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박 훈 · 남상호 · 최영호 · 김태기 · 방광석 · 김동명
정애영 · 함동주 · 김종식 · 박진우 · 하종문 · 허동현

09

일본 우익의 전체상을 역사적으로 재검토하는 이번 기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21세기 일본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종언과 55년 체제의 붕괴 이후 내외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확산되는 체제적인 불안심리는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화시켰으며, 국민통합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분출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제화 문제, 신가이드라인 관련법과 헌법개정 논의, 역사인식 논쟁 등은 아직도 논란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것은 향후 21세기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국가주의적인 움직임에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개정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주장하고 역사교과서의 개악을 주도하는 우익들의 논리는 그야말로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본 우익의 동향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주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1부의 ‘우익의 출현과 시대적 흐름’은 에도 시대 후기 대외적인 위기의식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방론을 중심으로 ‘초기 국가주의’의 원류와 그 특징을 밝히고, 이어서 제국주의 시대 일본 우익의 발생과 그 운동 형태, 그리고 패전 후 일본 우익의 부활과 현황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2부의 ‘우익의 주요 인물·단체·사상’은 근대 우익의 거두로 불리는 도야마 미쓰루[頭山滿]와 현양사[玄洋社], 도야마의 후계자이자 대륙낭인으로서 암약한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와 조선문제, 우익세력의 결집과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의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麿]와 동아동문회의 역할, 1920~1930년대 우익의 쇼와유신운동에 정신적인 지주였던 기타 잇키[北一輝]의 사상, 그리고 우익정치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전전과 전후에 걸친 사상과 그 정치적 유산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3부의 ‘우익과 보수정치의 상호작용’에서는 우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천황제와 우익의 관계, 야스쿠니신사·헌법개정·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한 우익의 인식과 동향,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왜곡과 우익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일본 우익에 대한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우익의 역사적 연원과 흐름 그리고 현재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로 의미있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기획의 집필에 참여해 주신 12명의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응 덕

제1부 | 우익의 출현과 시대적 흐름

- 19세기 전반 일본의 해방론과 ‘초기 국가주의’ 형성 박 훈
 - I. 머리말 011
 - II. 해방론의 등장과 특징 013
 - III. 초기 국가주의의 형성과 특징 018
 - IV. 맺음말 032
-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우익’ 남상호
 - I. 머리말 036
 - II. 우익의 발생 038
 - III. 우익운동의 기점 054
 - IV. 국체명징운동 061
 - V. 반영미세력으로서의 우익 066
 - VI. 맺음말 068
- 패전 이후 우익세력의 부활과 배경 최영호
 - I. 머리말 071
 - II. 패전에 저항하는 우익세력 073
 - III. 점령당국의 우익세력 공작 추방 078
 - IV. 천황의 인간화와 상징적 존재화 083
 - V. 피점령기 전후파 우익의 등장 088
 - VI.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우익의 부활 092
- 일본 우익의 흐름과 현황 김태기
 - I. 머리말 097
 - II. 반공우익 098
 - III. 민족파와 신우익 102
 - IV. 종교우익 105
 - V. 우익 지식인의 반동 107

VI. 현재의 우익	110
VII. 맺음말	113

제2부 | 우익의 주요 인물 · 단체 · 사상

• 현양사와 도야마 미쓰루 방광석

I. 머리말	119
II. 현양사의 성립	120
III. 민권운동과 현양사	126
IV. 국권주의로 선회	133
V. 현양사와 '아시아'	140
VI. 맺음말	149

• 우치다 료헤이와 조선문제 김동명

동광회의 조선내정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I. 머리말	152
II. 동광회의 조직과 조선총지부 설치	155
III. 내정독립운동의 전개	161
IV. 맺음말	171

• 동아동문회와 고노에 아쓰마로 정애영

I. 머리말	176
II. 고노에 아쓰마로	177
III. 고노에의 초기 사상 형성	179
IV. 동아동문회의 설립, 조직과 활동	183
V. 국민동맹회와 고노에 아쓰마로의 지론	190
VI. 조선협회와 고노에 그림	200
VII. 맺음말	201

• 기타 잇키와 1920~1930년대 일본의 우익사상 함동주

I. 머리말	204
II. 기타 잇키와 1920~1930년대 일본의 우익운동	205
III. 기타 잇키의 주요 저작과 사상	211
IV. 기타 잇키와 1920~1930년대 우익사상의 지형도	221

● 기시 노부스케의 국가주의 김종식

사상적 원천탐색

I. 기시 노부스케의 일생	227
II.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적 유산	229
III. 정치가 기시 노부스케의 행적	231
IV. 기시의 국가주의 형성	236
V. 국가주의자 관료 기시 노부스케	247
VI. 새로운 기시를 바라는 일본의 우익	252

제3부 | 우익과 보수정치의 상호작용

● 일본 우익과 천황제 박진우

I. 일본 우익의 공통기반으로서의 존왕주의	257
II. 전전의 우익과 천황제	259
III. 전후 우익과 천황제	263
IV. 아키히토 천황과 1990년대 이후의 우익	270
V. '여성 천황'에 대한 우익의 입장과 그 의미	275

● 야스쿠니신사 · 개헌 · 납치문제 허종문

I. 머리말	284
II. 야스쿠니신사	285
III. 개헌	295
IV. 납치	303

● 역사기억을 둘러싼 교과서 전쟁 허동현

I. 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은 계속되는가	315
II.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의 전통	318
III.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세계질서의 변동에 따른 내전과 국제전의 이중주	320
IV. 과거사 분석의 주역 우익	324
V. 후소사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327
VI.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35

● 찾아보기	341
--------	-----



제 1 부

우익의 출현과 시대적 흐름

19세기 전반 일본의 해방론과 ‘초기 국가주의’ 형성 (박 훈)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우익 (남상호)

패전 이후 우익세력의 부활과 배경 (최영호)

일본 우익의 흐름과 현황 (김태기)



19세기 전반 일본의 해방론과 ‘초기 국가주의’ 형성

박 훈_국민대학교

I. 머리말

동아시아 언어권에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란 용어를 번역, 사용할 때 겪는 어려움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내셔널리즘은 흔히 민족주의로 번역되나 문맥에 따라 국가주의 또는 국민주의로 번역해야 타당한 경우도 적지 않다.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민족국가(nation state)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중 국가가 더 강조되는 경우,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강조된다고 해서 국민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민을 일깨우고, 신분제를 약화 또는 해체시키며, 제한적이거나 정치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의 국민국가 건설과정을 이 두 가지 계기로 교착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국가주의가 국민주의를 압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본의 국가주의적 맹아(이를 ‘초기 국가주의’라고 하겠다)는 이미 19세기 초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어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의 『신론(新論, 1825)』과 같은 체계적인 저작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일본의 ‘초기 국가주의’는 당시 서구열강의 침입에 대한 대응방안, 즉 해방론(海防論)을 매개로 형성된다. 즉, 국방상의 위기감이 변 단위를 초월한 ‘일본 국가’에 대한 경사를 강화시켰고, 이 일본 국가를 만들어내고 강화시키기 위해 신분제를 약화시키는 방향, 즉 국민주의의 첫걸음을 떼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본고가 해방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이다. 물론 해방론이 등장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초기 국가주의’를 촉진시켰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해방론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해국병담(海國兵談, 1791)』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한 해방서(海防書)인데, 여기에는 군사기술, 군대조직 등 군사적 대책은 자세하게 쓰여져 있지만, 국가의 정체성, 국가와 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많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를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앞서 소개한 『신론』이다. 즉,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는 세기 전환기에 해방(海防)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확립과, 국가와 민의 일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해방론이나 ‘초기 국가주의’적 저작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대체적인 경향을 검토하여, 일본 ‘초기 국가주의’의 특징을 지적하고자 한다.

II. 해방론의 등장과 특징

1. 해방론 등장의 원인

서양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은 청이나 조선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더 강렬했다. 이미 1790년대에 후지타 유코쿠(藤田幽谷)는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을 강렬하게 표명한 바 있고, 하야시 시헤이도 『해국병담(海國兵談)』과 『삼국통항도설(三國通航圖說)』에서 해국(海國) 일본의 위기와 군사적 방책을 서술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소수파에 불과했다. 바쿠후의 핵심인물과 다수의 지식인은 이들의 주장을 지나친 것으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탄압까지 했다.

19세기에 들어서 서양 선박이 더욱 자주 출몰하자 위기의식은 점점 확산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즉 해방론이 주요 의제로 되어 갔다. 이에 따라 막부도 해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특히 천보기(天保期, 1829~1844)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논자 중에는 서양이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역, 신수공급 등이지 일본 점령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해방론자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자와 야스시는 『신론』에서 일본에 대한 서양의 침략위기를 강조하면서, 서양의 출현을 안이하게 보려는 논자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였다. 첫째, 오토츠크 연안에 당도하여 일본의 북부 도서지역에 출현하기 시작한 러시아에 대해 그들이 쌀을 구하러 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논자에 대해 아이자와는 러시아인은 원래 쌀을 먹지 않으며, 쌀은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일본 연안에까지 오는 것은 군사

적 침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둘째, 서양의 선박은 어선이나 상선이라서 전투를 벌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양 선박은 언제라도 전함으로 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고 했다. 셋째, 일본에 접근하는 서양인들을 은혜로 대한다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도, 동남아시아 등을 생각할 때 서양의 침략의도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조금의 은혜를 베푼다고 감복할 자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넷째, 서양이 설령 침략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정예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일본의 무위(武威)를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 아이자와는 일본이 무위가 있다고는 하나 이미 200년 이상 실전경험이 없고, 서양의 전법은 과거의 것과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대응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서양은 일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침략하더라도 병력은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아이자와는 서양은 기독교라는 강력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일본의 민(民)을 포섭한다면 일본 내부에 응원세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 같은 해방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소요, 막번체제에서의 탈피, 역직체계의 변화, 가신단 계층구조의 변화 등 기존질서에 동요를 가져오는 조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항이 거셌다. 그러나 중국에서 벌어진 아편전쟁과 중국 패배의 소식은 일본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해방론자들의 주장은 점점 힘을 얻어갔다. 그리고 막부와 각 번들도 해방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해방론에 따른 사회체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해방론이 일찍부터 제창되고 이른 시기에 국가의 방침이 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 도쿠가와 일본의 지배층이 사무라이, 즉 무사계층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도쿠가와막부 성립 이후 200여 년 동안 국제전쟁은 고사하고 이렇다 할 내전도 없어 무사계층이 군인으로서의 자기 존재의의를 증명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평화시대가 계속되면서 사무라이들에게는 전투 능력 대신에 행정능력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사무라이들은 유교적 교양과 행정실무를 배우는 데 열중하였다.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동일성(identity)은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형해화되기는 했지만 사무라이들의 조직인 가신단은 전투시의 조직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즉, 사무라이들은 구미[組], 반[番] 등 전투조직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지배층이 무사계층이었다는 점은 서양의 출현을 무엇보다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방론을 일찍이 등장시켰던 것이다.

둘째, 일본의 국제안보상의 고립감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조선이나 베트남과 달리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체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 도쿠가와막부 성립 이후 청과의 사이에서 한번도 공식 사절단이 왕래한 적이 없으며, 물론 국교도 맺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게 되는 것은 1871년 청일수호조규에 와서이다. 이 때문에 서양이 침략했을 때 중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었다.

셋째, 열도라는 지리상의 불리이다. 세계지리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일본에서도 18세기에 들어서면 관리나 지식인들은 제법 상세한 세계지도를 손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지리적으로 일본열도는 방어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야시 시헤이의 말대로 열도라는 조건은 예전에는 바다가 장애물이 되어 외침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항해술이 발달하여 바다를 육지처럼 다니기 때문에 적합이 사방에서 침입해 올 수 있는 악조건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넷째, 18세기 후반경에 이르러 천황에 대한 존숭과 일본을 신주(神州)로 여기는 사상이 확산되면서 일본이 서양 오랑캐에게 침략되어 오염된다는 공포감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런 공포감은 서양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철저하게 만들려는 의욕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일본에서는 해방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찍 제기되었고, 정책순위에서도 빠르게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해방론의 특징

그러면 이 시기 해방론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해방론, 즉 대외론과 내정개혁론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방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하야시 시헤이의 『해국병답』은 서양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군사기술 등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이 대부분인 군사기술서인 데 비해 19세기의 해방론은 국방능력의 향상을 위해 내정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정개혁론(부국강병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체제를 혁신하여 사회 전체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국일치(舉國一致), 합국일치(閤國一致) 등의 구호가 빈번히 등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에 따라 언론통개, 인재등용 등 일종의 능력주의, 업적주의가 존중되었다.

해방론이 내정개혁론과 결부된 대표적인 예는 막부의 천보개혁이다. 막부는 천보기에 해방을 위해 상지령(上知令), 대명예지(大名預地)의 수공(收公), 인번소(印旛沼) 개착공사 등을 계획 또는 실시하는데, 이는 모두 기존 번의 할거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들이다.

둘째, 해방을 위해 인심일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심이나 민심을 중시하

는 것은 동아시아 유교권에서는 일상적인 레토릭(rhetoric)이기는 하지만 인심을 일깨워 국가에 대한 관심, 국가에 대한 의무를 환기시키거나, 해방에는 사민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의 국가로의 동원이라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배층에 대해서는 민에 대한 일정한 양보와 욕망충족의 자제 등을 요청한다. 일본의 ‘초기 국가주의’ 형성단계에서 인심일화가 끝없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국가를 강조하면서도, 그 국가를 강화하는 데 항상 민의 일정한 협조를 필요로 했다는 점, 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정한 양보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 조법(祖法)에 해당하는 국내체제의 개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사고 방법으로서 변통론이 활용된다. 해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선(大船) 제조 금지를 풀다거나 신분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재등용 등은 모두 도쿠가와막부 성립시에 규정한 조법에 변화를 주는 것들이다. 조법준수를 주장하는 보수파들에 맞서기 위해 해방론자들은 국가의 방침은 시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바뀌어야 한다는 변통론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변혁논리를 뒷받침했다. 그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서양과 무역을 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하는 등 시세에 따라 변통했다고 주장했다.

넷째, 해방의 절박성은 인의도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감퇴시키고, 부국강병 논의의 정당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아울러 공리의 추구도 광범하게 긍정되었다.

예로부터 실로 크게 되려고 하는 군주는, 반드시 功을 세우고, 利를 일으켜서 그 자손에게 물려주고 當世에 명성을 날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후세의 儒者(宋儒)는, 헛되이 道德仁義를 논하고 功利를 말하는 것을 꺼리며, 부국강병을 배척하여 霸術이라고 합니다. ……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上古에 성인이 道를 세우고 教를 베푸실 때, 利用厚生은 正德의 앞에

있고 六府·三事を 九功이라고 일컬은 것을. 孔子가 政을 논할 때도, 兵을 족하게 하고 食을 족하게 하여 民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는 것을 先務로 하셨습니다. 즉 聖人이 功利에 열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지타 유코쿠는 정통적인 주자학자라면 중시하지 않을 공리, 부국강병 등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도덕인의에의 매몰을 비판하고 있다. 즉, 후지타 유코쿠는 주자학이 개인수양과 도덕인의를 우선시하는 것을 비판하고, 현실정치에서의 업적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해방론은 내정개혁론과 연결되면서 단순한 군사력 강화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국가, 사회체제를 요구하는 사상의 출현을 자극하였다. 해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막번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체제 구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이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명시적으로 막번체제의 해체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주장이 함축하는 역사적 의미를 자각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 해방론에 촉발되어 등장한 내정개혁론은 후일 일본 국가주의의 구성요소들을 거의 갖추고 있어 국가주의의 맹아라는 의미에서 ‘초기 국가주의’라고 이름붙일 만한 사상적 흐름을 형성했다.

Ⅲ. 초기 국가주의의 형성과 특징

19세기 ‘초기 국가주의’ 성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도 시대 유학자들이 중국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의 국가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대로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아사미 게이사이[淺見綱齋] 등의 유학자는 일본 고유의 천황존숭의 전통을 중시했고, 청에 대하여 일본을 중국, 중화, 중하(中夏)로 자칭했다. 유명한 야

마자키 안사이의 일화는 에도 시대의 유학자들이 도덕의 보편성보다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이 우선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에도 시대의 유학자들은 유학의 보편개념과 사상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유학이 가르쳐 주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도 관심을 유지했다. 어느덧 국학자뿐만 아니라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본을 ‘신주·중국’이라고 부르고, 중국을 한토(漢土)·만청(滿淸)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확대되어 갔다. 이런 풍토 때문에 서양의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이 전파되었을 때 중국, 조선보다 용이하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19세기 전반기에 형성된 일본의 ‘초기 국가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초기 국가주의’의 상징과 현실감각

첫째, 국가주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국을 타국과 구별시키는 특징, 상징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서양과의 차이에 앞서 중국·조선 등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던 국가들과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 일본이라는 국가를 주변의 국가들과 구별짓는 상징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만세일계(萬歲一系)의 천황과 태양, 그리고 무위(武威)이다. 일본 지식인들이 중국이나 조선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일본의 특징이라고 본 것은 단 한번도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천황가문이 군주로서의 지위를 단절 없이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의식은 물론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주요 담론으로 확산되었다. 사실 “유덕자에게 천명이 내려 군주로 삼는다”는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실덕자(失德者)에게서 천명이 떠나 유덕자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다는 왕조 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만세일계가 기이한 것이다. 그러나 만세일계

를 일본의 자랑으로 여기는 담론은 일본 유학자들에게도 커다란 저항 없이 일본의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아갔다.

둘째, 일본이라는 국가(民族)의 자기정체성의 상징으로 태양의 이미지를 즐겨 사용했다. 『신론』의 모두에서 이미 태양과 관련된 자기정체성을 명언하고 있고, 일본은 천일지사(天日之嗣)가 통치한다는 의식이 드러나 있다. 태양 이미지는 훗날 히노마루, 육일승천기(旭日昇天旗) 등 일본 내셔널리즘의 상징으로 줄곧 이용하게 된다. 태양 이미지와 관련하여 ‘초기 국가주의’ 담론은 『신론』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본을 ‘대지(大地)의 원수(元首)’, ‘만국(萬國)의 강기(剛紀)’ 등으로 표현하고, 이 일본이 ‘우내(宇內)에 조림(照臨)’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생산해냈다. 이처럼 자국을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천하의 중심’으로 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조선이 스스로를 동국(東國)이라고 하고, 베트남도 자국을 남한(南漢)이라고 하는 등, 중국을 의식하면서 자국의 위상을 설정한 것과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은 무위, 즉 군사력이 강한 국가라는 자기인식이다. 이 경우 중국이나 조선은 장수(長袖)의 나라, 즉 문약한 이미지로 그려진다. 무위의 나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이미 중세에도 분명히 존재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서양에 대한 공포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와 중국·조선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시도 속에서 일본의 자기인식으로 확산된다. 무위의 국가라는 자기인식은 근대 일본이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보면 일본의 ‘초기 국가주의’는 현실과는 유리된 상당히 신비적인 색채가 강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일본 ‘초기 국가주의’의 특징은 이상으로 하는 세계상과 현실의 세계상이 명확히 구분, 격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신론』에서 전형적으로 보인다. 아이자와 야스시는 국

체(國體) 편에서 일본이 ‘대지의 원수’, ‘만국의 강기’라며 세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설파하면서도 뒤의 형세(形勢), 노정(虜情) 편 등에서는 현금의 세계정세를 중국 고대의 전국시대에 비교하며 세계가 7웅의 각축장으로 변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 7개의 강국은 청, 무굴제국, 페르시아, 오스만튀르크, 신성로마제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이 7개의 강국에 들어 있기는 하나 다른 6개의 국가들에 대해 ‘절대적 우위’가 있는 국가로는 전혀 묘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 강국의 각축에 따라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존재로 되어 있다.

이처럼 아이자와는 일본을 세계의 원수(元首), 원기(元氣), 강기(剛紀)로 여기는 강렬한 화이 관념을 설파하면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화의 세계, 즉 원래 있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으로 위치짓고, 이를 현실의 역사적 세계와는 냉정하게 구별하였다. 이처럼 원래 그러해야 할 이상적·신화적 세계를 ‘정통적인 일본의 이미지’로 내세워, 이에 대한 희화화 시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현실세계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현실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일본 국가주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일본 국가주의는 이 균형이 무너지고, 군부나 우익 지식인들이 이상적인 세계상을 무리하게 현실화시키려고 한 시도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

2. 국가와 민의 일체화

일본의 ‘초기 국가주의’의 모습과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책이 아이자와 야스시가 쓴 『신론』이다. 『신론』은 아이자와가 미토 번주[水戸藩主]에게 상정할 생각으로 집필하여 1825년에 탈고되었으나, 그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한 미토 번주는 이 책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국 이 책이 간행된 것은 탈고한 지 30년 정도가 흐른 1854년이 되어서였다. 그러나 간행되지 못했음에도 이 책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앞다투어 이를 필사하여 그 내용이 점점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 『신론』은 막부와 서양세력에 반대하는 존왕양이파의 성전(聖典)이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책이 수많은 해방서와 다른 점은 실제적인 군사공격이나 전투방법 등 전문적인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일본이라는 국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내 인심을 통합하여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체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즉, 『신론』은 국가의 통일성 강화와 인민의 통합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생명력이 이어져 메이지정부의 신도국교화 정책, 교육칙어 등 국민도덕사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신론』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이라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며,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서양은 교활하고 천한 무리이며, 중국은 ‘만청’ 또는 ‘한토’ 이지 더 이상 중심의 국가(중국)가 아니며, 조선은 작고 왜소한 국가일 뿐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대지의 원수’이며 ‘만국의 강기’이다. 아이자와는 이렇게 위대한 일본이라는 국가가 서양의 침략 앞에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았다. 서양은 호시탐탐 일본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천지가 뒤바뀐 것이고, 머리와 손발이 거꾸로 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재정을 풍부히 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지배층의 단결과 각성을 촉구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자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 즉, ‘민’의 동향에 주목하여 민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장악하여 일본이라

는 국가에 충성을 바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은 서양의 이데올로기, 즉 기독교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이자와는 이 기독교를 서양의 군사력 못지않게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즉, 민이 기독교에 설득되어 일본이라는 국가에 충성을 바치지 않고, 거꾸로 서양의 국가들에 충성을 다하는 상황이 되면, 서양의 군사력과 일본의 민이 합세하여 일본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을 장악하여 일본이라는 국가에 포섭시킬 것인가. 아이자와는 천황과 민을 친밀하게 하여 민이 천황에 존경과 충성심을 갖게 만들고 이를 통해 일본 국가와 민이 일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일본의 정치권력은 에도에 있는 막부가 장악하고 있었고, 천황은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토 일원을 제외하고는 천황의 존재조차도 일반 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천황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민속신앙과 관련한 존재로 인식하였지 그것을 일본 국가의 상징이며, 정치적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으로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천황과 민을 가깝게 만들고, 민이 천황을 충성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아이자와가 생각해낸 방법은 대상제(大嘗祭)의 부활과 확대였다(이하의 서술은 기존에 발표된 필자의 논문에 따른 것임). 대상제란 천황이 즉위하고나서 처음 맞는 추수 때 곡물을 조상께 바치는 궁중의식이다. 당시만 해도 이 행사는 궁중 내에서 비공개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아이자와는 이 대상제의 준비 과정에 민중을 참여시키고, 그 행사 자체도 궁궐 깊은 곳에서 비밀리에 치를 것이 아니라, 개방된 장소에서 공개행사로 진행하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대 천황들이 대상제를 밖에서 공개적으로 행했음을 주장했다.

崇神天皇 즉위 초에는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에 上古의 風을 이어 받아 天祖를 殿內에서 제사지냈다. 天皇이 敬畏하여, 스스로 안주하지 않고 옮겨서 神器를 가사누이[笠縫]에 奉安하고, 드러나게 밖에서 제사를 지내어, 천하로 하여금 우리르게 하고, 그 敬事尊奉하는 뜻을 천하와 함께하니, 천하가 모두 天祖를 존중하고 조정을 敬慕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자와는 崇神天皇(崇神天皇)이 대상제를 궁궐 내에서 행하던 상고 이래의 관례를 깨고, 개방된 장소에 신기(神器)를 옮겨 거행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본 천하가 모두 천조(天祖)와 조정을 존경하게 되었다며 찬양했다. 더구나 아이자와는 이 대상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천황을 비롯한 전국의 민중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일체감과 귀속감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옛날에 大嘗祭를 할 때는 점을 쳐서 悠紀, 主基의 國郡을 정하고, 宮主卜部를 파견하여, 國司 이하 서민을 이끌고, 밭에 나가 벼이삭을 뽑아 神에 공물로 바쳤다. 四國에는 天神에 供奉하지 않는 자 없었고, 백성은 모두 자기들이 일하는 데 뽑혀서 大嘗祭의 준비에 쓰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天皇이 事天事先하여, 大孝를 보이고 民命을 중시하는 뜻이 사방에 달하게 되었다. 國司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 제사를 호송하고, 諸道에는 일을 맡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그 뜻이 또한 길거리에까지 이르렀다. …… 天皇이 이미 事天事先하고 申孝愛民하는 뜻을 갖고 그것을 천하와 함께하니, 뜻이 있으면 그에 맞는 禮가 생기는 법이다. 이로써 백성은 날마다 이에 의거하게 되니, 포고하지 않아도 깨닫고, 말하지 않아도 깨닫게 되어, 각자 섬기고 있는 君에 충성하게 되고, 이로써 함께 天祖를 奉戴하니, 民志가 이에 하나로 되었다.

즉, 대상제를 거행할 장소를 점을 쳐서 선정한 후에 高句麗[國司]가 이끄는

민중은 자신들이 생산한 공물(供物)을 바치거나, 제사(祭祀)를 호송함으로써 그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하여 전국(四國)에는 천신(天神)에 공봉(供奉)하지 않는 자가 없고, 제도(諸道)에는 대상제 관련 업무를 맡지 않은 자가 없게 되었다. 즉, 전 민중이 천황가의 제사인 대상제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케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민중은 군(君)에 충성을 바치게 되고, 천황의 조상인 천조(天祖)를 다 함께 받들게 되어 민지(民志)는 하나로 통일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 천황·국가가 민지를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민중은 천황·국가에 귀속될 수 있었다고 아이자와는 주장한 것이다.

아이자와가 재창조한 고대의 대상제 의식에서 민지를 장악한 이데올로기는 천황에 대한 보본반시(報本反始), 즉 충효(忠孝)이다. 민중이 서양세력에 내놓을 것을 두려워했던 아이자와는 충효라는 이데올로기로 일본 국가와 민중사회의 일체감을 만들어내어, 서양의 기독교에 맞서려고 했던 것이다. 아이자와가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지만, 그의 천황(大嘗祭)을 통한 억조일심(億兆一心)의 달성이라는 구상은, 서양의 기독교를 통한 민심통일과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청말(清末)의 Kang Yuwei(康有爲)가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 공교창설(孔教創設)을 시도했다든가, 조선의 동학(東學)은 그 이름 자체가 서학(西學, 天主教)을 의식했다는 점과 통하는 것인데, 다만 Kang Yuwei나 동학의 경우 아이자와처럼, 각각의 종교를 이용하여 민중을 하나로 묶어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발상이 존재했는지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이자와는 천황에서 민중에 이르기까지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서양세력에 맞선다는 발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그는 ‘억조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아이자와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서 민중에 이르기까지 마음 또는 뜻을 하나로 한다는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의 ‘억조일심’이란 용어는 아이자와 이전의 전근대에

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다. 좀 과감히 말하면 ‘억조일심’은 아이자와의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아이자와 이후의 근대 일본에서는 ‘억조일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고, 그 기본 발상은 태평양전쟁까지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와 민중이 일체화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옛날에 몽고가 일찍이 우리에게 無禮를 범했을 때, 北條時宗은 단연 그 자리에서 몽고의 사신을 베고, 천하에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몽고를 정벌하려 하였다. 龜山帝는 萬乘의 존귀한 분이시면서도, 몸으로써 국난에 대신할 것을 빌었다. 이때를 당하여 백성은 기꺼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죽음을 잊어버리니, 그 누가 감히 필사를 期하지 않았겠는가. 이로써 億兆가 마음을 하나로 하니, 정성이 감동시킨 바가 있어 풍랑이 일어나 오랑캐를 바다에서 섬멸했던 것이다.

이것은 몽골 침입시의 상황을 말한 것인데, 이 속에서 국가와 일체가 된 민중들은 기꺼이 전란에 나아가 누구나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를 했다(물론 이는 아이자와의 일방적인 상상에 불과하지만)는 주장이다. 이렇게 억조가 마음을 하나로 하니, 그 정성에 감격해 신(神)이 풍랑을 일으켜, 노(虜, 여기서는 몽골군을 가리키나, 아이자와는 서양을 가리킬 때도 虜라는 표현을 자주하고 있다)를 해상에서 섬멸시켰다는 것이다. 근대 내셔널리즘에서, “주민의 국가 귀속심에 관해서는 단적으로 말해, 전쟁에의 동원을 원리상 긍정하는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떠올려 보면, 위에서 묘사된 아이자와의 민중상은 실로 이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신론』은 민에 국가주의를 인식시키는 데 언어를 통

한 민의 이성적 자각이라는 방법보다는 의례적·시각적 방법을 중시했다. 이런 생각은 훗날 메이지정부의 방침에도 이어졌다. 메이지정부는 천황의 존재를 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천황의 순행을 실시했으며, 관공서와 소학교에는 어진영을 배포했다. 또 천황의 행렬을 맞이할 때, 국가의 경사를 축하할 때 ‘만세’를 외치는 습관을 정착시켰다. 이런 의례적·시각적·신체적 행위들을 통해 민은 점점 국가와 일체감을 갖게 되고 ‘국민’이 되어갔다. 이런 의미에서 『신론』은 근대 일본의 국민교화정책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민의 국가지사 참여를 위한 정책

한편, 국가에 대한 민의 일체감을 고양시키고,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민이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신분제를 철폐하여 민을 균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국민’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이를 주장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논자들은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신분을 뛰어넘어 국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하야시 시헤이는 국방을 위해서는 조선, 류큐, 에조(蝦夷)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릇 이 세 나라(조선, 류큐, 에조)는 그 영역이 일본에 접하고 있어서 실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다. 무릇 일본 사람이면 신분의 귀천과 직업 여하를 막론하고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나라의 지리이다”라고 주장하였다(『삼국통향도설』).

그러나 단지 관심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분제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민이 국가지사(國家之事)

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창된 것이 인재등용과 언론통개였다(이하의 서술은 필자가 발표한 기존 논문에 따른 것임). 정치개혁론으로서의 인재등용과 언론통개(言路洞開)는 동아시아의 역사에서는 빈번히 주장되어 왔던 것으로, 특별히 참신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내외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그것의 실질적·구체적 실시를 주장하여, 근세 이래의 신분제, 정치적 관습과 긴장을 불러일으키자, 그것은 사회변혁을 노려 정치에 개입하려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나중에 가면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을 정치의 장, 또는 정치의식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먼저 인재등용 주장의 핵심은 신분과 직책을 분리하여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낮은 신분의 자일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가격(家格)의 높고 낮음보다 재덕(才德)이 있는 자가 정치를 이끄는 것이 올바른 정치운영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업적(능력) 중시의 사상이 엿보인다. 그들은 신분이 낮은 자가 정치를 맡으면, 신분이 높은 자를 승복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도리를 내세울 것이니, 올바른 정치가 가능하고 만일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신분이 높은 자보다는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도요타 덴코(豊田天功)의 아래와 같은 견해는 당시 인재등용론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世臣・巨室・肉食의 자에는 賢才가 나지 않으니, 이 시대의 賢才는 반드시 下位(낮은 家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賢才를 알아보기가 어렵고 알아본다 하더라도, 평소의 관습에 世臣世緣의 집안이 執政하는 것이 정해진 通法이기 때문에, 賢才를 밑에서 발탁하여 정사를 맡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尋常容易의 것이지, 결코 天心이 이르는 바가 아니며, 일제 苟且의 정치여서 이 大命

(齊昭의 중흥의 정치)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의 성패의 갈림길
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단을 내리셔서 群議를 물리치고라도 반
드시 賢才를 등용·위임하여 정사를 맡게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중흥의
대업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재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유교적 소양과 지식이었다. 원래 도쿠가와
사회는 무인인 사무라이가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유교에 대한 지식보다는 무
술 등 전투력이 더 요구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평화시대가 계속되자 사무
라이도 점점 행정관료화되었기 때문에 유교적 소양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다음 주목되는 것은 실무지식에 대한 요구이다. 특히 재정·경제 분야
와 군사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 때문에 이 분
야에 해박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낮은 신분임에도 출세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인재등용에서 주목할 점은 막부 가신이 아닌 자들, 즉 타번의 가신 중에
서도 유능한 자를 막부에 등용하자는 것이다. 원래 막부 관직에는 하타모
토, 고케닌 등 막부의 직신(直臣)이 주로 등용되었고, 각 번의 가신들이 번을
뛰어넘어 다른 번이나 막부에 발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능력주의
적인 풍조가 강해짐에 따라 1850년대의 안정기(安政期)에는 각 번의 가신 중
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자는 막부의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특히 학문소(學問
所), 천문방(天文方)에 많은 인재가 발탁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번의 소속과
신분을 불문하고 유능한 인재를 막부의 정사(政事)에 발탁한 것인데, 이는 중
앙정부에의 인재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다음으로 언론통개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자. 서양의 출현이라는 위기상
황을 맞이하여 대부분의 논자는 인심일화(人心一和)를 제창한다. 그 인심일화
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장되었던 것이 언론통개였다. 19세기 일본의

정치사를 정치적 집중과 정치적 확대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언론통개는 인재등용과 더불어 후자의 주요한 수단이었다. 정치적 집중과 확대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일통(一統)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집중을 피했던 논자들이 일찍이 언론통개에 착목했던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지타 도코[藤田東湖]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보자.

人君의 職은 一人의 智力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衆人의 知력을 함께 이용하여, 民을 안도하고 國을 다스리는 것이다. 衆人의 知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言路를 여는 데 있다. 언론을 열면 下의 사정이 上에 들리고, 上의 은혜가 下에 미쳐 民이 편안하고 國이 다스려진다. 언론이 막혀 있을 때는 이와 반대로 된다는 것은, 古今의 예를 볼 때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주장은 19세기 초 일본 사료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언론통개의 주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초기 국가주의’는 한편에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적 상징을 창출하여 민을 국가와 일체화시키려는 시도를 행하는 한편, 인재등용과 언론통개를 통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민이 국가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4. 위기의식의 과장

다음으로 초기 국가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위기를 과장하여 위기의식을 조장했다는 점이다. 첨예한 위기의식은 이미 18세기 말에 나타나는데, 아이자와의 스승이기도 한 후기 미토학[水戸學]의 선구자 후지타 유코쿠는 이미 18세기 말에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론』의 위기의식도 이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북쪽의 교활한 오랑캐[러시아]는 神州[일본]를 엿보고, 항상 남쪽을 圖謀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안이하게 보는 것은) 이른바 불을 땔감 밑에 두고 그 위에 자면서, 불이 아직 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정세가 이러합니다. 천하의 걱정이 어느 때가 이보다 더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藩水戸은 바다를 등지고 있어 외적과 인접하니, 더욱 미리 방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러시아의 목적은 어업이라든가 무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본의 식민지화에 있다고 보았다. 18세기 말이라는 시점에서 과연 유코쿠가 지적하는 정도의 대외위기가 러·일 간에 있었던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는 오히려 잠재적 위기를 크게 과장하여 민심을 긴장시키고, 체제를 개혁하려는 사전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이자와도 대외위기를 심각하게 경고하는데, 서양 선박들의 출몰을 무역과 관련된 것이지 군사적 위협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당시 일부 논자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결국 유코쿠, 아이자와 등의 ‘초기 국가주의’는 대외 위기의식의 강조 또는 과장 위에서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대외 위기의식의 과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외부세력과의 충

들을 만들어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주장도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논자들은 나가사키의 쇄항을 촉구했는데, 나가사키는 주지하는 대로 17세기 초 이래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던 항구로 이를 갑자기 폐쇄하는 것은 네덜란드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했다. 또 논자들은 또 이국선타불령(異國船打拂令)의 부활을 요구했다. 1825년에 발령된 이국선타불령은 서양 선박을 발견하면 무조건 격퇴하라는 것인데, 이는 조난당했거나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연료, 식수, 식량 공급까지도 금지시킨 것으로 서양 선박과의 충돌을 야기하기 쉬운 조치였다. 막부도 아편전쟁을 지켜보고, 서양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를 철회했는데, 이의 부활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심으로 서양과 전쟁을 하려거나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런 충돌을 이용해서 위기의를 조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체제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양이론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메이지유신 이후 그토록 신속히 폐기하고 서양화 노선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주의의 과장과 대외 충돌을 이용한 국내체제 개혁이라는 구상은 이후에도 근대 일본을 관통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굳어져, 연속적인 대외 침략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쟁을 통한 내정혁신이라는 1930년대 이후의 논리로도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 글은 일본 국가주의 형성의 계기를 부여한 해방론의 등장과 그 성격

을 검토해 보고, 그로부터 형성된 일본 국가 중심의 사상을 ‘초기 국가주의’라고 명명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초기 국가주의’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상징으로 착목한 것은 만세 일계의 천황, 태양 이미지, 무위 등이다. 이것들은 모두 이후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초기 국가주의’형성에 노력했던 논자들은 국가와 민을 일체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대표적 논자인 아이자와 야스시는 천황가 고유의 제사인 대상제에 전 민중이 참여함으로써 민이 국가와 천황의 존재를 자각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식(儀式)적인 방안은 그 후 근대 일본에도 연결되었다.

다음으로 국가주의에는 민의 자발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이 시기 논자들이 제시한 것이 인재등용과 연로통개였다. 이를 통해 신분제가 갖는 정치참여 제한의 기능이 다소나마 완화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민이 국가지사에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초기 국가주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기의식의 과장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위협보다 상황을 더욱 위기적인 것으로 과장하여 선전함으로써 내부를 긴장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존왕양이론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위기의식의 과장은 이후에도 근대 일본을 관통하여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대한 변화도 있었다. 이후에는 조장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체제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실로 군대의 해외파병을 빈번하게 하고, 해외전쟁을 통해 국내체제개혁을 회피하는 구조가 생겨났던 것이다.

● 참고문헌

- 박 훈(2002), 「後期水戸學의 정치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동아시아연구』 1, 한성대학교.
- 박 훈(2003), 「徳川末期 後期水戸學의 민중관－會澤安의 『新論』을 중심으로」, 『歷史教育』 85.
- 박 훈(2003), 「後期水戸學의 變通論과 君臣觀」, 『日本歷史研究』 14.
- 박 훈(2003), 「근대일본의 公共圈의 형성과 公論政治」, 『국제·지역연구』 21.
- 일본시장대계 편집위원회(1973), 『水戸學』, 日本思想大系 53, 岩波書店.
- 橋本文三(1984), 『藤田東湖』, 日本の名著 29, 中央公論社.
- 吉田昌彦(1980), 「後期水戸學의 論理－幕府의 ‘相對化’ と徳川齊昭」, 『季刊日本思想史』 13.
- 尾藤正英(1977), 「尊皇攘夷思想」, 『岩波講座日本歷史』 13 (近世 5), 岩波書店.
- 芳賀登(1996), 『近代水戸學研究史』, 教育出版センター.
- 本雅史(1990), 『近世教育思想史の研究』, 第六章, 思文閣出版.
- 三谷博(1997),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幕末の外交と政治動向』 第二章, 山川出版社.
- 植手通有(1974), 『日本近代思想の形成』, 岩波書店.
- 信夫清三郎(1975), 「鎖國攘夷」, 『象山と松陰』, 河出書房新社.
- 安丸良夫(1992), 『近代天皇像の形成』 第四章, 岩波書店.
- 遠山茂樹(1951), 『明治維新』, 岩波書店.
- 前田勉(1987), 「『新論』의 尊王攘夷思想－その術策性をめぐって」, 『日本思想史研究』 19.
- 丸山眞男(1952),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Koschmann, Victor(1987), *The Mito Ideology: Discourse, Reform, and Insurrection in Late Tokugawa Japan, 1790~1864*,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田尻祐一郎・梅森直之(1998), 『水戸イデオロギー: 徳川後期の言説・改革・叛亂』, ぺりかん社).

Tadashi, Wakabayashi and Bob(1986), *Anti-Foreignism and Western Learning in Early Modern Japan : The New Thesis of 1825*,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우익’

남상호_경기대학교

I. 머리말

본고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 사회에서 우익이라 불리던 정치세력은 누구인가, 당시 일본 사회에서 우익을 어떻게 보았는가, 나아가 전후 연구자들은 우익 연구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핀 글이다. 이를 통하여 우익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당시 일본 사회 전반적 흐름 속에서 우익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 사회에서 ‘우익’이란 용어는 러시아혁명,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저널리즘에 등장하는데, 노동·농민운동 세력 중 우파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거나 좌익의 대칭용어로서 사용되었다. 한편 일본 공안당국인 내무성 경보국(警報局)에서 편찬한 『특고월보(特高月報)』에는 1932년부터 우익운동과 동일시하는 ‘국가주의 운동’ 난을 마련하여 우익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또 내무성 경보국에서는 1929년부터 매년 『사회운동의 상황(社會運動ノ状況)』을 편찬하여 1932년부터 ‘국가주의 운동’을 주목하고 있었다. 사법성 형사국도 『우익사상 범죄사건의 종합적 연구(右翼思想犯罪事件の綜

合的研究, 1939』를 비롯해 1939년부터 ‘국가주의 운동단체 동향에 관한 조사’를 이어갔다.

당시 우익이라고 자칭하는 단체나 인물은 극히 드물었다. 우익이라 불렀던 사람도 자신들의 활동을 자칭 애국운동, 일본주의 운동이라 칭했지 우익운동이라 부르지 않았다. 우익이라는 용어는 당시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었고, ‘우익 반동’으로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좌익인가 우익인가 하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의미밖에 갖지 않기에 무엇이 우익인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시 식민지 한국인에게, 일본인들 거의 대부분이 해외팽창 노선을 지지하였기에 일본 사회를 좌익과 우익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하기에 전후 일본 연구자들이 제국주의 시대 일본 사회의 키포인트였던 우익운동을 분석하고자 할 때 먼저 우익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하게 되었다. 전후 민간우익에 대한 연구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하시카와 분조(橋川文三), 아베 하쿠준(安部博純), 이토 다카시(伊藤隆) 등이 대표적이다.

파시즘 운동 연구자인 아베 하쿠준(1984)에 따르면 “우익운동, 파시즘, 국가주의, 초국가주의 등의 개념은 상호 호환성을 갖고 있고 꽤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또, “(당시 관현 측에서도 1939년이 되면) 종래 특히 마이네스 이미지를 부여해 왔던 ‘우익’ 대신에 ‘국가주의’, ‘일본주의’가 사용되고 ‘우익운동’을 대신해 ‘일본개조운동’, ‘국가혁신운동’ 등이 사용되었다”고 하며 우익의 개념 정리가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전후 연구자들이 수행한 우익 연구의 성과는 사실관계에서는 패전 이전 일본 공안당국에서 편찬한 자료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료일본현대사 6(1981)』 국가주의 운동 해설에는, 마루야마 마사오 이래의

통설적 이해에 따라 “일본에서 국가주의 운동의 원류는 1880년대의 현양사, 1900년대의 흑룡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급진 파시즘 운동으로서의 이데올로기와 조직을 갖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앞서 말한 공안당국의 자료인식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상의 것을 고려하여, 우선 제국주의 시대의 우익의 발생, 우익운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우익의 발생

당시 『요미우리신문』(1930년대 『도쿄아사히신문』, 『도쿄니치니치신문』과 함께 일본 3대 신문)을 보면 1910년대까지 정치세력으로서 ‘우익’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0년대 농민·노동운동세력 중 우파에게 우익이란 라벨을 붙이고 있다. 소위 우익단체나 인물에 대해서는 ‘우경’ 파로 명명했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서 ‘우익’이란 용어로 정착시키고 있다.

내무성 경보국에서도 노동·농민운동세력 중 우파를 우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930년대에 소위 우익운동을 ‘국가주의 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익 발생과 관련하여 내무성 경보국 『쇼와 7년 사회운동의 상황(昭和七年中ニ於ケル社會運動ノ狀況)』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아국(我國)에서 소위 국가주의 운동이 사회적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연원은 멀리 메이지(明治) 초기부터 배태된 것으로 그 이래 시세의 변천 혹은 운동 목표 여하에 따라 국수주의, 애

국주의, 국본주의, 국민주의, 일본주의, 국가사회주의, 국민사회주의 등 다종의 명칭, 다양한 주장을 가지고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황실중심주의를 기조로 하는 국가지상주의와 조국지상주의이다.

그리고 메이지기의 국가주의 운동은 대개 구화(歐化)주의에 대응하여 일어난 국수보존운동, 혹은 전시사변 때 양양되었던 애국운동과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수양운동의 범주에 있었고, 현양사(玄洋社, 메이지13, 1880), 일본홍도회(日本弘道會, 1887), 흑룡회(黑龍會, 1901) 등은 당시의 이러한 단체 중 주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다이쇼[大正] 7~8년(1918~1919)경부터 사회주의사상의 유행적 발진이 나타나자 국가주의 운동은 그 중심 목표를 이러한 신사조(新思潮)의 배격에 집중하였는데, 이러한 운동자 중에는 노사의 분쟁에 개입하여 노동자 측을 압박하고 그 외 좌익운동자에 대하여 폭력적 박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뿐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충군애국의 미명하에 약탈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자 점차 세인의 빈축을 사게 되어 끝내는 어용단체, 반동단체, 폭력단체의 명칭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조직된 단체 중 주요한 것은 대민구락부(大民俱樂部, 1913), 노장회(老將會, 1918), 종횡구락부(縱橫俱樂部, 1919), 유존사(猶存社, 1919), 대일본국수회(大日本國粹會, 1919), 대일본적화방지단(大日本赤化防止團, 1922), 입헌양정회(立憲養正會, 1923), 행지사(行地社, 1924), 국본사(國本社, 1924), 대일본정의단(大日本正義團, 1925), 건국회(建國會, 1926), 애국사(愛國社, 1928), 그 밖에 학내에서의 와세다대학 시오노카이[潮の會, 1923], 제대칠생사(帝大七生社, 1925) 등이다.

당시 이런 단체의 운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개 국수보존과 적화방지에 시종하고 있었지만, 드물게는 내정의 개혁, 강경외교 등을 단행하여 황도 정치에 근거한 유신일본·혁명일본의 건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의 유존사, 행지사, 건국회와 같은 단체는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의 객관적 정세에 압도되어 그 주장을 운동 형태로 구현할 수 없었다.

그런데 때마침 쇼와[昭和] 5년(1930) 런던군축조약 체결 당시에 소위 통

수권간범(統帥權干犯) 문제로 국론이 비등하자 국가주의 단체는 뜻밖에 군부 측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정부의 연약외교를 공격하고, 나아가 정당 정치 및 정당을 괴뢰로 하는 금융재벌의 타도와 특권계급의 배격을 공공연히 선포함에 이르러, 여기에 국가주의 운동은 그 동향을 현저하게 전화(轉化)하게 되었다.

더욱이 사상계의 동요, 경제계 불황의 심각화는 점점 현저하게 되었고, 게다가 쇼와 6년(1931) 9월 만주사변 발발에 따른 애국적 황군지원의 여론양상은 전술한 경향에 일층 박차를 가하는 한편 종래의 무산정당의 분야에서도 국가사회주의로 전향하는 자가 나오는 등 소위 근대적 국가주의 운동은 급격한 발전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양성된 내정개혁의 주장은 점차 급진적·실천적 전화를 이루고 쇼와 6년에 누차 그 준동을 보게 되었는데 쇼와 7년에 들어와 드디어 혈맹당사건, 5·15사건 등 불상사로서 나타났으며 그 이래 단속적으로 불온 계획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범(事犯)을 유인, 선동하는 인쇄물도 누차 비밀리에 배포되는 등 국가주의 운동의 현황은 단속상 엄격한 경계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대일본생산당(大日本生産黨), 신무회(神武會), 신일본국민동맹, 일본국가사회당, 대일본청년동맹, 신무청년대(神武靑年隊), 국가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은 이상과 같은 정세 아래 결성된 주요 단체이다.

내무성 정보국 『쇼와 8년 사회운동의 상황』(昭和八年中ニ於ケル社會運動ノ狀況)

중 우익의 발생에 관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국가주의 운동의 증추를 이루는 단체 상황을 개관할 때, 먼저 그 기원은 메이지 13년(1880)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히라오카 고타로[平岡浩太郎], 하코다 로쿠스케[箱田六輔] 등이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 창립한 현양사에서 구할 수 있고, 그 이래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의 일본홍도회, 도리오 고야타[鳥尾小彌太] 등의 일본국교대도사(日本國教大道社, 1883), 미야케 유지로[三宅雄次郎]의 정교사(政教社, 1883) 등이 조직되

었다. 이는 당시 구화주의에 대립하여 국수보존 운동을 시도한 것이었는데, 메이지 34년(1901) 1월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를 중심으로 조직된 흑룡회는 대러시아 외교, 만선(滿鮮)문제 등에 관한 활동으로 볼 만한 것이 있고 하스누마 몬조[蓮沼門三]의 수양단(修養團, 1906)은 정신적 미화 운동에, 또 사카이 가쓰도키[酒井勝軍]의 국교선명단(國教宣明團, 1906)은 재일 미국 선교사와 유대인 배격에 힘쓰고, 메이지 41년(1908)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도야마 미쓰루 등이 조직한 낭인회(浪人會)는 흑룡회 혹은 황국청년회 등과 함께 당시의 데모크라시 사상과 사회주의사상에 대하여 정력적으로 반항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메이지 43년의 고토쿠[幸徳] 사건 이래 사회주의 운동 침체에 따라 국가주의 운동도 또한 현저하게 퇴영, 미온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이쇼 6~7년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재현하게 된 야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유행적 발전을 이루고 이런 결과로서 신흥 사상 단체, 노동단체 등이 족생하게 되어 노동쟁의 빈발, 치열한 보통선거기성 운동 등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정세에는 필연적으로 국가주의 운동이 반발적으로 발흥하여 그 이래 국가주의자 등은 연달아 “국체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사상에 대하여 그 박멸을 기한다(大正赤心團)”, “나아가 적화선전을 타파하는 것을 기함(赤化防止團)”, “일체의 사회주의와 대립하여 확고하게 그것의 토벌을 기함(建國會)”, “비밀본적 사상의 배격(大行社)” 등등 반사회주의 기치를 든 단체를 조직하여 그것에 대항하고 신랄히 사회민주주의의 배격에 몰두함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이쇼 11년부터 그 단체 수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앞서 기술했듯이 국가주의 단체가 반동 등의 명칭을 얻게 된 것은 실로 이 당시의 일에 속한다. …… 이러한 정세하에 유존사, 행지사, 건국회 등은 일찍이 ‘혁명 일본의 건설’, ‘유신일본의 건설’, ‘천황정치의 확립’, ‘의회중심주의의 타파’, ‘산업대권의 확립’, ‘일군만민의 무착취 국가건설’ 등의 강령을 들고, 내정개혁, 혁신일본 건설을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은 당시 객관적 사회정세의 증압 속에서 그 주장을 운동형태로 구체화 할 수 없었고 소위 잠복 상태로 있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쇼와 5~6년경 이후 신흥 국가주의 운동의 신장을 보자 이와 같은 주장은 신흥세력의 선봉

적 지침이 되어 그 이래 신흥단체의 대부분이 혁신일본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기성단체 중에서도 여기에 추종하여 가담·합류하는 것이 생겨나 지금은 국가주의 운동 즉 일본 혁신운동이라는 추세를 초래하게 되었다.

위의 자료를 볼 때 우익은 메이지기에 발생했고, 정한론 이후의 대외 강경운동과 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쇼와기에도 대륙낭인적 인물들이 우익에서 접하는 비중이 컸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우익의 사상적 공통점은 황실중심주의를 기조로 하는 국가지상주의로 보고 있다. 우익은 1919년 전후 혁신성을 띠게 되고, 1930년 런던군축조약,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세력화하게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위 내용을 참고로 하여 당시 일본 사회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우익의 위치를 파악해 보자.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구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 속에 시작된다. 서구열강은 자유무역 제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압력을 가해왔다. 일본 도쿠가와막부는 1854년 미국 페리 함대의 군사적 압력에 눌려 미일화친조약을 맺고, 그로부터 4년 뒤 중국에서의 제2차 아편전쟁(제2차 중영전쟁)을 예를 들며 통상조약 체결을 강요한 미국 측의 위압 아래 굴욕적인 수호통상조약을 천황의 칙허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맺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실현된 일본의 개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서구열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계에 강제적으로 편입해가는 과정의 일환이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서구열강에 의한 반강제적인 조약체결을 둘러싸고 개국파와 천황을 내세운 존왕양이파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 개국파와 존왕양이파 사이의 논쟁과 대립 결과는 이후 일본 근대의 진로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막부 타도에 성공한 존왕양이파가 수립한 메이지정부는 개국론과 양이론의 궁극의 목표, 즉 ‘조약개정’과 ‘국위발양·해외웅비(國威發揚·海外雄飛)’를 국가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조약을 개정하고 해외웅비할 수 있는 실력을 ‘문명개화’의 정책으로 이룩하고자 했다. 이후 서세동점이란 위기적 국제 환경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국가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서양 선진국을 모델로 삼아 부국강병 노선을 추진해 갔다.

성립 초기 메이지정부는 아직 힘이 충분치 않아 각 번(藩)의 협력이 필요하였기에 공의(公議)존중의 방침을 취하였다. 그러나 1871년 폐번치현으로 번이 소멸하고 정부 기초도 확립되자, 정부는 실권을 장악한 사쓰마·조슈 양 번 출신자의 번벌(藩閥) 전제 색채가 강해졌다. 이 정부에 대해 공공연하게 번벌 전제 반대의 기치를 높이고 정치개혁을 꾀한 것이 1873년 정한론에서 하야한 이타카기 다이스케(板垣退助) 등의 세력이었다.

자유민권운동이란 1874년 민찬의원설립건백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조경감·국회개설·불평등조약 개정의 3대 요구를 내세워 메이지정부를 압박하였던 정치운동이다.

처음 운동의 중심은 구(舊)사족이었지만 점차 지식인·농민도 참가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규모의 운동으로서 일본 전토를 석권했다. 전국 각지에서 자유민권을 주장하는 정치적 결사가 결성되었다. 이런 정치결사 중에는 이타카기 다이스케가 1874년에 세운 입지사, 1875년에 결성된 애국사, 후쿠오카현에 1878년 결성된 향양사(1879년 12월 현양사로 개칭), 1878년 구마모토현에 설립된 구마모토 민권결사 중 최좌파였던 상애사, 1881년 ‘황실봉대(奉戴), 국권신장’를 내걸고 삿사 도모후사(佐佐友房)가 결성한 자명회(1889년 개조하여 구마모토국권당 설립) 등이 있다.

이 운동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1880년에서 1881년 가을 사이였다. 1880년

애국사가 중심이 되어 국회기성동맹이 결성었는데, 이를 계기로 국회개설청원운동이 고양되었다. 또 민권파는 당시 발각된 대규모 정부 비리사건인 홋카이도[北海道] 개척사의 관유물 불하사건을 집중공격하며 메이지정부의 전제성을 비판·규탄하여 메이지정부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 시점에서 정치의 주도권은 자유민권운동 측에 있었는데, 메이지정부를 이 위기에서 탈출시킨 것이 기사회생의 쿠데타로 불리는 1881년 정변이고, 천황의 조칙을 통하여 10년 후인 1890년 국회를 개설한다는 약속이었다. 이를 통하여 자유민권운동은 당면의 최대 정치목표를 상실하고 정치의 주도권을 메이지정부에게 빼앗겨버렸다.

정변 후 이타가키를 총리로 하는 자유당이 결성되고, 정변으로 하야한 오쿠마를 당수로 하는 입헌개진당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정치주도권을 메이지정부에 빼앗긴 상태에서, 당 내부에서 급진적 운동이 일어나자 1884년 자유당은 해산하고, 입헌개진당도 오쿠마 등 수뇌부가 탈당하는 등 약화되었다.

자유민권운동이 퇴조하고, 국권주의적 주장이 대두하는 시기이다. 일본에서의 자유민권운동은 천부인권설 등을 주장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권주의적 색채가 농후하였다. 서세동점이라는 위기 속에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위발양·국권신장을 꾀하기 위해 국회개설 등 자유민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자유민권론자 자신 속에 민권론과 국권론이 공존해 있고, 국권론과 민권론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은 이미 사케타 마사토시[酒田正敏, 1978]가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민권론자를 포함하여 많은 일본 지식인의 국제정세 인식을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서구열강에게 계속적으로 ‘병탐’·‘잠식’ 당하고, 병탐·잠식되지 않은 국가라도 약체로서 풍전등화와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본, 청국, 터키 3대 제국을 보더라도 어느 한곳도 국세를 떨치지 못하고 아시아인이 서구인에게 멸시·차별받고, 같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에 개시된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은 청국이 중심이 된 비교적 안정적인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크게 동요시켰다. 청국과 조선의 안정이 위협받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일본의 명운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민감하게 인식하였다. 이런 서구열강의 압력 앞에 일본의 독립과 발전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느냐가 당시 많은 일본인이 스스로 부여한 과제였다.

그런데 1881년 정변을 거쳐 국회개설이 현실화되어 각종 정당의 결성 등 정치적으로 분망하고 내정상의 문제가 산적해 있던 시기였다. 헌법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주도면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또 지방제도의 정비도 진행되어 1888년 4월에는 시제와 정촌제가 공포되고 1889년 4월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헌법 발포 후인 1889년 5월에는 부헌제가 공포되었다. 이 시기 일본 국민 대다수의 관심도 역시 국회개설이라는 내정적 과제에 쏠려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정적 과제에 관심이 쏠려 외정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시기에 일본의 국제적 지위라는 보다 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국권신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에 주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내정문제에 우월하는 외정, 즉 대외문제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런 경향이 당시 민권론에서 국권론으로의 전향 혹은 국권론자라 불리는 현상이다. 강대한 서구열강과 대치하여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국위를 밖으로 확대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들 관심 중 하나는 불평등조약 개정이었다.

불평등조약 개정은 메이지유신 이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외교문제였는데, 민권운동의 고양 속에서 내정문제로 발전하였다.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1886년부터 재일 각국 공사 등과 도쿄에서 조약개정 회의를 열었다. 이노우에 개정안에는 영사재판권을 철폐하는 대신에 외국인 재판에는 외국 국적의 재판관을 임용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자 민권론자나 국수주의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굴욕조약반대를 외치며 격렬하게 정부를 공격하였다. 1887년 정부는 조약개정 무기연기를 외국에 통고하고 이노우에 외상은 사임하였다. 정부가 조약개정 달성을 위하여 서구열강의 환심을 사고 일본이 문명국임을 외국에 나타내기 위해서였지만, 1883년 영빈관으로서 완공된 로쿠메이칸(鹿鳴館)에서 외국 외교관 등과 일본 상류계급 남녀가 서양풍의 무도회를 여는 등 표면적 서양화를 꾀했던 것도 국민의 반발을 샀다.

조약개정 반대운동의 고양은 침체해 있던 민권운동을 다시 회복시켰다. 민권론자의 재집결을 꾀하는 대동단결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민권론자들은 1887년 언론결사의 자유, 지조경감, 외교실패 만회 등 세 가지 요구를 내건 3대사건건백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노우에 뒤를 이어 외상이 된 오키타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서구열강 간의 대립을 이용, 국가별로 교섭을 진행시켜 외국 국적의 재판관 임용을 대심원에 한정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 안도 외부에 누출되어 반대운동이 다시 고양되었다. 1889년 오키타는 현양사 소속원에게 습격당하여 중상을 입고 교섭은 중지되었다. 오키타조약 개정반대 운동세력은 구자유당 계열과 비민당 계열 세력이었다. 즉 대동협화회·대동구락부(이상 자유당 계열), 보수중정당·정교사·『일본』신문그룹, 규슈(九州)단체연합(이상 비민당 계열)의 5단체와 9

신문잡지사 연합이었다. 이 중 정교사·『日本』신문그룹, 규슈단체연합 중 후쿠오카 현양사와 구마모토 국권당은 이후 대외강경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서 1930년대 일본 사회에서 메이지 시기의 우익으로 간주했던 현양사와 국수주의자에 관하여 살펴보자.

현양사는 애국사, 뒤의 국회기성동맹의 일원으로서 번벌정부를 공격하고 국회개설 청원운동에 참가한 단체이다. 1880년경부터는 점차 내정적 과제인 민권론을 벗어나 일본이 직면한 대외문제에 관심을 집중, 국권확장과 이를 위한 군비확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제국의회가 개설되자 이당(史黨)과 제휴했을 뿐 아니라 1892년 제2회 총선거에서는 정부의 선거간섭에 홍의병 노릇을 하여 후쿠오카 시내 각지에서 민당파를 습격하여 유혈사건을 일으켰다. 조약개정 문제에서는 이노우에 가오루 안과 오쿠마 시게노부 안에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현양사원이 오쿠마를 습격하여 중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또 흥아론(興亞論)을 내세워 청일전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였으며 조선을 합병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도 하였다. 국민동맹회나 대로동지회에 참가하여 대러시아 강경외교를 주장하는 한편 만주의군을 파견하여 러일전쟁의 후방공작을 꾀하기도 하였다. 현양사의 활동은 현양사 출신인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가 설립한 흑룡회(1901)와 낭인회(1908)로 이어졌다(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 책 제2부 1장, 2장 참조).

국수주의자들의 사상계 등장은 정교사를 결성하고 기관지 『일본인』을 창간함과 동시에 정교사와 동맹관계에 있는 신문 『일본』의 전신인 『도쿄전보』가 창간된 1888년 4월이다.

국수주의 사상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국수주의 탄생의 동기로서 메이지 정부가 채용한 ‘구화[서양화]’ 정책에 대한 반발을 지적해야만 한다. 메이지

정부는 서구열강과 대등한 국가를 만들고자 문명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외교면에서 불평등조약 개정 실현이라는 과제의 연장으로서 구화정책을 채용하였지만 1880년대 초반 그것은 국내적 불황을 가져왔고, 로쿠메이칸 외교로서 전개되어 갔다. 국수주의에 결집한 사람들은 모두 이 구화주의 정책에 대해 반발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공통되는 것은 각 국가의 국민이 갖고 있는 뛰어난 특성·개성(이것을 그들은 국수라고 칭했다)을 발휘하는 것이 세계문명의 공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본래 다양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문명이 구화주의 풍조 속에서 서구문명 일색으로 채색되는 풍조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들은 그 특성과 개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세계문명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분업의 논리에 기초하여 일본 국수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국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후년의 국수주의와 같이 천황 통치의 대의나 천황의 신성성이나 만세일제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이 농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라는 국토에 사는 민족의 긴 역사를 통해서 새겨진 생활의 연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즉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지리적·문화적인 관념으로서 국수가 주장되었던 것에 특징이 있다.

국수주의는 “장점은 채용하고 단점은 보완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 근처에는 각국의 다양한 ‘장점(=고유성)’을 존중하고 이질 그 자체를 배움으로써 오히려 국수를 견고하게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그들의 구화정책 비판은 서구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명의 훌륭한 점만을 섭취한다는 태도나, 그것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피상적이고 경박한 서구 모방 풍조를 비판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국수주의자들은 홍아론(동양맹주론)적 침략관을 갖고 있다.

서구열강의 압력 앞에 일본의 독립과 발전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 당시 이러한 문제에 하나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였다. 1885년 3월 16일 『시사신보』에 게재된 ‘탈아론’은 일본이 서구의 일익으로써 살아가는 길을 명시한 것이다.

청국에 대한 대결자세와 청과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연결되어 있는 조선과 절연을 주장하는 이 논설은 일본이 아시아와 결별해야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메이지정부에서도, 또 정부와 격렬히 대립하던 자유민권운동에서도 공유하는 것이다. 계몽사상가의 필두인 그의 발언은 영향력이 컸다.

그러나 ‘탈아’와는 다른 입장에서 아시아와 대면하고자 하는 조류가 존재했다. 즉, 홍아론, 아시아주의로 불리는 조류이다. 예를 들면 스기우라쥬고[杉浦重剛]는 1888년 서구 대 아시아라는 발상을 가지고 청·일 우호를 통한 아시아의 발전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강국론이라는 인식에 서서, 서구와 대치하기 위해서 일본과 청국의 우호관계가 불가결하다고 보았다. 후쿠모토 니치난[福全日南]도 1888년 이후 서구 대 아시아라는 구도 속에서 아시아의 부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는 백색인종과 황색인종의 대결로 세계를 파악하여 일본과 청국이 황색인종의 리더로서 동맹하여 아시아를 부흥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스기우라, 후쿠모토, 구가 가쓰난[陸羯南]이 아시아주의적 견지에 서 있다고 한다면 시가 시게타카는 인종경쟁적 견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서구세계에 대항하여 아시아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여기서 아시아 연대가 아니고 홍아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1880~1890년대에 주장된 아시아의 단결을 외치는 사상에는 진실된 의미의 대등·평등을 설파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동양맹주론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아론이 제기한 또 하나의 과제는 서구문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하는 문명 간의 문제였다. 후쿠자와는 일본의 서양화를 지상명제로 하여 아시아의 전통적 사상과는 결별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수주의자가 주장한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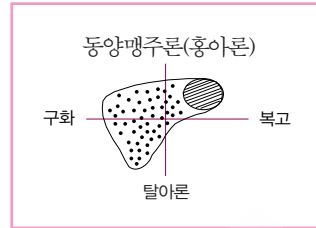


그림1 일본 근대 초기의 이념적 지형도.
사선 부분이 우익에 해당

아사상은 서구문명에 대치하기 위해 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문명을 압도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니며, 일본의 아시아 전통적 사상에 의거하여 서구문명을 상대화하고자 하는 지향이 보인다. 이러한 국수주의자나 현양사 계통은 탈아에 대하여 흥아를, 서구문명에 대하여 상대적인 자세를 선택하였다.

1889년 헌법을 발포하고 1890년 국회개설에 따라 근대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된 메이지정부의 정치자세는 내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서구열강의 위협에 대항하면서 아시아 침략을 수행할 수 있는 군비확장을 조속히 수행하는 것이다. 1890년 11월 개최한 제1 의회를 포함하여 초기 의회에 관해서는 종래 정부 예산안(군사비)을 둘러싸고 군비확장을 꾀하려는 정부와 민력휴양 노선을 주장하는 민당 측 의원들의 대립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대해 가토요코[加藤陽子, 2002]는 민권론자들이 국권주의적 색채가 농후했다는 점을 들어 과연 그것이 부국강병 노선과 민력휴양 노선의 대립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였다.

제1 의회(1890.11.29~1891.3.7)에 임한 민당 측의 슬로건은 경비절감과 민력휴양이었다. 세출을 될 수 있는 한 긴축하여 그 부분을 지조경감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중의원(국회는 중의원과 귀족원의 양원으로 구성)은 정부세출 예산액의 약 11%를 삭감하였다. 그러나 육해군 경비관계의 삭감은 4.9%에 머물고 있다. 즉, 육해군 비용에 대해서 정부원안 2,182만 엔 정도를 사정단계에서 2,076만 엔으로 삭감하였는데, 그 감액의 대부분은 무관의 봉급 등이고, 병기·탄약·포대·군함 건조 등 소위 순수 군사비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에서 단지 5만 엔을 삭감했을 뿐이다.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1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식은 정부 측에도 민당 측에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타협이 성립하여 중의원 측 사정안 중 약간을 부활시키는 형태로 예산안은 중의원, 귀족원 양원에서 가결되었다. 군사비 삭감에 대해서 민당 측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민당 측이 민권파의 대외인식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국가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상이다.

제2의회에서 1892년 11월 29일 개최하는 제4의회에 이르기까지 중의원 예산심의에서는 내각이 계상하는 군함 건조비를 전액 삭감하였다. 그러나 제2의회에서는 타협이 성립되지 않아, 예산삭감에 따라 발생한 삭감액을 지조 20% 감세로 돌리려는 민당 측과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 정부는 삭감을 위법이라 하여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제2의 총선거는 1892년 2월에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 임하여 정부는 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정부를 지지하는 당시 ‘이당’이라 불리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일본 선거사상 최대의 선거간섭을 하였다. 내무대신은 직접 경찰관을 이용하고, 또 당시 장사로 불리던 이당 계열의 폭력단을 사용하여 민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메이지정부는 1891년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본에 친선방문한 청의 북양함대의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해 군함 건조비를 1893년도 예산에 계상

하였다. 그러나 제4의회 기간 중인 1893년 1월 12일 중의원은 군함 건조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외 관리비용, 관청경비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871만 엔의 삭감을 결정하였다. 이후 삭감에 대한 정부의 부동의, 중의원의 내각탄핵상주안가결, 휴회, 천황의 조서를 통한 국면타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때 중의원의 삭감 이유를 보면 군함 건조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해군부 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해군부 내의 문제란 제2의회에서 소위 만용연설(해군 예산 삭감에 분노한 해군 대신이 오늘의 일본의 안녕을 지킨 공은 사쓰마·조슈에 있다고 역설한 연설)을 하여 의원들의 신경을 건드린 해군 대신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결국 당시 이토 히로부미 수상은 천황을 등장시켜 국면해결책을 선택하여 1893년 2월 10일 화충협동의 조치가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해군 군비확장에 대한 중의원의 이해를 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정리를 요구하며, 현안인 군함 건조비에 대해서는 금후 6년간 매년 30만 엔을 궁정비에서 지출하고, 부족분을 관리 비용의 1할을 충당하여 보충하도록 명한 것이다.

이상 중의원의 군사예산에 관한 공방을 보면 제1의회에서 ‘이익선’의 수호가 독립자위에 대한 길이라고 언명한 당시 수상 야마가타의 시정방침 연설 내용과 의원들의 생각 사이에 군사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황의 조치와 여기에 호응하는 자유당의 방향전환에 따라 제1의회부터 제4의회까지 이어진 초연내각과 중의원의 정면충돌은 종식되었다.

제4의회 이후 자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이번에는 조약개정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1894년 8월 청일전쟁 직전까지 정부 비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국내정치에서 정부와 의회의 기본적인 대립은 제4의회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3억 엔 이상의 배상금이 들어오자 정당은 정부 비판세력의 역할을 버리고, 지방 이익의 매개자로서 정책 결정에 대한 참가를 피하기 시작하였다.

조약개정 문제, 조선을 둘러싼 청·서구열강에 강경한 대외강경파들의 집합체로 1891년 동방협회가 결성되었다. 동방협회 회원에는 정교사 관계자 이외에 이토 히로부미 등 정부수뇌와 군관계자도 많고, 구자유민권운동가나 도야마 미쓰루·삿사 도모후사 등의 우익 국권파 사람들이 결집해 있었다. 서구열강의 위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압박해 오고 일본은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그 대응책을 생각하는 모임이었다. 1898년 동아동문회는 아라오 세이[荒尾精] 문하의 대륙낭인과 고노에가 경영하는 정신사계의 합작이었다(이 부분의 자세한 것은 이 책 제2부 3장 참조).

1894년 청일주전론에는 두 개의 방향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문명, 청국=미개’라는 인식하에 문명국이 미개국을 깨부수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것이 탈아의 완성이라는 주장이다. 메이지정부나 후쿠자와 유키치, 의회의 민당세력이 대개 이 입장이다. 또 하나는 아시아 개혁을 위하여 청의 각성이 필요하고 이 각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은 청국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서서 주전론을 주장한 것이 우치무라 간조나 후구모토 가즈오 등의 논자이다. 이런 생각은 탈아의 방향과는 반대의 입장으로 흥아, 즉 아시아의 개혁을 지향하는 점에서 같은 주전론이라 하더라도 전자와는 입장이 크게 달랐다. 주전론을 주장하는 것은 탈아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의 패자가 되어 흥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내무성사(內務省史, 1980)』를 보면, 패전 전 공안당국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메이지 시대의 우익에 대하여 다음과 서술하고 있다.

메이지 시대의 우익사건으로는, 1882년 4월 6일 이타카기 다이스케 암살 미수사건, 1889년 2월 11일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 암살사건, 같은 해 10월 18일 외무대신 오키마 시게노부 폭력사건 등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모두 국수주의자나 국가주의자들의 개인적 행동으로, 소위 우익운동으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다. 또 우익단체로서는 1875년 니시무라 시게키 등의 도쿄수신학사[東京修身學舎, 후의 일본흥도회], 1881년의 히라오카 고타로·도야마 미쓰루 등의 현양사, 또 1901년의 우치다 료헤이 등의 흑룡회 등의 결성이 있는데 당시 이들 단체에는 경찰의 단속대상이 될 만한 문제는 없었다. 그 뒤 러일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에는 경제방면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정치방면에서 정당의 발달로 공리주의·개인주의적 사상이 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사상은 보수 반동으로서 이를 주창하는 자는 벌죽에 영합하는 곡론으로 지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시대는 국가주의 운동의 침잠기였고 이들 사상에 기초한 범죄사건도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없다.

Ⅲ. 우익운동의 기점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매스컴의 발달, 중간층의 증대를 초래했고 사회문제를 현재화시켰다. 또한 이 전쟁의 결과 일어난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나 독일·오스트리아의 전제 붕괴로 상징되는 여러 혁명은 일본 사회에도 강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데모크라시’, ‘개조’, ‘혁명’, ‘해방’, ‘유신’을 강령으로 낚은 일본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단체가 탄생하였다.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 시민운동이 왕성했는데, 대표적 단체에는 도쿄제국대학 학생조직인 신인회(新人會, 1918, 점차 사회주의가 사상적 중심이 됨), 요시노 사쿠조오[吉野作造] 등 학자와 저널리스트 결합체인 여명회(黎明會, 1918), 와세다대학 학생조직인

민인동맹회(1919), 민인동맹회에서 파생된 건설자동맹(1919), 메이지 시기 이래 보통선거추진체였던 보통선거기성동맹의 재조직(1919), 개조동맹(1919, 파리강화회의 때 파리에 체재했던 정치가·저널리스트 결집체), 일본사회주의동맹(1920, 탄압과 아나키즘계와 마르크스계의 대립으로 쇠퇴), 일본노동총동맹, 일본농민조합, 피차별부락민 해방을 부르짖는 전국수평사(1922), 신부인협회(1920), 무샤노고지 사네미쓰(戔者小路實篤)나 다치바나 고사부로(橋孝三郎) 등의 농본주의적 개조운동 등이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개조운동이 일어나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개조운동은 사상적으로는 점차 사회주의로 기울어졌다.

그중 우익운동의 원류로 평가되었던 노장회(老將會)와 유존사(猶存社)에 대해 살펴보자. 1918년 10월 기타 잇키(北一輝)·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와 함께 3대 우익 지도자로 불리는 미치가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가 중심이 되어 노장회가 결성되었다. 미치가와와는 “쌀소동으로 폭발한 사회불안과 파리 강화회의를 계기로 기세를 탄 데모크라시 사상의 횡일(橫溢)은, 1918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 장래 일본의 운명을 결정할 하나의 기폭제라고 보여진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잘 응용하면 국가개조의 기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개조 연구를 위해 매월 1회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는 옛 대외강경파뿐만 아니라 오카와 슈메이, 개조동맹의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 후에 신인회 회원이 된 다이라 데이조(平貞藏) 등도 참석하였다. 1919년에는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국가사회주의로 전환한 다카바타케 모토유키(高田素之) 등 사회주의자들과의 교류를 넓혀갔다. 모임에서는 민본주의, 일본 정치개혁, 보통선거실시 가부 등을 논의하였는데, ‘국내적으로는 데모크라시,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분위기였다.

회원 중 한 사람인 오카와 슈메이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편력하고 도쿄

제국대학에서 인도철학을 공부하였다. 졸업 후에는 인도에 대한 영국 식민 정책을 연구, 이것으로 박사를 취득하고, 만철 조사부에 들어갔다. 그는 1919년 8월 노장회 회원 중 활동적인 분자를 모집해 유존사를 결성하였다. 강령으로는 “혁명일본의 건설, 일본 국민의 사상적 충실, 일본 국민의 합리적 조직, 민족해방운동, 도의적 대외정책의 수행, 개조운동의 연락, 전투적 동지의 정신적 단련”을 내세웠다. 미치가와, 오카와를 중심으로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니시다 미쓰기[西田税, 1936년 2·26사건 반란주모자로 체포·총살형] 등이 회원이다.

유존사는 발족 직후에 미치가와의 발의로 상해에 있는 기타 잇키를 이론적 지도자로서 맞이하려고 오카와 슈메이를 8월 상해로 파견하였다. 이때 기타 잇키는 “베르사유부터 전 세계에 팽배한 배일열, 지나 전토를 뒤덮은 배일운동 속에서” 고민하며, 뒤에 일부 우익운동의 교전이 된 『국가개조안원리대강』(뒤에 『일본개조법안대강』으로 출판됨)을 집필 중이었다. 후에 오카와 슈메이는 “이 『국가개조안원리대강』이 미치가와 군을 비롯 우리의 동지를 환희 용약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비단 우리들뿐 아니라 당시 개조운동에 몸 담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절망 속에 빠지게 했던 것은 단순한 개조 추상론이 아니라 실은 구체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타 군의 법안은 암중모색하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명백한 목표를 주었다”고 회상하였다.

기타 잇키는 1919년 말 상해를 떠나 다음 해 초에 도쿄에 도착, 유존사에 가담하였다. 기타 잇키, 오카와, 미치가와를 중심으로 하는 유존사는 후에 이른바 우익 ‘운동’의 하나의 큰 원류가 되었다(기타 잇키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 책 제2부 4장 참조).

내무성 정보국 『사회운동 상황』에서 지적하듯이 우익운동의 출발점은 좌익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기였다. 그리고 1930년 런던 해군군축회의를

둘러싼 정치과정 속에서 우익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협조와 군비축소에 비중을 둔 전후의 사회적 풍조는 일본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다. 1920년대 일본에서는 파리강화회의·워싱턴회의를 거쳐 군축 기운이 고양되고 있었고 갖가지 데모크라시 상황이 진전되고 있던 시기였다. 또 현실적으로 미·일 간 경제관계가 대단히 양호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29년 7월 성립된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민정당 내각의 정책 중심은 금해금(金解禁)과 긴축재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노우에 재정과, 대중국 유화 대영미 협조외교인 시데하라 외교였다. 대영미 협조외교의 성과는 1930년 런던 해군군축조약 체결로 나타났다.

런던 해군군축조약에서는 워싱턴회의에서 결정된 주력함 비율(미국 5, 영국 5, 일본 3)과 같은 비율로 보조함의 보유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미국 측에 대해서, 대미국 70%를 주장하는 해군강경파 특히 해군군령부와 70%가 안 되더라도 교섭체결을 피하고자 하는 하마구치 내각이 대립하였다. 회의결과 최종적으로 일본의 병력량은 총괄적으로 대미국 69.75%까지 획득되었지만 일본 국내 분열은 심각하였다. 조약은 1930년 4월 22일 조인되었지만 해군강경파를 중심으로 해군 군령부장의 찬성을 얻지 않고 천황의 통수사향인 병력량에 관한 조약을 조인한 것은 헌법 12조에 규정된 통수권의 간범이라는 논리가 등장하였다. 더욱 문제가 커졌던 것은 당시 야당인 정우회가 강경파 및 추밀원과 손을 잡고 내각 교체를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때 민간우익도 최저한의 요구인 대미국 70% 요구가 달성되지 않았던 점과 통수권 간범이라는 것을 내세워 격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런던 군축조약은 비준되었지만 통수권간범 논쟁은 그 후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장 1930년 11월 14일 하마구치 수상이 우익청년에게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편 군의 일부, 민간우익, 정계의 복고적 부

본이 처음으로 횡단적으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당내각에 반대하고 시대하라 외교에 반발하는 세력의 잔재가 1930년대 일본 정치의 한 축을 이루어 간다. 우익을 포함한 이들 세력의 시대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런던 군축조약을 서구열강의 일본 약화책으로 보았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워싱턴 체제가 일본의 대륙 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미국이 중국에 진출할 의도를 갖고 있기에 그 방해물인 일본의 군비확대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워싱턴 체제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강대국 영미의 세계지배의 분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일본의 대륙팽창의 정당성을 백인의 유색인종 지배에 대한 저항, 즉 비백인국 일본의 백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또는 일본을 맹주로 한 아시아 민족의 백인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단결에서 구하고, 또 그 정신적 지주를 일본 민족의 세계에서의 고유의 책임=국체에서 찾고자 했다.

둘째, 국내의 적은 영미협조노선을 주도하는 자들로 원로·중신·정당·재벌·군벌·관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당정치가 그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원리로 하는 집단이 천황을 옹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가 왜곡되고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았다. 천황 친정을 둘러싸고 소위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요약하면 대외적으로는 백인 제국주의에 대한 대결,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당정치=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타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된 이데올로기였다.

1931년 9월 18일 발발한 만주사변, 1932년 9월 만주국 승인, 1933년 3월 국제연맹 탈퇴에 이르는 전쟁노선과 외교정책 전환에서 그 주역을 담당했던 것은 관동군을 선두로 정부로부터 반독립화한 군부 특히 육군이었지만 그 배후에 국민의 열광적 흥분에 휩싸인 여론의 지지가 있었다. 1932년

10월 리튼보고서가 국제연맹에서 공표되자, 그 내용이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 타협적인 내용이었음에도 일본 내 여론은 이 보고서에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최후의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는 메이지 이래의 일본 외교를 되돌아보며 “국가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토 히로부미 공을 비롯하여 우리들은, ‘동양의 맹주인 일본’이라든지 또 ‘아시아 먼로주의’와 같은 좁은 식견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일본’이라는 점에 착안해 왔다. 동양의 문제에서도 역시 영미와 협조했기 때문에 그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아시아주의’라든지 ‘아시아 먼로주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편이 해결의 첩경이다. 좀 더 세계의 대국적 견지에 서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이온지의 희망과는 반대로 스스로 워싱턴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고 메이지 이래 전통적인 대영미 협조 외교노선에서 아시아 먼로주의적인 ‘자주외교’ 혹은 ‘적극외교’ 노선으로 크게 방향전환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게는 국제적 고립화의 길이 되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국내외의 현상타파를 부르짖는 혁신세력이 정치표면에 분출하였다. 만주사변 후 일본의 현저한 현상 중 하나는 공산주의·사회주의 등 좌익진영 활동가들의 국가주의 혁신진영으로의 전향 혹은 군부와의 접근이었다.

특히 군부가 급속히 정치적 발언력을 강화시켜 부패한 정당정치의 인기 하락에 반비례하여 정치혁신의 주역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모으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31~1932년에 정당정치 타도를 꾀하는 쿠데타 계획, 정당정치가·재제인사에 대한 테러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1932년 2~3

일에는 혈맹당 그룹이 이노우에 전 장상(藏相), 단 다쿠마[團琢磨] 미쓰이 이사장을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혈맹당사건의 충격이 끝나지도 않은 1932년 5월 15일 해군 청년장교 등이 중심으로 한 일단의 세력이 수상관저를 습격 이누카이 수상을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5·15사건). 이 사건은 수상뿐만 아니라 ‘군측(君側)의 간신’인 정당·재벌·관헌 등의 특권계급을 직접 토벌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천황 아래에서 유신 일본을 건설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회운동의 상황』에 기술되어 있는 우익단체의 규약장령 선언에서 그들이 달성하려던 과제와 타파하려던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단체의 추구과제는 ‘국체(명륜회)’ 내지 ‘건국의 정신(京大 猶興學會)’에 기초하는 정치, ‘군민일치(대일본생산당)’, ‘일군만민정치(구국학생동맹)’ 등으로, 일련의 국내 정치체제 개혁이 공동목표였다. 이 말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본위(명륜회)’로 ‘정당정파에 초월(관동국수회)’하여, 즉 국내의 모든 대립을 극복하고 ‘공존공영의 정치(대일본생산당)’를 실현하려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배격해야 할 대상은 ‘국체관념이 결여된 정치인, 금융과 두 전제정치, 정우회·민정당, 공산당, 전협(全協), 아류 공산주의, 사민(대일본생산당)’, ‘정당정치의 누습(신무회)’, ‘의회중심주의(건국회)’, ‘공산주의, 사민, 부르주아 파시즘(국가사회주의일본학생협의회준비회)’, ‘비국가사상(애국학생연맹)’, ‘의회제도(구국학생동맹)’, ‘민주주의·자유주의·기만적 협조주의·망국 정당·재벌(낙북청년동맹)’ 등이다. 결국 현재의 나쁜 정치의 근원으로 의회제도와 정당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이 새로운 정치 아래 추진해야 할 외교로는, ‘강경외교(대일본생산당)’, ‘대륙적극정책(애국사)’, ‘동아대륙정책의 적극적 수행(명륜회)’, ‘대

아시아주의(애국청년동맹) 등 중국 내지 아시아로의 적극적 팽창을 주장하였으며, 그것은 ‘백인 제패의 불공정한 현 세계질서(대일본청년동맹)’, ‘세계의 과당독점국민(국가사회주의학맹)’, ‘침략적 백인세력(대일본생산당)’을 타파하고 ‘정의외교(명륜회)’, ‘국제정의(대일본청년동맹)’를 실현하는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현재의 ‘퇴영적 추종 외교, 굴욕적 런던조약(명륜회)’, ‘국제주의(낙북청년동맹)’ 등은 공격대상이었다.

이어 경제정책면에서는 ‘계획경제(국가사회주의학맹)’, ‘국가계획경제’, ‘일만(日滿) 통제경제(구국학생동맹)’, ‘경제통제·자급자립 경제(낙북청년동맹)’ 등이 주장되었고 그것은 또한 ‘산업대권 확립(건국회)’, ‘황국적 경제조직(신무회)’ 등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국민의 생활보장(대일본생산당, 낙북청년동맹)’, ‘국방충실(대일본생산당, 명륜회, 낙북청년동맹)’이 기대되었다. 이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조직(국가사회주의학맹, 신무회, 건국회, 구국학생동맹, 낙북청년동맹)’, ‘망국적 자본주의 경제·계급적 이기주의(대일본생산당)’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당시 정치세력 중 우익의 위치를 살피고자 할 때 이토 다카시(1971)의 ‘복고-혁신’ 세력에 대한 파악은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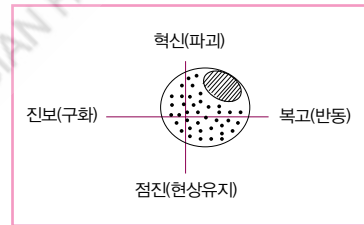


그림2 1930년대 이념적 지형도, 사선 부분은 우익에 해당

IV. 국체명징운동

근대 일본의 성립은 ‘서양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진보된 서양

의 존재를 의식하고 모방하면서 진행되었다. 서양화 시대 한편에서는 ‘국체’ · ‘국수’가 강조되었지만, 실체는 그 우세를 실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승국 지위, 그리고 세계 3대 강국의 하나가 되었다는 자부심은 서구문명을 상대화하고 자민족 중심적인 가치를 재인식하는 토양을 가져왔다. 일본에서 1930년대는 확실히 그것이 극단적인 시기였다. ‘외래적’이라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공격을 받고 협동 · 멸사봉공 · 국가 · 민족적 가치가 우선시되었으며, 자본주의와 의회주의가 공격을 받고 통제경제 · 정당개혁 · 의회제도 개혁이 주장되던 시기였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영미의 서구열강이 지배하는 질서를 타파하고, 국권 확장을 소리 높여 주장하던 시기였다.

1935년 들어서 최대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천황기관설사건이다. 천황기관설이란 주권은 법인으로서의 국가에 있고 천황은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써 그것을 행사한다는 미노베 다쓰기치(美濃部達吉)의 헌법 해석이다. 국가법인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한데, 속칭 기관설로 불렸다. 미노베 설을 헌법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이라며 배격하는 움직임은 이 이전 우익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치화되는 계기는 1935년 2월 귀족원에서 군인 출신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의 비방연설이었다. 기쿠치는 통치권의 주체를 국가로 하고, 천황을 그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하는 천황기관설은 천황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천황의 통치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반국가적인 것으로 공격하였다. 당초 이것이 정국을 흔드는 문제로까지 발전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았다. 당시의 오카다(岡田) 수상은 미노베 학설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천황 자신도 국가주권설의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도 전해졌다. 이것이 정치문제로 확대했던 것은 당시 야당인 정우회가 이 문제로 오카다 내각을 공격하였고, 재향군인회나 민간우익이 기관설 배격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미노베가 런던 국축조약 체결시 ‘통수권간범’이라 주장한 해군 군령부나 우익의 헌법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논박한 점도 작용했다. 이제는 문제가 헌법 해석이 아니라 국체 관념이 되어버렸다. 이리하여 국체명징운동이라는 문제가 형성되었다.

오카다 내각은 국체명징운동에 굴복하여 천황이 통치권의 주체라는 국체명징성명을 내고 천황기관설을 국체에 반한 것으로 단정, 그 학설의 배제를 결정했다. 그리고 1937년에는 문부성이 일본 국체에 관한 정통적 해석서로서 『국체의 본의(國體の本義)』를 간행·배포했다. 이 책은 자유주의·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일본은 황실을 종가(宗家)로 하는 ‘일대가족국가’라 하여, 천황에 절대순종·몰아귀일하는 것, 직분을 완수하고 화를 실현하는 것이 일본 국민의 자세라고 주입시키고 있다.

메이지유신으로 왕정이 복고되고, 인민을 직접 정부가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천황 통치의 정통성을 인민에게 설파하기 위해 국체론에 에너지를 집중했다. 그 때문에 복고국학자들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최고신 만들기과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신칙에 따른 천황제 정통성론이 주류를 점했다. 그러나 1870년대까지는 근대 서구사상의 유입으로 자유민권사상 속에는 계약국가론, 국약(國約)헌법론, 영국 군주제의 군림하더라도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범으로 삼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실론(帝室論)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메이지 초기 반정부파인 자유민권론자를 포함, 당시 거의 모든 세력이 ‘황실 존중’을 기치로 내세웠다. 천황을 등에 업고 막부를 타도하였기에 천황에게 정통성이 있어야 했다. 진짜 문제는 군권과 민권의 관계설정이었다. 정치적 군주로서 천황을 확립시키는 것이 이 시기 핵심과제였다. 왜 천황에게 국민들은 충성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도 뒤에 맹위를 떨치는 가족국가론적 국체론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시기였다.

메이지헌법 제정과정에는 입헌정치로의 이행이 국체의 변경인가 아닌가가 정부 내에서 논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입헌정치의 이행은 정체의 변경으로 국체의 변경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착하였다. 그리고 메이지헌법에 따라서 국체의 기초적 원리가 제시되고 교육칙어에 따라서 그 해석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기서는 천황 통치의 정통성이 만세일계(萬世一系)에 있다는 것, 그리고 충효의 덕목이 국체의 정화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왜 일본의 국체가 만방무비인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가 생겼다. 러일전쟁 이후는 황실을 종가로 하는 특유의 민족적 결합관계로부터 국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가족국가론적 국체관이 일반화되었다.

헌법학의 분야에서는 이치키 기도쿠로[一木喜徳郎]와 같이 국가는 통치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설과, 호즈미 야즈카[穂積八束]와 같이 국가는 그 자체의 의사를 갖지 못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자연인(천황)의 의사만이 존재한다고 하여 천황을 통치권의 주체로 보는 국가=천황론을 주장하는 보수적 사상이 존재하였다. 이치키의 영향을 받은 미노베 다쓰기치의 천황기관설을 호즈미를 스승으로 하는 우에스기 신기치[上杉眞吉]가 천황 친정론의 입장에서 비판하자 미노베는 국체는 문화적 개념이라고 하여 법학적 세계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요시노 사쿠조도 일본 국체의 우수성은 특별한 군신 정의(情誼)관계라는 민족정신의 문제라고 하여 정치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데모크라시와 국체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이쇼기에는 공인의 이데올로그인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조차도 「우리 국체와 세계의 추세」에서 군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야말로 국체의 안전이 된다고 설명했다.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이후 우익사상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국

체론도 활발해져 한편에서는 국가사회주의자의 일군만민론에 기초한 천황제 사회주의사상이 출현하고 한편에서는 천황기관설을 배격하는 국체명징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운동의 상황』에서는 국체명징운동의 사회적 의의를 혁신운동 추진에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과거 국가주의 운동은 대개 말초적 시국문제에 매달려 규탄적 행동을 반복하거나 혹은 일부 초조한 급진분자들이 테러를 자행하여 사회적으로 경시되고 빈축을 사왔으나, 이 국체명징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전하게 되자 그 기세가 정치적·사회적 모든 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국체명징운동이 표면적으로는 기관설 배격, 자유주의 법학 응징으로 나타났지만 그 사상적 근저에는 반자유주의로써, 궁극적 목표는 ‘자유주의 진영의 초멸격파’에 있고, 또한 시대적 성과를 이룸으로써 국가주의 운동 진영에 새로운 생기를 주입시키고 동시에 시대추진력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천황기관설사건(1935)을 계기로 일어난 국체명징운동의 광풍이 휘몰아친 직후인 1936년 대중종합잡지 『중앙공론』 1월호에 ‘자유주의’ 정치가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가 「자유주의자의 수첩」을 게재하였다. “자유주의인가, 통제주의인가(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의회정치인가, 독재정치인가)라는 것은 정치·경제·사회상에서 매우 중요한 제목이다”라고 시작되는 이 글에서 하토야마는 자유주의=의회정치=정당정치라고 주장하며 이에 입각하여 당시 거국일치 내각과 선거통제를 비판한다. 그러나 하토야마의 기대와는 달리 1936년 2·26사건으로 히로타(廣田) 내각이 들어서고, 정당내각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히로타 내각은 발족 때부터 자유주의 배제를 천명하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자유주의’란 제목의 글은 대중잡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V. 반영미세력으로서의 우익

1936년 2월 26일 민간우익 등과 연결된 황도파(육군 내의 파벌, 통제파와 대립)의 급진 청년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켜 천 수백 명의 병사가 수상관저 등 몇 곳을 습격하고 도쿄 일대를 점령하였다. 당시의 오키다(岡田) 수상은 난을 피했지만 각료들은 사상자를 냈다. 반란 측의 결기취지서에는 천황통수하의 ‘국체의 존엄’을 강조하고, 원로·중신·군벌·관료·정당 등은 사리사욕에 빠져 만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국체 파괴의 원흉으로 규정, 쇼와유신을 꾀하여 이러한 ‘군측의 간신’을 타도하고 국체옹호 확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반란군 지도자들 사이에 쇼와유신을 위한 구체적인 건설계획이나 정권구상은 없고 쿠데타라는 자각도 결여되어 있었다. 열렬한 천황신앙을 품고 있던 청년장교들은 일군만민사상 등에 근거하여 천황과 국민의 일체화를 방해하는 존재로서 중신들을 타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2·26사건은 일본이 입헌국가체제를 정비한 이래 최초의 대규모적 군부 쿠데타였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 진압 후 비공개 군법회의에 따라 민간우익 기타 잇키, 니시다 미쓰기를 포함해 17명을 사형에 처했다.

2·26사건 이후 우익 등 체제변혁의 움직임 중 제국헌법의 정지, 제국헌법 개정 방향의 국가개조 노선은 숨을 죽이게 되고, 제국헌법 내의 합법적 체제변혁 노선이 강화되어 갔다. 1936년 말경 일본 정계는 둘로 갈라져 정계개편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하나는 육군 중견층, 재계 대륙파, 정우회의 나카지마(中島)파, 민정당의 나가이(永井)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정권을 목표로 한 친군적 신당이고, 또 하나는 정우회의 하토야마(鳩山)파, 민정당의 주류파가 추진했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옹립의 정우회·민정당 합동운동이다. 이런 움직임은 기성 정당인 정우회·

민정당 주도의 정당정치가 국정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시대에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군부 대두로 정당·의회의 정치적 지위가 약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각 정치세력의 이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고노에 신당운동은 이후 신체제운동, 1940년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성립으로 전개되어 가는데, 민간 우익세력이 신체제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갔다(伊藤隆, 1983).

신체제운동 추진세력은 대외적으로는 동아신질서 건설, 동아협동체 건설 등을 내세운 반영미·친독이 노선이었던 점에서 일치한다.

배외주의적 방향으로 대중을 동원한 대표적 운동으로는 만주사변기에 육군이 실시한 국방사상 보급운동이 있고, 중일전쟁기에는 배영운동이 있다. 여기서는 적국 중국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중국·동남아에서 최대 지배권을 가진 영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축출하는 것이 중일전쟁의 최종 목적인다는 의식이 나타났다.

제1차 배영운동은 1937년 10월 중순에 시작되어 1938년 2월 들어 종식되었다. 30~300명 규모의 집회가 각지에서 개최되고 영국의 축출을 외치는 결의 등이 채택되었다. 모임의 대다수는 흑룡회, 입헌양정회, 일본혁신당, 명륜당, 대일본청년당, 건국회, 대일본생산당, 국수대중당, 동방회 등 우익단체가 주최한 것인데, 지역에 따라 시회(市會), 재향군인회분회(在郷軍人會分會, 향군분회), 신문사가 개최한 것도 있다.

1939년 6~8월에 걸쳐 제2차 배영운동이 고조되었다. 이 운동은 천진의 영국조계(租界)가 항일운동의 거점인 것을 구실삼아 영국을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영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지원 중지를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7월과 8월 2개월간 집회에 참가한 연인원은 약 152만 명(집회 평균 참가자 약 2,200명), 시위에 참가한 연인원은 약 63만 명(시위 평균 참가자는 3,800명), 강연회에 참가한 연인원

은 약 19만 명(강연회 평균 참가자는 약 700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이 배영운동은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에 대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반공협정의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일·독·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망하기에 이르게 된다.

Ⅵ. 맺음말

이상과 같이 제국주의 시대 일본 사회의 정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우익, 우익운동의 위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근대국가가 국민국가인 이상 내셔널리즘은 오히려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 발생은 막말(幕末) 서세동점의 충격에 기인한다. 이에 대항하여 일본 내 세력은 ‘위기적’ 국제환경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국가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서양 선진국을 모델로 천황제 국가의 건설,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확립, 아시아 침략을 추진해 갔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은 일본 내 세력이 과잉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세동점의 국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기의식·국난을 강조하고, 조장된 의기의식을 바탕으로 내부를 긴장시키고 자기 변혁논리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던 점이다. 이들 세력의 지향점은 ‘국내적으로는 데모크라시,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적 노선이었다. ‘위기적’ 국제환경 속에서 자국의 독립,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패션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자국의 독립을 위한 아시아 진출,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쟁이란 논리이다.

일본의 민간우익은 희생의 상대자인 아시아에 대해 함께 서구열강에 대항하자는 홍아론(동양맹주론)을 이념으로 내세웠다. 국내적으로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천황주의를 혁신의 상징으로 앞세워 국가개조를 꾀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지향점을 키워드를 쓴다면 ‘서양-아시아’와 ‘천황’, ‘혁신’의 3중주였다. 우익은 이런 지향점을 일본 민족의 사명이라 하며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졌다. 그런데 이런 우익세력은 제국주의 시대 고립된 일부의 세력이 아니었다. 이들 주변에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던 광범위한 동조세력이 존재하고 있던 점이 제국주의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우익에 대해 “일부 소수자를 제외하면 모두가 우익이다”라고 갈파한 지적도 있지만, 본고에서 말하는 우익은 요즘의 시각이라면 민간우익 혹은 극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우익은 1930년대 일본 사회 저널리즘에서 엄연한 정치세력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공안당국에서 우익을 국가주의 운동세력으로 취급하면서, “속칭 우익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은 현하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추진력인 일본 정신의 발로이다. …… 우리들이 진실로 방패와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은 일본 정신 이외에는 없다(사법성 형사국, 1939)”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도 당시 일본 사회 내에서 우익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짐작할 수 있다. 공안당국이 문제시했던 것은 테러 등 우익의 초법적인 급진분자 행동만이였다.

패전 후 일본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우익연구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랐으나 주도권을 획득한 것은 우익에게서 초국가주의, 파시즘의 사상·운동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일본을 전쟁에 몰아넣었던 초국가주의자들의 근대국가 공통의 내셔널리즘을 넘어서는 ‘초’, ‘극단성’을 찾고자 했다. 이를 통해 초국가주의·국가주의를 해체하여, 전후 평화 민주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이 현재의 일본을 바라볼 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 책의 제1부 4장과 3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창일(2002), 『근대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 김양희 외(2007), 『일본 우익사상의 기저연구』, 보고서.
- 김호섭 외(2000), 『일본 우익 연구』, 중심.
- 남상호(2006), 『근대일본의 제문제』, 경기대학교출판부.
- 박진우 편저(2006),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논형.
- 방광석(2007), 「'제국헌법'과 明治天皇」, 『일본역사연구』 26.
- 한일관계사학회 편(1998),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 함동주(1995), 『明治期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國權意識』, 『일본역사연구』 2.
- 加藤陽子(2002), 『戦争の日本近現代史』, 講談社.
- 橋川文三(1964), 「昭和超國家主義の諸相」, 現代日本思想大系 31, 『超國家主義』, 筑摩書房.
- 今井清一·伊藤隆 編(1974), 現代史資料 44, 『國家總動員』 2, みすず書房.
- 內務省 警報局(1929~1942), 『社會運動ノ狀況』, 三一書房 復刊.
- 大霞會 編(1980), 『內務省史』 第2卷, 地方財務協會.
- 司法省 刑事局(1939), 「右翼思想犯罪事件の綜合的研究」, 現代史資料 43, 『國家總動員』 1, みすず書房.
- 須崎慎一(1998), 『日本ファシズムとその時代』, 大月書店.
- 安部博純(1984), 『日本ファシズム研究序説』, 未來社.
- 伊藤隆(1971), 「右翼運動と對米觀」, 『日米關係史』 3, 東京大學出版會.
- 伊藤隆(1983), 『近衛新體制』, 中央公論社.
- 井上光貞 外 編(1989), 日本歴史大系 5, 『近代』 2, 山川出版社.
- 酒田正敏(1978), 『近代日本における對外硬運動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丸山眞男(1987),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 讀賣新聞.



패전 이후 우익세력의 부활과 배경

최영호_영산대학교

I. 머리말

여기서는 일본의 패전 이후 점령 종결에 이르는 기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전후 우익세력의 부활 과정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시 총동원체제 아래에서 우익세력은 군부와 영합하는 가운데 그 세력을 키워왔다. 중일전쟁 중에는 우익세력이 각 지방에서 중국을 매도하고 천황의 군대를 찬양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도 일본의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사상단체·문화단체로 활동했다.

전반적으로 우익단체가 체제 추종적인 활동에 안주하다보니 패전에 이르는 군부정권의 취약성에 관한 정보에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현실로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더욱이 전쟁의 막판에 이르러 일본정부 내에서 포츠담선언 수락을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익세력은 전혀 이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할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대체로 우익세력은 망연자실한 가운데 패전을 맞게 된다.

패전은 일본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황국

사관으로 무장한 우익세력에게 패전은 신국(神國)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에 이어 천황의 ‘인간 선언’은 그들의 국가주의적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점령 초기에 연합군 최고 사령부(SCAP)가 취한 일련의 민주화 조치들은 우익세력에게는 가혹한 현실적 기반의 파괴를 의미하였다.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황도(皇道)사상을 지탱하던 국가 신도(神道)의 해체, 우익 지도자에 대한 전범재판과 그들의 공직 추방, 우익단체의 해산 명령, 우익 활동의 자금원이 되었던 재벌의 해체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들은 이제 우익세력이 사회 전면에서 활개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점령당국이 우익세력을 근절할 만큼의 철저한 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점령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헌법에서도 천황제를 존속시켰다. 국제적인 냉전의 물결이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점령당국의 방침이 반공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화시켜 갔으며, 이와 함께 패전으로 주춤해 있던 우익세력이 다양한 우회적 방법으로 하나씩 다시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에 따라 반공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형태로 일본 국가가 독립을 하게 되자, 공직 추방에서 해제된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우익세력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사회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 패전 정국과 점령체제에 대해 우익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을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일본 점령체제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을까. 이 시기 움직임은 전후 일본 우익세력의 재편과 부활을 나타내는 맹아적(萌芽的) 표상이 되며 오늘날에 이르는 신우익세력을 배양시킨 토양이 되기도 한다.

II. 패전에 저항하는 우익세력

전쟁 말기 ‘본토 결전’, ‘일억 옥쇄’ 등의 전쟁 구호를 신봉하던 일본인 대부분은 무조건항복이라는 현실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패전에 즈음하여 자결을 선택한 일본인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틀에 자신들의 일생이 달려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게 항복하는 천황을 상상할 수 없어 이 시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무조건항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이어 천황 존재가 부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그들에게 무조건항복은 곧 천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의 죽음이 천황에게 목숨을 바치는 마지막 애국 행위로 간주했다.

야스다 다케시[安田武] 등이 펴낸 자료 『기록·자결과 옥쇄 : 황국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따르면, 패전 후 자결한 일본인이 8월 한 달에만 323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포츠담선언 수락에 직면하여 일부 군인들 중에서 극히 미미한 움직임으로 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도쿄의 근위(近衛)사단 청년장교들이 일으킨 반란사건이 가장 유명하다. 소위 ‘궁성사건’ 혹은 ‘8·15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항복을 저지하려는 육군 청년장교들이 간부 장교들을 살해하고 거짓 명령을 내려 천황의 패전담화 녹음 자료를 탈취하려던 것인데, 결국 이 사건은 실패로 끝났고 관련자들은 모두 자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우익세력 가운데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다소 저항의 움직임을 보인 단체가 있다. 패전에 즈음하여 산발적으로 일어난 우익단체의 저항 움직임 가운데는 ‘존양동지회(尊攘同志會)’의 집단자결 사건이 대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40년 4월에 나카무라 다케시[中村武], 이치마 요

시오[飯島與志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존양동지회’는 전쟁 종결에 반대하여 1945년 8월 12일 전쟁 종결을 주모하는 각료들을 공격,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일이 있다.

이어 8월 16일에는 이지마를 중심으로 하여 전쟁 말기에 평화공작에 가장 앞장섰던 기도 고이치[木戸幸一] 대신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의 관저에 쳐들어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 가운데 12명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쿄 미나토구[港區]에 있는 아타고야마[愛宕山]에 피신했다. 이곳에 피신한 12명의 이름과 당시 나이는 다음과 같다. (<http://www3.kiwius.com/~ingle/topix-2/atagoyama.html>)

飯島與志雄(35)	稻垣弘太郎(30)	和栗和英(19)
川口善一(33)	谷川仁(32)	稻村浩(18)
皆川貞次郎(22)	茂呂宣八(32)	茂呂かよ子(29)
關本貞次郎(35)	摺建富士夫(29)	摺建靜子(27)

경찰의 체포망이 점점 좁혀지자 이들 가운데 여성 2명을 제외한 10명이 8월 22일 수류탄으로 먼저 자폭했다. 여성 2명도 하산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 장례를 치른 뒤에 모두 자결했다. 이들 ‘12열사’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매년 아타고야마 신사(神社)에서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http://www.asahinet.or.jp/~gx8r-mtok/meisyo.html>)

이 외에도 패전에 저항한 우익단체의 움직임으로, ‘명랑회(明朗會)’와 ‘대동숙(大東塾)’ 직원들의 집단할복자살 사건이 유명하다. ‘명랑회’는 일본우선(日本郵船)회사 사원이던 히비 가즈이치[日比和一]가 1936년에 기존의 일본해원(海員)조합이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며 일

본주의를 내세우는 우익적 단체로서 결성한 조직이다. 패전에 직면하여 히비를 포함하여 12명의 조직원들이 8월 22일 천황 거소 앞 광장에서 “인애하신 폐하, 신민 1억으로 하여금 국체호지(國體護持)를 위한 정전(征戰)에 나서게 하옵소서”, “죽음으로 천양(天壤) 무궁을 기원함” 등의 유언을 남기고 한꺼번에 자결했다.

도쿄 후추시(府中市)에 있는 사찰(大長寺)에는 ‘명랑회 12열사의 충혼’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현존하고 있다. 그 비문에는 “명랑회는 일본 전통의 신도(神道)와 유교·불교의 3종교 융합 정신에 따라 모든 행동을 통하여 국체호지 신념을 관철하였으며, 대동아전쟁 종전(終戰) 발표 말씀이 내리자 회장 히비 가즈이치 외 11명은 황실의 무궁함을 기원하면서 천황 거소 앞에서 자결했다. 때는 1945년 8월 23일 오전 12시, 1966년 8월 23일 유지 일동 건립”이라고 새겨져 있다. (<http://www.asahi-net.or.jp/~UN3K-MN/0815-yuukoku.htm>)

가게야마 마사하루(影山正治)가 1939년에 결성한 우익단체 ‘대동숙’도 패전에 저항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가게야마의 부친 쇼헤이(影山庄平)를 포함하여 14명의 조직원들은 패전 직후 8월 25일에 도쿄의 요기공원에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집단할복자살을 감행했다. 그들은 공동으로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깨끗하게 바치는 우리 14주(柱)의 황혼(皇魂)은 맹세코 무궁하게 황성(皇城)을 지키겠다”라고 적혀 있다.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천황폐하 만세, 일본제국 만세, 어머니 만세”라고 적혀 있다. 오늘날에도 이들을 추모하는 ‘대동숙 14열사’ 비석이 요기공원 구석에 있다. (<http://a.sanpal.co.jp/hokutoh/shibuya/daitou.html>)

가게야마의 집안은 목숨을 바치며 국가주의를 주장한 대표적 우익 집안으로 유명하다. 마사하루의 숙부 이와오(影山岩男)는 고베(神戸)에 있는 미나

토가와[澁川]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다. 그는 1949년 점령 아래에서의 교육 현실을 비판하고 친형의 뒤를 이어 자결했다. 패전 후 ‘대동숙’의 대표를 담당해 오던 마사하루도 1979년에 “천황 원호(元號) 법제화 실현을 간절히 기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또한 시마네현[島根縣]에서 일어난 일련의 패전 반대 사건도 우익세력의 저항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마쓰에시[松江市]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황국의용군(皇國義勇軍)’ 회원 53명이 무조건항복을 의미하는 포츠담선언 수락 담화에 반대하며 8월 24일 새벽에 시마네현 현청 건물에 쳐들어가 불을 질렀다. 오카자키 이사오[岡崎功] 등이 일으킨 방화사건으로 현청 본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 건물 모두를 태우고 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것은 ‘마쓰에 소요사건’으로 불리는 것으로 비록 정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일개 지방에서 일어난 단순한 시위행위로 끝났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소란을 전제로 하여 계획된 ‘대일본제국 최후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황국의용군’이 배포한 전단지에는 1980년에 이르러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대일본은 신국(神國)이다.

절대신이다.

폐하에게 항복은 없다.

금번 패전 담화는 폐하의 본심이 아니다.

항복은 죽음이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현민(縣民) 여러분 우리 군대에 협력하여 단호히 항전하자.

협력하지 않고 매국노 행위를 일삼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즉각 체포되었으며 제1심 재판 판결이 1945년 12월에 열렸다. 이때 중심 주모자로 지목된 오카자키는 검찰 측으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았고 제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언도받았다. 이 사건은 전시특별법에 따라 처리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없이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곧바로 대심원에 상고했다. 이듬해 9월에 열린 대심원에서 재판장이 변호인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오카자키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서 1947년에 검찰 측 상고를 받아들인 대심원은 기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제1심에서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카자키는 1943년에도 당시 수상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징역 2년의 판결을 받고 투옥된 일이 있다. 그는 일본 점령이 끝난 후에 출소하여 시마네현에서 ‘청년황도대(靑年皇道隊)’라는 우익단체를 결성하기도 했고, 마쓰에시에 있는 쇼난(澁南)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학생들에게 국가의식을 강조하여 ‘히노마루 교장’으로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쇼난고등학교는 1961년에 오카자키가 세운 사립고등학교이며 1970년에 니혼(日本)대학과 제휴를 맺었다가 1990년에 고쿠가쿠인(國學院)대학 및 고가쿠칸(皇學館)대학과 제휴한 바 있다. 2001년부터는 릿쇼(立正)대학의 부속고등학교에 준하는 고등학교라고 하여 ‘릿쇼대학 쇼난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오카자키는 개교 이래 매일 열리는 고등학교 조회를 동방요배, 기미가요 제창, 교육칙어 제창으로 시작하는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오카자키는 아들(岡崎朝臣)에게 이사장직을 넘겨주었다. 현재에도 이 학교 건물 현관에는 전후 신우익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와 모리타 마사가쓰(森田必勝)를 ‘열사’로 떠받드는 비

문이 새겨져 있고, 각 교실에는 교육칙어가 부착되어 있다. 이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일본사를 ‘국사’라고 칭하며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무시한 독자적인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Ⅲ. 점령당국의 우익세력 공직 추방

패전 직후인 8월 17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 히가시쿠니 노부히코[東久邇稔彦] 총리는 당면한 국가체제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우익 지도자를 내각 고문에 끌어들었다. 우선 해군 군부세력이나 우익세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다마 요시오[兒玉譽士夫]를 내각 참여(參與)로 영입했으며,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에게도 내각의 고문이 되어주기를 요청했다. 히가시쿠니가 황족 가운데서는 비교적 개명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천황이 새로운 내각 수장으로 발탁했지만, 이렇듯 대륙침략에 앞장섰던 인물을 영입하고자 한 것을 보면,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읽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연 설명하자면, 고다마는 전쟁시기 상해(上海)에 ‘고다마 기관’으로 불리는 상사(商社)를 설립하여 텅스텐, 라듐, 코발트, 니켈 같은 전략물자를 거래하여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인물이다. 중국인과 만주인들을 총으로 위협하여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물자를 획득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패전 후 해외 재산을 가지고 일본에 귀환했다. 1946년 초 점령군이 A급 전범 혐의자로 체포하여 스가모[巣鴨] 형무소에 수감했다. 그러나 점령 방침이 ‘민주화’에서 ‘반공’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반공정책에 협조적인 인물로 인정받아 전범재판에 기소되지 않고 운 좋게 풀려났다.

그리고 이시하라는 1937년에 관동군 참모부장으로 임명되어 만주국에서 근무했다. 만주국의 민족적 독립을 강렬하게 주창했던 그는 만주국에 관한 전략구상을 둘러싸고 당시 도조 수상과 심한 대립을 보여 권좌에서 밀려났다. 1941년에 그는 현역에서 퇴임하여 교육, 평론, 집필, 강연 활동을 하면서 소일하게 된다. 그는 만주국 침략의 주범이었는데도 도조와 대립했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전후에 전범으로 지목되지 않았다. 다만 1946년 3월에 도쿄재판과 관련하여 연합국 검찰관으로부터 심문을 받기도 했으며 이듬해 5월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그는 증인 심문에서 만주사변은 일본의 자위(自衛)를 위한 것이었으며 침략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까지 거의 7년 동안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간접통치를 받았다. 1945년 8월 28일 점령군으로서 미군 제1진이 아쓰기[厚木] 비행장을 통해 들어왔다. 이튿날 9월 2일에는 도쿄만[東京灣]에 정박한 미주리(Missouri)호 선상에서 일본정부 대표가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실질적인 일본 점령이 시작되었다. 당초 미국 측은 히로히토[裕仁] 천황에게 항복문서에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그렇게 하면 천황에게 굴욕을 안겨 일본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오히려 대일 점령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천황 대신에 내각을 대표하는 시게 미쓰 마모루[重光葵] 외상과 군부를 대표하는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참모총장에게 서명을 하게 했다.

이처럼 점령군은 애초에 천황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우익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일찍이 점령당국은 9월부터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개전 때의 각료들을 비롯하여 전쟁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그해 12월 말까지 100명이 넘는 혐의자들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점령군에 체포된 우익인사들을 살펴보면, 11월

19일에 육군대장을 역임한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흑룡회(黑龍會)’ 주간을 역임한 구즈우 요시히사[葛生能世], ‘대일본언론보국회(大日本言論報國會)’ 이사장을 역임한 가노코기 가즈노부[鹿子木員信] 등 11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황족으로서 유일하게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가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우익 지도자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도쿠도미 이이치로[徳富猪一郎], 고바야시 준이치로[小林順一郎] 등을 포함한 59명을 체포했다.

이어 12월 6일에는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등 9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전정책임 추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로써 우익 지도자에 대한 전범 지목과 공직 추방이 시작되었다. 주요 우익인사에 대한 전범 지목과 공직 추방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급 전범 지목 : 兒玉譽士夫, 笹川良一, 大川周明, 徳富猪一郎, 進藤一馬, 葛生能久, 橋本欣五郎, 鹿子木員信, 平沼騏一郎, 有馬頼寧 등
- 공직 추방 : 井上日召, 頭山秀三, 橋孝三郎, 本間憲一郎, 清水行之助, 影山正治, 木村武雄, 寺田稻次郎, 三上卓, 三浦義一, 佐郷屋留雄, 小沼正, 許斐氏利, 松木勝良, 茂木久平, 鈴木善一, 下中彌三郎, 津久井龍雄, 安岡正篤, 蓑田胸喜, 齊藤忠, 齊藤响, 赤尾敏 등

한편 점령당국은 1945년 12월 15일 신도(神道)를 정치에서 분리하는 지령을 내렸다. 종래의 국가 신도는 천황을 신격화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우익세력을 선두로 대부분의 일본 국민이 이를 신봉했다. 국가 신도는 일본 본토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황국사상을 광신적으로 신봉하게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따라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점령당국이 정교분리(政教分離)를 단행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황국사상에 젖

어 있던 우익세력 대부분에게 정교분리 조치는 그들의 국가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천황의 ‘인간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1946년 1월 4일, 점령당국은 우익 지도자의 공직 추방과 우익단체의 해산을 지령하여, 우익세력에게 일시적이었지만 타격을 주었다. 이미 특별고등경찰이나 헌병이 모두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익세력에 대한 추방령을 통해 과거 전쟁체제를 지도하고 적극 추진한 세력은 거의 추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같은 날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대변인은 “이 지령에 따라 정부조직이나 각종 단체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인물 가운데 전쟁 범죄인으로 기소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라도 일본 국민에 대해 중대하고 사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일본을 세계지배 전쟁으로 내모는 데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한 모든 개인과 단체가 추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때 점령당국이 해산 대상으로 예시한 우익단체(단체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 | |
|----------------------------|-----------------|
| ① 大日本一新會(舊 ‘大日本生産黨’, 吉田益三) | ③ 大日本生産黨(吉田益三) |
| ② 大日本興亞連盟(水野鍊太郎) | ⑤ 大東亞協會(井戸川辰三) |
| ④ 大日本赤誠會(橋本欣五郎) | ⑦ 言論報國會(鹿子木員信) |
| ⑥ 大東塾(影山正治) | ⑨ 時局協議會(一條實孝) |
| ⑧ 玄洋社(進藤一馬) | ⑪ 建國會(赤尾敏) |
| ⑩ 鶴鳴莊(摺建一甫) | ⑬ 黑龍會(葛生能久) |
| ⑫ 金鷄學院(安岡正篤) | ⑮ 國際政經學會(増田正雄) |
| ⑭ 國際反共連盟(平沼騏一郎) | ⑰ 國體擁護連合會(入江種矩) |
| ⑯ 國粹大衆黨(笹川良一) | ⑲ 瑞穗俱樂部(大井成元) |
| ⑱ 明倫會(田中國中, 石原廣一郎) | ⑲ 大化會(岩田富夫) |
| ⑳ 尊攘同志會(茂呂宣八) | ㉓ 東亞連盟(石原莞爾) |
| ㉑ 天行會(頭山秀三) | |

㉔ 東方同志會 (故 中野正剛)

㉕ 全日本青年俱樂部 (影山正治)

㉖ Yamatomusubi やまとむすび (佐々井一晃)

점령당국의 지령에 따라 일본정부는 1946년 2월 9일 해산 대상 우익단체를 119개로 확정하고 폐지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2월 22일에는 칙령 제 101호를 통해 45개 우익단체의 해산을 명령하고 75개 단체에게 다시 단체를 구성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칙령에서 제시된 우익단체 중 거의 대부분은 2월 9일에 지목한 우익단체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칙령은 법적으로 단체에 대한 소멸 조치를 추진한 규정에 불과하다.

우익 지도자의 공직 추방과 단체 해산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1948년 5월까지 이어졌다. 공직 추방자로 심사 대상이 된 사람은 총 71만 7,415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1만 288명이 추방 대상이 되었다. 이 숫자는 초국가주의자는 물론 나중에 부가된 공산당원이나 사회주의 활동가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 가운데 우익 관계자와 관련된 내역을 보면, ① 전쟁 범죄자 3,422명, ② 극단적인 국가주의 단체의 유력 활동가 3,381명, ③ 기타 군국주의자 4만 6,276명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하기 직전인 1951년 말까지 총 233개의 우익단체가 해산되었다.

그러나 패전 이전의 우익세력에 대해 점령군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의 점령정책에 따라 점령당국이 천황제를 존속시키고 천황에 대한 전쟁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에서 전후 우익세력이 부활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따로 언급하겠다.

1946년 5월부터 시작된 ‘도쿄재판’도 전쟁 책임자로서 일부 정치·군사 지도자만을 심판한 재판으로 끝났다. 침략전쟁에 이르는 중요한 국가 의사

결과와 군사력 행사에 대해 주로 최고 당국자의 책임만을 추궁함으로써, 침략전쟁을 개시하거나 수행하는 데 국가기관의 요직에 있던 사람 대부분과 민간인 가운데 우익인사처럼 적극적으로 침략전쟁에 공감하고 전시체제에 과잉충성을 보인 사람들도 이 재판에서 심판을 받았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소수 특정 지도자만의 심판에 그친 ‘도쿄재판’은 결과적으로 우익인사를 비롯하여 대다수 전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고 이것이 패전 후 일본 사회에서 우익세력에게 부활을 준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IV. 천황의 인간화와 상징적 존재화

1946년 벽두에 천황의 ‘인간선언’이 발표되었다. 점령기구 가운데 특히 민간정보교육국(CIE)은 일찍부터 천황의 담화를 통해 천황 자신이 직접 종래 황국사상에 담긴 일본이 다른 국가나 국민을 지배할 신성한 사명의식을 명확하게 부정하는 견해를 밝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령당국의 의도를 간파한 천황은 1946년 1월 1일자 관보를 통해 ‘인간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천황 자신의 ‘인간선언’은 종래 우익세력에게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온 ‘황국사관’을 부정하는 선언이기도 했다.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 국가와 세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종래의 국가관·세계관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다. 과거 우익세력에게는 천황에게 적대하거나 천황 중심의 민족통일 체제를 깨뜨리고자 하는 자는 모두 불구대천의 원수로 천주(天誅)의 대상이 되어 테러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패전과 함께 이제 천황 자신이 신격(神格)을 부정함에 따라 그들의 이념적 기반이 붕괴된 것이다.

점령군의 진주와 함께 일본의 우익세력은 물론 대다수 국민에게 가장 큰 정치적 관심은, 그때까지 일본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로 군림해온 천황에 대해 과연 전쟁책임이 추궁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당사자인 천황은 자신에게는 침략전쟁의 책임이 없으며 군부세력이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전쟁을 감행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일찍이 패전에 즈음하여 발표한 「종전(終戰)의 조서(詔書)」에서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한 이유도 실로 일본 제국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염원하는 데 있었으며 미국의 주권을 배격하거나 영토를 침략하려는 것 따위는 본래 나의 생각에 없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패전 직후 9월 25일 『뉴욕 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대한 회답에서나 27일 맥아더와의 회동에서도 자신의 전쟁책임에 관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군부에 책임을 모두 전가하거나 전쟁책임문제를 회피하고 점령정책의 협력만을 피력했다. 맥아더와 천황의 대좌에 통역관으로 배석했던 오쿠 무라(奥村勝藏)가 받아 쓴 기록에 따르면 천황은 전쟁에 대한 발언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전쟁에 대해서는 자신으로서는 극구 이를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은 자신의 가장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패전 직후부터 일본공산당은 대중운동을 통해 ‘천황제 타도’를 계속 주장해 왔으며 연합국의 매스컴도 맥아더가 천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듬해에 열릴 극동군사재판에서 우선적으로 천황을 전범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켜 왔다. 비록 점령 초기에 미국정부의 대일점령방침에서 천황에 대한 전후처리방침이 불투명했으며 맥아더의 천황에 대한 태도가 관대했다고 하더라도 천황의 주변세력은 이에 안도할 수 없었다. 점차 천황의 전쟁책임을 주장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점령당국이 11월과 12월에 민주화의 일환으로 국교였던 신도를 민

간중교화하고 황실재산의 동결, 황실조직 내대신부(內大臣府)의 폐지, 황족전범의 체포, 황실의 신성화 교육금지 등을 추진하자, 천황과 천황 측근들은 물론 천황을 신(神)으로 떠받들어 오던 우익인사들이 가까운 장래에 전개될 전후처리의 행방에 대해 초조함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미국과 점령당국 등의 전후처리방침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천황제 존속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 자구책을 모색했다. 11월 하순에는 전국의 관공서와 학교에 기존의 전제군주 모습을 한 군복 차림의 천황 사진 대신에 황실복 차림의 사진을 배포했으며 12월 말에는 이 사진들을 다시 서둘러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천황 자신이 궁내성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생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러한 천황제 존속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인간선언’이 이루어졌다. 이 선언은 비록 권위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기는 했지만 천황 스스로가 기존의 신국(神國)주의를 인위적인 관념이었다고 고백하는 한편, 천황의 신격(神格)을 부정하고 자신이 ‘인간’임을 선언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짐(朕)과 우리 국민 간의 유대는, 시종 신뢰와 경애로 맺어지는 것이지만 단순한 신화와 전통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천황을 현인신(現人神)화하고 또한 일본 국민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으로 여기며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지녔다고 하는 가공의 관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난국 때에 분투하며 …… 그 공민생활에서 단결하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관용으로 서로 용서하는 기풍을 진작하고 …… 우리 국민들이 인류의 복지와 향상을 위해 크나 큰 공헌을 행하는 데 있음은 의심할 여지없다.

한편 천황제 존속을 위한 노력은 헌법개정 과정을 통해 천황의 상징적 존재화로 이어졌다. 점령 초기에 점령당국은 일본정부에 대해 천황 전제적인 메이지 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먼저 천황 자신이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를 무임소대신에 임명하여 헌법개정안의 초안 작성을 착수하게 했다. 이어서 내각 안에 헌법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마침 10월에 시데하라 기쥬로(幣原喜重郎)를 수반으로 하여 성립된 새로운 내각은 연일연야 신헌법문제가 매스컴에서 거론되는 것을 꺼리고 마쓰모토 조지(松本烝治) 국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개정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천황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여 점령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점령당국 측은 메이지 헌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초안을 거부하고 민간 지식인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가 작성, 제출한 초안을 참고하여 국민주권 원칙에 입각하여 천황을 상징적 지위에 두는 초안을 직접 마련하여 일본정부에 회부했다.

시데하라 내각에 이어 1946년 5월 구성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은 점령당국에서 넘어온 것과 유사한 헌법안을 정리하여 6월에 의회에 제출했다. 이 헌법안에 대해서는 약 2개월간에 걸친 논의와 수정 끝에 8월 24일 최종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의회의 헌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국체 변혁과 주권 소재의 문제였다. 주로 ‘자유당’, ‘진보당’, ‘협동민주당’ 소속의 보수파 의원들이 집요하게 추궁한 이 문제에 대해, 요시다와 관계 각료들은 주권이 ‘천황을 포함한 국민’에 있다고 해석하고 “비록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군신일여(君臣一如)·군신일가(君臣一家)로서의 국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처음에 상징천황을 원수(元首)로 하자고 주장하던 보수파 의원들은 나중에 원수론을 철회하고 헌법개정안에 찬성했다. 다만 공산당만이 천황제의 타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새로운 헌법은 제1조에서 “천황은 일본 국가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고 하여 상징천황제를 규정하고 있다.

1946년 11월 3일 귀족원에서 거행된 새로운 헌법의 공포식에 천황 부부가 참석했다. 이것은 전후 처음으로 천황이 참석한 공식행사가 되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천황이 부인과 함께 참석한 행사이기도 하다. 이후 천황은 부인과 함께 자주 일본 각지에 있는 문화시설과 문화적 행사에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듬해 5월 3일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었으며, 그 후 처음으로 열린 6월의 특별국회 개원식에 천황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낭독하는 가운데 자신을 가리켜 이제까지 써 오던 ‘짐(朕)’이라는 표현 대신 ‘나(私)’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은 ‘인간화’된 상징천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었다.

점령군의 민주화 조치가 포츠담선언에서 규정한 “일본 국민 사이에서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에 대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던 과 같이, 그 연속선상에서 점령당국은 일찍부터 천황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변화를 지시하게 되었다. 다만 점령당국은 일본이 무장해제와 민주화 개혁을 단행해 나가면서도 천황에 대한 전쟁책임 추궁에 관해서는 유보해 둬으로써 대다수 일본 국민의 점령당국 권위에 대한 경외와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점령당국 내에는 민주화 정책을 둘러싸고 제2참모부장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와 같이 소련을 강하게 의식하여 급격한 민주화가 반미감정을 유

말할 것으로 보아 이에 반대하는 진영과, 민정국장 휘트니(Courtney Whitney)와 같이 민주화의 적극적 추진을 주장하는 진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맥아더는 두 진영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민주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택하는 대신에 천황에 대한 전쟁책임 추궁은 유보했다고 전해진다.

아무튼 점령당국의 일련의 민주화 조치와 함께 지난날 신격화되었던 천황은 서서히 ‘인간화’ 되어 갔으며 그것도 급격한 방법보다는 점진적인 방법에 따라서였다. 이는 공산주의 운동가를 제외하고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급격한 국가체제의 변화나 천황에 대한 전쟁책임 추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령당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 걸친 민주화 조치는 천황의 전쟁책임문제 유보라고 하는 담보 아래 점진적인 천황의 ‘인간화’를 가져왔고 제도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한 천황의 상징적 존재화 작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V. 피점령기 전후와 우익의 등장

패전 이전에 활동하던 우익세력이 해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전후 우익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우익 활동가는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과거에 우익단체 활동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무명 인사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폭력단과 같은 색깔을 띠었다. 그것은 패전에 따른 경제적 혼란, 특히 악성 인플레이션, 그리고 제대장병과 해외에서 대책 없이 밀려들어온 귀환자 등으로 인한 1,0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불안과 관련이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1945년 가을부터 새로운 정당 결성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11월에 '사회당', '자유당', '진보당'이 결성되었으며, 12월에는 '공산당'이 재건되고 '협동당'이 새로 결성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정당 결성의 움직임과 함께 전후파 우익의 세력화 움직임도 국지적으로 나타났다.

패전 이후 가장 먼저 등장하여 활동한 우익 정치단체는 1945년 9월 3일 결성된 '친미박애근로당(親米博愛勤勞黨)'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총재인 오가와 도모조[小川友三]는 1904년 사이타마현[埼玉縣]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1년에 메이지[明治]약학전문대학을 다녔으며 졸업 후 제약업, 고물상, 농업 등을 경영했다. 패전 직후 '친미박애근로당'이라는 우익적 정치단체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정치가로 나섰다. 1947년 4월의 제1회 참의원 선거에서 '녹풍회(綠風會)' 소속 전국구 후보로 출마하여 3년 임기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후에는 '녹풍회' 조직을 떠나 무소속 의원으로서 활동했다. 1950년 4월 참의원 본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그는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회 내에서 비판이 일어났으며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참의원 다수 의견으로 제명을 당했다. 그의 제명은 일본 참의원 사상 처음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경우가 되고 있다.

일본 패전 직후 『시카고 선 타임스(Chicago Sun Times)』의 도쿄 지국장으로 부임하여 취재 활동을 하던 마크 게인(Mark Gayn)은 일본 체류 기록을 모아서 『일본 일기』를 출간했다. 그는 1945년 12월 9일자 일기에서, “얼마 전에 결성된 우익 폭력단체 ‘일본천구당(日本天狗黨)’을 비롯하여 이날 38개에 달하는 새로운 우익단체의 명부를 입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패전 직후부터 새로운 우익단체들이 점령정책에 순응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 추방의 회오리바람에 따라 현직 의원들이 대거 추방되는 상황에서, 1946년 4월 전후 첫 번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선거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투표일인 4월 10일 당시 입후보자 수가 총정원 466명의 6배에 가까운 2,770명으로 집계되었다. 입후보자 가운데 전현직 의원 경험자는 단지 146명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인물의 정계 입문과 함께 군소 정당의 난립도 두드러졌다. 이때 입후보자를 낸 정당이 총 258개였고, 이 가운데 5개 대규모 정당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의 입후보자를 내놓은 정당은 6개 정당에 불과했다. 입후보자 한 사람만을 내놓은 정당이 총 184개나 되어 전체에서 71%를 차지했던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얼마나 군소 정당들이 난립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전후파 우익정당 역시 우후죽순처럼 급조된 군소 정당들이 각지에서 이름을 내걸고 등장했다. 총선거를 전후하여 일본 각지에서 결성된 우익단체가 정체불명의 단체를 포함하여 무려 400개 이상이나 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패전 이전의 ‘국수대중당(國粹大衆黨)’을 이어받은 ‘전국근로자동맹(全國勤勞者同盟)’, 패전 이전의 ‘흥아청년운동본부(興亞靑年運動本部)’를 이어받은 ‘일본국민당(日本國民黨)’, 그리고 패전 이전의 ‘애국사(愛國社)’를 이어받은 ‘신일본당(新日本黨)’ 등과 같이, 지난날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우익단체들이 전후에 들어 간판만을 바꾼 것이 있다. 또한 ‘가월포우회(加越砲友會)’, ‘일본고이노보리동지회(日本鯉登同志會)’, ‘국수회(菊水會)’, ‘복원동지회(復員同志會)’, ‘인양원호학생호조회(引揚援護學生互助會)’, ‘일본전우단체연합회(日本戰友團體聯合會)’ 등과 같이 제대군인이나 귀환자들이 새로 결성한 우익단체들도 있다.

이 밖에도 중의원 선거에는 ‘일본인민당(日本人民黨)’, ‘일본반공연맹(日本反共連盟)’, ‘천황제봉호동맹(天皇制奉護同盟)’, ‘일본혁신당(日本革新黨)’, ‘일본민주

동맹(日本民主同盟), ‘신일본청년동맹(新日本青年同盟)’, ‘일본근로대중당(日本勤勞大衆黨)’ 등과 같은 우익 성향의 정치단체들이 입후보자를 내놓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 이들은 거의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 당파별 당선자 수는 ‘자유당’ 140석, ‘진보당’ 94석, ‘협동당’ 14석, ‘사회당’ 92석, ‘공산당’ 5석, 기타 군소 정당 119석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천황제 지지’와 ‘반공’을 주장하고 나선 보수파 진영이 대승리를 거둔 결과가 되었다. 법정 득표수에 모자라 당선자를 채우지 못한 2개 의석은 그해 6월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자유당과 사회당이 각각 1개씩 나누어 가졌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수 성향의 정당이 대승리를 거두었는데도, 우익단체 가운데는 일본인민당만이 미야기현(宮城縣) 제1 선거구에서 다다노 나오사부로(只野直三郎)를, 그리고 가가와현(香川縣) 제1 선거구에서 오다 마사노부(織田正信)를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이 시기에 결성된 전후파 우익단체의 활동은 대체로 일본 사회에서 ‘야쿠자’로 불리는 폭력조직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단체 가운데 도쿄에서 결성된 단체로는 1945년 12월에 오타 산키치(太田三吉)를 대표로 하여 결성된 ‘일본천구당’, 1946년 2월에 다카하시 요시토(高橋義人)를 대표로 하여 결성된 ‘신일본의인당(新日本義人黨)’, 1946년 6월에 마키 야스토시(真木康年)를 대표로 하여 결성된 ‘신예대중당(新鋭大衆黨)’ 등을 들 수 있다. 나중에 일본천구당은 군마현(群馬縣)에서 트럭을 사용하여 창고 물품을 강탈한 혐의로 점령군과 치안당국이 해산시켰으며, 신일본의인당은 폭력투쟁과 총포소지 혐의로, 신예대중당은 습격사건과 살인강도사건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각각 해산조치를 당했다.

이 시기 우익단체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이념에서 과거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공’ 이념을 강조했던 점에서는 과거의 우익단체와 공통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공이념 플러스 민주주의 이념을 함께 내세운 점에서 과거와 확을 달리했다. 이것은 점령체제 아래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일본 국민 전반에 걸친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에대중당은 ‘민주주의의 실천’을, 신일본의인당은 ‘자유평등의 민주주의의 일본 건설’을, 일본혁신국민동지회(日本革命菊旗同志會)는 ‘자유민주 정치이념의 양양’을, 구국청년연맹(救國靑年連盟)은 ‘전쟁 없는 세계의 실현, 포츠담선언의 엄정 실시’를 대외 구호로 내세웠다.

나아가 전후와 우익단체 가운데는 특이하게 일찍부터 ‘재군비 반대’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나선 단체도 있었다. 대표적인 단체로 1946년 4월에 결성된 ‘일본국민당(日本國民黨)’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이시하라 간지를 실질적인 지도자로 하고 있었고 패전 이전의 ‘동아연맹협회(東亞連盟協會)’를 이어받았다. “점차 세계가 통일되어가는 마당에서 세계의 마지막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최고 문화의 건설”이라는 이시하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일본의 재군비 반대를 주창한 것이다.

Ⅵ.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우익의 부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것에 반하여 일본은 피점령 상태를 끝내게 된다. 점령 초기에 강하게 추진되었던 민주화 정책이 일찍이 1947년을 경계로 하여 주춤해지고 대신에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여 보수적인 정책들이 강화·실시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본의 국내 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던 초기 정책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

발하자 일본에서는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공산주의 활동가들이 공직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일 점령을 종결짓는 움직임도 활발해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었으며 1952년 4월 이 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은 독립국가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점령 막바지인 1950년 10월 이미 공직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가운데 1만 명 이상에 대해 추방 해제조치가 취해졌다. 1951년 말에 이르면 총 21만여 명의 추방자 가운데서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추방 해제조치를 받았다. 이것은 반공정책의 강화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직 추방이 한창 전개되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전후 일본의 급격한 보수화 진전을 상징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날의 우익세력들도 속속 부활하기 시작했다.

1951년 2월에 아라하라 보쿠수이[荒原朴水], 오무라 히데노리[大村秀則], 후쿠다 모토아키[福田素顯] 등의 우익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1회 ‘애국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상설 연합체 기구를 발족시켰다. 여기에는 우익의 거두로서 공직에서 추방되었다가 풀려난 아카오 사토시[赤尾敏], 쓰쿠이 다쓰오[津久井龍雄] 등도 참가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역시 공직 추방되었던 혼마 겐이치로[本間憲一郎]를 대표로 하여 ‘신생일본국민동맹(新生日本國民同盟)’이 결성되었으며, 8월에는 이시하라 간지의 ‘동아연맹’ 계열의 ‘협화당(協和黨)’이, 그리고 10월에는 아카오 사토시가 이끄는 ‘대일본애국당(大日本愛國黨)’이 각각 발족되었다. 11월에는 쓰지 노부오[辻信夫], 고지마 겐시[小島玄之] 등이 대중적인 반공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여 과거 고위 공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을 고문 자리에 앉히고, 패전 직후 점령군이 전쟁범죄자로 지목하여 구금된 바 있는 아리마 요리야스[有馬頼寧]를 의장으로 하여 ‘일본청소년선도협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1952년이 되어 실질적으로 일본이 독립하자, 우익세력의 규합은 더욱

활발해졌다. A급 전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정신병자로 인정되어 판결을 면한 오가와 슈메이[大川周明]와 ‘대동숙’의 고문을 역임한 마에다 도라오[前田虎雄] 등을 중심으로 ‘동풍회(東風會)’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구리하라 미노루[栗原美能留]와 간 다로[菅太郎] 등을 중심으로 ‘일본신생협의회(日本新生協議會)’가 조직되었으며, 요시다 마스조[吉田益三]를 중심으로 ‘은급(恩給)부활촉진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우익세력 부활 움직임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1953년 가게야마 마사하루를 중심으로 다시 뭉친 ‘대동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점령 초기에 ‘대동숙’이 해산되자, 관련자들은 ‘야마토공사(大和公社)’, ‘후지가도회[不二歌道會]’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암암리에 활동해왔다. 이 단체는 ‘재건 선언’을 통하여 자신들이 일본의 독립과 함께 지하 활동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지상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선언했으며, 단체 지도자들이 자결로써 패전에 저항했던 것을 찬양하며 패전 이전의 단체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우익단체들이 명칭이나 행동강령을 바꾸어 전쟁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에 비추어, ‘대동숙’은 패전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어 과거와의 연결성을 찾으려 했던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추방에서 해제된 우익 정치가들도 정계에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마침 요시다 내각과 보수정당 간의 알력으로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1952년 10월에 이어 1953년 4월에도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 총선거가 반복된 것은 공직 추방당했던 정치가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익 정치가들은 선거과정에서 한편으로 요시다 내각의 미국 편향주의와 경제 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좌파 정당과도 거리를 두는 태도를 견지했으며, ‘자주독립’이라는 민족주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선거전에 임했다.

195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우익 정치가 29명이 입후보하여 이 가운데 5명이 당선되었다. 이어 1953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21명이 입후보하여 5명이 당선되었다. 모두 동일 인물이 연이어 당선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다음 4명은 전쟁 전부터 우익 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

다다노 나오사부로[只野直三郎]는 미야기현 출신으로 천황주권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로 전쟁 전에 육군 사정관(司正官)과 사립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전후에 '일본인민당'을 창당하여 정치권에 진입하여 1947년에 처음 중의원 의원이 되었다.

기무라 다케오[木村武雄]는 야마가타현[山形縣] 출신으로 전쟁 전에 중의원 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가 이끄는 우익단체 '동방회(東方會)'에 입당하여 활동했다. 패전 후 '일본자유당' 결성을 주도했으나 공직 추방을 당했으며 1952년에 정계에 복귀했다.

기타 레이키치(北聆吉)는 니가타현[新潟縣] 출신으로 사회운동가 기타 잇키(北一輝)의 친동생이다. 1936년에 중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되었으며 군국주의 사상가로 전후 공직 추방을 당한 일이 있다.

쓰지 마사노부[辻政信]는 이시카와현[石川縣] 출신이다. 육군 장교 출신으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전쟁 때 각종 비인도적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방콕에서 패전을 맞았다가 승려로 위장하여 도망쳐 나왔다. 전후 철저한 반공주의 정치가가 되었다.

● 참고문헌

- 김양희(2007), 『일본 우익사상의 기저 연구』, 보고서.
- 김종천(1997), 『지금 일본이 심상치 않다 : 일본의 망령 우익 그 뿌리와 번식』, 빛샘.
- (교과서에진실과자유를)연락회(2001), 『철저비판 일본우익의 역사관과 이데올로기』, 바다출판사.
- 나카무라 마사노리(2006), 『일본전후사 : 1945~2005』, 논형.
- 이면우(2000), 『일본우익연구』, 중심.
- 이에나가 사부로(2005), 『전쟁책임』, 논형.
- 최영호(2006), 『현대 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 최영호(2006), 『한일관계의 흐름 : 2004~2005』, 논형.
- 堀幸雄(1983), 『戦後の右翼勢力』, 勁草書房.
- 東久邇稔彦(1957), 『一皇族の戦争日記』, 日本週報社.
- 社會評論社(1990), 『右翼テロ!』, 社會評論社編集部.
- 西銳夫(1983), 『マッカーサーの犯罪 : 秘録日本占領』 下巻, 日本工業新聞社.
- 安田武・福島鑄郎 編(1974), 『記録 - 自決と玉碎』, 新人物往來社.
- 歴史學研究會(1990), 『日本同時代史 1 : 敗戦と占領』, 青木書店.
- 猪瀬直樹(1983), 『天皇の影法師』, 朝日新聞社.
- 猪野健治(1988), 『右翼』, 現代書館.
- 猪野健治(2005), 『日本の右翼』, ちくま文庫.
- 淺羽通明(2006), 『右翼と左翼』, 現代書館.
- マーク ゲイン(1998), 『ニッポン日記』, 筑摩書房.



일본 우익의 흐름과 현황

김태기_호남대학교

I. 머리말

최근 일본의 우경화, 특히 일본 헌법개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군사 활동의 증강, 재일한인에 대한 배척의 움직임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가지고, 전몰자를 추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배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우경화를 선도하는 일본의 우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익의 실체를 알아야지, 보다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일본의 우익에 대한, 특히 동시대의 우익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재 일본의 우익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우선 패전 이후의 우익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한다. 패전과 미

군의 지배라는 특수 상황, 미일안보조약이라는 정치적 현실,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무반성과 이에 대한 주변국가의 비난, 경제대국으로의 부상, 일본 국민의 탈정치화, 안보효용론의 확대, 냉전의 종결과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라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일본의 우익운동을 어떤 단체가 주도 하였으며,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였는지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근의 일본 우익의 현황과 그들의 주장과 사상에 대하여 소개한다. 결론에서는 앞으로의 우익의 방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자 한다.

Ⅱ. 반공우익

1. 본류우익의 재기와 반공 이데올로기

패전 후, 일본 우익의 정신적인 지주인 천황의 인간선언에 따라, 일본 우익은 천황 신앙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미점령군이 1946년 1월에 공직 추방과 우익단체 해산 지령을 발하여, 대일본일신회(大日本一新會), 대동숙(大東塾) 등의 우익단체가 강제로 해산되었다.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고다마 요시오[児玉譽士夫] 등의 우익 지도자들은 공직에서 추방되고, A급 전범으로 체포되었다. 미점령군은 정책적으로 일본의 국가주의 사상을 억제하고 좌익사상과 운동가를 해방하였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함께 미점령군은 민주화보다는 반공 정책을 우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좌익운동을 억제하고, 고다마 요시오 등의 우익 지도자들이 전범에서 해방되었다. 이후 친미·반공 그리고 민주

주의를 주창하는 일국기동지회(日菊旗同志會) 등 일부 신흥 우익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과거의 정통을 이은 이른바 본류우익(本流右翼)이 본격적으로 부활한 것은 1952년의 대일강화조약 발효를 전후해서이다.

대일본애국당(大日本愛國黨, 1951년 10월 결성)을 비롯하여, 1952년 4월에 오카와 슈메이 등이 모여 동풍회(東風會)를 발족하고, 국민동지회(國民同志會, 1952년 8월 결성), 대동숙(大東塾, 1954년 4월 재건), 호국단(護國團, 1954년 4월 결성), 대일본생산당(大日本生産黨, 1954년 6월 재건), (대일본)전우회(戰友會, 1952년 8월 결성, 1956년에 국민동지회로 개칭) 등 구우익 관계자가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거나 과거의 단체를 재건하였다.

당시의 일본 우익은 비교적 온건하게 자신들의 주의나 주장을 전개하는 조직우익(組織右翼) 혹은 관념우익(觀念右翼)과 암살 등 과격한 행동을 동반하는 행동우익(行動右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일본애국당·호국단 등은 후자에 속한다. 예를 들어 대일본애국당의 젊은 회원의 아사누마 암살사건[淺沼稻次郎 暗殺事件, 1960], 시마나카 사건[嶋中事件, 1961] 등을 들 수 있다.

2. 임협우익의 등장

당시 이른바 본류우익 혹은 순정우익(純正右翼) 외에도 (대일본)순국청년대(殉國靑年隊, 1952. 1960년에 일본학생회의로 개칭), 방공정신대(防共挺身隊, 1955. 대일본애국당의 별동대), 송엽회(松葉會, 1957) 등의 ‘임협·인협(任俠·仁俠)’계 우익단체가 과거의 흐름을 이어 또다시 등장하였다.

임협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를 돕는 기풍을 말하는 것인데, 야쿠자 폭력단 중에서 도박을 주요 생업으로 하는 도박단, 축제나 행사 등에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을 과거 ‘임협의 무리’라고 불려서, 이

들로부터 파생된 우익단체를 임협계 우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高木正幸, 1996 : 50).

폭력조직의 이 임협계 우익단체들은 정치결사를 표방하면서 조직 확대를 꾀하였다. 그들은 순정우익과 결탁하여, 일본정부와 보수정치가의 전위대로서, 노동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51년에 법무성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도박단과 노점상을 조직하려고 했던 반공발도대구상(反共拔刀隊構想)이나, 1960년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 반대하는 혁신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민당안보위원회(아이크 환영실행위원회)와 고다마 요시오가 계획한 도박단과 노점상 관련 단체, 우익단체 그리고 구군인, 종교단체 등을 총동원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3. 임협우익의 확산

1960년 안보는 패전 이후 일본 우익세력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 안보를 둘러싸고 일본은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이 그야말로 격전을 전개하였다. 조직으로 움직이는 혁신세력이 우세한 속에서 보수세력은 세 걸집을 위하여 연합체 조직인 일본국민회의(日本國民會議, 1959), 전일본애국자단체회의(全日本愛國者國團會議, 1959), 애국청년회의(愛國青年會議, 1960, 1961년에 青年思想研究會으로 개칭), 대일본애국단체연합시국대책협의회(大日本愛國團體連合時局對策協議, 약칭 時對協, 1960), 삼요회(三曜會, 1958) 등의 연합조직을 결성하였다.

또한 당시 보수와 혁신세력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일본국수회(日本國粹會, 1958), 일본의인당(日本義人黨, 1960, 후에 義人黨으로 개칭), 긴세이카이(錦政會, 1962, 후

에 稻川會로 개칭), 구스황도회[楠皇道會, 1961. 1969년에 日本青年社로 개칭] 등 임협계 우익단체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수세력은 전위부대를 필요로 했고, 야쿠자는 ‘우익’ 정치결사라는 간판을 가지고 조직의 온전을 꾀했다. 즉, 야쿠자의 정치단체화가 촉진되었다.

이들 임협계의 우익단체는 일본공산당이나 노동운동을 폭력으로 저지하였다. 특히 1954년의 교육법 개정을 반대하는 일본교직원조합(日本教職員組合) 대회 저지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등 혁신세력의 활동에 대한 폭력을 통한 저지는 1960년대에 들어서 더욱 거세졌다.

4. 반공우익의 논리

1960년 안보를 둘러싼 보수와 혁신의 대립은 보수정권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교훈도 얻었다. 일본정부의 경제정책과 국내외 환경의 도움을 받아 1960년대 일본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국민 전체의 90%가 자신을 중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 성장은 탈정치화를 촉진시켰으며, 미일안보 효용론이 일본 사회에 확산되었다. 일본 국민은 현 체제를 지지하고, 과거로의 복귀를 바라지 않았다. 또한 상징 천황상이 확대되고, 일본 사회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족’이 아니라 ‘기업가족’으로 변모해 갔다.

이러한 속에서 기존의 우익은 현 체제를 긍정하면서 혁신세력의 활동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패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일본 우익의 활동을 보면, ‘쇼와유신[昭和維新]’을 추구하던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미일동맹관계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민족주의라는 ‘이상(理想)’ 보다는 반공주의라는 ‘현실(現實)’을 내세우며, 오로지 반공을 자

신들의 추구하는 목표로 삼았다. 그들이 미일안보조약을 지지하는 것은 “지금 안보를 파기하면, 방위력이 약한 일본은 압도적인 군비를 갖추고 있는 소련군에게 순식간에 침략을 받는다는 단순한 것이었다.”(猪野健治, 2005 :

76; 猪野健治, 2006 : 74)

이들 기성 우익은 헌법개정, 미일안보견지, 영토회복을 주장하였으나, 그들은 ‘친미반공’ 우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감히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즉, 친미의 전후 체제의 타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자주헌법 제정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정·관·재(政·官·財) 3각 구도의 자민당 지배의 현 체제를 긍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Ⅲ. 민족파와 신우익

1. 민족파 학생운동

현 체제 옹호와 ‘반공’이라는 틀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던 기존 우익의 행태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학생단체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학원 분쟁 속에서, 전학련(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등의 좌익 학생단체에 대항하여, 학원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이른바 우익의 학생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YP(알타·포츠담)체제 타도’, 자주헌법 제정, 자주 방위체제의 확립과 안보조약 파기, 북방영토 반환, 반근대·문화방위 등을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 반체제, 반안보, 국가혁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성의 우익과 차별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신민족주의 혹은 민족파(民族派)라고 불렀다.

이들 민족과 운동은 천황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과거의 우익 지도자나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영향을 받았다. 학생이 중심이 된 이들 민족과 운동은 현양사(玄洋社) 등을 동경하고, 과거 우익으로의 복귀를 주창하였다.

이들 학생조직에는 '생장의 집 학생회 전국총연합회[生長の家學生會全國總連合, 1966. 5]', 일본학생동맹(日本學生同盟, 1966. 11), 전국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全國學生自治體連絡協議會, 1969. 5), 반헌법학생위원회연합회(反憲法學生委員會連合, 1974. 3. 生長の家 계열) 등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 이들 우익 학생운동은 일본학생동맹과 생장의 집 계열이 주도했는데, 와세다대학 출신의 스즈키 구니오[鈴木邦男] 등이 활동한 '생장의 집'은 종교집단이라는 것이다. 이 종교는 신도교단으로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성전(聖戰)'이라고 지지하고, 패전 후에는 1960년 안보투쟁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천황의 원호 법제화 등 천황제 강화에 힘을 쓰기 시작하였다. 뒤에 소개하는 미시마의 자결이나 경단련 사건 등에는 이들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이들 민족과 학생운동은 1970년 이후 자신들의 상대인 신좌익의 학생운동이 쇠퇴함에 따라 함께 급속히 쇠퇴해 갔는데, 이 학생 운동가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신우익운동을 이끌게 된다.

2. 미시마 사건과 신우익운동

일본 국민이 탈정치화하고 안보효용론이 확산되어 가고, 천황이라는 존재의 절대적 지위가 상실되어 가는 속에서, 일본 민족주의 사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 것이 우익작가라고 할 수 있는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와 미시마 유키

오[三島由紀夫]일 것이다. 하야시는 당시의 일본을 ‘반(半)국가’라고 표현하였다. 공산주의 운동가에서 전향하여 천황주의와 우파적인 정치성향을 보였던 하야시는 『일본은 국가인가[日本は國家か]』(讀賣新聞社, 1969)에서 일본은 안보조약을 배경으로 한 전력 없는 군대와 연약한 경찰을 가진 ‘반국가’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당시 일본의 모습을 비난한 것이 미시마였다. 1968년 3월에 자칭 ‘군대’인 다테노 가이(盾の會)를 결성하고, 『문화방위론(文化防衛論, 1968)』 등을 저술하여 천황 문화의 전통국가 재건을 주장하던 미시마는 1970년 11월 육상자위대 동부방면 총감부에서 헌법개정과 천황 군대 보유를 주장하면서 할복자살하였다.

민족과 학생운동은 신좌익의 쇠퇴와 함께 열기가 식었으나, 미시마의 자살을 계기로 민족과 학생운동가 출신인 스즈키 구니오 등을 중심으로 1972년 3월 일수회(一水會), 대비회(大悲會, 鈴木邦男, 1975. 3), 통일전선의용군(木村三浩, 1981. 9), 일본주의청년학생협의회 등의 단체가 결성되었다.

그들은 민족과 학생과 같이 반체제, 반안보, 국가혁신을 주장하였으며, 이른바 ‘육탄언어(肉彈言語)’인 폭력행위조차도 정당화하였다. 결국 과거의 순정우익의 정신을 그들은 이어갔다. 이들은 미군주택건설 반대운동, 스미토모 부동산 회장 자택습격, 북방영토 반환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신우익이 국민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노무라 슈스케(野村秋介) 등이 ‘YP체제타도청년동맹’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3월 경단련(經團連)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재벌과 결탁해 온 과거의 우익과 달리 그들은 반체제를 주장하며 재계를 공격한 것이다. 또한 1978년 12월에는 오히라[大平] 수상 습격사건으로 신우익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반체제(행동)우익으로 일본 국민의 우익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IV. 종교우익

1. 우익 종교단체의 정치세력화

신우익의 출현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일본 신도 종교세력의 정치적 세력화이다. 1974년 4월 일본을 지키는 회[日本を守る會]가 신사본청(神社本廳), 생장의 집[生長の家], 불소호념회(佛所護念會) 등 종교단체와 수양단(修養團) 등의 사회교육단체가 모여서 “전통적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심을 고양하고 윤리국가의 대성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이 종교집단을 일본에서는 흔히 종교우익이라고 하는데, 일본 국민의 탈 정치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이 종교우익들은 종교법인이라는 방패막 속에서 자신들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통해서 세력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들의 조직과 자금력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국회의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신에 동조하는 보수정치가들과 협력하여 원호법제화, 국기 국가의 법제화, 건국기념일의 공식행사화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서 벗어나, 일본의 국가주의를 고취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일본의 혁신세력이 조직을 통해 기반을 다진 것처럼,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1978년에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元號法制化實現國民會議)’를 결성하고, 자민당의 보수 강경파와 협력하여 원호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내각은 1979년 2월 원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6월 6일에 원호법이 성립하였다. 당시 신사본청, 신도정치연맹, 일본청년협의회, 건국기념일봉축회, 일본을 지키는 회 등의 단체가 원호법 제정을 위한 지방의회 결의를 추진하는 한편 ‘원호법제화촉진 국회

의원연맹(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411명, 1978년 결성) 그리고 여기에 민사당과 공명당을 끌어들이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1년 3월에는 ‘다 같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의 모임[みんなで靖國に参拜する國會議員の會]’이 결성되고, 스즈키 내각은 교과서 검정제도를 강화하여 일본 민족주의 고취를 꾀하였다.

원호법제화가 이루어진 이후 이 종교집단과 문화인 등은 1981년 10월,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를 발전시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國民會議]’를 발족하여, 헌법개정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임의 중심은 ‘생장의 집’, ‘승공연합’, ‘향우회’ ‘신사본청’ 등이며, 헌법개정, 천황의 원수화 등 복고적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황국사관을 반영한 고교 교과서(『新編日本史』)를 편찬하는 등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을 지키는 회’는 원호법제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야스쿠니신사 국영법(靖國神社國營法)’에는 실패하자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로 전술을 바꾸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나카소네는 1983년 4월, 총리로서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였다.

1985년 8월 문부성은 입학식과 졸업식에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제창을 철저히 행하도록 각 학교에 통지하는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변화의 중심적인 위치에 종교우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주의적 엘리트 양성을 추구하는 일본정부의 교육행정이 강화되었다.

2. 임협우익의 쇠퇴

신우익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종교우익이 세력을 확장하여 정치세력화한 반면, 기존 우익의 활동은 정체되어 있었으며 임협계 우익의 불법 행

위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감은 증폭되어만 갔다.

임협계 우익은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개조한 차량을 동원하여 군가나 기미가요를 확성기로 흘려보내는 거리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또, 그들이 적대시하는 단체(한국대사관, 중국대사관, 소련대사관, 조선총련 관련기관, 『아사히신문』 등)의 거점이나 일본공산당의 가두연설 회장, 일교조 전국집회장에 선전차로 밀어닥쳐 방해하였다. 또한 기업을 협박하여 활동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폭력단이 임협계 우익으로 탈바꿈하여 총회꾼으로 진출하고, 또한 거품경제 때에는 부동산업자·건설업자와 결탁하여 땅값을 인상시키는 역할, 즉 ‘지아게야(地上げ屋)’를 하여 이권을 챙겼다.

임협계 우익의 활동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일본정부의 견제도 강화되었다. 1988년에는 국회·외국공관과 정당사무소 주변에서의 ‘정온보지법(靜穏保持法)’을, 1992년에는 ‘폭력단대책법(暴力團対策法)’을 통과시켰다. 또한 1992년부터 각 자치체는 ‘확성기를 통한 소음 규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임협계 우익의 실질적인 활동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V. 우익 지식인의 반동

1. 자유주의사관연구회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는 일본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의 시

기였다. 1988년 9월 이후 히로히토의 병상이 악화되고, 1989년 1월 그가 사망하자 일본 국민 사이에 잊혀져 가던 천황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증폭되었는데, 당시의 '자숙'이라는 분위기는 천황제의 잠재성을 엿보게 하였다. 1988년 12월 8일 시의회에서 “천황에게 전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나가사키시[長崎市] 모토시마 히토시[本島等] 시장은 우익단체로부터 집단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붕괴되고,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등의 일본의 강경 보수주의 정치가들은 1980년대 말부터 대미관계에서 자신들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991년의 걸프전쟁은 1980년대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분담론’에서 1990년대의 ‘국제공헌론’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여건은 일본 보수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보수 강경파가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오자와가 자민당을 이탈한 이후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가 1993년에 무너졌다.

1993년에 연립정권을 구성한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노리히로[細川護熙] 총리는 1993년 7월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전쟁을 ‘침략행위’였다고 단정짓고 사죄하였다. 또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1995년 6월 국회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제국의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일본은 이에 “통절히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전후 50주년 결의’를 발표하였다. 또한 ‘종전(終戰) 50년’을 가까이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남경대학살의 진상문제, 종군위안부에 대한 책임과 보상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이른바 종군위안부재판이 제기되

었다. 즉,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쿄대학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 교수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사관연구회가 1995년 1월(1997년 1월 결성)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본사학회의 그간의 역사관이 일본의 나쁜 점은 강조하고 좋은 점은 과소평가하는 자학사관^(自虐史觀), 동경재판사관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서 '자유주의사관'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연구회는 자유주의사관에 입각하여 이데올로기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일본의 역사를 고쳐 쓴다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들은 결국 침략전쟁 긍정론으로 빠지게 되고, '대동아전쟁 긍정론', '반미', '반사죄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본사학회로부터 역사수정주의, 신황국사관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들이 펴낸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教科書が教えない歴史]』가 40만 부나 팔려 베스트셀러의 하나가 되었다.

2.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후지오카와 니시오 간지^[西尾幹二]는 자유주의사관에 동조하는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등과 함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會, 이하 새역모)'을 1997년 1월에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만화가인 고바야시는 1998년에 태평양전쟁과 아시아 침략을 긍정하는 『전쟁론^(戰爭論)』이라는 만화를 발간했는데, 이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침략전쟁을 긍정하는 만화가 수십만 부 팔린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어렵게 되어버렸다. 새역모는 2001년에 문부성의 검정을 마친 중학교 교과서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를 발간하고, 그 채택운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5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회’가 통합해서 ‘일본회의’가 결성되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모임들은 신도 종교 집단과 유족회 등이 중심을 이룬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보수계 조직으로 당연이 우익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협력하는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日本會議國會議員懇談會)’도 결성되었다. 일본회의는 헌법개정, 교육기본법개정, 야스쿠니 공식참배, 부부별성 법안반대, 국가주의적 교과서 채택 등을 주장하고, 재일한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반대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일본회의가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다.

Ⅵ. 현재의 우익

1. 우익단체의 현황

현재 일본의 우익단체(정치자금규제법에 따라 정치자금 신고를 한 단체 중 우익이라고 간주되는 단체)는 1,700여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실체는 확실하지 않다. 일본 경찰은 약 12만 명이 우익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우익단체들도 전통적인 계보를 잇는 우익은 20~30여 개이며, 단순한 거리 선전 활동을 넘어서, 육탄언어로 대표되는 행동우익의 성향을 가진 단체가 약 50개(2만 2천 명)가 있다고 한다. 가두선전을 하는 우익은 약 900개(1만 명)가 활동하고 있고(1999년 당시), 기업 등을 협박하여 이권을 챙기는 ‘가짜우익(えせ右翼)’은 약 350개(6천 명)가 있다고 한다. 우익이라는 간판은 유지하고 있지만 활동이 정지된 단체도 상당히 많다.

현재의 다양한 일본의 우익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굳이 분류하

자면 과거부터의 분류우익을 들 수 있는데, 대일본생산당, 대동숙, 국민동지회, 대일본애국당, 호국단, 일본동맹(호국단에서 분립) 등이 있다. 전자의 3단체가 관념우익이고, 후자의 3단체가 행동우익으로 분류된다.

또한 패전 후 새로운 우익으로 부상한 임협계 우익이 있다. 임협계 우익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야마구치[山口組]계의 일본국수회(日本國粹會, 1958), 1960~1970년 안보 때 좌익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결성된 일본국수회의 국수청년회(國粹青年會), 교화청년대(交和青年隊, 1969), 일본청년사(1969), 조국방위대(1970) 등이 있다. 특히 일본청년사는 중국과 영토문제로 다투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에 1978년에 등대를 설치하여 실효지배하고, 북한 납치 일본인 귀국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임협계 단체의 우익단체 결성이라는 흐름 속에서, 야쿠자 조직을 확대하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결성된 충효숙(忠孝塾, 1972), 대일본서뢰회(大日本西雷會, 1979), 신일본청년우정회(新日本青年優政會, 1977), 대일본신정회(大日本新政會, 1981), 수기관(修己館, 1978) 등의 단체가 있다.

신우익을 대표하는 우익단체로는 일수회(一水會, 1972), 낙풍회(洛風會, 1972), 팔천모사(八千矛社, 1980), 통일전선의용군(1981) 등이 있다.

그리고 정치단체는 아니지만, 이른바 생장의 집과 같은 신도단체와 일본유족회 등 구군인단체 등이 있으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익단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네트우익(ネット右翼)이라고 하여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통해 우익적인 언사를 표현하는 이들이 있다.

2. 우익의 주장과 사상

일본의 우익이라고 해도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장과 행동을 동반

한다. 하지만 일본 우익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국체수호’, ‘반공’, ‘반좌익(반일교조)’이다.

일본의 우익은 천황을 깊이 숭배하는 것이 특징으로, 신도를 주로 믿고 있다. 특히 ‘생장의 집’ 등의 교파 신도는 천황 숭배에 집착을 보이고 있으며,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반공이라고 해도 ‘친미(親美)’, ‘반미(反美)’, ‘대미자립(對美自立)’ 등 단체에 따라 다양하다. 냉전 붕괴 이후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가 해체됨으로써 현재의 미일안보체제는 미국의 일본 속국화를 추진시키는 것뿐이라며 반미의 입장을 취하는 단체도 있지만, 중국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영토문제 등으로 일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친미의 입장을 취하는 단체가 주를 이룬다.

행동우익으로 한때 관심을 모았던 대일본애국당은 천황국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친미와 친한의 입장을 취했으며, 선전차에는 일장기와 성조기를 함께 내걸고 다녔다. 신우익의 대표단체인 일수회는 친미·반공우익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하여, 일본의 완전 독립을 얻기 위해 반미의 입장을 취했는데, 1999년에 회장이 된 기무라 미쓰히로(木村三浩)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에는 ‘부시정권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회(ブッシュ政権のイラク戦争に反対する會)’를 결성하는 등 일본의 ‘대미자립’을 주장하였다.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태평양전쟁과 동경 재판에 대해서는 기존 우익이 긍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신우익은 철저히 부정하고 소위 YP체제 타파를 주장한다. 국내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우익은 현 체제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신우익은 반체제적이며 전통적인 천황국가 건설을 주장한다. 전통국가로의 회귀라는 입장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녀평등 실현정책(男女共同参画) 등을 일본의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

라며 비판한다.

대외문제에서 대부분의 우익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며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을 요구한다.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에서 대만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단체도 있으나, 군사적 위협, 야스쿠니신사 문제, 조어도의 영토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과 대만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1980년대 말까지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동질감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단체도 많았으나, 반일감정, 야스쿠니신사 문제, 독도문제 등으로 비판적인 우익이 늘고 있다. 러시아연방에 대해서도 북방영토 문제 등으로 비판적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일본의 우익과 함께할 수 있는 주변국가는 미국뿐이다.

일본의 보수 온건파와 좌익 등 일부는 재일한인이나 재일외국인 등에 대하여 동정적이고, 일본 사회 속에서의 공존을 추구하나, 보수 강경파와 대부분의 우익은 이들에 대하여 배타적이다. 하지만 신우익의 대표적인 인물로 1993년에 아사히신문사 본사에서 자살한 노무라 슈스케(野村秋介)는 재일한인에 대하여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Ⅶ. 맺음말

현재 일본이라는 국가의 우경화를 실질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종교우익이다. 또한 우익 지식인의 활동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들은 과거의 우익과 같이 일본 국민과 떨어져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조직력으로 국회를 움직이는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신우익의 일수회가 선전차를 하얀색으로 하고, 티셔츠 등을 입고 운동을 하는 등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일본 국민에게 보다 접근하려는 우익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의 '전술'은 일본을 우경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 우익의 '전술'에 대하여 과연 일본 국민이 어떻게 반응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국민들이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필자가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한국」(『韓日民族問題研究』 11號, 2006. 12), 「일본 우익의 사상과 활동에 관한 사적 고찰」(『韓日民族問題研究』 13號, 2007. 12) 등에서 논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단지, 일본 국민이 일본의 우익을 지지하고, 우경화되어 가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일본 국민의 우경화는 폐쇄적인 일본 민족주의의 지향이라기보다는 경기 불안,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반감 등 현실도피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의 불안 요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시키려는 우익의 의도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일본의 세대교체에 따른 천황에 대한 인식 변화, 재일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일본 사회의 변화, 한국 등 주변 국가와의 교류 증가 등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하는 여건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양희 외(2007), 『일본 우익사상의 기저연구』, 보고서.

김호섭 외(2000), 『일본우익연구』, 중심.

노다니엘(2006), 『우경화하는 신의 나라』, 랜덤하우스.

警備實務研究會(1989), 『右翼運動の思想と行動』, 立花書房.

高木正幸(1989), 『右翼』, 土曜美術社.

高木正幸(1996), 『右翼・活動と團體』, 土曜美術出版販賣.

堀幸雄(2006), 『最新 右翼辭典』, 柏書房.

堀幸雄(1993), 『戦後の右翼勢力』, 勁草書房.

宮崎學(2007), 『右翼の言い分』, 아우콤.

木下半治(1983), 『日本右翼の研究』, 現代評論社.

小林よしのり・西部邁(2003), 『アホ 腰抜け ビョーキの親米保守』, 飛鳥新社.

小熊英二・上野陽子(2003), 『〈癒し〉のナショナリズム』, 慶應義塾大學出版會.

松本健一(1995), 『右翼・ナショナリズム傳説』, 河出書房新社.

松本健一(2000), 『思想としての右翼』, 論創社.

鈴木邦男(1993), 『脱右翼宣言』, 株式會社アイピーシー.

鈴木邦男(2000), 『右翼・公安用語の基礎知識』, コアラブックス.

鈴木邦男(2005), 『新右翼』, 彩流社.

猪野健治(2005), 『日本の右翼』, 筑摩書房.

猪野健治(2006), 『右翼・行動の論理』, 筑摩書房.

池田諭(1978), 『日本の右翼』, 大和選書.

天道是(1989), 『右翼運動 100年の軌跡』, 立花書房.

蒲島郁夫・竹中佳彦(1996), 『現代日本人のイデオロギー』, 東京大學出版會.



제2부

우익의 주요 인물 · 단체 · 사상

현양사와 도야마 미쓰루 (방광석)

우치다 료헤이와 조선문제 - 동광회의 조선내정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김동명)

동아동문회와 고노에 아쓰마로 (정애영)

기타 잇키와 1920~1930년대 일본의 우익사상 (함동주)

기시 노부스케의 국가주의 - 사상적 원천탐색 (김종식)



현양사와 **도야마 미쓰루**

방광석_ 고려대학교

I. 머리말

현양사(玄洋社)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초국가주의 단체, 아시아주의 단체, 또는 우익의 원류로 불려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군부와 관료, 재벌의 가교 역할을 하며 또한 테러, 협박, 암살을 불사하는 폭력기관으로서 정계 뒤에서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관여한 수많은 전쟁에서 자금 조달과 뒷공작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시아주의라는 이름 아래 중국의 쑨원[孫文]과 조선의 김옥균(金玉均)을 비롯해 당시 서구열강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이슬람 지도자 등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가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양사 사원은 정부 관리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유력 정치가에게 힘을 빌려주었고 대중의 불안을 선동하거나 진압했다. 선거 때 입후보자나 유권자를 위협하고, 반체제적인 노동자를 탄압했다. 탄광업이나 제조업의 경영자는 현양사와 그 관련조직을 파업 진압에 동원했고 선거공작에도 활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초국가주의 단체로 지목되어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해산시켰다.

그러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현양사는 초국가주의와는 대비되는 자유민권운동 정치결사로서 1870년대에 결성되었다. 번벌정부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다가 1880년대 말 전국의 많은 정치결사가 의회정당으로 재편되어 가는 가운데 국권주의 단체로 그 성격을 전환해 패전 때까지 결사의 형태를 유지했던 것이다.

현양사의 또 다른 특색은 규슈의 후쿠오카(福岡)에 근거를 계속 두었다는 것이다. 현양사 회원은 후쿠오카 가운데에서도 지쿠젠(筑前), 그중에서도 구 후쿠오카번(福岡藩) 영역 출신자에 한정되었고 더구나 사족(士族) 출신자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대중을 조직한다거나 전국에 지부를 두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후쿠오카 현양사(福岡玄洋社)’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초창기부터 현양사를 장악하고 이끌었던 도야마 미쓰루(頭山滿)에 초점을 맞춰 현양사의 성립과정과 민권·국권 단체로서의 활동, 아시아와의 관련 등을 검토함으로써 현양사의 실태에 접근하고자 한다.

Ⅱ. 현양사의 성립

도야마 미쓰루(1855~1944)는 1855년 4월 12일 후쿠오카 성 니시진쵸(西新町, 현재 후쿠오카시 早良區 西新)에서 구로다번(黒田藩)의 우마마와리역(馬廻役)이었던 아버지 쓰쓰이 가메사쿠(筒井龜策)와 어머니 인 사이의 3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쓰쓰이 오쓰지로(筒井乙次郎), 뒤에 어머니의 친정 집안인 도야마가(頭山家)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가 되었다. 도야마가는 18석(石)의 하급무

사였다. 도아마는 21세 때인 1876년 후쿠오카 불평사족의 결사인 교지사(矯志社)의 반정부 봉기에 가담해 체포되면서 현실문제에 뛰어들게 되었다.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 가고시마[鹿兒島] 사족이 정부에 반기를 든 서남전쟁(西南戰爭)이 발발한 한 달 뒤인 1877년 3월 후쿠오카에서는 다케베 고지로[武部小四郎, 당시 31세]와 오치 히코시로[越知彦四郎, 당시 27세]를 지도자로 하는 후쿠오카 사족이 사이고 군에 호응하여 거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후쿠오카 성의 탈취에는 실패하고 패주했다. 다케베 등 중심인물은 막말기에 처단된 지쿠젠[筑前] 근왕당 지사의 고아들이었다. 이 ‘후쿠오카의 변(變)’에서 전사자는 54명, 그리고 뒤에 사형자 5명, 옥사자 43명, 징역형 422명 등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20세 전후의 젊은이었다.

‘후쿠오카의 변’ 당시, 뒤에 현양사를 창립하는 도아마, 하코다 로쿠스케[箱田六輔], 신도 기헤이타[進藤喜平太]는 그 전후에 일어난 ‘하기[萩]의 난’에 연좌되어 옥중에 있었다.

‘하기의 난’은 요시다 쇼인의 문하생인 마에바라 잇세이[前原一誠]가 지도했다. 그는 메이지 신정부의 참의(參議)였으나 동향의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등 요인의 생각에 의문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가 하기 사족의 수령이 되었다. 기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이 이끄는 신정부와 ‘정한론쟁(1873)’으로 하야한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등 재야세력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던 1876년, 당시 21세였던 도아마는 동지인 하코다, 신도 등과 함께 자주 하기를 방문해 마에바라를 만났다고 한다. 『현양사사사(玄洋社社史)』는 “하코다, 도아마, 신도는 조슈의 풍운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바다를 건너 하기의 마에바라를 방문했다. 마에바라는 후쿠오카 지사의 내방을 매우 기뻐하며 함께 거사하기로 약속했다”고 적고 있다.

1876년 10월 28일 마에바라가 꺾기했다. ‘하기의 난’이다. 그러나 11월

6일에 체포되고 반란은 진압되었다. 후쿠오카에서는 마에바라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7일 먼저 하코다가 체포되었다. 8일에는 경찰에 항의차 방문한 도야마가 그대로 구속되고 신도도 붙잡혔다. 후쿠오카 현령은 구출 움직임을 피해 다음 해 2월 도야마 등을 하기로 이송했다. 마에바라는 체포 1개월 뒤 감옥에서 참수되었고 도야마 등에 대한 취조도 매우 가혹했다고 한다.

그때 감옥 밖에서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는데, 서남전쟁과 그에 호응한 ‘후쿠오카의 변’이다. 이러한 ‘대사건’은 도야마 등이 옥중에 있을 때 일어났다. 만일 그들이 붙잡히지 않았다면 필시 후쿠오카의 변에 가담했을 것이다. 사이고가 가고시마에서 자살하고 서남전쟁이 종결된 1877년 9월 24일 도야마 등은 석방되었다. 그때 도야마의 나이는 22세였다.

도야마와 현양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두 명의 여성이 있다. 그중 한 명은 노무라 보토니[野村望東尼]이다. 보토니는 1806년 후쿠오카 번사의 3녀로 태어났다. 와카[和歌]를 배우고 후쿠오카시 추오구[中央區] 히라오[平尾]에 있는 산장에서 살았다. 남편의 사망 후 출가, 근왕의 뜻을 품게 된 것은 후쿠오카 근왕 지사의 선구였던 히라노 구니오미[平野國臣]와 와카를 매개로 친교를 나누고 도막을 위해 분주하던 지사들을 비호하게 되면서이다. 마침내 히라오의 산장은 조슈번[長州藩]의 기병대[奇兵隊] 창립자인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 사쓰마번[薩摩藩]의 사이고 다카모리 등 지사들의 비밀 집회소가 되어갔다.

막말의 한 시기 후쿠오카는 도막운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865년 구로다번의 근왕파는 좌막파의 반격으로 일망타진된 탄압을 받는다. 근왕파 지도자인 가로[家老] 가토 시쇼[加藤司書] 이하 7명이 할복, 14명이 참수, 16명이 유배되었고 보토니도 히메지마[姫島]로 유배되었다. ‘이쓰츄[乙丑]의 옥[獄]’이라고 불리는 이 좌막파의 쿠데타에서 구로다번의 근왕파 1세대는 사

실상 붕괴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 뒤인 1877년 ‘이쓰츄의 옥’에서 처단된 지사들의 고아를 중심으로 한 청년사족 그룹이 일으킨 ‘후쿠오카의 변’이 실패함으로써 2대 연속 비운에 사라졌다.

도야마 등 현양사 결성 멤버는 ‘이쓰츄의 옥’을 10대 때 목격했다. 히메지마까지 보토니의 호송임무를 맡은 10명 가운데 당시 15세였던 하코다로 쿠스케도 있었다. 유배당한 이듬해 9월 보토니는 다카스기 신사쿠의 계락을 통해 기병대의 손에 구출된다. 그 뒤 조슈에 머물며 지사들에 대한 후원을 계속하지만 약 1년 뒤인 1867년 세상을 떠났다.

또 한 명의 여성은 다카바 오사무[高場亂]이다. 그가 메이지 초기 문을 연 ‘흥지숙(興志塾)’은 현양사의 주요 인물을 키워낸 사숙(私塾)이다. 주변은 고려인삼 재배지여서 보통 ‘인삼밭학교’라고 불렸다. 후쿠오카 안과의사의 딸로 태어난 다카바는 집안의 후계자로 교육을 받았다. 양명학을 배운 뒤 1871년경 인삼밭에 학교를 열어 구로다번의 자제들을 모아 강의를 했다. 학생 가운데는 후쿠오카의 변에서 처형된 다케베 쇼시로와 나중에 현양사에 결집하는 도야마, 신도, 히라오카, 나라하라, 구루시마 등이 있었다. 후쿠오카시의 현양사 기념관에는 남장을 하고 소 등 위에 옆으로 앉아 있는 다카바의 초상화가 소장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사내아이 취급을 받고 자라 번청(藩廳)에서 대도(帶刀)를 허락받았다고 한다.

도야마와 다카바의 만남은 1871년 도야마가 16세 무렵이다(1874년이라는 설도 있다). 다카바는 호쾌한 성격으로 지엽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만을 이야기하며 자유방임형 교육을 했다고 한다.

서남전쟁이 끝난 1877년 9월 도야마 등은 석방되어 후쿠오카로 돌아왔다. 이제 무력을 통해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도야마 등은 하카타만[博多灣]에 ‘개간사(開墾社)’를 세우고 그곳의 소나무 벌채권을 얻

어 경제적 자립을 꾀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878년 5월 14일 정부의 지도자 오쿠보 도시미치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도야마는 즉각 고치[高知]에 있는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만나기 위해 시고쿠[四國]로 건너갔다. 이타가키의 궤기를 기대하고 있던 도야마는 ‘무력보다는 언론’이라는 그의 말에 낙심했다. 그러나 이 이타가키 방문은 도야마와 ‘자유민권운동’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었다. 당시 40세였던 이타가키는 18세 연하인 도야마에게 중앙 정국의 움직임을 들려주고 무력봉기보다는 입헌정치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당사』에는 “도사에 찾아오는 지사들이 많다”며 이타가키가 그들의 솟구치는 열기를 쓰다듬고 민권의 길로 이끌었다고 적혀 있다. 도야마는 수개월 동안 고치에 머물렀다.

도야마는 그 사이 입지사(立志社)의 연설회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설을 체험했다. 나아가 후쿠이[福井]의 스기타 데이이치[杉田定一], 후쿠시마[福島]의 고노 히로나카[河野廣中] 등 고치를 찾아온 전국의 민권가들과 친교를 맺고 인맥을 넓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현양사 결성에 큰 영향을 미친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를 알게 되었다. 우에키는 고치 출신으로 당시 자유민권운동의 대표적인 논객이었다.

1878년 9월 오사카에서 입지사 주도로 ‘애국사(愛國社)’ 재흥(再興)대회가 열렸다. 애국사는 3년 전 이타가키 등이 전국 규모의 정당 결성을 노리고 결성하였지만 그 뒤 자연 소멸 상태에 있었다. 고치에 체재하고 있던 도야마는 그대로 오사카로 향해 대회에 참가했다. 후쿠오카에서 신도 기헤이타 등도 달려왔다. 대회에서 각지에 민권결사 설립을 서두르자고 결정함에 따라 후쿠오카로 돌아온 도야마 등은 그해 가을 현양사의 전신인 향양사(向陽社)를 결성한다.

입지사를 모범으로 만든 향양사는 교육기관인 향양의숙(向陽義塾) 등을 병설하였고, 도야마는 우에키를 초빙해 이론면에서 지도를 받으려 하였다. 민권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입지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우에키가 왜 후쿠오카에 갔는지 의문이 들지만 도야마는 향양사의 사장 하코다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우에키를 초빙했다. 1879년 1월 후쿠오카에 도착한 우에키는 5일 향양의숙 개교식에 참석했고 약 2개월 동안 후쿠오카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사이 자신의 대표 저작인 『민권자유론』을 완성했다.

향양사가 현양사로 명칭을 바꾼 것은 1879년 말로 도야마가 가고시마로 사이고 다카모리의 묘를 찾았을 무렵이다. 초대 사장에는 히라오카 고타로[平岡浩太郎]가 취임했다. 현양사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고치의 자유민권운동과의 만남이었다. 현양사는 이른바 민권결사로서 출발했던 것이다. 마에바라 잇세이나 사이고 등에 호응하여 무력봉기했으나 실패한 후쿠오카의 청년사족은 ‘자유민권’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내걸고 재출발하게 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양사에 결집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이고에게 숭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입지사 등 다른 민권단체와 큰 차이가 있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사이고의 유지를 이어 “유신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메이지유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후쿠오카 사족의 굴절된 생각이 투영되었을지도 모른다. 지위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신념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사이고상(像)은 현양사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Ⅲ. 민권운동과 현양사

1879년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애국사 제3회 대회는 국회개설 청원이 의제였는데, 당시 현양사의 전신인 향양사의 사장이었던 히라오카가 간사로서 대회를 주도했다. 이 자리에서 히라오카는 국회개설 요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애국사에 연연하지 말고 널리 국민에게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참석자 다수의 찬성을 받았다. 이것은 다음 해 3월 국회기성동맹의 결성으로 이어졌는데, 동시에 자유민권운동 속에서 현양사가 각광을 받은 계기가 되었다.

애국사 대회가 열린 1개월 뒤인 1879년 12월 향양사는 현양사로 개칭한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후쿠오카 경찰에 현양사로서 결사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출서류의 첨부자료를 보면 신청시의 사원은 61명, 도야마, 히라오카, 하코다, 신도 등 간부급은 모두 20대였다.

1879년 11월 6일 후쿠오카시 하카타구[博多區]에 있는 세이후쿠지[聖福寺]에 향양사 등 민권결사 사원과 유지 등 약 8백 명이 모였다. 집회는 이들 동안에 걸쳐 국회개설과 불평등조약 개정을 원로원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부터 1개월 뒤인 12월 이 모임은 ‘지쿠젠[筑前]공애공중회(共愛公衆會, 약칭 共愛會)’로 조직화되었다.

공애회는 후쿠오카의 민권운동의 단결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후쿠오카시와 그 주변지역, 지쿠호[筑豊]의 일부 등 구 치쿠젠국[筑前國] 일대를 망라한 규모와 운영 방식으로도 선구적인 특색을 갖고 있었다. 공애회는 17개 군구(郡區)에서 3~5명씩 공선된 위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민설 ‘의회’였다. 절 등을 회의장으로 삼았고 의장석 옆에는 답변석을 설치했으며 방청인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공애회 설립은 통제를 강화하는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공애회의 조직화와 운영은 현양사 사람들이 담당했다.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은 하코다 로쿠스케로 국회개설, 조약개정 의 건언의원과 회장을 맡았고 하부조직의 핵심에도 현양사 사원이 있었다.

규슈의 자유민권운동은 후쿠오카, 구마모토를 축으로 전개되었다. 1881년 경에 정치결사는 후쿠오카의 10개를 최고로 규슈와 야마구치에 모두 27개가 있었다. 공애회도 1881년 9월까지 9번 집회를 열고 2종류의 헌법초안을 작성했다. 민권운동이 비등해 정부를 위협했다. 1880년 1월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공애회가 국회개설과 불평등조약개정 청원서[健白書]를 원로원에 제출했는데, 이 행동을 주도한 것도 현양사 사원이었다.

1881년 10월 12일 정세를 급변시킨 정변이 일어났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중심으로 한 정부 수뇌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를 파면하고 동시에 9년 뒤인 1890년에 국회를 개설한다는 조칙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언뜻 재야 민권운동 진영의 승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측에 국회개설의 선수를 빼앗겨 목표를 상실한 민권운동은 혼란을 겪는다. 이 1881년 정변의 뒤에는 정부 내에서 오쿠마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의 교묘한 정략이 있었다. 이토의 의도는 오쿠마를 추방하는 한편 국회개설 요구를 반정부 활동의 무기로 삼아온 재야 민권파의 칼날을 피하는 것이었다.

현양사가 주도해 조직한 공애회 활동은 1881년 정변 직후부터 활동을 정지했다. 한편 중앙에서는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중심으로 한 자유당, 하야시 오쿠마를 중심으로 한 입헌개진당이라는 두 개의 정당이 생겨났다. 나아가 현양사는 규슈개진당의 결성을 둘러싼 정치결사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복잡한 움직임을 보인다. 당시 후쿠오카와 함께 규슈의 민권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던 구마모토와 관련이 있다.

구마모토에는 민권결사의 중심이었던 '상애사(相愛社)'가 존재하고, 정변 직전인 1881년 9월 서남전쟁에서 사이고군에 가담했던 삿사 도모후사(佐佐友房)를 중심으로 '자명회(紫溟會)'가 결성되어 상애사와 대립하고 있었다. 규슈개진당의 결성대회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1882년 3월에 개최되었다. 상애사의 발의에 응해 후쿠오카, 사가(佐賀), 오이타(大分), 가고시마에서 민권결사의 대표적 인물 140명이 구마모토에 모였다. 현양사에서는 사장인 하코다와 도야마가 참석했는데, 결국 현양사는 가맹을 보류했다. 상애사와의 관계와, 삿사와의 교류를 양립시키려는 도야마와 상애사와 대립하는 자명회에 위화감을 갖고 있는 사원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

규슈개진당 가맹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 현양사는 히라오카가 마련한 개간장에서 양잠 작업을 했다. 오전 중에는 밭에서 땀을 흘리고 오후부터는 산장에서 면학했다고 한다. 개간이나 양잠은 재정이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도 한다.

여기서 도야마와 함께 초기 현양사를 이끈 주요 지도자에 관해 살펴보자. 개성적인 인물들이 모인 현양사 가운데서도 선견적인 발상으로 특히 이채를 띠는 존재는 히라오카 고타로(平岡浩太郎)였다. 히라오카는 1851년 후쿠오카 번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현양사의 다른 지도자들이 메이지 초기 '하기의 난'에 연좌되어 투옥되었던 데 비해 히라오카는 서남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히라오카는 1868년 번병(藩兵)으로 관군 측에 가담하여 무진전쟁에 참가하였고 그때 사이고 다카모리와 만났다. 1877년 '후쿠오카의 변'에 참가한 히라오카는 후쿠오카에서 봉기가 실패한 뒤 사이고 군에 합류했으나 정부군에 체포되어 미야자키(宮崎)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후 나가사키, 도쿄로 이송되었다. 1881년 이후 "번벌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군자금 필요하다"며 사업 경영에 나섰다. 간장과 설탕 거래, 혹은 구리광산 경영 등

에 손을 댔으나 실패의 연속이었다. 1889년 후쿠오카 지쿠호[筑豊]에서 탄광 경영에 성공해 큰돈을 벌었다. ‘탄광왕’으로 올라선 히라오카는 1894년 중의원 의원으로서 정치의 표면에 등장했다. 물론 현양사의 동료들과는 계속 연결되었다. 히라오카가 쌓은 재력은 현양사 활동의 주요 재원이 되었음은 물론 향토의 후배들에 대한 면학원조, 그리고 중국의 쑨원[孫文] 등 일본에 망명한 아시아의 혁명가, 독립운동가의 지원에도 쓰였다.

신도 기헤이타[進藤喜平太]는 1850년생으로 도야마에 비해 5년 연상이다. 현양사가 창립된 이듬해인 1880년, 사원 61 명으로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현양사는 2년 뒤에는 은사인 다카바 등을 추가해 164명의 큰 조직이 되었다. 도야마나 하코다, 히라오카 등이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가운데 신도는 후쿠오카에 눌러 앉아 후배의 육성에 전념했다.

하코다 로쿠스케[箱田六輔]는 ‘하기의 난’에 연좌되어 도야마, 신도와 함께 투옥되었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 도야마 등보다 약 1년 늦은 1878년에 출옥했다. 곧바로 신도가 현양사 결성에 참가할 것을 권했으나 거절했다. 그러자 도야마가 설득에 나서 결국 현양사의 사장에 취임, 초창기 현양사를 지도하게 되었다. 하코다는 구로다번의 하급무사 집안에서 태어나 후쿠오카의 유명한 자산가인 하코다 집안의 양자가 되었다. 통이 크고 사람을 모아 조직화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1879년 3월 하코다는 오사카에서 열린 애국사 제2회 대회에 참석했다. 그해 민권가의 랭킹을 정한 ‘메이지민권가합경(合鏡)’이 유포되었는데, 최상위인 오제키[大關]에는 이타가키, 바로 밑의 세키와케[關脇]에는 하코다의 이름이 올랐다.

하코다의 수완이 빛난 것은 후쿠오카 민권결사와 유지를 규합한 공애회의 설립이었다. 사족 중심의 결사뿐만 아니라 농민이나 어민들을 규합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 것이 하코다였다. 1880년 공애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로원에 국회개설청원서를 낼 때는 대표로서 상경했다. 현양사가 결성된 직후인 1880년 4월 정부는 결사 상호간의 연계 등을 금지한 집회조례를 제정하여 민권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감시의 강화에 따라 민권운동이 쇠퇴해가는 가운데 동지 61명으로 출발한 현양사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선두에 선 하코다는 결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재를 털어가며 이것을 지원했다고 한다.

현양사에는 결성 때부터 반세기 이상 변하지 않고 유지된 기본방침이 있다. 헌칙(憲則) 제3조가 그것이다.

제1조 황실을 경대(敬戴)할 것

제2조 본국을 애중(愛重)할 것

제3조 인민의 권리를 고수할 것

이 가운데 제3조는 1880년 5월 후쿠오카 경찰에 제출한 설치신고서에는 ‘인민의 주권을 고수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신고서의 원본은 전쟁 때 소실됐으나 1936년 당시의 기관지에 ‘인민의 주권’이 ‘인민의 권리’로 바뀐 경위가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1880년 5월 13일이고, 인가가 내려진 것은 8월 31일로 되어 있다. 인가까지 3개월이나 걸린 것은 제3조의 ‘인민의 주권’이라는 말이 ‘천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고서 제출 책임을 맡은 신도는 몇 번이나 경찰을 찾아갔으나 경찰 측은 강경하게 수정을 명해 현양사 측은 ‘인민의 권리’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현양사의 헌칙은 종래의 민권적인 색채에 대신해 국가주의 국권적 색채의 성격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창립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양사는 우국지사의 단결이고, 애국지사의 단결이며 尊王殉忠의 단결이다. 그리고 민권신장론자의 단결이고, 군국주의자의 단결이다. …… 생각
컨대 光輝 있는 國史의 회고는 국민의 元氣를 振作하고 국민의 원기진작
은 다시 한번 광휘 있는 國史를 현창하는 데 있다. 우리가 현양사를 창립
하는 까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玄洋社社史』, 3쪽)

현양사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1879년 도야마가 “향양의숙을 고쳐 정사
조직으로 삼아야 할 것, 현해(玄海)의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것을 따서 현양
사로 명명했다(『巨人頭山滿翁』)”라고 한다.

현양사의 제2세대 인물 중에는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가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스기야마는 도야마보다 9세 연하로 같은 구로다번 번사 출
신의 사족이었지만 소년 시절 도야마 등과의 접점은 없었다. 메이지유신 후
가록(家祿)을 잃고 많은 사족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스기야마는 서
양 나라들을 추종하고 무사계급의 궁핍을 초래한 신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스기야마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노리고 이토의 저택에 잠입한 것
도 신정부 타도의 정열에서 나온 것이다.

1880년 상경한 스기야마는 먼저 도쿄의 지도를 사고 번벌 거두의 저택
을 기억해 두었다. 표적이 잘못되지 않도록 돈을 주고 이토의 사진을 손에
넣었다. 몇 명의 연하 동지를 발견해 프랑스혁명의 과격정당의 이름을 빌려
‘자코뱅당’이라고 이름붙였다. 1883년 일단 귀향한 스기야마는 구마모토
에 있는 자명회의 삿사 도모후사를 방문했다. 스기야마가 삿사에게 활동자
금을 요구하자 삿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60엔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스기야마가 처음으로 도야마를 만난 것은 1885년이였다. 내각제도가 발
족되어 이토가 초대 수상에 취임한 해이다. 21세였던 스기야마는 도쿄 긴자
[銀座]의 싸구려 여관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

스기야마가 정부 고관의 뒤를 쫓고 있던 무렵 구루시마 쓰네키[來島恒喜, 당시 21세], 마토노 한스케[的野半介, 24세], 히사다 젠[久田全, 31세] 등 현양사의 젊은 이들이 잇달아 도쿄로 향했다. 히라오카 고타로 등이 조선의 임오군란에 의용군을 보내 개입하려고 한 계획이 실패로 끝난 것과 같은 시기이다. 상경한 구루시마 등은 구마모토, 미야자키, 후쿠이의 젊은이들과 함께 7, 8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현양사사사』에서는 “도쿄 시바벤텐[芝弁天]에 양산박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현양사는 재정이 궁핍한 상태였다. 따라서 풍부한 자금을 갖고 상경했을 리가 없다. 이 ‘양산박’은 자유민권파의 거점이 되어 이타가키도 얼굴을 비쳤다고 한다.

1884년 12월 하순 조선에서 갑신정변의 소식이 전해졌다. 스기야마는 아직 정변을 주도한 김옥균 등이 일본에 망명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에 건너가려고 1주일간 번 돈을 갖고 고베[神戸]로 향했다. 그런데 관현의 경계는 엄했다. 동행한 동지는 고베에서 체포되었다.

도항을 단념한 스기야마는 도쿄로 돌아와 다시 칼날을 이토 히로부미 등 정부고관에 향했다. 그러나 동지 세 명이 도쿄에서 경찰에 붙잡혀 전원 감옥에서 사망했다. 방도를 상실한 스기야마는 도쿄 야나카[谷中]에 있는 야마오카 뱃슈[山岡鐵舟]를 방문했다. 그는 구 막신[幕臣]으로 에도[江戸] 무혈입성을 이끈 공로자이자 메이지유신 후에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요청으로 궁내성에서 천황을 보필했다. 야마오카는 자신을 찾아온 스기야마를 혼낸 뒤 소개장을 써 이토에게 보냈다. 이토는 자료를 제시하며 젊은 스기야마의 비판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천박한 지식만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무랐다고 한다.

1887년 12월 25일 정부는 갑자기 보안조례를 공포했다. “정치적인 비밀결사의 결성과 집회의 금지”, “치안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황거에서 12km 밖으로 추방한다”는 내용이다. 보안조례는 민권파의 움직임에 대한

이토 내각의 위기감의 표현이었다. 당시 '3대사건건백', 대동단결운동의 지도자 등 약 570명이 도쿄에서 퇴거명령을 받았다. 이 보안조례는 현양사 사원에게도 적용돼 도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IV. 국권주의로 선회

1885년 30세였던 도야마는 15살 연하인 미네오[峰尾]와 결혼했다. 그해 구루시마 쓰네키 등 젊은 현양사 사원들은 조선 개화파를 지원하는 '의용군' 계획과 어학학교 '선린관(善隣館)'의 설립계획에 몰두하고 있었다. 도야마도 후쿠오카와 도쿄를 왕래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두 계획이 모두 좌절되어 구루시마 등 3명의 현양사 사원이 남양개발의 조사를 위해 오가사와라[小笠原]에 건너간 1886년 후쿠오카에는 야스바 야스카즈[安場保和]가 현지사로 취임했다.

야스바는 구마모토의 자명회를 이끄는 삿사 도모후사와 맹우관계였다. 자명회는 현양사가 제휴한 구마모토의 자유민권결사 상애사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도야마는 현양사의 조직원으로서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삿사와 의기투합해 야스바와도 친교를 맺었다. 독자적인 판단으로 우호 결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물과 사귀는 도야마는 현양사의 지주로서 존경을 받으면서도 점차 고립감을 심화시키게 된다.

1887년 8월 11일, 한번도 현양사의 사장이 되지 못했던 도야마가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의 직함을 갖게 되었다. 이날 창간된 『후쿠료신보[福陵新報]』 신문사의 사장에 취임한 것이다. 32세 때의 일이다.

창간시 국회 개설이 3년 뒤로 임박해 있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자유민

권파, 국권파가 신문을 발간하여 ‘민당(民黨)신문’, ‘이당(吏黨)신문’으로 나눠 경쟁의식을 갖고 다투고 있었다. 후쿠오카에는 이미 『후쿠오카일일신문』이 있어 민권신장의 논진을 펴고 있었다. 『후쿠료신보』의 창간에는 ‘민당박멸(民黨撲滅)’을 내건 지사 야스바가 관여해 현의 인쇄물을 발주하는 등 경영을 도왔다.

창간 동기에 대해서는 『규슈일보』(『후쿠오카신보』를 개칭) 50주년 기념호(1936. 4)에 도야마의 담화가 게재되어 있다. 즉, “천하를 위해 일하는 희생적인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신문사와는 출발점부터 달랐다. 신문에 관해서 알고 있는 자는 동지 중에 한 명도 없었으므로 상당히 무모한 시도였다.”

스기야마 시게마루, 유키 도라고로[結城虎五郎] 등 현양사 사원이 열심히 자금을 모집했다. 주필에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을 나와 후쿠자와 유키치의 『시사신보』에서 활동한 가와무라 아쓰시[川村稔]를 데려왔다. 부사장에는 1871년 반정부사건을 일으킨 구루메[久留米] 근황당(近皇黨)에 관여했던 가노 준지[鹿野淳二]를 불러왔다. 당시 도야마는 경영을 회계 담당인 유키 등에게 맡기고 편집에도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뒤에 “나는 내 신문을 본 적이 없다”, “월급이 50엔이었으나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후쿠료신보』는 『후쿠오카일일신문』에 대항하면서 창간 3개월 뒤에는 나가사키에 있던 다카시마(高島) 탄광의 가혹한 노동실태를 특종기사로 내는 등 활기가 넘쳤고 판매부수도 점차 늘었다.

그러나 당시 현양사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1887년 현양사 사장인 하코다 로쿠스케가 경찰에 제출한 현양사 사원명부에는 도야마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시기 현양사는 하코다파와 도야마파로 나뉘어 일체감을 잃고 있었다. 현양사의 명부에 도야마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민권파(하코다파)와 국권파(도야마파)로 인맥이 나뉜 것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양사는 향양사 시대부터 초기 자유민권운동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도야마 등은 조선에서 일어난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 등 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주의로 급격히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1888년 1월 19일 하코다는 후쿠오카의 자택에서 37세로 생애를 마감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는 도야마와 격론 끝에 자살했다는 설과 급성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설 등 의문이 있다. 도야마는 그의 죽음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나 현양사 관련 연구서의 대부분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1889년 10월 구루시마 쓰네키[來島恒喜]가 외상인 오쿠마 시게노부를 습격한 사건은 그의 이름을 전국에 알렸을 뿐 아니라 그 뒤의 현양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사건이었다.

구루시마는 1859년 후쿠시마 번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도야마보다는 4세 연하이며, 독신으로 자손이 없다. 1882년 가을부터 다음 해 봄에 구루시마와 마토노 등 현양사의 젊은 사원들이 도쿄에 갔다. 활동거점은 시바[芝] 공원 근처 세이쇼지[靑松寺] 옆에 있었다. 동지들과 도호쿠, 홋카이도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 다른 현 동지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 1886년 4월부터 1887년 봄까지 오가사와라에 도향했는데, 그곳에서 김옥균을 만나기도 했다.

1889년 막말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의 개정반대운동이 다시 고양되었을 때 운동을 이끈 것은 34세의 도야마였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후임으로 외상에 취임한 오쿠마는 사가번 출신으로 메이지유신 이래 현안이었던 조약개정을 성공시켜 사쓰마·조슈 번벌정권에 타격을 가하려 하였다. 오쿠마는 이노우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중히 개정교섭을 진행했다. 1888년 11월 멕시코와 상호 대등한 ‘통상항해조약’을 맺었을 때는 순조롭

게 진행되는 듯이 보였다.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열강과는 비밀리에 개별교섭을 시작했다.

그 비밀교섭의 내용을 영국의 『런던 타임스』가 1889년 4월 폭로했다. 구가 가쓰난(陸羯南) 등이 국수주의를 내걸고 창간한 『니혼(日本)』은 이 보도를 접하자 5월 말에서 6월 초에 걸쳐 오쿠마 개정안을 연재했다. 그러자 이노우에 개정안과 차이가 없다, 나라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등의 여론이 비등했다.

도야마는 현양사를 대표해 상경했다. 후쿠오카에서는 신도, 히라오카, 가쓰키 히로쓰네[香月愼經] 등 현양사 간부가 삿사 도모후사가 이끄는 구마모토의 자명회와 연계해 조약개정에 반대하는 ‘지쿠젠협회’를 조직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①주권을 손상시킨다, ②치외법권의 철폐를 기하기 어렵다, ③내정간섭의 빌미가 된다 등 6항이다.

도쿄에서 도야마는 반대파 단체 등과 연설회를 열고 각 단체의 대표자와 협력해 각료를 방문해 조약개정의 중지를 요청했다. 도야마는 내상 겸 장상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와 추밀원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방문해 담판을 했다.

도야마 등의 활동이 효과를 보아 마침내 이토도 조약개정 교섭 반대로 돌아서 내각은 반대 분위기에 싸였다. 그런데 수상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는 8월 2일 각의에서 일단 오쿠마의 조약개정안 단행을 결정했는데, 반대운동이 활발해지자 메이지 천황이 동조하고 나섰다. 재차 열린 각료회의에서 구로다 수상이 개정을 단행하겠다고 하자 이토 추밀원 의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개정 단행 방침이 결정되었다.

점점 타오르는 반대운동에 후쿠오카에 있던 구루시마는 동료 마토노에게 ‘목숨을 버릴 각오’라고 밝히고 상경했다. 구루시마는 도쿄에서 반대운

동의 선봉에 서 있던 도야마를 자주 방문하며 신중하게 정세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언론을 통한 운동으로는 오쿠마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습격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다. 폭탄의 입수에 관해서는 가장 신뢰하던 도야마에게 상담했다. 당일 오후 3시 55분 외상 오쿠마를 태운 마차가 외무성 정문에 들어서 오쿠마가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 구루시마는 숨기고 있던 폭탄을 던졌다. 폭약 연기 속에 오쿠마는 쓰러지고 구루시마는 단도를 꺼내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했다. 오쿠마는 오른쪽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각 신문은 즉각 이 사실을 보도했고 경시청은 현양사 관계자의 적발에 나섰다. 현양사 사원 약 30명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 도야마는 조약개정반대 유지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에 가 있어 그곳에서 구속되었다. 후쿠오카에서도 히라오카, 신도, 스기야마, 유키 등 약 20명이 붙잡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처벌된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구루시마가 현양사에 탈퇴신청서를 내는 등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짰기 때문이다.

1889년 2월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포되고 이듬해 7월 제1회 총선거가 실시되어 11월 제1회 제국의회가 개최되었다. 유권자는 직접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25세 이상의 남자로 당시 인구 약 4천만 명 가운데 유권자는 약 46만 명, 국민의 1.1%에 지나지 않았는데, 소선거제로 3백 명의 중의원의원이 탄생했다.

후쿠오카현은 8개 선거구로 나뉘어 2구만이 정수 2명, 현양사 계열로는 가쓰키 히로쓰네, 오노 류스케[小野隆助], 곤도 간이치[權藤貫一] 등 세 명이 당선되었다. 그들은 정부당인 '국민자유당'의 일파로 활동했다. 가쓰키는 현양사의 젊은 사원의 교육을 담당한 '현양사 감독', 오노와 곤도는 전 군장[郡長]으로 특히 오노는 과거 공애회의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1891년 5월 야마가타[山縣] 내각의 뒤를 이어 성립한 마쓰카타 마사요시

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민당의 주장에 따라 크게 삭감당하자 12월 25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892년 2월 15일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포하였다. 이 제2회 총선거를 앞두고 1892년 1월 반 번벌(藩閥) 야당세력을 의회에서 내쫓기 위해 민당 장사(壯士)의 단속강화를 지시해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 내상의 주도로 정부와 경찰이 일체가 되어 ‘선거간섭’에 나섰다.

주전장은 민당이 강한 기반을 가진 고치[高知],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등지였다. 현양사의 히라오카와 도야마는 현 지사인 야스바 야스카즈를 통해 마쓰카타 수상에게서 중의원 선거에서 친정부 단체의 후보자를 도와줄 것을 부탁받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했다. 현양사가 선거간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 정책이 ‘민권’에서 ‘국권확장’으로 옮겨졌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양사는 친정부 단체인 ‘중앙교섭부’, ‘긴키구락부[近畿俱樂部]’를 위해서 유세함은 물론,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폭력단을 조직하였다. 현양사 사원은 칼과 목도를 휘둘렀고 민당 측은 갈고리와 죽창으로 응전했다. 일련의 선거간섭으로 후쿠오카에서 3명, 사가에서 7명 등 전국에서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388명이었다.

이러한 선거간섭 속에서 후쿠오카에서는 현양사가 지원한 후보가 9의석 가운데 8석을 획득했고 민당은 1석에 머물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정부 측이 승리하지 못하고 선거간섭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각문책결의안이 가결되어 마쓰카타 수상은 인책 사임하고, 야스바 지사도 사직했다. 도야마는 수미일관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이후 국내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현양사는 시야를 해외로 돌리게 되었다.

민권결사로 출발한 현양사는 드디어 국권주의로 크게 선회해 나갔다.

1882년 7월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현양사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히라오카 고타로였다. 사이고 문하의 가고시마 사족 노무라 닌스케(野村忍助)도 호응했다. 서남전쟁에서 사이고군에 가담했던 히라오카는 정한론을 외친 사이고의 뜻을 이어받고자 했다. 그들은 의용군으로 개입하려고 획책했다. 히라오카는 정부의 교섭이 어찌되든 연약외교를 규탄하여 제2유신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회밖에 없다고 생각해 군사행동을 번벌정부 타도로 전화시키려 계획했던 것이다.

노무라는 외무성 어용괘(御用掛)라는 직함을 얻어 일본 측 전권 이노우에 가오루의 수행 교섭을 감시하게 되었다. 도중에 시모노세키[下關]에서 히라오카, 도야마와 만났다. 얼마 후 조선으로 건너간 노무라로부터 히라오카에게 장문의 암호전문이 도착했다. 군대를 만들어 서둘러 조선으로 건너오라고 재촉하는 내용이다.

히라오카는 당시 후쿠오카와 가고시마 사족을 중심으로 편성한 ‘의용군’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선발대를 출발시키기로 했다. 히라오카는 선발대가 부산에 상륙한 뒤 3천 명을 이끌고 단번에 서울로 쳐들어 올라간다는 계획이었다.

경찰이 철저히 감시하는 가운데 80명이 상인이나 관리로 변장해 폭탄을 지니고 하카타에서 오사카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 배가 바다로 나가자 총, 검, 창 등으로 선장을 위협해 배를 납치, 부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배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청국군이 반란을 진압하여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히라오카의 행동은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본의 국내여론은 민권신장에서 국권확장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다.

V. 현양사와 ‘아시아’

1884년 12월에 발생한 갑신정변이 실패함에 따라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이 비밀리에 일본에 망명했다. 도쿄에 도착한 김옥균은 미타(三田)에 있는 후쿠자와의 집에 거처를 정했다. 후쿠자와는 2년 전에 일본 시찰차 방문한 김옥균과 친교를 맺고 이후 개화파를 지원했다. 김옥균은 1881년 일본 시찰단의 일원으로 방일한 이래 일본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근대화를 꾀하려 했다. 후쿠자와와 만나 교유하고 조선의 청년들을 게이오의숙에 유학시켰다. 1882년 임오군란 뒤 다시 방일했을 때는 후쿠자와와 면회해 조선의 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김옥균 등의 망명이 세상에 전해진 것은 다음 해 3월에 접어들어서였다. 신문은 연일 개혁을 위해 거사한 김옥균 등을 호의적으로 다루어 지원 움직임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신병인도 요구에 일본정부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구루시마와 마토노 등 재경 현양사 사원은 청의 영향을 배제한 ‘조선의 독립’을 도와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울었다. 구루시마 등은 ‘의용군’ 계획을 세워 후쿠오카에 있는 도야마의 상경을 촉구했다. 재경 그룹의 연장자인 히사다 젠이 후쿠오카로 돌아가 도야마에게 계획을 밝혔다. 도야마는 반대하지 않고 “곧 상경해서 동지와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오카의 현양사 사원 중 몇 명은 도야마에 앞서 도쿄로 떠났다.

1885년 4월 김옥균은 간사이(關西)로 이동해 고베(神戸)를 중심으로 교토와 아리마(有馬) 온천 등을 전전했다. 일본명을 사용하고 머리나 복장도 양장으로 바꿨다. 도야마는 재경 동지들의 요청으로 상경하는 도중 니시무라(西村) 여관에서 김옥균과 처음으로 만났다. 1885년 5월에서 6월경의 일이다.

이때 도야마는 30세, 김옥균은 34세였다. 도야마는 갖고 있던 500엔을 모두 김에게 건넸다. 김옥균과 면담한 후 도야마는 후쿠오카로 돌아갔다가 자금을 조달해 다시 도쿄로 향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구루시마 등은 쫓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야마는 의외로 계획을 연기하자고 말했다. 다른 현의 동지도 참여해 격론이 벌어졌지만 도야마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이 무렵 구 자유당 좌파인 오이 켄타로[大井憲太郎]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도 조선 개화파의 지원과 명성황후 등 수구파의 타도 계획을 오사카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도야마는 상경하는 도중 오이 등이 관헌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1월 도야마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구 자유당 좌파의 불온한 움직임을 눈치챈 경찰이 오이 등 139명을 일제히 체포했던 것이다.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망명해 온 김옥균은 귀찮은 존재였다. 그래서 오가사와라[小笠原], 홋카이도[北海道] 등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러나 도야마, 히라오카, 구루시마 등 현양사 사원은 김옥균을 만나 그에게 협력했다. 『현양사사사』에는 도야마와 김옥균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베에서 김옥균을 만나 크게 동양의 앞날의 풍운을 이야기하고 일본과 한국이 동포국이므로 서로 제후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백 년 친구와 같았다.

조선과 청국의 정세를 주시하면서 현양사는 다양한 인재육성 계획을 짠다. ‘의용군’ 계획을 단념한 현양사에서는 조선의 부산에 일본, 조선, 중국 3개국의 어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자는 계획이 부상했다.

어학학교 계획은 급진화하는 자유민권파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정부의 감시를 피하며 비밀리에 진행했다. 구루시마, 마토노 등 현양사원 외에 구마모토, 니가타[新潟]의 운동가도 참가, 게이오의숙 근처의 류겐지[龍源寺]에 모였다. 망명 중인 김옥균도 참석했다.

학교의 명칭은 ‘선린관(善隣館)’으로 정했다. 설립취지서는 나카에 초민[中江兆民]이 썼다고 한다. 조선과 중국의 연계, 개혁 지원에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 인재를 육성할 계획으로 자금조달의 분담도 구체화되었다. 도야마가 그 역할을 맡아 자금을 모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침 오이 등의 일제 검거의 여파로 재야 활동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현양사의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되어 선린관 계획은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1884년 여름 중국 상해의 조계에 현양사의 히라오카 고타로, 『아사히신문』 주필인 스에히로 시게야스[末廣重恭], 자유민권의 사상가 나카에 초민 등 7명의 모습이 보였다. 이들이 ‘동양학관’을 설립한 것은 이해 8월 7일로 중국인, 영국인, 일본인 교사가 한 명씩, 학생 수 10명의 작은 어학학교였다. 설립 1주일 뒤인 8월 14일 『아사히신문』은 설립취지서를 게재했다. 취지서는 서구문명의 위협 속에서 일본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눈을 돌리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중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다.

‘아시아 속의 일본’을 의식한 현양사의 활동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개시되어 히라오카 등의 ‘의용군’ 파견계획이 중지된 직후 나카에, 스에히로 등이 현양사에 대륙에서의 활동계획을 제시하였다. 도야마 등은 모두 찬동했다. 논의 결과 현양사에서 90여 명, 구마모토의 민권결사에서 약 60명이 참가하여 ‘활동당’을 결성하고, ‘중국에 인재육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동양학관’의 설립이었다. 도쿄에 사무소를 두고 학생을

모집했다. 구 막신(幕臣)인 가쓰 가이슈(勝海舟)도 자금을 원조했다. 학장에는 스에히로가 취임했다. 청국에서 동양이란 일본을 의미한다고 해서 스에히로는 학교명을 ‘홍아학관’, 이후 ‘아세아학관’으로 개칭했다. 그러나 면학 분위기가 나빠지고 학교 경영도 급속히 악화되어 설립된 지 약 1년 만에 폐쇄하였다.

히라오키는 1887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 상해에 설립한 학교 ‘동양학관’은 이미 폐쇄되었지만 젊은이를 육성하겠다는 꿈은 계속 갖고 있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아라오 세이(荒尾精)의 한구(漢口) 낙선당(樂善堂)에 동생을 보내고, 상해의 일청무역연구소에도 수십 명을 파견했다. 히라오키는 유학비 염출을 위해 상해에 제화점을 열어 현양사 사원을 주임으로 앉히고 기숙사도 만들었다. 히라오키는 아라오가 일청무역연구소를 설립할 때에도 학생·직원의 모집과 연구소 설립에 지급하는 보조금 획득 지원도 했다.

탄광경영으로 활동자금을 조성했던 히라오키는 향토의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보여, 히로타 고키(廣田弘毅),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 등의 면학비용을 제공했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 히라오키는 43세의 나이로 중의원 의원이 되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현양사 지도자들은 조선에서 은밀히 활동해온 이른바 ‘조선낭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조선낭인들은 부산의 오자키 슈키치(大崎正吉)의 법률사무소를 거점으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조사하고 당시의 정세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조선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 오자키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한국의 현상을 일본에 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필요한 군자금 조달하고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 도쿄로 향했다.

한편 현양사는 나름대로 동학농민전쟁을 이용하여 조선에 개입할 방도

를 모색하고 있었다. 5월 말 김옥균의 장례식이 도쿄에서 있는 직후 현양사 간부이자 대륙낭인인 마토노 한스케〔的野半介〕는 외상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를 찾아가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청국과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빠른 시간 안에 청국과 전쟁을 벌일 것을 권했다. 무쓰는 시기상조론을 펴면서도 자세한 것은 주전론자인 육군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와 상의하라고 말했다. 마토노의 주장을 경청한 가와카미 대장은 “현재의 정국을 전환시키고 시국을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가 불을 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누군가 그 일을 맡아 해준다면 그 다음 소화작업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제의했다. 가와카미의 말뜻을 파악한 현양사 간부들은 동학농민전쟁을 기회로 이용하여 ‘방화’의 역할을 하기 위한 행동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히라오키는 도쿄에 있는 우치다를 후쿠오카로 불러 참여시켰다. 즉, 현양사는 『니로쿠신보〔二六新報〕』의 주필 스즈키 덴칸〔鈴木天眼〕을 통해 한국 실정에 밝은 오자키와 협력하여 히라오키의 재정적 지원으로 천우협(天佑俠)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15명으로 이루어진 유격대 형태의 작은 단체였다.

천우협은 6월 하순 부산에 도착한 이후 일본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전국 도처에서 게릴라식 활동과 폭력을 감행해 ‘방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현양사와 흑룡회가 남긴 자료들을 보면 현양사의 활동과 우치다의 역할을 사실과 달리 과장하고 있다. 우치다가 천우협의 활동을 계획하고 지휘한 총지휘자라거나, 또는 혼자서 500명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다고 말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매우 근거가 희박하다.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1903년 도야마는 히라오키 고타로, 삿사 도모후사, 가미무치 도모쓰네〔神鞭知常〕 등과 함께 ‘대러동지회(對

露同志會’를 결성하였다. 현양사는 1901년 우치다 료헤이가 대륙진출을 위해 조직한 흑룡회나 구마모토 국권당 등과 연합해 대러 강경외교를 주장하며 러일전쟁을 재촉하는 활동을 벌였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현양사는 만주에서 정규군의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색했다. 현양사 사원이자 『규슈일보』 기자인 야스나가 도노스케(安永東之助)가 상경해 도야마에게 ‘의용군’의 조직을 주장했다. 도야마는 참모차장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를 소개했다.

참모본부의 보증을 받아 편성된 부대는 ‘만주의군(滿洲義軍)’이라고 이름 붙였다.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부대는 이해 5월 모지(門司)항을 출발했다. 현양사에서는 야스나가 외에 시바타 린지로(柴田麟次郎), 가야노 나가토모(萱野長知), 후쿠시마 구마지로(福島熊次郎), 오노 고노스케(小野鴻之助), 후쿠스미 가쓰미(福住克己), 신도 신타로(眞藤愼太郎) 등 모두 7명이 참가했다. 육군에서는 지휘관으로 소좌 하나다 나카노스케(花田伸之助) 이하 8명, 그리고 중국어 통역 1명이 참가했다. 현양사 사원의 종군 명목은 통역이었으나 누구 한 명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만주 현지에서 토호세력들을 모아 군단을 조직했다. ‘만주의군’은 게릴라 활동이나 정찰 등의 임무를 띠고 한때 1,200명이 넘었다.

‘의군’은 1904년 여름 수십 차례 전투를 했으나 하나다의 지휘가 탁월하여 대부분 승리했고 ‘의군’의 피해는 적었다고 한다. 1905년 2월 ‘의군’은 독자적으로 7~8천 명의 러시아군을 공격하여 통화(通化), 신민보(新民堡)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5월에는 약 300명의 대원으로 길림(吉林) 방면의 적 세력에 잠입하여 정찰에 종사하였으며 적의 병참부를 불태워버리고, 전선을 절단해서 길림-블라디보스토크 간의 통신을 단절시켰다. 신출귀몰한 행동으로 러시아군에게 위협을 주었다. 후쿠시마 소장은 ‘만주의군’의 활동에 대

해 “300명의 적은 병력을 가지고 약 3만 명의 적을 움직였다”며 극찬했다.

‘만주의군’은 러일전쟁이 끝나자 그해 10월에 해산했다. 전사자는 없었지만, 해산 뒤에도 대륙에 남은 야스나가는 청국 병사에게 저격당해 목숨을 잃었다.

도야마는 1898년 중국 혁명을 꾀하는 쑨원과 처음으로 만났다. 도야마는 42세였으며, 쑨원은 11살 연하인 31세로 중국 최초의 봉기가 실패하여 일본에 망명 중이었다.

두 사람을 연결한 것은 구마모토 출신의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이었다. 미야자키는 중국 혁명은 서구열강의 식민지가 되고 있는 아시아의 해방으로 이어진다는 쑨원의 사상에 경도해 열렬한 지원자가 되었다. 도야마를 중심으로 히라오카 고타로, 스에나가 미사오[末永節], 가야노 나가토모 등 현양사 인물들과 정치가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도 쑨원을 지원했다. 도쿄에서 쑨원의 거처는 이누카이가 알선했다. 생활비는 도야마를 통해 히라오카가 제공했다.

중국 혁명에 깊숙이 관여한 미야자키는 저서 『33년의 꿈』에서 어려울 때 도야마가 금전을 제공해주거나 격려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도야마는 전면에 나서는 일은 적었으나 미야자키가 가장 의지했던 인물로 보인다. 미야자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도야마와 현양사를 잘 알 필요가 있다.

1911년 신해혁명을 성공시켜 중화민국임시정부의 임시대총통이 된 쑨원은 1913년 봄 일본을 방문해 각지에서 대환영을 받았다. 체재기간은 2월 13일에서 3월 23일, 방문지에는 후쿠오카시의 현양사와 히라오카의 묘소, 구마모토현 아라오시[荒尾市]의 미야자키 도텐의 생가가 포함되었다.

도야마는 후쿠오카에는 동행하지 않고 도쿄에서의 환영회에 참석했다. 그는 북양군벌인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임시대총통의 자리를 양보한 쑨원

을 걱정했다. 신해혁명 후 이누카이 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위안스카이는 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경의 임시정부의 힘이 아직 약해 쑨원은 북경의 위안스카이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쑨원이 중국으로 돌아가자 상황은 급변했다. 위안스카이의 배반으로 1913년 7월 쑨원은 제2혁명을 시도했으나 위안스카이에 진압되어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스카이와의 관계를 심화시켜 쑨원의 상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고베항에 도착한 쑨원의 배는 경찰과 신문기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현양사의 가야노 나가토모는 어둠을 이용해 쑨원을 작은 배에 태워 몰래 상륙시켰다. 도야마는 이누카이를 통해 수상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와 교섭해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쑨원의 망명을 인정했다. 위안스카이가 자객을 보내 쑨원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어, 도야마는 쑨원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다. 1916년 4월 27일 쑨원이 제3혁명을 하기 위해 귀국할 때까지 도야마는 관헌과 암살의 위기에서 쑨원을 지켜냈다. 제3혁명 후 중화민국 군정부 대원수에 선출된 쑨원은 도야마에게 편지를 보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쑨원의 마지막 방일은 북경에서 병사하기 4개월 전인 1924년 11월, 중일 양국 사이의 반목이 깊어지는 가운데 쑨원은 고베에서 도야마와 회견했다. 이 회담에서 도야마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거쳐 획득한 중국 동북부의 권익환부 가능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회담 며칠 뒤 쑨원은 고베에서 유명한 ‘대아시아주의’ 연설을 했다. 쑨원은 “앞으로 일본이 서양 패도의 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동양 왕도의 간성이 될 것인지 일본 국민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월 뒤 쑨

원은 북경에서 병으로 쓰러졌다. 도야마는 가야노를 대표로 파견했다. 쑨원의 ‘영령봉안제(英靈奉安祭)’가 1929년 6월 1일 남경 중산릉(中山陵)에서 열렸을 때는 도야마도 참석했다.

1915년 말 도쿄 신주쿠에 있는 빵가게 나카무라야[中村屋]에 인도인 라스 비하리 보스가 모습을 나타냈다. 보스는 영국의 지배로부터 인도 독립운동을 피하다 실패해 일본에 도주해 와 있던 상태였고, 당시 29세였다.

이해 11월 27일 ‘일인교환회(日印交歡會)’가 우에노[上野]에서 열렸다. 영국 정부는 반란을 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스와 다른 한 명의 독립운동가를 국외추방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12월 2일까지 퇴거를 명령했다. 보스는 다음 날 망명 중이던 쑨원의 소개로 도야마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다.

12월 1일 나카무라야의 단골손님인 도야마의 지인이 이러한 사정을 점주 소마 아이조[相馬愛藏]에게 말했다. 소마는 자기 가게에 숨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보스를 몰래 그곳으로 도피시켰다. 보스는 일단 나카무라야의 아틀리에에 숨어 지냈으나 영국정부의 수색이 엄해 은신처를 전전하는 도피생활을 계속했다. 이를 걱정한 도야마는 소마 부부의 장녀와 보스의 결혼을 제의해 1918년 7월 도야마의 자택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보스는 1923년 7월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 뒤 일본을 거점으로 인도 독립운동을 펼친다. 강연을 하고 인도 독립에 관한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하며 인도의 해방을 호소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의 저서도 번역하여 그 인연으로 도야마는 일본에 온 타고르와 친교를 맺게 되었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복잡하고 상호 모순된 듯한 현양사의 모습은 현양사가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치결사라기보다는 도야마의 카리스마나 지연에 의존한 느슨한 조직이었던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현양사는 각인각색의 네트워크로서 정치적인 틀로 서로 묶여진 것은 아니다. 도야마의 언동에도 조직자로서의 발상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히라오카가 국회의원이 되었던 것에 비해 도야마는 한번도 공직에 나선 적이 없다. 이른바 수제자인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가 설립한 흑룡회(黑龍會)가 현양사와 병립하게 된 뒤에도 도야마는 현양사에 남아 우익의 거두로서 은연중에 영향력을 유지했다. 평상시 과묵하면서 결단력이 뛰어났던 도야마는 카리스마가 있었으며 활동가들과 군, 정계, 관계, 재계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유효하게 해냈다. 그러나 도야마가 아시아주의 사상가로서 명확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메이지 말까지였다. 1944년 10월 5일 도야마는 시즈오카(静岡)에서 90세로 사망했다.

현재의 현양사 이미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캐나다 역사학자이자 외교관인 허버트 노먼(E. Herbert Norman)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GHQ의 조사분석과장으로 일본에 부임한 노먼은 “후쿠오카야말로 일본의 국가주의와 제국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이상한 일파의 정신적 발상지로서 중요하다”며 도야마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현양사를 위험한 군국주의 단체로서 인식했다. 노먼의 눈에 현양사는 ‘구식 팽창주의 압력단체’(「일본에 있어서 특정 정당, 단체, 결사의 해산」)로 비쳤던 것이다. 그는 1944년에 발표한 논문 「현양사 일본 제국주의의 원류」의 머리말에서 현양사는 “일본 제국주의 반동의 중요한 사악한 역할을 해 왔다”, “전후에도 그들은 다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의 선봉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도야마 등이 아시아 각지의 혁명가와 독립운동가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쑨원 등을 우대한 것은 일본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필리핀의 아기날도, 인도의 라스 비하리 보스 등에 관해서는 “무절제한 모험자, 싸구려 출세주의자, 정치적 사기꾼 등 자국에서도 무용한 환영받지 못하는 무리들이었다”고 썼다. 이 저작은 패전 후 일본에 번역·소개되어 노먼이 그린 현양사, 도야마의 이미지가 정착되어 갔다. 역사학자 노먼은 현양사를 국가주의 원류로 보았던 것이다.

현양사의 이름은 GHQ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1946년 1월 4일자의 「특정 정당, 협회, 결사, 기타 단체의 폐지에 관한 각서」이다. GHQ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이날 ‘군국주의 지도자’의 공직 추방과 함께 ‘초국가주의 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단체 리스트에는 27개의 이름이 올랐는데, 8번째가 현양사(*Dark Ocean Society* 참조)였다. 이 방침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노먼이라고 한다.

과연 노먼이 말한 것처럼 현양사를 국가주의의 원류로서 보는 것은 가능한가. 노먼이 만들어 놓은 현양사 이미지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는, 자유민권결사로서 현양사를 높이 평가하거나 아시아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등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양사의 행동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와 아시아주의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창일(2002), 『근대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 조항래(1993), 「일본 국수주의단체 玄洋社の 한국침략행적」, 『한일관계사연구』 1
(2006, 『韓末 日帝의 韓國侵略史研究』, 아세아문화사에 재수록).
- 한상일(2002), 『일본제국주의의 한 연구 :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까치(1980, 개정
판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오름).
- 大山正治(2003), 「右翼運動の原点と‘玄洋社’」, 『治安フォーラム』 9.
- 讀賣新聞社(2001), 『頭山滿と玄洋社 : 大アジア燃ゆるまなざし』, 海鳥社.
- 頭山滿(2007), 『頭山滿直話集』, 書肆心水.
- 馬原鐵男(1956), 「自由民權運動に於ける玄洋社の歴史的評價」, 『日本史研究』 28.
- 木村時夫(1974), 「玄洋社の成立に關する一研究—日本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序説」, 『社會科學討究(早稻田大學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9(2).
- 西尾陽太郎(1969), 「玄洋社の成立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14.
- 西尾陽太郎(1970), 「玄洋社の大陸政策」, 『歴史教育』 18(4).
- 石瀧豊美(1997), 『玄洋社發掘 : もうひとつの自由民權 増補版』, 西日本新聞社.
- 永本義弘(2004), 「玄洋社の國權論への一考察—政治資金源の獲得と明治大陸政策の
先兵として」, 『九州榮養福祉大學研究紀要』 1.
- 葦津珍彦(2007), 『大アジア主義と頭山滿』, 葦津事務所.
- 猪野健治(2005), 『日本の右翼』, 筑摩書房.
- 井川聰(2003), 『人ありて : 頭山滿と玄洋社』, 海鳥社.
- 蔡洙道(2002), 「黑龍會の成立 : 玄洋社と大陸浪人の活動を中心に」, 『法學新報(中央
大學法學會)』 109(1/2).
- 泉賢司(2005), 「玄洋社と頭山滿」, 『國土館大學武徳紀要』 21.
- 玄洋社社史編纂會 編(1917), 『玄洋社社史』, 同編纂會.
- 黑龍會 編(1966), 『東亞先覺志士記傳』 上・中・下(覆刻本), 原書房.



우치다 료헤이와 조선문제

- 동광회의 조선내정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김동명_국민대학교

I. 머리말

이 글은 ‘아시아주의’나 ‘아시아연대’, 또는 ‘대아시아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대외팽창에 참여하여 ‘아시아주의자’, ‘전통적 우익’, ‘대륙낭인’, 또는 ‘조선낭인’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인물 중 우치다 료헤이(内田良)를 중심으로 ‘조선문제’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서의 그들의 책략과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치다는 1874년 옛 구로다번(黒田藩)의 하급무사의 자식으로 후쿠오카시(福岡市)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현양사(玄洋社)의 국권론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청년기에는 청일전쟁 직전에 천우협(天佑俠)의 일원으로 조선에 건너와 반청(反淸) 공작에 임했다. 그 후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시베리아 횡단 조사여행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러시아론(露西亞論)』을 저술해서 대로(對露) 필전 필승론을 주장했다. 1901년에는 그 활동모체로서 흑룡회(黑龍會)를 결성하고 주간에 취임했다. 러일전쟁 후에는 한국통감부 촉탁으로서 한국 병

합과정에 깊게 관여했다. 한편 중국의 혁명에 관심을 갖고 쑨원[孫文] 등 중국 혁명파를 원조했으나 신해혁명 후에는 ‘만몽(滿蒙)’의 분리 보호국화를 실현하려 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강화, 만몽의 분리와 시베리아 진출을 목표로 일본 내외에서 활동하다 1937년 사망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치다 등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당시 저명한 중국문학자이며 평론가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아시아주의의 범주에서 논하면서이다. 다케우치는 아시아주의에 대해 “아무리 할인해도 아시아 나라들의 연대(침략을 수단으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불문하고)의 지향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만은 공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대’를 아시아주의의 ‘최소한’의 ‘속성’으로 들었다. 그는 우치다를 “전통적으로 대외강경의 가장 선봉에 섰던 흑룡회의 맹주”로 규정하고 그에게조차 한국 병합이라는 “정치적 결착은 불만이었다”며, 일본정부의 침략주의와는 다른 연대의식이 있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연구 시각은 다케우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치다 등의 사상과 행동에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연구자들에게 계승되었다. 특히 그들은 우치다 등이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긴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연구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에 대하여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는 우치다 등의 사상과 행동에서 연대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침략을 은폐하기 위한 ‘미명’에 불과하다면서 연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의 입장을 뒤집어서 반대로 침략의 측면에서 그들의 사상과 행동을 규명해 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연대 또는 침략의 대상이었던 조선인 정치세력과 관계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주목하더라도 우치다 등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선인 정치세력의 주관적인 의지나 운동목표를 외

면하고 일방적으로 연대에 협조하거나 침략에 이용당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 정치세력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일본정부는 물론 우치다 등의 재야세력과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록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교섭을 시도했다. 왜냐하면 그들도 조선 사회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정치세력으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일본 측에서도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동반자로서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양자는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며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자 간의 상호 관련을 규명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치다 등의 사상과 행동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들의 조선문제를 둘러싼 책략과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우치다가 조선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활동한 것은 크게 세 번이었다. 첫 번째는 동학농민전쟁 당시 천우협(千雨協)의 일원으로 조선에 건너와 청나라 세력을 조선에서 배제하고 농민군을 지원하려 한 일이고, 두 번째는 흑룡회를 기반으로 한국 병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진회와 함께 소위 ‘한일합방운동’을 벌인 일이며, 세 번째는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동광회(同光會)를 조직하여 조선에 ‘동광회 조선총지부’를 설치하고 ‘조선내정독립운동’을 전개한 일이다. 이 중 첫 번째의 경우는 우치다가 천우협의 후발대로 참여하여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고, 농민군 지원활동 또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으며 관련 사료도 미미하다. 두 번째는 그가 관여한 조선문제 중 규모나 내용 그리고 역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풍부한 사료가 존재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세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보다는 운동의 규모나 내용, 역할, 사료 등에서 약간 크고 많지만, 두 번째보다는 현저히 작고 적다. 하지만 조선내정독립운동은 한일합방운동과 관련되어 식민지 지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치다 등의 조선문제 처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책략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우치다가 동광회를 조직, 조선총지부를 설치하여 전개한 조선내정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조선인 정치세력의 주관적인 생각과 행동에도 주목하면서 양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우치다 등이 조선문제 해결에서 구사한 책략의 실상을 밝히고 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려 한다.

II. 동광회의 조직과 조선총지부 설치

1. 동광회 조직

1919년 3월 1일 발발한 3·1운동은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조선 내외의 각계각층의 조선인이 참가한 대규모 식민지 지배 반대운동이었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병합을 단행하고 억압적인 무단정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인은 지배 자체를 부정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는 3·1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그 동안의 물리력 중심의 무단정치에 대한 비판이 일본 본국 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신문·잡지 등의 언론계를 비롯하여 제국의회의원 등의 정계는 물론, 식민지 학자 등의 학계, 재야인사들도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

한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3·1운동 직후 우치다도 총리 하라 다카시(原敬)에게 「조선폭동에 관한 의견(愚見)」이라는 의견서를 보내는 등 조선 지배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주장했다. 이 의견서에서 우치다는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병합 후 총독부가 ‘친일당’을 적극 원조하지 않아 ‘배일당’이 ‘친일당’을 압도하여 조선인 모두가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우치다는 일진회 등 한국 병합 당시의 협력세력을 총독부가 적극 보호, 육성하지 않은 결과 저항세력이 협력세력을 모두 흡수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어 그는 지배정책의 일대 전환을 주장하고 ‘대방침’으로서 조선에 ‘자치’를 허용할 것을 제시했다. 물론 그가 주장하는 ‘자치’는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근대 이전에 중국이 조선을 ‘속령’으로 삼아 ‘주권’을 장악하고 내정에 관해서는 ‘인민’에게 ‘자유’를 ‘방임’한 것과 같이, 천황제 국가 일본제국의 지배 아래 조선인에게 ‘완전한 자치’를 허용해서 협력세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일본인への 동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우치다가 이와 같이 조선 지배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며 개혁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한국 병합 때 한일합방운동을 벌였던 일진회(一進會)의 구회원들이 1920년 5월 27일자로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에게 자결사(自決死)를 촉구하는 서간을 보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 병합 직전인 1909년 12월 4일, 일진회는 스기야마·우치다 등의 권유에 응해 대한제국의 황제·내각, 통감부에 일본제국과 대한제국의 ‘합방’을 요구하는 소위 「합방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일진회는 일본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 병합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합방(政合邦)’을 제창하였다. 이는 양국 인민의 대등한 권리 보

호 등을 보장하는 정치기관의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치다 등이 일진회의 활동에 개입해서 천황제국이 일본에의 대한제국 흡수를 의미하는 소위 ‘한일합방’을 청원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일진회의 「합방청원서」에 대해서 1910년 2월 2일 당시의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郎)는 스기야마에게 내훈(內訓)을 전달해 형식적으로는 청원서를 받아들였다. 이 내훈은 같은 달 9일 스기야마의 지시를 받은 기쿠치 사부로(菊池忠三郎)가 일진회에 제시하였다. 기쿠치는 일진회에 대해서 ‘① 한일병합은 각 주권자 대등의 협정에 따라 합해서 한 국가가 되는 것, ② 양국 인민은 정치상·사회상 무차별 평등하게 권리를 부여받을 것’ 등의 ‘2대 요점’을 설명하고, 일진회도 이에 대해 ‘만강(滿腔)의 찬의’를 표시했다. 즉, 일진회는 스기야마의 설명을 듣고 한일병합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합방’의 실현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진회 자신이 한국 병합의 단행과 동시에 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를 파견기관으로 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는 그들이 예기한 형식과 조직이 아니었다. 특히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별은 그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3·1운동 후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의 정책도 구 일진회원에게 희망을 안겨줄 정도로 개선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일반 조선인들에게서 원망과 질시를 받아 ‘구적(仇敵)’·‘매국의 적(賊)’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일진회원은 마침내 스기야마에 서간을 보내 그의 ‘감언’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스기야마가 스스로 ‘배를 갈라’ 자결사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1920년 7월, 우치다는 서간을 받은 스기야마를 대신하여 조선을 방문해서 구 일진회원의 자신들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려 했다. 조선에 건너온 우치다는 7월 14~18일 구 일진회장 이용구(李容九)의 맏아들 이현규(李顯奎)를

비롯해 전 일진회 평의원장 윤정식(尹定植) 등과 회합하고 각서를 교환했다. 각서는 우선 스기야마·기쿠치·우치다 등이 구 일진회원 등 한일 ‘합방’에 찬성한 조선인에 대해서 ‘합방의 참목적’을 달성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합방의 목적’은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똑같은 자격의 행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라며, ‘합방목적 기성회 동맹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병합 때 ‘정합방’과 ‘합방’을 각각 주장한 일진회와 우치다 등은 일본정부 주도의 한국 병합에 따라 어느 쪽도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없었다. 양자는 병합 이래 일본정부나 총독부에서 병합에서의 그들의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운동의 재개를 도모한 것이다.

조선에서 돌아온 우치다는 ‘조선통치문제’에 관해서 ‘선배와 지우(知友)’들에게 호소하고 곧 단체조직에 착수했다. 그는 ‘조선통치의 방술’은 “오직 황택(皇澤)을 널리 미치게 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민족적 결합을 통해 일선인 간의 완전한 화동(和同) 동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고한 단체를 조직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20일, 우치다 등은 도야마 미쓰루(頭山滿)와 데라오 도루(寺尾亨)의 연명으로 도쿄(東京)에서 간담회를 열고 단체 조직을 결의, 다음 해 2월 3일에는 ‘민족적 결합을 통해 내선인 간에 철저한 혼용(混融) 동화를 꾀할 것’을 목적으로 내걸고 동광회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즉,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궁극적 목적은 조선인을 천황제국이 일본의 국민으로서 일본인에 동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보고 그를 위해 조선인의 정치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동광회 조선총지부 설치

같은 해 5월 15일, 동광회 간사장 우치다는 상담역 데라오 등 4명과 함께 동광회 조선총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에 들어왔다. 한편 동광회는 창립 대회 전후부터 조선지부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발기회 전후에는 이미 서울에 주재하는 동광회 교섭위원 아리후 주로(蟻生十郎)의 ‘헌책(獻策)’에 따라서 회장에는 도야마, 부회장에는 데라오, 조선인 후작 박영효·백작 송병준을 세울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인 박시규(朴時奎)와 박춘금(朴春琴) 등이 창립 초부터 관여하고, 이희간(李喜僊)과 신태현(申泰鉉) 등 2명은 동광회 창립 직후인 2월 하순 아리후 등의 권유에 따라 도쿄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지부 설치의 소문만 종종 들려왔을 뿐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치다 등의 동광회 간부들이 지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에 들어온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동광회 간부들은 아리후를 중심으로 곧 지부 설치에 들어가 이희간으로 하여금 박영효가 총재로 있는 유민회를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박영효는 승낙하지 않았고 송병준도 표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교섭한 자작 이하영(李夏榮)도 참가를 꺼렸다. 또한 우치다 등이 기대를 걸었던 구 일진회 회원도 여전히 우치다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동광회 조선총지부 설치에 소극적이었다. 더욱이 지식을 갖춘 청장년에게는 아직도 ‘독립운동의 열’이 식지 않고 있어 동광회 조선총지부 설치의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상황이 곤란하게 되자 동광회 간부들 사이에서도 지부 설치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희간은 동광회 간부의 서울 입성 때 지부를 설치한다고 이미 언명한 것, 만약 지부 설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

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동광회의 명맥을 잇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 등을 들어 지부 설치의 강행을 주장했다. 결국 동광회 간부들이 이회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에 총지부를, 각 도에 지부를 두며 회원은 당분간 조선인에 한정하는 것 등을 정하고 모든 일을 이회간에게 일임했다. 이리하여 5월 22일, 동광회 간부가 서울에 들어온 지 꼭 1주일 만에 동광회 조선총지부 설립총회가 열려 조선인 65명을 회원으로 하고 이회간을 간사장으로 하는 동광회 조선총지부가 설치된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조선에서 참정권 청원운동과 조선인 권리획득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동광회는 구 일진회와의 관련을 기초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합동조직으로 등장했다. 그 때문에 박영효, 송병준, 이하영 등 비교적 지명도 있는 인물들은 물론 구 일진회 회원조차도 동광회 지부에 참가하는 것을 기피했다. 동광회 지부의 중심인물이 된 이회간은 이전에는 ‘독립협회’와 ‘상동(尙洞)청년회’ 간부로서 헤이그밀사사건에도 관여하는 등 ‘조선독립의 유지’에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관헌의 밀정’이 되어 광업, 간척, 상업, 대금업 등에 종사해 당시 청장년 사이에서는 전혀 신용이 없었다. 이 때문에 동광회 지부에는 주로 구 대한제국 시대의 군수, 군서기, 몰락한 양반과 유생 등이 참가했을 뿐 ‘신지식’을 가진 청장년은 입회하지 않았다.

동광회 조선총지부는 창립 후 6월에 간사와 평의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입회 ‘권유’에 나서, 한때는 3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곧 재정 곤란에 빠지고, 더구나 이회간이 본부에서 받은 공적인 ‘운동비’를 사적으로 써버렸다는 의혹이 지부 내부에서도 문제되어 세력이 현저하게 쇠퇴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동광회 조선총지부는 조선내정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세력 확대를 꾀한 것이다.

Ⅲ. 내정독립운동의 전개

1. ‘조선내정독립청원서’ 제출

1921년 11월의 워싱턴회의 개최를 앞두고 동광회 본부 상임간사 오바타 도라타로[小幡虎太郎]와 조선총지부 간사장 이희간, 신태현, 계선(桂宣) 등은 워싱턴회의 극동위원회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일본제국의회에는 일본 각 후켄[府縣] ‘유지’ 들과 함께 ‘조선은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문’을 제출하는 운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작한 독립청원서 제출을 위한 위임장과 연판장이 11월 17일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음 해 1월 동광회 본부는 조선독립청원서와 결의문 제출계획을 수정했다. 동광회 본부는 태평양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조선독립청원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극동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조선을 일본제국의 ‘연방’으로 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동광회 본부는 독립청원서 대신에 연방편입 청원서를 워싱턴회의의 극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청원서를 급히 송부할 것을 조선총지부에 전했다.

오바타 등 동광회 본부원들이 처음부터 조선의 독립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치다 등에게 조선 지배의 궁극적 목표는 조선인을 일본인에 동화시켜 천황제국이 일본에 조선을 흡수하는 것이다. 3·1운동 후의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정책전환을 둘러싸고, 하쓰세 료헤이[初瀬龍平]도 지적한 것처럼, 우치다 등은 “명백히 조선 민족의 내셔널리즘에 정당성을 전혀 승인하지 않고 실질상 조선인 일반을 무시한 형태로 조선인의 ‘동화’를 주창하고 그 선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치다 등은 당시 일반 조선인은 물론 동광회 조선총지

부원들조차도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 강했기 때문에 천황제 국가에의 ‘융화’ 또는 동화를 직접 내걸지 못하고 독립청원을 미끼로 해서 일단 조선인 운동세력을 규합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내정독립’이라는 새로운 숙어를 만들어내 동광회 총지부에 모인 조선인 정치운동세력에게 독립의 ‘희망’을 던져주고 점차 그 운동의 방향을 일본 본국과 조선의 ‘융화’로 전환시키려 한 것이다. 한일병합 전 ‘정합방’론을 주장하는 일진회로 하여금 그들의 ‘합방’론을 제창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선인 운동세력에 대한 접근방식은 바로 우치다 등이 사용하는 조선책략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광회 본부의 ‘연방’ 청원서 제출 제안에 대해서 당초 이희간을 비롯해 조선총지부원은 ‘절대’ 반대했다. 그들은 연방청원서를 제출하면 조선 사회로터 배척당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동광회 본부의 강한 압력에 따라 추진된 조선독립청원서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동광회의 행동에 대한 ‘내외의 신용’도 땅에 떨어져 동광회는 그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활로를 찾아야 할 상황에 처한 동광회는 제국의회 개회 중을 기회를 잡아 의회에 청원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같은 해 2월 4일 조선총지부 간사장 이희간과 간사 이기만(李起晩)은 김한(金翰), 현채(玄采), 노병희(盧秉熙), 양기탁(梁起鐸) 등과 만나 ‘연방’ 청원서 대신에 조선을 일본제국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독립청원서를 제국의회에 제출할 것을 협의했다. 그 결과 그들은 당시 제국의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의 대세’도 조선인이 정치 활동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 병합을 고수하지 않고 조선을 일본제국에서 분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국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즉, 그들은 제국의회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본정계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논의

를 일으키고 그들의 독립청원서가 조선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으로 동광 회원 등 제국의회원의 찬성을 얻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조선총지부는 제국의회에 청원하기 위한 세력 규합에 착수했다. 우선 간사장 이희간은 같은 달 13일 간사 이기만을 신태현, 계선과 만나게 하여 재만주 조선인 ‘유력자’의 서명을 받게 하였다. 다음에 서울 내 ‘유력자’의 찬성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동분서주하였다. 특히 총독 데라우치 암살음모사건의 주모자 양기탁에게 접근해서 여러 번 의회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양기탁은 조선총지부가 작성이 끝난 구체적인 청원서를 보여주지 않고 ‘조선의 해방’과 같은 공막하고 진상을 포착하기 어려운 청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양기탁 이외의 ‘유력자’도 서명을 거절하여, 결국 조선총지부는 단군교의 정훈모(鄭薰謨), 노동대회의 회장 문탁(文鐸) 등 ‘이류(二流) 이하’의 50~60명의 서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조선총지부는 제국의회에 제출할 청원서의 서명은 모았지만 조선에서는 청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도쿄에서 공작에 들어갔다. 2월 9일 이희간의 ‘밀지’를 받은 문탁이 서울을 출발, 도쿄에 도착하여 동광회 간사장 구즈요시히사(葛生能久)와 함께 청원서 작성에 들어갔다. 이어 이희간, 아리후도 도쿄에 들어가 동광회 간부들과 교섭한 끝에 ‘내정독립’ 청원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조선에서 가져온 연판장을 첨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조선총지부는 처음에는 조선의 ‘분리’를 청원할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내정독립을 청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에 관해서 『동아일보』의 ‘탐사’에 따르면, 독립청원의 ‘위탁’을 받은 이희간 등은 제국의회가 조선의 독립청원에 찬성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몇몇 일본 정객이 내정독립을 표방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임의로 갑자기 의지를 바꾸어 내정독립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조선총지부에서 검토된 독립 청원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월 4일의 이희간 등의 회합에서 조선의 일본제국에서의 분리가 주장된 점, 또한 ‘병합반대이유서’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작성하였다는 경찰의 정보에서 추측하면, 조선총지부는 한국병합조약에 따른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조선 독립을 청원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희간 등이 도쿄에 건너가 동광회 본부원들과 만나, 특히 천황제국가에의 조선 흡수를 노리는 우치다 등에게 설득당해 내정독립이라는 양자의 주장을 혼합한 형태의 청원서로 결착되었다고 생각한다.

3월 6일 정훈모 외 6명은 ‘상주문(上奏文)’을 ‘봉정’했다. 같은 날 정훈모 등 42명 연서의 ‘조선내정독립청원서’가 내각총리대신, 추밀원의장과 중의원에, 이어서 8일에는 귀족원에 제출되었다. 그들은 또한 요로(要路)와 귀·중 양원 의원 개인에게도 청원서를 보내 청원서 제출의 원의(願意)가 관철되도록 협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여기서 실제로 서명한 단체와 인물을 보면, 단군교 대종사(大宗師) 정훈모 등 15명, 조선총지부 간사장 이희간 등 3명, 노동대회장 문탁 등 2명, 야소교(기독교) 장로교회 감찰 김용수(金龍洙) 등 18명, 대동사문화 이사 전동환(全東煥) 등 3명, 유림 이용규(李容珪), 제우교(濟愚敎) 대원사장(大源司長) 박종구(朴鐘九)로 되어 있다. 조선총지부는 여러 단체의 서명이라는 형식을 빌려 조선인의 대표성을 높이려 했던 것이다.

한편, 내정독립청원서는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주문’에는 청원의 목적이 ‘천황폐하 통치하에 조선의 내정을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이 청원서는 어디까지나 일본 천황제국가의 조선 지배의 지속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어 ‘이유’에서는 먼저 한국 병합은

메이지[明治] 천황이 세계의 대세를 살피고 인류의 함낙(陷溺, 못된 일에 빠짐)을 생각하여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동양 평화’의 기초를 확립하려는 예지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에 병합의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인을 정치적·사회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민의를 존중하고 조선인이 일본의 지배에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며,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하는 병합 취지와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내정독립청원자들은 이러한 병합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합 이래 총독부 당국의 정책은 병합의 취지를 헛되게 하고 조선인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실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 조선인은 정치·사회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양자는 마치 피정복자의 정복자에 대한 관계와 비슷하다. ② 치안의 악화, 경찰관현의 폐해 등 때문에 조선인의 신체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③ 형식적 행정, 일반산업정책의 부재, 일본인에의 특권부여 등에 따라 조선인의 재산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④ 지방관 등 조선인 고위관리는 일본인 관리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정책결정권한에서도 열세이고 그 때문에 조선 사정에 맞춰 조선인에게 ‘온정’을 주는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중추원과 지방자문기관, 감찰관과 시찰관 등 민의를 존중하고 상하의 의사를 소통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관들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이러한 총독부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과 일본인 중심의 정책 등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원망과 탄식의 근본 원인이며 불평의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 3·1운동을 일어나게 한 이유라고 보았다. 또한 3·1운동 발발에서도 민족자결주의는 미세한 동기를 부여한 데 불과하고 역대 총독의 시정상의 결함이 당시 전 조선에 충만한 독립사상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결합은 사이토가 총독이 되어 점점 외부에 폭로되어 왔다고 말해 그가 제창한 동화주의 지배체제의 효과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 총독정치를 폐지해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내정을 처리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따라서 천황폐하 통치하에 내정을 [조]선인에게 해방하여 [조]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데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일본인 중심 정책의 상징이기도 한 총독부를 통한 지배를 거부하고 조선인을 통한 조선의 ‘자치’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의 조선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천황제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지배정책의 제안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내정독립청원서는 첫째로 조선인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병합의 정당성을 인정한 다음, 둘째로 지금까지 총독부를 통해서 실시된 지배정책이 병합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비판하고, 셋째로 천황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조선의 내정만을 조선인이 하게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주장은 우치다 등 동광회 본부의 의견을, 두 번째 주장은 동광회 본부와 조선총지부 양자가 일치한 견해를, 세 번째 주장은 천황제 지배의 지속을 요구하는 동광회 본부의 입장과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총지부의 입장을 각각 반영한 것이다. 즉, 내정독립청원운동은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동광회 본부와 조선총지부가 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여 연계한 것이다.

그러면 내정독립기성회에 참가한 조선인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 점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의견과 내정독립청원서 내용의 상이점을 명확히 해보자. 우선, 조선총지부 상임간사이며 내정독립기성회 상무위원이 기도 했던 이기만은 내정독립운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들은 총독부 정치의 선악 여하에 관계없이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의 민족관계에서 조선의 독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민족은 4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일본과는 관습 등 제반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의 사이에 서로 이민족이라는 감정이 불식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늘날의 총독의 통치책은 조선인을 본위로 해서 조선인을 다스린다고 말할 수 없고, 조선에서 일본인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일본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내정의 독립으로써 실질적인 [조]선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형식적인 절대독립을 바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만은 일본 민족과는 다른 역사·관습·제도를 가진 조선 민족의 존재를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당시의 동화주의 지배체제가 일본인 중심이라고 비판하고 조선인 본위의 자치주의 지배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잠시 그것을 포기하고 독립의 실질적인 형태로서의 ‘내정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바로 ‘분리형 협력’ 운동의 전개를 말한 것이다.

다음에 내정독립기성회 위원으로 조선일보사 전북지국 총무였던 최경렬(崔景烈)은 내정독립운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한일병합은 ……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책하에서 나온 것으로서 조선

민족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님은 명확합니다. 병합 이래의 통치책은 완전히 일본인 본위여서 [조]선인은 노예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 세계전쟁의 결과 민족자결의 소리에 자극받아 마침내 1919년 3월의 만세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후 일본정부는 통치방침을 변경해서 무단정책에서 문화정치로 이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하등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조]선 민족은 점점 불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 절대독립에 관해서는 조선 민족이 조만간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해결할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제1보로서 우선 첫째로 내정의 독립을 도모하고, …… 나는 민족적 인권·자유·평등을 조건으로 먼저 내정의 독립을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서 최경렬은 한일병합의 정당성을 명확히 부정하고, 일본인 중심의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적 조선 지배에 대한 민족자결의 요구가 3·1운동 발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3·1운동 이후 사이토의 ‘문화정치’ 하에서 실시된 구체적 정책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조선 민족의 절대독립을 향한 하나의 단계로서의 내정독립을 주장했다. 최경렬도 이기만과 마찬가지로 ‘분리형 협력’ 운동의 전개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경렬과 이기만의 ‘분리형 협력’ 주장과 우치다 등의 ‘동화형 협력’ 운동 주장이 서로 섞인 내정독립청원의 내용은 당시 동화주의 지배체제를 제창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동화주의 지배체제의 실현을 주장하는 ‘동화형 협력’ 운동세력과 조선의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 저항운동세력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요소를 안고 있었다. 그 때문에 내정독립운동에 대한 총독부를 비롯한 일본 본국 정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1922년 3월 6일 소에지마 기이치(副島義一) 의원의 소개로 중의원 제45회 통상국회에 청원된 「조선통치의 건」이라는 내정독립청원은 심사 미료(未了)로 위원회의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2. 조선내정독립기성회

그 후 청원서를 제출한 조선인들은 같은 달 23일 동광회 본부의 원조를 받아 ‘조선내정독립기성회창립준비회’를 발족시켜 청원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한편 같은 해 10월 동광회 본부는 ‘조선민정시찰’을 위해 정우회 국회의원 우에쓰카 쓰카사[上塚司], 헌정회 국회의원 아라가와 고로[荒川五郎], 그리고 내정독립청원서의 소개 의원이었던 무소속 국회의원 소에지마 기이치 등 3명의 국회의원과 동광회 본부 간사 아리후와 오바타를 조선에 파견했다. 동광회 본부에 따르면 시찰의 목적은 조선 민심의 실정(實情)을 밝히고 조선문제 해결이 급무임을 조야에 알려서 하루라도 빨리 그에 대한 적당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것으로 실제 목적은 내정독립청원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찰에 다름 아니었다. 이 시찰단이 조선에 도착하자 조선내정독립기성회창립준비회 등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시찰단 일행을 맞이하고 ‘각 단체 연합환영회’를 여는 등 조선 내의 내정독립운동은 한때 크게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각 단체 연합회 환영회 석상에서 조선내정독립운동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충돌사건이 일어났다. 내정독립운동은 당시 다른 운동세력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의 즉시 절대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일본 천황의 지배 아래에서 ‘내정독립’을 도모하려는 것은 조선을 일본의 ‘통치권’에서 분리하려는 ‘독립운동’과 그 성질과 정신에서 ‘천양의 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본제국의 천황은 ‘주권의 총람자’이기 때문에 일본 천황의 지배하에서의 ‘내정독립’은 이 ‘총람자’의 지배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내정독립’이

달성되면, ① 일본 천황은 조선의 내정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일본 주권의 '통일성'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해서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선인은 국제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③ 일본정부는 조선의 외교와 군사관계에 관해서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정독립'이라는 것은 단지 이름만의 독립이지 사실은 '일정한 정무(政務)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정독립운동에 조선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민정시찰단은 서울에 체재하면서 5일간에 걸쳐 각 단체의 대표 등 각지 각 계급 50~60명의 조선인과 면담하고 조선의 민의를 청취했다. 시찰보고를 한 3명의 국회의원 모두 당시의 조선인의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해 조선의 안정적인 지배 지속에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가미즈카는 당시의 조선인의 생각을 '참정권론자', '자치론자', '내정독립론자', '절대독립론자', '적화론자'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절대독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조선은 절대적으로 조선인의 조선이다, 무조건 즉시 독립시켜라 하고 크게 외치는' 절대적 독립론은 조선의 민심에 침투하기 쉬워 당시 대다수의 조선인은 이것을 '열렬히' 주장하고 있다고 조선인의 '사상' 상황을 파악했던 것이다.

10월 20일 민정시찰단이 귀국한 후 조선내정독립기성회준비회는 '내정독립기성회'로 조직을 변경하고 내정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24일 총독부 경무국은 내정독립기성회의 간부를 소환해서 '내정독립의 의의와 회의 목적'에 관해서 청취했다. 그러자 이 회의 간부는 '내정독립'이라는 것은 "일본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즉 일본의 통치권 아래에서 조선 사람만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며, "총독정치를 폐지하고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일체의 정치를 조선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무국은 이러한 내정독립기성회 간부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 조선 사람만이 조선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현재 일본의 통치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인즉…… 현재의 총독정치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총독정치, 즉 다시 말하면 일본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일본 통치를 인정한다 하며 사실상으로는 일본정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인즉……

말하자면 총독부는 내정독립운동은 총독부의 폐지를 요구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분리해서 조선인만에 의한 조선의 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당시 스스로 제창한 동화주의 지배체제에의 참가 또는 그 수정을 요구하는 소위 지배체제 내의 운동이 아니라 그에 반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러한 총독부의 판단은 말할 것도 없이 이기만과 최경렬 등의 조선인들의 독립의사를 간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총독부는 내정독립운동은 “병합의 성지에 어긋나며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에 반하”기 때문에 안정된 지배지속을 ‘방해’한다고 간주하고 즉시 ‘보안법’ 위반으로 내정독립운동기성회의 해산을 명령했다. 이로써 내정독립운동은 그 막을 내리고 이후 조선인 운동의 무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Ⅳ. 맺음말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이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위기감을 느낀 우치다는 구 일진회원들의 책임 추궁을 등에 업

고 동광회를 조직, 조선총지부를 설치해서 조선내정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합동에 따라서 추진되어 본국 의회에 청원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러나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총독부가 단체운동 자체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운동 전개에의 결말은 주로 내정독립운동의 성격에 기인한다. 즉, 이 운동은 한편으로는 운동의 궁극적 목표로서 일본 천황제국가 지배하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화'를 내걸고 '동화형 협력'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의 분리를 의미할 수 있는 조선인의 '자치'를 주장하고 '분리형 협력'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양면적 운동의 성격은 조선인의 일본인과의 동화를 주장하며, 같은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일본제국의회에의 조선 선출 의원의 참여를 주장한 참정권청원운동 등의 '동화형 협력' 운동과 전자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고 후자에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 조선인 권리획득운동과 같은 저항운동과는 대립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총독부의 동화주의 지배방침에도 반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내정독립운동은 다른 조선인 정치운동 및 총독부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 운동은 세력 확대에 실패해 총독부와의 구체적인 교섭을 하지 못한 채 충분한 힘을 갖추기도 전에 조선의 정치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내정독립운동에서 우치다와 조선인 정치세력 사이에는 '내정독립'이라는 면에서 '연대'가 스며들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의 내정독립 이후 각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나 상이했다. 우치다 등에게는 천황제국가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조선인을 일본인에게 동화시키는 것이었고, 조선인 정치세력에게는 장래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으며, 각각에게 내정독립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한 단계에 불과했다. 이러한 일시적인 ‘연대’는 결국 직접적으로 총독부의 간섭에 따라 좌절되었지만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존재였다. 이는 우치다 등과 조선인 정치세력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연대’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이 때문에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치다 등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치다 등의 전형적인 조선문제 책략은 지배자인 일본 제국주의와 피지배자인 식민지 조선의 정치세력 사이의 존재하는 근본 모순을 극복할 수 없었다.

● 참고문헌

-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 강창일(2002),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우익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김동명(2006),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 “內政獨立도 獨立인가-當局의 奇怪한 解釋”, 『동아일보』(1922. 10. 30).
- 동선희(2003), 「동광회의 조직과 성격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 제50호, 한국역사연구회.
- 李東旭 編(1978), 『日政下東亞日報押收社說集』, 東亞日報社.
- 한상일(2002),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대륙낭인과 대륙팽창』, 오름.
- 姜在彦(1970), 『朝鮮近代史研究』, 東京:日本評論社.
- 金東明(1992), 「一進會と日本-‘政合邦’と併合」, 朝鮮史研究會 編, 『朝鮮史研究會 論文集』第31集, 東京:綠蔭書房.
- 李種植 編, 井本幾二郎 編纂(1929. 10), 『朝鮮統治問題論文集』第1集, 東京:近澤印刷部.
- 鄭薰謨 等(1922. 3), 「朝鮮內政獨立請願に關し要路に貴衆兩院議員諸公に訴ふ」.
- 內田良平, 「朝鮮暴動二關スル愚見(1919. 4)」, 姜德相 編(1967), 『現代史資料 26, 朝鮮 2』, 東京:みすず書房.
- 內田良平(1920), 「一進會交渉顚末」, 『朝鮮統治問題に就て先輩に知友各位に訴ふ』.
- 同光會本部(1923. 2), 「朝鮮民情視察報告」.
- 同光會本部(1922. 4), 「朝鮮內政獨立請願に就て 附 朝鮮內政獨立請願書 朝鮮內政獨立請願經過」.
- 同光會本部(1922. 7. 24), 「同光會ノ所信に運動 過二就テ加首相ニ贈ル書」, 內田良平文書研究會 編(1994), 『內田良平關係文書』第9卷, 東京:芙蓉書房.
- 山之口公一(1996), 「黑龍會・內田良平の同光會活動」, 日本法政學會 編, 『法政論叢』第32卷, 東京:日本法政學會.

杉村茂丸, 「我帝國政治向き全御改革の儀に付建言の次第」, 『建白』(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杉村茂丸, (1920. 5. 27), 「一進會員代表書簡」, 『建白』(44) 台朝鮮の政治改革の事(14), 『九州日報』(1922. 9. 23).

瀧澤誠(1976), 『評傳 內田良平』, 東京: 大和書房.

原奎一郎 編(1950), 『原敬日記』, 東京: 乾元社.

朝鮮高等警察情報 534(1922. 2. 19 附), 「同光會支部の狀況に關する件」, 『齋藤實文書』, 94-15, 第9卷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본의 영인본, 高麗書林, 1990. 문서번호와 순서는 소장실의 1993년 작성 목록에 따름).

朝鮮高等警察情報 534(1922. 2. 28 附), 「同光會の朝鮮に於け行動に關する件」, 『齋藤實文書』, 94-16, 第9卷.

朝鮮高等警察情報 703(1922. 3. 2 附), 「華府會義に對する朝鮮人の獨立請願運動の真相」, 『齋藤實文書』, 94-19, 第9卷.

朝鮮總督府警務局(1922), 「朝鮮治安狀況 其ノ一(鮮內)」,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第3卷, 高麗書林(1989 수록).

竹內好 編集・解題(1963), 『アジア主義』, 東京: 筑摩書房.

初瀬良平(1980), 『傳統的右翼 內田良平の研究』,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黑龍會 編(1966), 『東亞先覺志士記傳』全3卷(復刻本), 原書房.

「同光會の成立」, 『亞細亞時論』, 第5卷 第2(1921. 2), 黑龍會.

「同光會朝鮮支部の創立」, 『亞細亞時論』(1921. 7).

「朝鮮統治ノ件」, 『衆議院請願』1540(1922. 3. 6 提出)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동아동문회와 고노에 아쓰마로

정애영_ 고려대학교

I. 머리말

근대 일본의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논점은 외교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의 정치운동은 중국에 대한 서구세력의 확대라는 정세에 자극받아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 ‘국민동맹회(國民同盟會)’ 운동과 같이 대외 경제집단의 통일화·조직화의 경향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근대 일본이 제국주의 노선으로 나아가게 된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대외 팽창주의가 본격화하는 때에 부상한 동아동문회와 같이 대외문제를 자기과제로 하는 제 집단과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磨, 1863~1904]를 중심으로 그 성격과 내용을 고찰한다.

일본 우익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고찰하는 데 청일전쟁·러일전쟁 시기는 우익세력의 결집과 확대 현상이 나타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898년에 결성된 동아동문회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대외경운동의 정치집단화의 단서가 되어 1890년대의 내셔널리즘 운동을 주도해 간다. 동아동

문회와 그 지도자였던 고노에 아쓰마로의 분석을 통해, 또한 청일전쟁 이후의 대외경집단의 대외론과 활동의 분석을 통해 청일전쟁·러일전쟁 시기의 대외문제와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스트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고노에 아쓰마로나 동아동문회 등에 관한 연구는, 고노에라는 인물보다 동아동문회나 국민동맹회 운동 등이 중심을 이루어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인물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동아동문회의 연구는 구성원 개인의 활동과 인식을 고찰한 연구와 동아동문회의 발회 초기의 활동에 관한 연구, 동아동문서원의 교육활동 등 한 측면을 취급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동아동문회의 연구가 중국과의 관련에서만 논해져 다양한 지역에서의 대외활동 특히 조선에서의 활동 등 전체상을 알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동아동문회가 산하 조직으로 조선협회를 두고 본격적인 대조선 여론을 주도하고, 조선에 대한 조사연구, 조선에서의 실천적 인재의 육성, 조선에서의 교육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고노에 아쓰마로 개인에 대해서도 아시아와의 연대를 주장하는 아시아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Ⅱ. 고노에 아쓰마로

고노에는 메이지 시대 후기의 정치가로 유서 깊은 화족 가문의 공작으로, 1930년대 정치가인 고노에 후미마로의 부친이다. 1863년 교토에서 태어나 1879년 대학예비문(동경대학의 전신)에 입학했으나 병으로 퇴학한 뒤 이후

한학·영학 등을 독학하다 1884년 7월 화족령의 제정으로 공작 작위를 받았다. 1885년부터 5년간 오스트리아·독일에 유학하다 귀국하여 귀족원 의장을 지내다 1895년에 학습원 의장이 되었다.

고노에는 근대 일본에서 화족이 그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황실의 변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학습원의 교육조직과 재정적 기초 확립에 주력하고, 특히 화족 자체가 외교관과 육해군의 군인이 될 것을 희망하였다. 이 같은 귀족정치의 이상에서 귀족원 의원 또는 귀족원 의장으로서 일관되게 변별관료 지배에 반감을 보이고 역대 변별정부에 대해 강경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한편 당시의 기성 정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 대외문제와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청일전쟁 이후 더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서구제국 주도의 중국의 반식민지화의 변화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국가주의에 강한 자극을 받아 동아동문회를 조직하였다. 이는 극동정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의 국가주의적 제단체의 대동단결을 꾀한 것으로, 재정상으로는 거의 외무성의 기밀비에 의존한 반관·반민적 조직이었다.

이후 동아동문회는 아시아주의적 입장에서 ‘지나 보전(支那保全), 조선 부액(朝鮮扶腋)’을 강령으로 외무성 및 군과 연대하며 중국·조선에 대한 정치·문화적 활동의 추진체로 기능하였다. 1890년에 중국에 남경동문서원(나중에 동아동문서원)을 설립한 것이 그 예이며, 1890년의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만주·조선을 둘러싼 러일관계가 긴박해지면서 고노에는 동아동문회의 조직을 통해 ‘남방 제 총독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내에서는 대러강경론을 주장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시 위

한 목적하에 동아동문회 세력을 중심으로 보다 넓은 조직으로서 국민동맹회를 결성하여 대러주전론의 선두에 섰다. 나아가 1903년에는 강경한 대러주전론을 주장하는 대로동지회(對露同志會)를 결성하였다. 같은 해 귀족원의장을 사임하고 추밀원 고문을 지내다 1904년 1월 1일 병사하였다.

Ⅲ. 고노에의 초기 사상 형성

1. 북해도 개척론

고노에의 논문이나 의견서는 다수 있으나 저서는 그리 많지 않다. 고노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고노에 아쓰마로 일기(近衛篤磨日記)』를 들 수 있다. 이 고노에 일기는 1968년 총 6권으로 간행되어 1895년 2월~1903년 3월의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고노에는 1890년대 말에 동아동문회를 설립하고 동아동문서원의 경영을 맡는 한편 국민동맹회를 조직, 이어 대러동지회와 중요한 관계를 맺는 등 ‘대외경운동’, ‘아시아주의’의 유력한 창도자 역할을 한 인물의 하나였다. 따라서 그의 일기와 부속문서는 이들 사항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메이지 후반기의 정치외교사 연구, 특히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 운동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고노에의 수기 『형설여문(螢雪余聞)』을 통해 살펴보면 어린 시절 스승에게서 일·중·한의 민족적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유학 도중 서구열강에 잠식당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참상을 실제로 보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유학 시기에 증기택(曾紀澤)의 동양연합론에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 아시아에 대한 사상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저서로는 1902년에 출판한 『홋카이도사견(北海道私見)』이 있는데, 1892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홋카이도 각지를 답사한 실태조사서 겸 의견서이다. 이는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여 홋카이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수의 이민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 한 달 뒤에 귀족원 의원인 오자와 다케토(小澤武雄)와 홋카이도의 실업가인 쓰시마 기사부로(對馬喜三郎) 등과 함께 홋카이도협회(北海道協會)를 설립한다. 협회의 기록을 보면 홋카이도 이주민에의 편의 제공, 홋카이도 지역의 실태조사 등을 협의하여 주로 홋카이도 개발에 대해 정부와 의회에 의안을 발의하고 홋카이도 척식 전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조직을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894년에는 홋카이도협회의 고노에 이름으로 「홋카이도에 철도를 부설하고 항만을 개축할 건의안」을 귀족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본 국내로부터 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기관 운임의 인하, 숙박시설의 알선 등을 무료로 대행하였다. 특히 선박요금의 인하 등은 북해도 이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홋카이도는 북쪽의 관문으로 홋카이도 척식이 급선무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홋카이도협회는 홋카이도를 북부 일본의 국방의 요지로서 정의하여 이주를 촉진하고 각종 조사와 정책 제언을 시도하였다.

고노에는 홋카이도 개척의 의의를 역설하며 “이 세계의 대세는 동양에 주목하고 있고 일본은 큰일을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이르렀으며 동양의 요로인 홋카이도는 바로 아메리카·러시아와 이어지는 중요한 지점에 있다. 국방상으로 보아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문(北門)의 연쇄(連鎖)론’을 주장하였다.

고노에의 홋카이도 개척론과 이후의 중국 보전론 등은 일견 다른 주장으로 보일 수 있으나 러시아라는 강렬한 대외위기적 요인을 매개로 긴밀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노에는 초기에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 홋카이도 개발을 주장했으나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요소가 대두하자 국방에 입각한 홋카이도론을 개진하였다. 이 시점에서의 대외위기적 요소는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추측에 가까운 요소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열강의 중국 침략은 현실적 문제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고노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중국의 위기로 보고 동아동문회를 조직하여 ‘중국 보전론’을 제창하여 민간교류, 무역, 학술교류 등을 통한 청일간의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화단사건에 따른 대외위기로서의 러시아의 요소가 커지자 고노에의 ‘중국 보전론’도 국방을 중시한 논리로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두 주장 모두 중국을 경제적 이익 개발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한편 북방의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방파제로 보는 인식에서 일치하고 있다.

2. 동인종 동맹론, 중국 보전론

고노에는 “동양은 동양의 동양이다. 동양문제를 처리함은 처음부터 동양인의 책무에 속한다. 청국이 쇠했다 할지라도 정치가 그런 것이지 민족이 쇠한 건 아니다. 이를 바로 계몽 유도하여 모두 손을 잡고 동양 보전의 일에 전념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인종으로서의 동양을 역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입장을 밝히며 아시아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1898년 1월에 당시 권위 있던 대중잡지 『태양(太陽)』에 「동인종동맹 부 지나문제연구의 필요(同人種同盟 附支那問題研究, 必要)」라는 논문을 기고하면서였다.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양의 전도를 보면 항상 인종 경쟁의 무대가 되고 최후의 운명은 황백 양 인종의 경쟁으로, 이 경쟁하에서는

중국인, 인도인, 일본인은 백인종의 원수가 될 것이다. 중국은 결코 ‘미개지’가 아니고 고도로 발달된 독자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열강이라 해도 이를 정복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열강의 중국 침략은 일종의 ‘열국동맹’ 즉 열강 간의 일정한 양해하에 복수의 열강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질 것이고 드디어 ‘중국 분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나라는 크게 ‘동인종동맹의 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 인민의 존망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일본인 자신의 이해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종래의 중국을 비하하고 등한시해 온 세태를 비판하며 동아문제를 연구할 기관이 필요한 까닭에 동아동문회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일전쟁 이후 가장 대규모의 본격적인 아시아 연구조사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동아동문회의 비중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인종론이 내외의 비판을 받으면서 고노에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 ‘인종경쟁’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대신 ‘문화’를 중시하는 자세를 취한다. 여기에서 ‘동문동종’과 같은 개념이 나오게 된다. 이는 서양문화의 장점을 흡수하여 동양문화를 강화하며 일·청 양국 공통의 동양문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기존의 서양화=문명화 도식의 탈아론과는 일선을 긋는 독특한 근대화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노에가 위와 같은 인종, 문화론을 갖게 된 계기는 1898년 11월부터 시작된 해외시찰이었다. 시찰의 목적은 유럽 각국의 귀족교육의 현상과 외교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시찰에는 중국 시찰도 포함되어 고노에로서는 청국의 상태, 유럽 열강의 동아정책 등을 현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는 7개월 정도의 해외시찰을 마친 뒤 다양한 대외구상을 발표

한다. 예를 들면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전략을 제기하고 있다.

장래 하와이를 점령한 나라는 반드시 태평양에서 우세를 점할 것이다. 일본의 동양의 끝에 있어 아메리카에 이어 일본이 가장 가까워 먼저 하와이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일본의 남쪽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한 그의 개탄은 해외시찰 중 하와이의 일본 이민의 실태를 보고 3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 이민이 백인 밑에서 노예 상태에 있다고 분개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민을 더욱 늘려 일본 세력의 부식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의 인종경쟁적 대립구도를 인구의 증가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노에에게 동맹과 제휴의 대상은 진부한 청국이 아니고 근대화된 중국이며 그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중국을 경시하는 일본인과 '미개'한 중국인을 동시에 계몽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계몽의 방법으로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와 장래의 대륙관계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설정하고 그것을 담당할 기관으로 동아동문회와 동아동문서원을 설립하게 된다.

Ⅳ. 동아동문회의 설립, 조직과 활동

1. 동아동문회의 설립

동방협회에 이어 고노에 그룹의 부상과 우익의 결집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동아동문회를 들 수 있다. 반드시 우익의 범주로 넣기 힘든 부분도 있으나 다양한 운동세력이 결집하여 대외문제에 대해 발언한 중심적 단체의 역할을 한 점에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아동문회는 고노에 아쓰마로의 지도력 아래 그를 중심으로 한 동문회(同文會)와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를 중심으로 한 동아회(東亞會)의 합병으로 1898년에 설립하였다. 동아회는 1898년 4월에 ‘아시아 부흥을 목적’으로 구가 가쓰난, 이누카이 쓰요시 등의 정교사(政敎社)계의 언론인, 진보당 의원의 일부, 동경전문학교생 등으로 구성된 대외문제연구회의 ‘동인회(同人會)’와 동경제국대학 학생회의 연구회인 ‘동명회(同明會)’가 ‘동방문제 특히 중국 문제를 연구하고 시국문제에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동아동문회의 전신인 동문회는 흥아회(興亞會)나 아세아협회(亞細亞協會) 등 대륙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던 단체 중에서 아라오 세이(荒生清) 등이 결성한 을미회(乙未會)가 전신이 되어 고노에 아쓰마로를 회장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이 두 단체가 1898년 11월 2일에 합쳐서 만든 것이 동아동문회이다. 당시 고노에는 35세로 귀족원 의장이었으며 유망한 재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아동문회는 고노에 아쓰마로의 명성과 동아시아 상황의 유동화와 함께 국내 기성 정당의 구도 변화 등에 힘입어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동아회는 진보당 계열의 정치가나 당시 국수주의로 유명한 정교사 그룹 학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출범하였다. 주로 청일전쟁 이후 중국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시사문제를 토론하고 중국의 혁명세력과 소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교사에 사무소를 두고 월간지 『동아세아(東亞細亞)』를 발행하였다.

이 같은 대외문제를 중점으로 한 큰 집단이 성립된 요인은 무엇보다 당

시의 극동 정세, 특히 중국을 둘러싼 정세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898년은 러시아의 여순·대련 조차, 독일의 교주만 조차, 프랑스의 광주만 조차 등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캉유웨이(康有爲) 등의 변법자강운동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결국 무술정변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전환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는 이른바 동양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륙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청일전쟁 이후의 일본의 대외경운동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898년 성립 당시의 동아동문회는 고노에 아쓰마로, 이누카이 쓰요시, 구가 미노루(陸實), 다니 다테키(谷干城), 삿사 도모후사(佐佐友房),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나카이 기타로(中井喜太郎), 호시 도오루(星亨) 등을 중심 회원으로 초당파적인 성격을 표방하며 출발하였다. 초당파적 성격이 짙은 이 단체의 활동은 크게 나누어 중국·한국 관계의 정보수집, 대륙낭인으로 불리는 실천가의 양성, 선전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발회결의에서 행한 동아동문회의 주지는 다음과 같다.

- 지나(支那)를 보전한다
- 지나의 개선을 조성한다.
- 지나의 시사를 토구(討究)하고 실행을 꾀한다.
- 국론을 환기한다.

내용은 청·일 양국의 ‘동문동종’, ‘순치보거(唇齒輔車)’를 주창하여 종래의 대륙관계 집단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특징적으로 보이는 주장은 ‘지나(중국) 보전’ 강령이다. 다음의 발회결의를 보면, 중국에 대해 ‘동문동종’, ‘순치보거’적 입장에서 서구열강의 중국의 식민지화를 뜻하는 ‘중

국 분할'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청·일 양국은 교제가 오래이고 문화가 서로 통하고 풍속도 비슷하다. 정으로 치면 형제 같은 사이이고 세력으로 보면 이와 입술의 관계이다. 무릇 중국은 지금 열강에 둘러싸여 서로 쟁탈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양국 정부가 공(公)을 취하여 예를 갖추고 양국 상민이 신의를 지켜 이익을 같이 도모하고 양국 사대부는, 즉 중류의 초석이 되어 성의껏 교류하여 대도를 규명하여 위를 돕고 밑을 다스려 변영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동아동문회를 만드는 이유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위와 같은 '중국 보전론'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중국 보전론'은 당시 중국 교주만에 대한 독일의 점령 등으로 시작된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진출의 노골화라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논리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보전론'의 내용에는 청나라 정부에 대한 지원, 서구열강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청국의 개혁세력인 Kangyuei 등의 개혁운동에 대한 지원 주장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 또한 '중국 보전론'에는 메이지 30년대의 아시아주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제국에 대한 연대의 주장과 함께 당시 메이지정부가 표방하는 '탈아입구' 노선과도 합치되는 면도 갖고 있다. 즉, 서구열강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하에 열강의 세력균형론을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중국 분할론, 일청동맹론을 포괄하는 논리로 기능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협조적인 논리로 작용한 양면성을 가진 논리였다고 볼 수 있다.

2. 동아동문회의 조직과 활동

동아동문회는 발회 당시 회원이 60명으로 회장 고노에 아쓰마로, 간사 구카 가쓰난, 이케베 요시타로[池邊吉太郎],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 다나베 야스노스케[田鍋安之助]였고 다음 해 춘계대회까지 96명이 새로 가입하였다. 1899년도에는 외무성 기밀비에서 4만 엔의 보조금을 받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동아동문회 조직 중에 중국 조선부를 두고 정보수집, 현지조사, 현지에서의 언론활동, 어학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여 상해, 한구, 광둥, 복주, 북경 등에 주재원을 배치하고 북경과 남경에는 특파원을 두었다. 그리고 주재원·파견원이 수집한 정보는 국내 기관지인 『동아시론(東亞時論)』, 『동아동문회보고(東亞同文會報告)』에 실리고 중국과 조선 각 지역에 현지 언론사를 설립하여 동아동문회의 취지를 선전하고 현지 언론의 환기에 힘썼다. 상해에서는 『아동시보(亞東時報)』, 한구에서는 『한보(漢報)』, 복주에서는 『민보(閩報)』, 조선에서는 『한성월보(漢城月報)』를 발간하였다.

중국·조선에 산재한 회원들이 수집한 정보는 그들이 접촉하고 있던 해외 공사관의 무관 군첩보원들에게 제공되었다.

교육활동으로는 동아동문서원을 1899년 동경에 건립하였는데, 이는 청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으며, 그 전신인 남경동문서원은 1899년 5월에 건립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중국인 학생은 일본어로, 일본인 학생은 중국어로 문과계·이과계의 다양한 학문을 습득하게 하고 중국·일본 양국의 역사와 지리 수업시간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구미의 학문을 접하면서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대륙관계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는 북청어학교(北淸語學校, 笹森儀助), 평양어학교(平壤語學校, 近藤義雄)를 설립하고 경성학당에도 보조비를 지급했다. 또한 중국의 복주동문학당(福州同文學堂)에도 보조하였다. 그리고 중국인과 조선인을 교육함과 동시에 일본인 중국·조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1890년 5월에 남경에 동아동문회가 경영하는 남경동문서원을 만들었다가 다음 해에 폐교하고, 상해에 동아동문서원을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일본의 패전까지 중국 전문가를 양성할 취지로 계속 존속되어 동아동문회의 재외활동의 중심 기관으로 활동하고 일본의 대륙정책과 연동하는 대학으로 기능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활동은 이른바 낭인 계열의 ‘지사활동’이다. 이들은 근대 일본의 대륙으로의 팽창과 연동하여 급격히 늘어난 해외 활동가들의 활동을 말한다. 종래 대륙낭인이나 중국낭인들로 불리던 대표적 우익 활동가들로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주류 관료사회 등에 편입되지 못한 사족 출신이나 자유민권운동 이후 활동의 장을 잃은 많은 젊은이가 새로운 삶의 장으로 주목한 것이 조선·중국과 같은 일본의 팽창지이다. 이들은 ‘지사’, ‘낭인’ 등으로 불리며 현지에서 그 지역의 협력세력을 구축하거나 정보활동, 지역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대외팽창에 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쑨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과 캉유웨이·량치차오(梁啟超) 등의 변법파에 대한 지원 등이다. 회장인 고노에 아쓰마로는 이러한 해외 실천가들의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동아동문회의 조사활동을 살펴보면, 고노에는 동아동문회 설립 이전부터 “중국을 모르면서 중국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문제의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동아동문회 설립 이후의 조사활동은 초기에는 회원 개인 또는 상해, 한구, 복주, 광동의 네 지부만을 통해 진행되고 중국의 정세나 시사에 관한 정보수집에 그쳐 정보공작의 측면이 짙었다. 수

집 내용도 당시의 극동 정세와 동아동문회의 정치외교 활동의 관심에 따라 정세보고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보 자체는 체계적인 기초 조사라기보다 정세변동을 알리는 단편적이고 시사적인 것이었다. 이런 보고는 계속해서 동아동문회 지도부, 정부나 참모본부 등에 전해졌고 동아동문회의 기관지에 게재되어 회원 간의 정보교류에도 이용되었다.

1900년의 의화단사건 이후 동아동문회의 활동이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 문화활동 측면이 더해지면서 중국 조사의 내용도 변화하였다. 먼저 조사 내용이 시사나 정치정세 부분에서 중국 사회 전반에 관한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실제적 수요가 큰 경제동향뿐만 아니라 중국 전반의 상황을 반영하여 특히 연구와 편찬의 소재가 되는 기초적 자료의 수집이 중시되기 시작하였고 조사방식 또한 부정기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에서 점차 동아동문회가 중국 현지에 설립한 동아동문서원을 통해 정기적이고 집단적인 조사 형태로 바뀌었다. 그 결과의 하나로 1903년 8월부터 동아동문서원 학생 수십 명의 집단적인 조사로 『지나경제전서(支那經濟全書)』가 편찬되어 중국의 정치·사회·재정·경제·산업·문화 전반에 걸친 체계적 연구가 집적되었다.

또한 1907년에 지나경제조사부를 설립하고 외무성에서 보조비를 받으면서 조사의 목적, 인원, 경로, 장소 등에 관한 사전승인이 의무화되었고, 그 결과물을 외무성과 농상공부에 제출할 의무가 지워졌다. 이 시기부터 동아동문회의 조사활동은 일본정부의 지도와 규제를 통한 촉탁조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조사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인이 통신원이나 파견원의 형태로 여전히 조사에 참여하여 그 비중 또한 가볍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동문회의 중국 각지의 현지조사는 중일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어 일본인의 해외조사로는 큰 규모로 진행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동아동

문화 사업의 하나였던 조사활동은 정기적으로 정부나 군부 등에 그 결과를 제공하여 정책 입안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국 진출과 중국 연구에 기여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V. 국민동맹회와 고노에 아쓰마로의 지론

1. 국민동맹회

국민동맹회(國民同盟會)는 의화단사건, 러시아의 만주 점령과 같은 일련의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정우회의 결성이라는 1900년대의 내외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고노에 아쓰마로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경 제 집단의 연합체적 성격을 띤 초당파적 단체로, 헌정본당(憲政本黨)·제국당(帝國黨)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세력과 귀족원, 언론계 등 당시의 제 혁신집단을 망라한 대외경세력의 연합조직이다.

국민동맹회는 대외경운동의 실천운동단체로서 동아동문회의 정치적 실천조직으로 행동한 단체였다. 국민동맹회는 “회장 고노에 공작이 동아동문회의 이름으로 정치적 운동을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먼저 국론을 통일하여 지나 보전을 목적으로 국민적 운동에 착수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1902년 10월 21일 지방 유지를 모아 2,000명 정도의 전국동지간친회를 열었다. 11월에는 간친회의 여세를 몰아 지방유세를 시작하였다. 네즈 하지메(根津一)는 규슈(九州)·가고시마(鹿兒島)·구마모토(熊本)·나가사키(長崎)·사가(佐賀)·구루메(久留米) 방면으로, 구니토모 시게아키(國友重章)는 주고쿠 지방에서 시코쿠로 들어가 히메지(姫路)·오카야마(岡山)·오노미치(尾道) 방

면으로, 모치즈키 류타로[望月龍太郎]는 산인[山陰] 지방, 아베이 이아네[安部井磐根] 등은 기키·도카이[近畿東海] 지방, 나카니시[中西]·다카다 사나에[高田早苗] 등은 고신에쓰[甲信越] 지방을 도는 등 전국적 규모로 유세가 진행되었다. 이 간친회와 연동하여 여론을 환기시킨 역할을 담당한 것이 ‘전국신문기자동맹회’였다. 이 단체는 “우리는 국민동맹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국론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동지기자동맹회를 조직한다”는 기치 아래 미우라 가쓰토[箕浦勝人], 나카이 기타로[中井喜太郎]가 간사로 활동하고, 전국동지간친회를 개최할 때 동지기자가 57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국민동맹회는 고노에의 지론인 ‘중국 보전론’을 기초로 만주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동아문제 전문의 결사로서,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의 만주 점령, 일본 국내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등이 주장하는 만한교환론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반러시아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적 국민운동이었다.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된 것은 1900년 8월의 동아동문회의 간사회의 회합으로, 이 모임에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고 조직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고 중국 보전론에 반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중국 보전론을 강령으로 내건 국민동맹회는 만주에서 러시아의 철군을 목적으로 여론을 환기하여 국론의 통일을 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홍보하면서 대대적인 유세활동을 벌였다. 또한 전국신문기자동맹회를 하부조직으로 하여 동맹회에 호의적인 여론활동을 벌이며, 잡지 『동양(東洋)』을 창간하여 동맹회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마쓰모토 마사즈미[松本正純], 다카하시 히데오미[高橋秀臣] 등을 중심으로 청년동맹회도 창립되었다. 러시아의 만주 철군이 늦어진 데 대해

동맹회가 낸 결의는 다음과 같다.

결의(決議)

우리 국민동맹회가 주장하는 청국의 보전은 지금 제국의 국론일 뿐 아니라 실로 세계의 공론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우리 외교 당국자는 왕왕 의지가 박약하여 오류를 범하는 적이 많다. 특히 열강 가운데 그 행동이 안심이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 본회는 더욱 분발하여 이러한 국론의 수행을 기대하는 바이다.

고노에는 국민동맹회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동양』에 「소위 만주문제」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국내의 정치인들에게 만주 개방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논설에서 만주 교환론을 강하게 비난하며 러시아에 만주를 넘기면 결국 중국 분할로 이어지고 동아시아와 관계있는 다른 열강들도 합세하여 '세계 평화의 큰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만주는 러시아의 과도한 팽창력을 제어하는 방벽인 동시에 실로 동양 평화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만주 점령을 방지하면 러시아는 더욱 동아의 침략을 노골화하여 지나, 조선은 물론 나아가 태평양 일대까지 세력을 넓힐 것이다.

노국의 만주 점령을 만주만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만주를 청국에게 돌려준 뒤 열강의 보호하에 두고 만주의 개방과 문명의 보급을 촉진하여 열강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평화유지야말로 지금의 최선책이다.

고노에를 비롯한 국민동맹회 세력은 만주문제를 초미의 과제로 설정하여 대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동아동맹회가 내걸었던 중국 보전은 만주 보전의 강령으로 이어진다. 그를 위한 우선책으로 만주를 중국의

영토하에 보전시키고 만주를 열강의 협동하에 개방시켜 러시아의 독주를 막는 ‘만주 개방책’을 제시하였다. 즉,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주 개방을 통한 만주 보전=중국 보전을 주장한다.

그리고 만주로의 세력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안으로서 철도부설권의 획득을 주장하였다. “경의철도부설권 획득의 급무와 의주(義州)·영구(榮口) 철도권 획득의 필요를 역설한 정밀하고 상세한 2개의 조사안을 편성하여 하나는 당국자에게 건언하고 하나는 의회의 협찬을 촉구하여 러시아의 동양 경영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했듯이 일찍부터 조선·만주 지역으로의 팽창을 주장하고 있었다.

1900년 12월 20일자 『고노에 아쓰마로 일기』에 기재되어 있는 ‘동지기자동맹제대회(同志記者同盟題大會)’의 결의안을 보면 “첫째, 청국에 대한 강화 조건과 선후책은 보전의 방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열국 공동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 둘째, 청국에서의 소위 영토보전과 문호개방의 구역은 반드시 만주 일대를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지금 만주의 상태는 청국의 보전을 저해하고 조선을 위협에 빠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속히 구체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듯이 만주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대해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의 중국·만주 보전론이 대러 개전론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동맹회 운동에 참가하면서 응원부대가 된 ‘전국신문기자동맹’은 동 회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1902년에 조직되었는데, 『일본(日本)』신문을 비롯하여 모두 100개사의 언론단체가 참가한 연합조직이다. 그 전신인 ‘동지기자구락부(同志記者俱樂部)’는 1898년 도쿄의 신문기자 가운데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언론인들로 조직되어 『일본』, 『일본인』, 『아세아(亞細亞)』

등의 이른바 정교사 계열의 『일본』신문 그룹과 지방신문 등이 가세하여 국민동맹회 운동의 여론화를 위해 활동하였다. 또 이 동맹회는 청일전쟁 전에 있었던 ‘비번벌 대외경신문동맹(非藩閥 對外硬新聞同盟)’과도 밀접한 인적 관련성을 갖고 대외문제에 대해 강경한 일관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비번벌 대외경신문동맹’은 청일전쟁 직전에 외국인의 일본 국내 자유이주 등을 말하는 ‘내지잡거(內地雜居)’에 반대하고, 근대 일본이 맺은 많은 불평등조약을 평등조약으로 개정하려는 조약개정문제를 둘러싸고 행해졌던 민당의 대외강경운동과 연동하여 조약개정의 여론화에 큰 역할을 담당한 집단이다. 여기에는 『일본』, 『보지(報知)』, 『독매(讀賣)』, 『매일(毎日)』, 『중앙(中央)』, 『국민(國民)』, 『국회(國會)』, 『이륙(二六)』 등의 신문이 중심이 되어 책임내각, 자주외교추진 등을 요구하며 번벌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야당적 정치운동을 벌이는데 앞장섰다.

‘전국동지기자동맹회’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동맹회 운동의 상황과 중국·만주·조선에 관한 보도와 각지에서의 유세 연설회를 통해 국민동맹회 운동의 전국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들은 의화단사건 이후 만주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철병이 늦어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만주문제를 여론화시킴으로써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개전 여론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모인 언론인들은 강경한 대외경논자로 그들은 대외문제의 강경 대응논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진력하였다. 이 같은 언론단체의 존재는 대외문제와 일본의 내셔널리즘 운동을 생각할 때 도시 지식인 계층의 사유양식과 제국주의 국가의 저널리즘의 성격을 웅변하고 있다.

그들은 러일전쟁 개전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해 만주문제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회합을 촉진하여 도미이 마사이키[富井政章], 도

미즈 히론도[戸水寛人], 가나이 엔[金井延], 데라오 도오루[寺尾亨], 마쓰자키 구라노스케[松崎藏之助],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 등 7명이 만주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여 강경한 대러 여론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각지에서 유세활동을 계속하여 국민동맹회의 전국화를 위한 선전기관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00년 12월 20일자 『고노에 아쓰마로 일기』에 있는 ‘동지기자동맹제대회’의 결의안을 보면 “청국에서의 이른바 영토보전과 문호개방의 구역은 만주 일대까지 포함해야 한다. 지금 만주의 상태는 청국의 보전을 위협하고 조선을 위협에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속히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만주 지역에서의 러시아 세력의 확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자세는 만주와 조선을 일체로 하여 팽창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으로 만한불가분론의 대표적 구상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만주 없는 조선은 없다. 하물며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조선을 취하려 한다면 만주는 반드시 취해야 한다. 만주문제와 조선문제를 구별하여 조선을 우리 세력 안에 넣고 만주를 러시아에 주어서는 동양평화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 같은 말은 조선과 만주의 관계를 모르고 하는 고식적인 속론에 지나지 않는다.

즉, 중국의 보전을 외치던 동아동맹회의 주장이 만주의 보전으로 이어져 만한불가분론으로 이어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만주 보전론은 대러 개전론으로 확대되어 개전론의 여론선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민동맹회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 전국동지기자동맹회는 대러 개전을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동하여 개전 여론을 이끌어가는 전위부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국동지기자동맹회는 1902년 4월 27일에 국민동맹회의 해산과 함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자기평가를 내리며 해산하였다. 여기에서 목적의 달성이라 함은 ‘지나 보전·조선 보호(支那保全·朝鮮保護)’라는 대외론으로의 국론통일, 영일동맹과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제1차 철병 등을 의미한다. 국민동맹회의 해산식에서 행해진 전국대선언에서 “국론은 이미 우리의 주장대로 이루어졌고 국시도 우리의 의견대로 확정되어 일영동맹(日英同盟)이 성립하여 만주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한 발언도 이를 방증한다. 즉, 영일동맹론으로 중국에서의 열강의 세력균형이 지켜졌고 러시아의 남침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1898년에 설립한 강호구락부(江湖俱樂部)는 일군의 변호사, 신문기자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가 예비군 집단으로 청일전쟁 이후 일본 사회의 제 문제를 배경으로 반번벌적 색채를 띠고 정치 혁신을 주장하며 고노에가 이끄는 대외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단체이다. 강호구락부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이와 같은 단체의 존재와 활동은 당시의 변호사, 언론인, 학생 등 중간층의 국내외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파악하는 데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그 구성원을 보면 동아동문회·국민동맹회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이후에도 일본의 우익세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를 중심으로 한 동경변호사회의 변호사들과 『만조보(萬朝報)』와 같은 당시의 정론신문의 기자들이 중심 회원이며, 전국동지기자동맹회와도 강한 인적 관련을 맺으며 대외문제 여론의 환기에 주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회원으로 오가와 헤이키치, 다케우치 헤이키치(竹內平吉), 이시바시 유키치(石橋有吉), 나카이 기타로(中井喜太郎), 야마모토 나히데(山本名秀, 『萬朝報』 기자), 고이데 고로(小出五郎), 이모토 쓰네히사(井本常治), 이시바시 유키치(石橋友吉), 마치이 데쓰노스케(町井鐵之助), 사사키 분이치(佐佐木文一), 하나이 다

쿠조[花井卓藏], 후쿠다 가즈고로[福田和五郎, 『二六新報』 기자], 구로카와 규바[黒川九馬], 오자와 마사타쿠[小澤政澤] 등을 들 수 있다.

만주문제를 자기과제로 설정하여 활동한 국민동맹회는 여론의 환기와 국론의 통일을 위해 전국적 유세활동, 동지기자동맹회를 통한 선전활동, 국내외에서의 잡지 발행을 통한 출판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며 대정부 의회 공작이나 청년유력자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메이지 정치사에 필적할 만한 대대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국민동맹회는 국내적으로 당시의 변별세력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우익세력을 결집하여 반변별적 입장의 국민적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2. 고노에의 중국 보전론, 영일동맹론, 대러 강경론

1901년 7월 12일~8월 28일 고노에는 천진, 북경, 여순, 대련, 경성, 부산을 역방하였다. 청국에서는 이홍장·공친왕·숙친왕 등 유력자와 면회하며 ‘중국 보전론’을 피력하고 특히 공친왕과 숙친왕이 장래 유망하다는 인식을 갖고, 여순·대련에서는 진행 중이던 러시아의 요새건설 상황을 둘러보다 병이 깊어져 러일전쟁 직전에 사망한다.

동맹회는 고노에의 이름으로 유곤일(劉坤一), 장지동(張之洞) 양 총독에 대해 이홍장과 러시아 간의 밀약을 저지시키도록 부탁하며 협조를 구하는 등 중국의 세력가를 규합하여 반러시아적 여론을 관철시키는 데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대안의 하나로 ‘영일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주지하는 대로 영일동맹은 3국간섭 후의 극동의 정치정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일본 측의 외교대응책으로서 러일협상이라는 외교노선과 경합하면서 점차 대세를 확보하여 1902년에 체결된 것이다.

고노에는 1902년 2월 16일자 『일본』신문 지상에 「일영동맹의 성립」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협약의 정신은 극동에서 현상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는 데 있고, 우선 청·한 양 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유지함을 말하며 해당국 모두 침략적 행위를 배제하는 성명이다. …… 이로써 청국의 보전, 한국의 옹호를 이룰 수 있어 이 협약이야말로 동양 평화의 기초를 굳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영일동맹이 비침략적이고 동맹회의 운동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책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전의 1901년 2월 28일에 강호구락부 예회(例會)에서 열린 ‘전국동지기자동맹회’의 결정은 “제국의 최종 목표는 러시아의 경영을 뿌리부터 파괴하여 동양에 있는 화근을 영구히 잘라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정부에 대해 기일을 정해 여순·대련을 청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청·한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장철도(牛莊鐵道), 의주철도(義州鐵道)의 부설권을 인정하게 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전의 준비가 끝나면 대러 개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대러 강경론(對露強硬論)’을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고노에를 비롯한 동아동문회의 중국 보전론이나 영일동맹론은 맥을 같이하며 중국에 대해 영일동맹을 배경으로 하는 안정된 일본세력의 부식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청일전쟁은 근대 일본의 팽창의 역사를 확정시킨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팽창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많은 팽창론과 실천이 이어지게 된다. 그런 가운데 팽창의 한 수단으로 구체적으로 부상한 것이 러시아문제를 염두에 둔 동맹론이다. 청일전쟁 이후에 러일협상론, 영일동맹론 등은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었고 대외문제를 통해 일본 국내에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대외경적 정치세력은 더욱 강경한 개전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영일동맹’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고노에 아쓰마로를 중심으로 ‘지나 보전, 조선 부액’을 강령으로, 대러 강경노선을 명확히 내걸고 활동했던 국민동맹회는 ‘국론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자기판단에 기초하여 해산을 결의한다. 국민동맹회 해산 결의문에서 보듯이 대외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이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일영동맹이 성립하여 이에 동양 평화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우리는 오늘의 성공으로 모든 국면이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설령 국면이 변하더라도 지나가는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고 조선은 반드시 옹호되어야 하며 러시아의 남침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는 당파가 아니고 우리의 회맹은 일시적 국면에 대한 국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해결과 함께 해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형의 회맹은 해산되나 무형의 회맹은 계속되어 다시 풍운이 일어나 국가의 안위와 동아의 치란이 걸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동지는 반드시 다시 쫓기할 것이다.

그리고 가쓰라 다로[桂太郞] 내각의 성립으로 대외정책면에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단계에서 고노에를 비롯한 대외경파는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조선 부액’의 실제적 문제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새로운 대외경집단으로 등장한 것이 조선협회이다.

Ⅵ. 조선협회와 고노에 그룹

1902년 설립된 ‘조선협회’는 동아동문회의 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체로 동아동문회가 얼마나 조선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국민동맹회가 대러 강경노선을 명확히 하며 국론의 통일을 위해 활동

하다가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한 단계에서 이들 세력이 당면한 최대 관심사인 ‘조선 부액’의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조선협회이다. 조선협회는 고노에의 측근이 활동의 주체를 이루고, 동아동문회·국민동맹회 세력이 대거 참여한 단체였다. 또한 경부철도주식회사를 비롯한 경제계와 학계의 참가가 두드러지고, 고노에의 지도력 아래 조선으로의 팽창의 실제적 과제에 대한 대조선 여론을 환기시키고 실천적 활동가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대조선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협회는 활동의 중점으로 경부선과 같은 철도 부설, 은행 설립, 식민과 농업, 상업 등의 항목을 세워 조선의 식민지화를 향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철도 부설은 타국을 제어하는 유력한 방법이라는 인식 하에 경의선, 경부선, 경원선 등의 장악을 주장하고 이것이 국력의 팽창을 위한 국가의 철도라는 여론을 선동하며 활동하였다. 또한 조선 경제문제의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조선에 대한 관심 고조,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식민의 기반을 강고히 하려 하였다. 또 하나 중요한 활동은 재조선 일본거류지에 관한 것이다. 거류민단에 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거류지의 조직화를 통한 일본 이민의 안정화를 꾀한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 문제에 대해 조선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책 제안을 시도한 점에서 동아동문회와 조선협회의 역사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I. 맺음말

이상으로 근대 일본의 제국화 과정에서 고노에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선 청일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서구열강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동아시아 정세를 배경으로 대륙문제를 자기과제로 설정하고, 일본 국내의 내셔널리즘 세력을 결집하여 정치세력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러일전쟁 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의 해외로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본격적인 아시아 학지(學知)를 형성한 점을 들 수 있다. 동아동문회의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아카데미즘 만선사학이 설립되기 이전 아시아 학지를 담당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그의 관심은 홋카이도 개척을 주장하고, 동방협회·식민협회·홋카이도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근대 일본의 식민지 개척을 중심으로 한 팽창주의를 실제적인 식민활동을 통해 실현하려는 데 중점을 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동아동문회, 국민동맹회, 조선협회 등을 만들어 당시의 대외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강경한 대안을 여론화하여 대러 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측면은 고노에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대외관을 관철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협력세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고, 아시아 지역의 변혁세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정파나 정치세력에 대해 원조·협력함으로써 일본의 팽창정책의 협력세력 구축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여러 우익세력을 결집하여 조직적 활동을 전개한 점, 일명 대륙낭인으로 불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다양

한 실천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점은 이후의 파시즘기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동인종 동맹론, 중국 보전론, 동문동종론 등 식민통치의 동화론으로 이어지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점은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고노에 연구가 아시아주의적 입장에서 동인종 동맹론이나 중국 보전론 등을 들어 비침략적인 고노에상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데 대해 심도 있는 반론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工藤武重(1938), 『近衛篤磨公』, 大日社.
國民同盟會(1903), 『國民同盟會始末』.
東亞同文會 編(1968), 『對支回顧錄』 下, 原書房.
白柳秀湖(1941), 『近衛家及び近衛公』, 國民新聞社.
山本茂樹(2001), 『近衛篤磨－その明治國家觀とアジア觀』, ミネルヴァ書房.
神谷卓男(1924), 『近衛霞山公』, 日清印刷株式會社.
酒田正敏(1978), 『近代日本における對外硬運動の研究』 1, 東京大學出版會.
翟新(1996), 「荒尾精の中國觀－東亞同文會の思想的源流」, 『法學政治學論究』 第29, 夏季.
翟新(1997), 「東亞同文會の中國世論形成活動」, 『法學政治學論究』 第34, 秋季.
翟新(2001), 『東亞同文會と中國』, 慶應義塾大學出版會.
坂井雄吉(1970. 8), 「近衛篤と明治三十年代の對外硬派」, 『國家學會雜誌』 83.
『國史大辭典』 5, 吉川弘文館.
『近衛篤磨日記』.
『東洋』.



기타 잇키와 1920~1930년대 일본의 우익사상

함동주_ 이화여자대학교

I. 머리말

기타 잇키[北一輝]는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와 더불어 1920~193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인사로서, 일련의 저작을 통해 1930년대 청년장교들의 국가개조운동에 커다란 사상적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급진파 청년장교들의 우상으로서 ‘다카마가하라[高天原, 하늘]’ 또는 마왕(魔王)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러한 기타의 영향력은 테러와 같은 무력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다른 우익인사들과는 달리, 나름대로의 논리적 사상체계를 갖추고 이를 저서를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기타는 행동가·실천가로서보다는 대표적 우익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기타는 일본의 우익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는 기타가 범화경, 특히 니치렌교(日蓮敎)에 심취하게 된 이유가 일본 내에서 그의 활동반경과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인 데 따른 심정적 돌파구를 필요로 했던 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타와 함께 대표적 파시스트였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이노우에 닛쇼[井上日昭], 니시다 미쓰기

[西田税] 등이 모두 법화경 신자였던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 모두가 일본 파시즘의 취약성과 협력할 정치세력이 열악한 소수파였으며, 법화경은 사회 내에서 고립된 속에서 투쟁하는 그들의 심경을 만족시키는 논리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바야시의 평가는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본 우익의 위상을 자칫 과소평가할 위험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우익운동의 적극 참여자들이 수적으로 제한되었다고는 해도 이들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 우익인사들이 일본 사회에서 수적 소수파였는데도 1930년대 일본 정치의 주요 고비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기타 잇키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타는 당시 우익 운동가로서 활동하는 동안에 열렬한 추종세력이나 지원집단을 갖지 못했으며, 우익 조직가로서도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저서와 국가사회주의의 이론을 통해 국가개조운동의 이론적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지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타의 주요 저작들에 담긴 내용을 검토하고, 그의 주장과 이념이 당시 일본 우익운동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Ⅱ. 기타 잇키와 1920~1930년대 일본의 우익운동

기타 잇키는 1883년 4월 3일 니이가타현 사도에서 출생했다. 그의 본명은 테루지로[輝次郎], 지방 유지였던 게이타로[慶太郎]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888년 소학교, 1897년에 현립 사도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눈병 때

문에 휴학을 거듭하다가 18세였던 1900년 중학교를 자퇴했고, 결국 1902년 무렵에는 오른쪽 눈을 완전히 실명하여 의안을 해야 했다.

기타는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던 중에 사회문제에 관심이 깊어지면서 1901년부터 고향의 『사도신문(佐渡新聞)』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투고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던 1903년에는 러시아에 대한 개전론을 펴기도 했다.

기타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퇴학을 하고 도쿄 상경을 반복하던 중 1906년 처녀작인 『국가론과 순정사회주의(國家論及び純正社會主義)』를 완성하여 자비출판을 했다. 이 책은 발매 5일 만에 발매금지처분이 되었다. 그는 경찰에서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었는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한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의 사회주의에 관심을 보였으며,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과 같은 혁명평론사(革命評論社) 동인과 교류하였다. 이 단체는 미야자키를 비롯해 스가노 나가토모(菅野長知), 이케 고키치(池亨吉) 등이 결성하였으며, 중국혁명동맹회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중국혁명을 원조하고자 하였다.

기타는 혁명평론사와의 교류를 통해 중국 혁명운동에 가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즉, 그는 혁명평론사의 관계자들을 통해 일본에 망명 중이던 중국 혁명가들이 조직한 중국혁명동맹회에 입당하였으며, 특히 쑨자오런(宋教仁)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1911년 10월 말에 쑨자오런의 초청을 받은 기타는 흑룡회 기관지 특파원 자격으로 상해에 건너가서 신해혁명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였다. 기타가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그가 혁명당의 간부들과 항상 왕래하면서 혁명운동의 중심적 지점에 있으면서 그 과정에 개입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의 중국 체험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1913년에 쑹자오런이 암살되면서 기타는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로부터 3년간 중국을 떠날 것을 명령받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는 신해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나혁명외사(支那革命外史)』를 집필했다. 1917년 6월에 다시 상해로 건너가서 활동했지만 1919년 5·4운동으로 중국 내 정세가 급변하자 일본 귀환을 결심하였다. 이 무렵 집필 중이던 『일본개조법안대강(日本改造法案大綱)』을 완성한 후 그해 말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기타는 귀국과정에 도움을 준 오카와 슈메이와 협력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의 권유에 따라 유존사(猶存社)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일본 국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기타는 1920~1930년대의 우익운동과 청년장교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의 파시즘운동에 관여하였다.

유존사는 1919년 8월 미쓰카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가 창립한 국가주의 단체로 미쓰카와, 오카와, 기타의 3인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미쓰카와는 1918년에 노장회(老壯會)를 조직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위해 새로이 유존사를 결성하였다. 노장회는 급진적 국가주의 단체의 원류로 평가되는 단체로, 1918년에 국가주의자, 사회주의자, 국수주의자 등 다양한 입장의 인물들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그런데 노장회가 주로 사상가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을 지녔던 데 비해, 유존사는 보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1920년 초에 결정된 강령을 보면, ① 혁명일본의 건설, ② 일본국민의 사상적 충실, ③ 일본국민의 합리적 조직, ④ 민족해방운동, ⑤ 도의적 대외정책의 수행, ⑥ 개조운동의 연락, ⑦ 전투적 동지의 정신적 단련 등 7개항이다. 유존사는 대외팽창을 주된 목표로 했던 현양사, 흑룡회와 같은 메이지 시기의 우익단체와 달리, 대외팽창과 국가개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우익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존사는 내부대립과 자금난으로 1923년 해산되었다. 그중 내부 대립의 중심에 있던 것이 기타와 오카와의 대립이다. 오카와(1886~1957)는 우익인사로 활동했지만, 기타와 달리 제5고등학교, 도쿄제국대학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이다. 졸업 후 동아경제조사국, 만철조사부 근무를 거쳐 다쿠쇼쿠대학[拓殖大學] 교수가 되었다. 한편, 그는 1910년대에 인도 독립운동에 관여하였고, 1922년에는 아시아주의적 입장을 피력한 『부흥 아시아의 제문제[復興亞細亞の諸問題]』를 출간하였다. 또한 일본 정신의 부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일본정신연구[日本精神研究]』(1924)를 집필하였다.

오카와와 기타는 ‘국가개조’라는 대의명분은 공유했지만 구체적 활동 방식에서 대립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 기타의 경우, 본격적인 국가개조 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각종 정치공작에 개입하였다. 예컨대 기타는 1921년 재벌 야스다 겐지로[安田善次郎]를 살해한 아사히 헤이고[朝日平吾] 사건에 개입하였다. 또한 당시 황태자였던 쇼와 천황의 약혼문제가 있다. 이 사건은 사쓰마 출신의 모친을 둔 황태자의 약혼녀 가계에 색맹인자가 있다는 것을 빌미로 조슈 번벌의 수장인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파혼을 주장한 것에 대해, 황태자의 스승이던 미우라 주고[三浦重剛]가 천황의 결정임을 이유로 반대하고, 여기에 흑룡회의 간부들과 함께 기타가 가담하여 결국 약혼 유지로 결정된 것이다. 기타가 뚜렷한 정치활동보다는 음모에 가담하는 방식의 행동에 주력한 것에 대해 오카와가 크게 비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기타는 유존사 해산 이후에도 공적인 정치활동보다는 쟁의개입, 정치 스캔들 폭로를 통한 금전 뜯기로 일관하였다. 즉, 1920년 내상 도코나미 다케지로[床次竹次郎]에게서 3백만 엔을 받는 대가로 『일본개조법안대강』의 출판을 정지했다고 한다. 이후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유골탈취사건(1923. 12),

야스다 생명 쟁의 개입사건(1925. 8), 주고은행(十五銀行) 괴문서사건(1925. 12), 궁내성 괴문서사건(1926. 5), 박멸·박문자 괴사진사건(1926. 7), 런던 해군군축회의 통수권 간범문제(1930) 등에 관여하였다. 그중에서, 기타는 1926년 궁내성 괴문서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해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러한 기타의 행적에 비판적이던 오카와는 1925년 야스다 생명 쟁의 개입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결별하였다. 그 대신에 열렬한 추종자가 된 니시다 미쓰기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2·26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지로 활동하였다.

기타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였던 니시다는 1901년 돗토리현 태생으로 사관학교 재학 중에 이미 기타의 국가개조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고 1922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이후 국가개조운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1925년 병으로 예편(중위)한 후에는 오카와의 행지사(行地社)에 참가하면서 적극 활동하였다. 이후 행지사에서 탈퇴하고 기타와 가까워졌다. 1926년 『일본개조법안대강』을 간행하며 기타의 사상 선전에 착수하였다. 그 실천을 위해 1927년 2월 육해군의 청년장교를 모집하여 최초의 청년장교 중심의 개조단체인 사림장(士林莊)을 조직했다. 그해 7월에는 보다 강력한 국가개조단체를 결성하기 위해 천검당(天劍黨) 규약을 만들어 육사 동료 40여 명에게 배포하는 이른바 천검당사건을 일으켰다. 1931년부터는 그의 밑에 청년장교들이 빈번히 모여 들면서 국가개조운동의 주요 인물로 자리잡았다.

한편, 니시다는 기타가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에 관여했고, 궁내성 괴문서사건에서는 기타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 이치가야 형무소 도쿄 구치소에서 복역했다. 기타는 니시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배후에 영향력 있는 국가개조 이론가의 모습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우익인사들은 대부분 천황제국가 체제의 틀 안에서의 반관

적·반도시적·반대공업적·반중앙집권적 경향을 지닌 농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류였으며, 천황제국가 자체의 개조를 주장한 기타는 주류적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미쓰이 등의 재벌에게서 생활자금을 염출하며 살아간 정치꾼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기타의 일생에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이 2·26사건이다. 2·26사건은 1936년 2월 26일 황도파 청년장교들이 이끄는 하사관, 병사 1,500명이 육군성을 비롯한 수도 중추부를 점거하고 요인 암살을 꾀하며 황도파 내각의 수립을 요구한 사건이다. 실제로 내대신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대장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육군교육총감 와타나베 조타로[渡邊錠太郎]가 암살되었고, 총리 오카다 게이스케[岡田啓介], 내대신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는 암살 미수가 되었다. 사건의 결과는 반란군진압 칙령에 따라 29일 하사관·병사는 원대복귀, 장교는 체포, 재판에 따라 주도자 총살형이 결정되었다. 기타와 니시다가 2·26사건의 민간주모자로 청년장교들과 함께 체포된 후, 1937년 8월 총살당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타는 2·26사건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기타와 니시다가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미야모토 모리타로[宮本盛太郎]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타는 사건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시기상조라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장교들의 결정이 분명해지면 서 지원 활동을 하였다. 사건 발발 후에는 황도파 수령 마자키 진자부로[真崎甚三郎]를 비롯한 군상층부에 접근, 봉기의 유효한 수습책을 구하는 데 노력하며 공동행위를 구체화하였다. 재판에서도 기타에 대해 “자기가 품은 국가개조법안대강을 실현하고자 하여 순진한 청년장교를 계몽하고, 제도를 소란하게 하며, 국헌·국법에 저항한” 죄가 인정되었다. 당시 기타에 대한 구형문에는 기타와 니시다가 “국체옹호, 국위회흥(國威恢弘)의 미명 아래 사

회민주주의의 사상인, 우리나라와 절대로 어울지 않는 교격불령(矯激不逞)한 일본개조법안에 기재된 사상에 의거하여 순진한 청년장교를 현혹시키고, 일본개조법안의 구현을 위해 국헌·국법을 무시하며 통수권을 간범하고 직접행동도 불사하는 신념을 품게 하여 국사(國史)에 일대 오점을 남긴 죄, 정상작량(正常酌量)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되었다.

Ⅲ. 기타 잇키의 주요 저작과 사상

기타는 체계적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독자적인 주장을 담은 저작을 통해 당대의 우익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 첫 번째는 『국가론과 순정사회주의』로, 그가 1906년 사도에서 상경하여 23세가 되던 때에 일거에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집필되었다. 두 번째의 주요 저작인 『지나혁명외사』(1916)는 신해혁명 이후의 중국 혁명을 체험하는 속에서 집필된 것으로, 장대한 동아시아 구상과 그것을 실현할 일본의 대아시아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일본개조법안대강』은 5·4운동 이후 상해에서 일본의 국가개조 구상을 제시하기 위해 완성하였다. 그는 이 책을 귀국 후인 1920년에 등사판으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1923년에는 일부를 삭제한 후 『일본개조법안대강』이라는 제목으로 개조사(改造社)에서 출판되었다. 1928년 12월에는 소형본으로 니시다 미쓰기가 발행자로서 간행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저작은 『일본개조법안대강』으로, 청년장교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1. 『국가론과 순정사회주의』

기타의 처녀작인 『국가론과 순정사회주의』는 1906년 5월에 자비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중학교 퇴학, 병으로 한쪽 눈 실명, 가업인 주조업의 폐업 등으로 불우한 상황에 놓인 기타가 저술에 몰두하여 완성한 것이다. 23세의 무명 청년의 저서는 커다란 호응을 얻어서,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 가타야마 센(片山潛),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와 같은 저명 인사의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국가론과 순정사회주의』는 당시 일본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두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첫째는 천황 중심의 국체론에 대한 비판이며, 둘째는 사회주의의 구상이다. 즉, 그는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당시 지배적이던 국체론을 비판하였다.

먼저, 기타는 진화론적 역사관을 토대로 사회주의의 구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인류와 사회가 일정한 목표를 향해 진화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회체제가 ‘군주국’에서 ‘귀족국’을 거쳐 ‘민주국(공민국가)’으로 발전하며, 그러한 발전은 무력을 통한 전제적 지배에서 투표와 토의에 따른 합의제의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를 지닌 국가 중심에서 인류 전체를 하나로 한 세계연방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일본의 역사도 이러한 역사관에 따라 설명하였다. 고대의 다이카 개신을 황족의 일부가 군주전제정체를 실현하기 위해 일으켰지만, 무사단의 무력혁명을 통해 일본은 귀족국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막부의 쇼군은 봉건제도하에서 전국을 지배하고, 천황은 박해받았다. 그런데 에도 시대를 지나면서 하층계급의 자각에 따라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하급무사들은 국체론에 의거하여 무사의 귀족지배를 부정했다. 이것이 메이지유신이며, 이를 통해 수립된 정체는 민주국, 즉 공민국가였다. 이러한 공민국가를 법률적으로 완성시킨 것이 1890년의 국회개설이었다.

그런데 그의 역사적 진보관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의 역사는 공민국가인 현 체제의 다음 단계로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그는 메이지체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에 따르면, 메이지국가는 ‘공민국가’였다. 여기서 주권은 천황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된다. 그렇다면 천황은 어떤 존재인가. 국가는 국민의 특권 있는 일부분인 천황과 평등한 권리를 지닌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천황은 국회와 함께 국가의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국민은 천황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목적을 위해서만 봉사한다. 그는 ‘특권 있는 국민의 한 분자[一分子]’인 천황은 ‘평등한 다수’의 대표자인 의회와 함께 국가의 최고기관이라고 하였다. 그런 의미로, 그는 국가법인설, 천황기관설을 주장하고 천황주권설을 부정하였다. 또한 이처럼 국가의 전부가 정권을 갖는 정체를 국민주의 또는 민주주의라고 지칭했다. 국가주의와 국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를 국체로 하는 공민국가는 국가 진화의 궁극적 도달점이라고 하였다.

기타는 천황주권론이 아닌 국가주권론에 입각하여 천황은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다며 당시의 국체론을 비판하였다. 즉, “일본의 국체는 군신일가가 아니라 당당한 국가”로 보고, 천황은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특권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한 일원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민일가, 충효일치, 천황주권설은 앞에서 언급한 국가체제의 진화를 역행하는 ‘복고적 혁명주의’이며, 이러한 국체파괴의 사상에 대하여 현 국체를 단호하게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사회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실로 군신일가론

을 근거로 하여 충효일치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사회주의적 혁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그는 당시의 사회문제인 빈곤과 범죄의 증가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자본주의적 기계문명과 자본가, 지주지배의 경제체제에서 찾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토지와 생산기관의 공유와 공공적 경영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경제적 현실은 가장국 계급국가 시대와 같이 황금귀족, 경제적 다이묘[大名]가 노동자·농민을 임금으로 속박된 노예나 농노처럼 만들었으며, 부와 빈곤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유신혁명은 법률혁명을 통해 정치적으로 공민국가를 실현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귀족계급 국가로 되돌아가버렸다. 유신혁명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제도를 폐기하고 공산제도로 변혁하는 경제적 제2유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는 보통선거권의 획득을 요구했다. 즉, 오늘날의 계급투쟁은 완력의 우열이 아니라 투표의 방법을 갖고 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보통선거의 실시에 따라 법률투쟁을 해야 하며, 법률투쟁이 불가능한 나라에서는 폭탄 사용도 당연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타의 사회주의 구상은 원래의 사회주의와 중대한 차이를 지녔다. 그는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금의 사회당 여러분”이라고 지칭했는데, 그 골자는 바로 국가주의의 문제에 있었다. 기타의 순정사회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사회를 귀속주체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시각에 따라 사회의 진화에서도 계급경쟁 외에 국가경쟁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국가의 대립과 항쟁을 시인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사회진화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며, 일본사회당의 전쟁비판론을 무저항주의의 종교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공격했다.

2. 『지나혁명외사』

기타는 1911~1919년 동안 ‘중국 혁명’을 꿈꾸며 중국에서의 혁명운동에 개입하였다. 그는 신해혁명과 그 이후 중국에서의 혁명운동을 경험하면서 제국주의적 국제정세와 일본의 진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립해 갔다. 이를 토대로 그는 『지나혁명외사(支那革命外史)』를 집필하여, 그 속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구상을 전개하였다.

그가 『지나혁명외사』에서 목표로 한 것은 청조 혁명의 전후에 걸친 이론적 해설과 혁명지나의 금후의 대책에 대한 지도적 논의와 함께 일본의 중국 및 세계정책의 혁명적 변화의 필요에 있었다. 책은 20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반부는 중국혁명당의 성립과 중국 혁명의 전개과정을 다루었으며, 후반부는 일본이 중국 혁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영국과의 전쟁을 포함한 세계전략을 담고 있다.

기타는 일본이 ‘지나 혁명’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즉,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로 아시아인의 민족의식이 각성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민족주의였다. 그는 혁명의 원인으로 사상적 요인을 중시했다. 국가민족의식의 각성이라고 하는 정신적 요소를 중시하면서 객관적으로도 지나가 통일성이 높은 국가임을 강조했다.

기타는 중국의 혁명이 근대적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중국의 혁명을 사회진화의 필연적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그 원인을 국민적 자위의 본능적 발현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신해혁명의 배만주의가 ‘홍한’의 전제가 된다고 보면서, 중국이 스스로에게 알맞은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동양적 군주제’와 대비되는 ‘동양적 공화제’를 중국의 나아갈 길로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은

오랜 동안 황제라는 전제권력이 계속되어 자유정치의 경험이 없다. 따라서 몽골의 오고타이칸을 모델로 하여 ‘천명과 민의의 위에 입각한 공화정’이며, ‘투표 만능의 도그마에 입각한 백인 공화제’와 구분되는 동양적 공화제라고 하였다. 동양적 공화제에서는 무력을 통해 선출된 대총통은 앞으로 대내적으로는 무단정책, 대외적으로는 군국주의를 통해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혁명에 대해 논의한 다음으로 일본이 취할 정책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동양적 공화제와 일본이 대표하는 동양적 군주제의 제휴였다. 그는 중국이 일본이 대표하는 동양적 군주정과 협조하여 새로운 아시아의 앞날을 열어갈 것을 주장하였다. 강고한 ‘일지동맹(日支同盟)’을 바탕으로 러시아, 나아가 영국과 맞서는 ‘제2의 러일전쟁’, 즉 영일전쟁을 치러야 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의 해방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기타는 중국 혁명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서,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여 중국의 혁명과 영토를 보전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대일본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영일동맹을 파기하고 일본·독일의 군사동맹과 일본·미국의 경제동맹을 채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3. 『일본개조법안대강』

기타 잇키의 『일본개조법안대강』은 1919년에 완성되어 1923년에 정식 출판되었다. 책의 집필은 중국의 5·4운동의 와중에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1920년대 일본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적

시하고 있다.

1920년대 일본은 정당정치가 발달했지만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운동의 심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도 1917년 러시아혁명의 성공에 따른 불안감, 1920년대 영미 중심의 국제질서와 일본정부의 협조외교노선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일본개조법안대강』은 제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심화된 일본 사회가 노동운동·대중운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 중국의 반일민족주의와 러시아의 공산혁명과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타는 『일본개조법안대강』을 통해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아시아에서 일본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개조를 통한 대대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력동원을 통한 혁명적 방법으로 기존 체제와 지배층을 일소하고 천황과 인민의 직접관계에 기초한 체제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먼저, 기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본이 ‘유사 미증유의 국난’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 즉, 일본은 밖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혁명에 따른 세계체제의 동요, 안으로는 쌀소동 이후의 노동운동의 고양 때문에 ‘유사 미증유의 국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냉정히 분석하고 일본제국의 개조를 위한 대원칙을 수립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천황대권을 발동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신속히 국가를 개조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일본의 과잉 인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고 중국과 인도, 일본을 비참한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국가개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일본은 ‘민족경쟁, 국가경쟁’을 통해 아시아연맹의 기수가 되고, 나아가 세계연방의 지도자가 되고 ‘천도를 선포(宣布)’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는 이렇게 국가개조의 필요성을 주장한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개조구상을 전개하였다.

제일 먼저, 기타는 천황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거론하였다. 기타는 국가개조의 첫 단계로 계엄령을 통한 헌법의 정지를 요구했지만, 천황의 존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층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천황은 국민의 총대표이며 국가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체는 3층의 진화를 이루어낸 것으로서 천황의 의의 또한 3층의 진화를 이루어왔다. 제1기 후지와라씨(氏)에서 다이라씨의 과도기에 이르는 전제군주국 시대, 제2기 미나모토씨에서 도쿠가와씨에 이르는 귀족국 시대, 제3기는 무사와 인민의 인격적 각성으로 군주라는 장군 또는 제후의 사유로부터 해방되었던 유신혁명이 시작되는 민주국 시대이다.

한편, 그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황은 제도와 분리되어 신성성을 유지해야 했다. 또한 그러한 신성한 존재를 구심점으로 일본 국민을 결집시킬 정당성을 찾기 위해, 새삼스레 일본은 독자적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서양의 민주주의가 국가의 대표를 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것에 대해, 그러한 선출 방식이 일본의 천황과 같이 ‘특이한 일인(一人)이 하는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시각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국가는 각각 그 국민정신과 건국의 역사가 다르다고 하면서, 선거와 같이 국가 원수가 당선을 위해 하급배우처럼 행동하는 것은 일본 민족으로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 민족에게는 천황을 ‘국가의 총대표’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변혁을 위한 ‘국가의 기본 요소’로서 ‘천황’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국민에 보통선거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서양의 예를 들면서, “납세자격, 선거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각국의 제도는, 영국에서 황실의 징세에 대하여 그 세금의 용도를 감시하는 의회에 기원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국 자신의 원칙으로서는 국민이라는 권리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 징병이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의미로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다”라고 하였다.

기타는 국가개조의 필요성과 구심점에 대해 언급한 다음 구체적인 개조의 방법과 계획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개조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민이 본대(本隊)가 되고, ‘천황이 호령자’가 되는 쿠데타를 실시, 즉 천황대권의 발동을 통해 3년간 헌법을 정지하고, 계엄령을 실시, 그 아래에서 천황이 ‘국민의 총대표’가 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계엄령하에서 해야 할 시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되었다. 즉, 천황을 보좌하는 인재를 널리 국민 속에서 찾는다. 천황을 보좌하는 고문원을 설치한다. 화족제와 귀족원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국가의 공로자들로 구성된 심의원을 설치한다. 25세 이상의 남자(여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보통선거법을 실시한다.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문관임용령, 치안경찰법, 신문조례법, 출판법 등을 폐지한다. ‘군벌, 이벌(吏閥), 재벌, 당벌’을 배제하고, ‘전국민으로부터 널리 위기(偉器)를 선발한’ 국가개조내각을 조각하고 지방장관을 교체한다. 국가개조회의를 소집하고 황실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다음으로 그는 사유재산의 제한을 주장했다. 그는 사유재산의 한도를 3백만 엔으로 제한하였고, 토지소유도 시가 3백만 엔으로 제한하며,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자본금 1천만 엔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를 넘어선 부분의 국유화(사유재산은 몰수, 사유지·사인생산업은 삼분이부 공채지급), 은행·항해·광업·농업·공업·상업·철도의 각성을 통한 산업통합과 국유재산의 합리

적 운용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시책은 국가개조내각이 주체가 되고, 재향군인으로 구성된 재향군인단회의를 바탕으로 만든 무장조직을 배경으로, 산업을 재편성하고, 각 성청을 정비·신설하여 강고한 정치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조직을 만드는 밑바탕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노동성에 따른 쟁의의 조정, 자유계약에 따른 임금의 결정, 8시간 노동제의 실시, 유년노동의 금지,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의 일련의 노동정책을 실시한다.

일반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항으로, 15세 미만·60세 이상의 아동·노인의 국가부양, 5세 이상·15세 미만 아동의 수업료면제·교과서 무료배부·점심의 학교지급·에스페란토어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국유재산의 운용을 통해 얻으며, 노동자는 개인기업에서는 순익의 2분의 1을 배당받고 경영에 참가하게 하고,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참여 대신에 중의원을 통해 경영에 발언권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국내의 개조와 함께 식민지와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식민지 정책도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식민지에는 일본 국내와 동일한 행정법이 시행되고, 10년 후부터 지방자치제가, 20년 후에는 일본과 같은 참정권이 그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 국내의 개조가 완료된 후에는 국가개조내각 아래에서 실시된 것과 동일한 정책(사유재산한도, 사유지한도, 사인생산한도의 3원칙)이 식민지에도 적용되고, 일본인과 동일한 생활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조 후의 일본은 징병제도를 기반으로 강력한 정치체제, 강력한 산업조직에서 생겨난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기방위'를 위해 '불의한 강제력에게 억압당하는 다른 국가 혹은 민족(중국, 인도)'의 해방을 위해 '대영토를 독점하여 인류의 천도를 무시하는' 국가(영국, 러시아)를 타파하기 위해 투쟁에

도전해야 한다. 당면의 문제로는 오스트레일리아(남방영토), 극동시베리아가 취득해야 할 지역이다. 기타는 「결언」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으로의 개조’를 넘어서서 아시아를 이끌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양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국가프롤레타리아의 일원으로서 부국(영국은 대부호국, 러시아는 토지 대국)으로부터 정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시아 본토에 대해 팽창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서양에 대항하여 모든 아시아인들의 이익을 후원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그는 “일본 민족은 주권의 원시적 의미, 통치권상의 최고의 통치권이 국제적으로 부활하여 ‘각 국가를 통합하는 최고국가’의 출현을 각오할 만하다. 지나(支那), 인도 등 아시아의 7억 민(民)의 각성을 이끄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쟁 없는 평화는 천국(天國, 천황의 나라)의 도(道)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타는 『국가개조범안대안』을 대외팽창적 주장으로 마무리하였다.

Ⅳ. 기타 잇키와 1920~1930년대 우익사상의 지형도

20세기 초 일본에서 기타의 사상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기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청년장교층의 국가개조운동이었다고 평가된다. 그의 사상이 청년장교들에게 특히 환영받은 것은 1920년대 사회풍조에 대한 비판론 때문이다. 청년장교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촌 자제로, 자본주의화된 도시문화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를 개조해야 한다는 기타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그러나 1920~1930년대 기타의 행적은 폭력이나 음모사건에 개입하는 등, 여타의 민간우익과 다를 바 없었다. 다시 말해 기타의 사상은 논리 정연한 국가개조론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우익적 활동을 촉발시킨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한 기타의 사상적 성격은 당대의 주요한 우익인사들의 사상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우익인사와 마찬가지로 기타는 천황 중심의 국가개조를 구상하였다. 1920~1930년대의 대표적 우익 활동가였던 이노우에 닛쇼는 1932년 혈맹단을 조직, 요인들에 대한 테러사건인 혈맹단 사건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노우에의 과격한 행동주의는 철저한 천황주의와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는 원래 니치렌 승려였지만 일본 천황을 우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천황주의의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일본이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일본 천황의 성업(聖業)이라며 천황에의 절대적 귀의를 주장하였다. 또 한 명의 대표적 우익인사였던 오키와 슈메이도 일본 문명의 특수성을 뒷받침하는 근간이 '황통연면(皇統連綿)'인 천황에게 있다고 하는 천황주의적 주장을 지녔다. 이들의 천황주의적 주장과 비교할 때, 기타의 천황관은 합리적 목적성을 지닌다.

초기 저작인 『국가론과 순정사회주의』에서 기타는 만세일계적 천황주의를 거부하고 천황중심적 국제론을 비판했던 점에서 기타가 대부분의 우익인사들과 달리 천황에 대한 절대적 신앙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기타가 철저한 천황주의 비판의 입장을 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개조법안대강』에서 기타는 국민통합의 기축으로 천황의 존재를 중시하면서, 천황을 호령자로 하여 국가개조를 위한 체제변혁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기타는 일본의 국제에서 천황이 차지하는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천황의 권위를 토대로 국가개조를 이

루고자 하였다. 특히 천황과 국민의 직접 관계를 강조한 그의 천황론이 황도와 청년장교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점에서 그의 천황관의 사상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1920~1930년대 우익사상은 국가개조론적 사고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노우에 닛쇼는 혈맹단 사건을 통해 당시 일본이 사리사욕에만 몰두하여 국방을 경시하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고려하지 않은 관료 기업인들을 제거하여 국가혁신의 출발로 삼고자 하였다. 기타도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통해 관료와 재벌들을 제거하고 천황과 국민을 직접 연결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국가개조의 대상과 방법에서는 우익인사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다치바나 고사부로(橋孝三郎)의 농본주의를 볼 수 있다. 다치바나는 대륙낭인을 거쳐 일본에 귀환하면서 우익활동을 하였는데, 주로 농촌의 재건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1929년에는 애향숙(愛郷塾)을 설립하였다. 그는 도시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토지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체적 조화’에 기반을 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반해, 기타는 철저히 도시적 사고를 지녔다.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중심의 합리적 통제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의 폐해를 없애면서 그 이익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는 체제, 즉 ‘국가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셋째, 일본의 우익은 제국주의적 팽창을 지지하였는데, 기타도 일찍부터 침략적 아시아주의자의 면모를 지녔다. 그런데 1920~1930년대 우익들 중에서도 기타는 아시아 문제에 가장 적극적 관심을 보인 인물 중의 한 명이다. 앞서 언급한 이노우에나 다치바나는 주로 일본 국내의 개조에 관심을 갖고 테러와 같은 무력적 방법을 동원했다. 그런데 기타는 1910년대에 중

국 혁명에 개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국가개조와 더불어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함께 주장하였다. 즉, 그는 “침략 없는 평화는 천국(天國)의 도가 아니다”라고 하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인도의 독립과 중국의 보전, 오스트레일리아와 시베리아의 획득을 위한 전쟁은 정당한 일본의 권리라고 선언하였다.

기타와 더불어 아시아 문제에 적극적이던 인물로 오카와 슈메이가 있다. 일본의 아시아 지배가 아시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기타의 논리는 오카와 슈메이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아시아 전문가였던 오카와는 식민정책의 연구를 통해 국제정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만들었다. 그는 앞으로 세계에는 ‘대국시대’가 끝나고 ‘초대국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세계에서 진정한 독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은 적어도 자급자족할 만큼의 경제단위를 정치적으로 지배할 필요가 있다는, 즉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오카와는 일본이 이러한 자급자족의 영역을 지배할 정당성을 ‘일본 문명의 특수성’에서 찾았다. 그는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일본은 “세계에 유례없는 황통의 연면, 아직껏 외국에 정복된 적이 없는 숭고한 자존, 그리고 선조의 사상과 감정을 보존하는 데 지극히 편리한 지리적 위치”를 지녔기 때문에 유교, 불교와 같은 아시아 사상과 문명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잇키는 1920~1930년대 일본에서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사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일본개조법안대강』이 널리 읽히면서 그에 대한 찬반의 의견도 분분했다. 그런데 그가 주목받았던 것은 다수의 동조자를 얻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사상적 분위기에서 그의 주장이 지닌 파격성과 차별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국가개조’라는 우익적 사고를 공유했지만, 그 실천 방안에서는 천황 중심적 농본주의라고 하는 지배적 우익 코드에서 벗어나 있었다. 기타 잇키는 1920~1930년대 일본 우익의 이단아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岡本幸治(1996), 『北一輝－轉換期の思想構造』, ミネルヴァ書房.

宮本盛太郎(1975), 『北一輝研究』, 東京: 有斐閣.

木村時夫(2007), 『北一輝と二・二六事件の陰謀』, 恒文社.

北一輝(1959~1972), 『北一輝著作集』全3巻, 東京: みすず書房.

小林英夫(1984), 『昭和ファシストの群像』, 校倉書房.

松本健一(1996), 『北一輝論』, 講談社.

五十嵐曉郎(1979), 『北一輝論集』, 東京: 三一書房.

吳夏羅美(1987), 「북일회의 국가개조사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田中五郎(1949), 『日本ファシズムの源流－北一輝の思想と生涯』, 白揚社.

竹山護夫(2005), 『北一輝の研究』, 名著刊行會.

河原宏外(1979), 『日本のファシズム』, 有斐閣.

White, James W.(1995), *Ikki : Social Conflict and Political Protest in Early Modern Japan*,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기시 노부스케의 국가주의

– 사상적 원천탐색

김종식 아주대학교

I. 기시 노부스케의 일생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본명은 사토 노부스케[佐藤信介], 그의 총리 재임기(1957~1960)에 새로운 미일안보조약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의 형으로, 사토 가문 출신이지만 기시라는 성을 가진 아버지 쪽 친척의 양자로 들어갔다. 도쿄제국대학 법과를 졸업(1920)한 뒤 관료로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1936년에 만주국(滿洲國) 정부의 산업부 차관이 되어 만주국과 중국 점령지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일본으로 돌아온(1940) 뒤에는 상공 차관으로서 전시경제체제에 기여했다. 재벌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 했지만 좌절되자 사임했다가 1941년에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의 상공상이 되어 정계로 복귀했다. 1942년 4월에 중의원 의원이 된 뒤에는 도조 내각의 군수성 차관으로 일했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계속한다는 도조의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1944년 도조 내각이 무너지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1945년 연합국 점령당국에 체포당해 투옥되었지만 재판을 받지 않은 채 석방되

었다(1948).

그는 사업가로 재기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953년 중의원 의원으로 선출된 뒤 일본 민주당의 창당을 도왔으며 민주당이 1955년에 자유당과 통합하여 자유민주당을 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듬해 이시바시[石橋] 내각의 외무상이 되었고, 이시바시가 병으로 쓰러지자 그 뒤를 이어 1957년 2월에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된 후 일본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1957년에 이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배상협정과 경제협력을 추진했다. 1959년에는 서유럽과 라틴아메리카도 순방했다. 1957년의 워싱턴 방문에 이어 1960년 1월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일 양국관계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권을 되찾기 위해 미일안보조약 개정안에 조인했다.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는 전쟁을 금지하여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었던 전후 헌법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는 한편 일본의 자주국방을 추진했다.

기시는 여당 의석이 절대다수임을 이용하여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을 비준시켰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횡포로 간주되어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군중시위를 불러일으켰고, 예정되어 있던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취소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여파로 기시는 사임했으며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가 후임 총리가 되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불법화한 헌법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기시는 이 조항을 확대해석하여 일본 자위대가 군비를 더 갖출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는 자민당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했으며, 1987년 사망하였다(『브리태니커백과사전』 온라인판).

II.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적 유산

기시는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기시의 유산 혹은 기시의 주장이 여전히 일본 사회 특히 일본 우익에게 유익한 자산이며, 과제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시가 주목받는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다.

첫째, 기시가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결성과 자민당의 정권 형성의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재군비·‘독립’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둘째, 헌법개정을 목표로 하는 자민당을 개헌 정당으로 발족시키고 자신이 총리 자리에 있을 때 정부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조사를 착수하여 오늘날 ‘자민당 헌법사안’이라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정치일정에 오르게 하였다. 셋째,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에 따라 미국과의 쌍무적인 관계로 미·일 안보를 위치시킴으로써 일본의 ‘독립’을 실체화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경찰예비대의 창설(1950) 이래 보안대를 거쳐 자위대로 발족(1954)하여 방위비 4조 8천억 엔(2005년도 예산기준), 자위대 총 정원 24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전력을 지니는 군대로 성장하는 밑받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시가 수행한 위의 세 가지 과제는 서로 정합성을 지니고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지탱하는 정치의식으로 노골적인 국가주의가 존재한다. 기시의 눈으로 보면 1948년에 만든 일본국 헌법은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 민주화의 수단으로서 강요한 헌법으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1945년 이전의 천황제 국가 지배체제(국체)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고 일본 고유의 문화 전통과는 괴리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기시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시의 정치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

가 된다. 기시는 1945년 이전의 육·해군 군인을 채용하여 만든 경찰예비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일본의 경찰예비대로부터 시작되는 재군비는 원래 한국전쟁의 발발에 따라 미군기지와 미군가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지만 기시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었다. 기시가 그리는 전후 일본의 국가 모습은 일본의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에서 시작된다. 그는 헌법의 개정으로 패전 이전의 국체를 회복하여 1945년 이전의 권력을 전면 부활시켜 사살상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1945년 이전으로의 복귀(역코스)는 당연하지만 국내의 온건적인 보수층을 비롯한 여론에서도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A급 전범 용의자라는 전력을 가진 기시의 주장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다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1953년 4월 공직 추방에서 해제되어 다시 중의원 의원으로 복귀한 기시는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과의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패배하였지만 이시바시가 병으로 물러난 이후 기시가 외무대신의 자리에서 1957년 2월 숙원의 내각 총리대신에 취임한다. 이때부터 기시는 세 가지 과제를 강력한 방법으로 실행한다.

자민당 내에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를 필두로 하는 대미추종과 혹은 경제제일주의로 불리는 그룹과 명백한 대립각을 세운 기시는 재군비를 실현한 이후 자주헌법의 제정을 통해 ‘진정한 독립’을 달성함으로써 대미관계도 비로소 대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속에서 아시아의 맹주로서 일본을 재정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기시의 정치적 구상은 대미관계에서도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에도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강행하여 1945년 이전의 일본으로 복귀, 즉 ‘자주적인’ 일본의 기초를 다졌다. 일본의 이

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일을 실현함으로써 일본의 주체적인 역코스의 선택에 따라 일어날지도 모를 대미관계의 불안전화를 불식시키려고 하였다.

기시의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실현시키려는 집념의 배경에는 대등한 미일관계를 실현하고 동시에 미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헌법을 자주헌법으로 개정하여 '독립'에 적합한 국민정신을 환기시킴으로써 1945년 이전의 국가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Ⅲ. 정치가 기시 노부스케의 행적

기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유민주당의 결성은 중심과제로 헌법 개정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국가주의자 기시의 최종·최고의 목표였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기시는 직접적인 헌법의 개정보다는 헌법을 해석적으로 확대하여 무력화시키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의 설정을 꾀할 수 있는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공권력 강화의 사전 정지작업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헌법개정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문제, 미일안보조약의 개정문제에 대한 기시의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기시와 헌법개정 논의

현행 일본 헌법이 제정된 이래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1952년 샌

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래 파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보수정당들 속에서 논의되었다. 1953년에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이 만들어지고, 자유당과 개진당이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을 위한 집권여당의 움직임이 고양되던 시기였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 자민당을 만들고, 자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헌법개정이 주장되었다. 1956년 6월 1일 공포된 헌법조사사회법에 따라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다. 이 시기는 헌법개정의 움직임이 고양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드는 기시가 내각 총리대신이 되는 1957년에 정부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헌법조사회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사회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헌법조사회 설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정부에 설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1958년 기시 총리는 미국의 NBC 브라운 기자와의 회견에서 “지금의 헌법으로는 전쟁도 할 수 없고 해외 파병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헌법이 제정된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공동방위를 위한 안보체제를 강화해야만 한다. 지금이야말로 헌법 제9조를 폐기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하였다. 기시는 전쟁을 포기하는 헌법 제9조의 폐기를 포함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의 실현과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위한 중의원의 3분의 2선의 확보를 위해 소선거구제로의 선거법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야당인 사회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1958년 4월 중의원을 해산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야당인 사회당은 헌법개정 지지선인 중의원 의석의 3분의 1 확보에 힘을 집중하여 그 의석을 확보하였다. 결국 헌법조사회는 야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명분을 잃었으며, 소기의 조사활동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결론

도 없는 보고서를 1964년에 작성하는 것으로 수명을 다하였다.

2. 기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도

1958년 10월 8일 기시는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 警職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경직법의 개정안은 ① 경찰관의 출입권을 확대하여 조합사무소와 집회, 숙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임시검문을 부활시키고, ② ‘제지’의 명목으로 대중행동의 예방·탄압을 가능하게 하고, ③ ‘흥기 소지’의 수색명목으로 영장 없이 신체검사를 하고, ④ ‘보호’라는 명목으로 체포영장 없이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경직법 개정안의 의도는 데모 등을 엄두에 둔 집단범죄 예방과 제지를 목적으로 했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침범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명백하고 시급하게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경고와 제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노조, 야당, 언론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찰국가’의 재현을 노리는 것으로 강력히 반발하였고 또한 갑작스런 제안으로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경직법 개정은 공공복지와 사회질서를 중시하고 데모를 폭력행위로 바라보는 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기시와 개인의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우선시하는 신헌법을 옹호하는 일본의 민주주의 세력이 대립한 문제였다. 기시는 점령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후의 교육제도와 치안정책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기시의 경직법 개정문제는 기시의 국가주의적인 체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결국 반대운동으로 폐안되었다.

3. 기시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講和條約)과 함께 ‘일본과 미합중국의 안전보장조약(Security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52. 4. 28 발효)’이 체결되었다.

전후(戰後)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그 제3장 C항에 의거하여 일본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기초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안보체제에 가입할 수 있게 용인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었다. 1951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에서는 미군의 주둔을 규정하고 일본 내의 기지를 제3국에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에 대규모 내란이나 소요가 발생하여 일본정부의 요청이 있거나 일본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미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불평등조약이었다.

기시가 주장하는 ‘독립’을 위한 헌법개정이 정권의 과제인데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자, 기시 내각은 개헌에 대신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대등한 안보조약 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안보조약 개정에 따른 미일동맹의 대등화는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조성 역할도 하였다.

조약의 개정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반대운동은 혁신정당·노동조합·학생단체·시민단체 등이 연대하여 체결에 반대했고, 체결 후에도 국회에서 연일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것에 대하여 기시는 “조금 극단적인 말이 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일부 세력이 국회의 주변만을 포위하고 시위를 하고 있을 뿐, 국민의 대부분은 안보조약 개정에 큰 관심이 없다. 그 증거로 국회에서 2km도 떨어져 있지 않는 긴자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젊

은 남녀가 활보하고 있고, 고라쿠엔구장에는 몇만 명의 사람이 야구를 보고 있다. 일본이 내란적 소요사태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외국인도 있는 듯하나, 이러한 내란이나 혁명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기시는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결국, 1960년 1월 19일 ‘일본과 미합중국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60. 6. 23 발효)’이 체결되었다.

신조약은 구조약을 개정한 것으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문화한 외에 조약의 효력을 10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쌍방 어느 한쪽이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고 나서 1년이 되면 무효가 된다고 규정했다. 신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이 있어 방위행동을 취했을 경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그리고 이사회가 평화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때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규정했다. 조약은 군비능력을 상호 발전시킬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일본과 극동의 안전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일 간에 협의와 군사연습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일본 간의 정치·경제상의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일본 내의 내란시 미군의 출동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사전 협의에 대한 것은 조약으로 두지 않고 1960년 1월 19일 기시 총리와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 제6조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전협의의 대상은 일본에서 미군의 장비와 배치에 대한 중요한 변경, 일본 이외 지역의 전투작전 행동을 위한 기지 사용 문제 등이다. 이 신조약은 1970년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은 헌법 제9조의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켰고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장시켰다. 기시 내각은 안조보장조약의 개정에 따라

미일군사동맹의 실질화를 꾀하였다.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때까지 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초해서 “조약 체결국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그 국가에까지 가서 그 국가를 방어하는 의미에서의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헌법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되는 것에 대하여 기시는 재검토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일정 정도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 혹은 군사적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되고, 일본국 헌법 제9조를 해석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은 미·일의 대등화 전략과 헌법개정의 실마리를 존속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IV. 기시의 국가주의 형성

기시의 이러한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그의 출생에서 학교생활, 관료생활 등 1945년 패전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전후의 우익 정치가 기시 노부스케가 탄생하는 사상적 기반을 검토한다.

1. 출생과 성장-조슈번의 흔적

기시 노부스케는 야마구치(山口) 출신이다. 야마구치현은 메이지유신을 일으킨 중심세력이 성장한 조슈번(長州藩) 지역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치의 중심세력을 형성하는 조슈벌[長州閥]의 중심 근거지이기도 하다. 기시는 1898년 11월 13일 야마구치현에서 현청에 근무하는 사토 히데스케[佐藤秀助]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증조부 사토 신칸[佐藤信寬]은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지도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도 교류하였고, 메이지정부의 정치지도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과도 교제하여 메이지 신정부의 조슈벌과도 직접 연결되었으며,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시마네현[島根縣] 현령을 지내기도 하였다.

기시는 신칸을 사토가의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신칸은 기시의 나이 4세 혹은 6세 때에 사망하였다. 기시는 증조부 신칸을 통하여 요시다 쇼닌,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기토 다카요시[木戸孝充] 등 메이지유신의 지도자들을 친밀한 눈앞의 존재로 인식하고, 증조부 신칸을 연결시켜 자각하였다. 증조부 사토 신칸은 기시의 정신세계 형성에 토양과도 같은 존재였다.

19세기 동아시아의 격동기에 아편전쟁으로 시작되는 서구열강의 아시아 진출·지배에 대하여 조슈번의 사상적 지도자 요시다 쇼인은 군신일체[君臣一體]의 황국사상으로 대응할 것을 설파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조슈번을 막말 중앙정치에서 사쓰마번[薩摩藩]과 경쟁하면서 존왕운동[尊王運動]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일본 전체의 존왕운동을 주도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슈번의 역사적 전통이 기시의 국가사상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기시가 중학시절 정치가를 지망하게 된 것은 증조부 신칸과 그와 연결된 조슈의 지사들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숙부 마쓰스케[松介]를 매개로 소박한 형태이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사상으로 기시에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마쓰스케는 기시의 삼촌이며 사토가의 장남으로 사토가의 계승자였다. 그는 동경제국대학에서 의학을 배우고 오카야마의전[岡山

醫專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마쓰스케는 정치가적인 기질이 있었으며, 기시의 경제적 후원자이면서 정신적인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쓰스케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기시는 세상을 떠난 마쓰스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수석을 닦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기시의 인격형성에서 중학교 졸업까지의 기간은 결정적이다. 그의 인격형성은 사토 일족의 혈연공동체와 그것을 둘러싼 조슈의 유신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조슈번 모리가의 전 가신이라는 가격에 자긍심을 가지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입신영달의 길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교육에 대한 집착,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집착을 일족 결속을 가지고 실현하려는 의지는 기시의 인격형성을 통하여 지속되었던 것이다. 기시의 입신영달의 야심은 사토 일족의 교육열과 일족의 자긍심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시의 소학교 시절의 희망은 군인이었다. ‘조슈의 육군’은 메이지유신 이래의 전통이기도 하였지만,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더욱더 야마구치에서 군인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기시의 군인 지망은 중학교 3학년 무렵에 식었다. 그리고 법과를 지망하여 장래 정치가가 되기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 체력에 자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는 군인 지망생의 필수인 기계체조를 못하는데다가 허약체질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친척인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가 외교관으로 활약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외교관의 활약으로 한국 병합, 관세 자주권 확립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국가주권의 회복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을 눈여겨보면서 군인과는 다른 새로운 인상을 받았다. 이것에 고무되어 정치의 길을 걷기로 하였다. 참고로 기시의 큰형 사토 이치로(佐藤一郎)는 해군 중장을 지냈으며, 동생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는 총리대신을 역임하였

다. 기시를 비롯한 3형제는 아마구치에서 수재 3형제로 유명하였다.

기시는 조슈벌의 존왕(尊王)의 역사적 전통과 무사의 집안으로 근대의 입신출세에 대한 강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이러한 배경은 기시가 관료로, 전 후에는 정치가로 성장하는 데 다른 사람보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2. 현실적인 감각의 배양 – 현실주의자 기시의 탄생

기시는 1914년 일본에서 가장 어렵다는 입시를 통하여 제1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국내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1911년 메이지[明治] 천황이 죽고 이어 다이쇼[大正, 1912~1926] 시대가 시작되었다. 메이지 천황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는 사회도 변모하고 있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적 과제인 치외법권의 철폐 등 서구열강에서 완전히 독립을 실현하고,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됨에 따라, 일본 국민은 억눌렸던 정치적 욕구를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정당정치와 각종 사회운동의 활발한 발전을 가져온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1945년 이전 일본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낳는 토양이 되었다.

한편 정치에서 일본 국민은 조슈벌 출신의 제3차 가쓰라 타로[桂太郎] 내각의 등장을 기화로 헌정옹호·벌족타파의 제1차 호헌운동을 일으켰다. 국민의 반정부운동으로 가쓰라 내각이 물러난 후 등장한 사쓰마벌의 해군 출신 야마모토 곤페이[山本權兵衛] 내각도 오래지 않아 오직사건으로 물러나고 메이

자유신의 원로이자 정치지도자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번벌반대와 정당정치를 외치면서 총리가 되었다. 그는 1914년 8월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하였고 동시에 21개조의 요구를 내걸고 중국에 대한 간섭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판도를 확대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기시는 국내외적으로 민중의 정치적 진출과 일본의 본격적인 제국주의로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고교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 기시의 정치의식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기시의 독서경향은 그의 성격을 조금은 알 수 있게 한다. 기시는 자유로운 고등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광범위한 독서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교양의 토대가 되었다. 톨스토이·도스토예프스키·피테 등의 소설류와 헤겔·니체·칸트 등의 철학서를 읽었다. 일본서적으로는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등의 저작집과 소설책, 그 외 역사책 등 다양하며, 내용이나 수준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는 난독(亂讀)의 수준이었다. 그 외 일본의 전통적인 라쿠고(落語)를 즐기기도 하였다. 기시의 지적 호기심은 기본적으로 유럽을 향해 있었지만, 일본 문화에 관심도 보이는 보통의 청년이었다.

이 시기 기시의 폭넓은 독서는 그의 일생 동안 교양의 토양이 되었다. 이러한 지적 토양이 그를 후에 국수주의자, 광적인 우익적 사상의 소지자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감각을 갖춘 정치가로서 국가주의의 실천자가 되게 한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3. 보수적 국가주의자 우에스키 신키치와의 인연

기시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17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고,

1920년에 졸업하였다. 당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으로 경제가 호황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한편 경제호황은 인플레이를 발생시켜 노동자와 중산계급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면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빈부격차의 확대로 야기되는 사회불안은 기존질서를 뒤흔드는 힘이 되었다. 특히 1918년 쌀소동은 이러한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다. 쌀값 폭등으로 도시의 하층민을 중심으로 쌀값 인하의 요구와 쌀 강탈을 포함하는 시위와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시기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상적 조류가 등장하였다.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민본주의(民本主義)를 주장하면서 천황제하에서 민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의 요구를 이론적으로 표현하였다. 주권은 천황에게 있지만 천황은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민본주의는 천황제라는 한계 때문에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관철시키지는 못하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정신적인 기초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났으며, 전 세계에 사회주의를 확산시켰다. 1918년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내각에서 러시아혁명에 대한 간섭을 구실로 시베리아 출병을 결정하였다. 그 후 7년에 걸쳐 20만 명을 동원하면서 시베리아를 차지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철수하였다. 1918년 9월에는 일본 헌정사상 본격적인 정당내각인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이 탄생하였다. 정당내각은 1921년 하라가 암살될 때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1919년 1월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강화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그 영향은 조선의 3·1운동, 중국의 5·4운동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야심과 아시아 여러 민족의 저항이라는 구도를 명확히 하였다.

기시가 대학을 다닌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사회변동이 극심한 시기였다.

이러한 변동은 좌익의 사회주의에서 우익의 국가주의까지 다양한 사상적 흐름과 사회운동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학생이던 기시도 사회변동의 격랑 속에 자기의 생각을 어느 한쪽에 놓게 되었다. 당시 정치정세를 반영하여 동경제국대학에는 요시노 사쿠조를 지도자로 하는 민본주의의 흐름과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愼吉)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국가주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었다. 민본주의적인 학생은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의식을 가지고 ‘신인회(新人會)’에 모이게 되었다. 이것에 대항하여 국수주의 학생은 국가 전통정신을 강조하고, 국권주의를 주장하는 목요회(이후 흥국동지회)에 결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헌법학에서도 주권은 국가에 있고 천황은 국가의 최고기관이라는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천황기관설, 우에스키 신키치의 천황주권설로 대립하였다.

대학 내의 이러한 정치정세에서 기시는 입학 후 바로 우에스키의 강의를 통해 국체론에 공감하였고, 야마구치중학교 선배들에 이끌려 우에스키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으며, 목요회에서도 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시는 유교적·일본주의적인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주의에 심취하였다.

4. 국가사회주의자 기타 잇키와의 만남

기시는 우에스키의 국가주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국가주의 사상을 접하였다. 특히 기타 잇키(北一輝)는 기시에게 강한 사상적인 충격을 주었다. 기시는 기타에 대하여 대학시절에 자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그와 직접 만난 것은 단지 1회였다.

기타는 23세 때인 1906년 『국체론과 순정사회주의(國體論及び純正社會主義)』

를 자비로 출판하였으나 발매금지당하였다. 이 책은 사회주의혁명과 대외 팽창론을 합체시킨 국가사회주의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내용은 천황에 대한 인식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메이지유신을 ‘가장국가(家長國家)’에서 ‘공민국가(公民國家)’로 변용하는 하나의 혁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천황의 개인 소유물로서의 국가(=가장국가)에서 국가에 주권을 귀속시키는 ‘공민국가’로의 진전은 전제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가장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타의 천황제 비판은 사회주의자 고토쿠슈스이[幸徳秋水],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와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요소이기도 하였다.

기타 잇키는 1916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혁명동맹회에 참가하여 중국 혁명에 투신한다. 1919년 국가주의 정치결사인 유존사(猶存社)를 만든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는 유존사의 지도자로 기타를 초청하였고, 기타는 1920년 1월 귀국한다. 기시가 기타를 방문한 것은 그의 귀국 직후이고, 기시의 대학 졸업 직전이다. 유존사에 찾아간 기시는 기타의 혁명가적인 모습에 압도당한다.

그 후 기시는 기타가 저술한 『국가개조안원리대강(國家改造案原理大綱)』을 읽고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 책은 1919년 중국에서 집필되어 기타의 귀국 전 오카와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와 그의 지지자들이 은밀히 돌려가며 읽었다(1923년 『日本改造法案大綱』으로 제목이 바뀐다). 기시는 이 책을 밤새워 필사할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국가개조안원리대강』에는 일본 개조의 계획이 적혀 있었다. 구체적으로 천황이 쿠데타를 일으켜 3년간 헌법을 정지시키고, 귀족원과 중의원을 해산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발포할 것, 화족(華族)제도의 폐지, 치안경찰법과 신문조례법 등의 폐지를 통한 ‘국민 자유의 회복’을 꾀할 것, 황실재산을

국가의 귀속시킬 것, 국민에 사유재산을 제한할 것, 대자본의 국유화를 행할 것, 사기업의 순익을 노동자에게 배당하고, 1일 8시간 노동과 일요일·공휴일에 휴업(임금은 지불)을 시행할 것 등을 주장하여, 국가개조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민은 평등·자유로운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국민의 인권 옹호도 주장하였다. 국가사회주의 혁명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개조안원리대강』은 세계영토의 재분할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다. “불법으로 대영토를 점유하여 인류공존의 천도(天道)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개시할 권리를 지닌다”고 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와 극동 시베리아를 차지하기 위한 개전은 ‘국가의 권리’로서 제국주의적인 영토확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시는 기타의 사상에서 받은 영향에 대하여 “『일본개조법안대강』은 처음에 사회주의자였던 기타 씨의 국가사회주의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 혁신을 우리 국체와 연결시킨 것으로, 당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매우 가까웠고 실행방법이 조직적이고 구체적이었다”고 회고하였다.

기타의 사회주의론이 기시의 국가론에 영향을 미쳤음은 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론과 겹치는 데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기시가 뒤에 상공성의 혁신관료로서 통제경제의 기수가 되고, 그 뒤 대외팽창론에 동조하여 만주국 경영에 실력을 발휘하며, 나아가서 만주를 떠나서는 군부 주도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의 각료로서 태평양전쟁을 지도한 그의 족적은 명백히 이러한 제국주의적 사회주의사상을 관철시키고 있다.

기타 잇키와 기시의 사상에서 차이점은 국체론이다. 천황제 타도로 기울었던 기타와는 달리 기시의 국체옹호(유지)는 변하지 않았다. 기시가 전쟁 전과 전쟁 중에 걸쳐서 화족제도의 폐지와 궁내성의 개혁을 주장하고, 사유재

산의 제한을 말한 것은 기타와는 반대로 국체를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기시는 국체를 신성화시키거나 관념화시키지는 않았다. 그는 우에스키의 맹목적인 천황제 옹호에는 명백하게 찬성을 표시하지 않는다.

결국 기타는 1936년에 일어난 대규모 쿠데타인 2·26사건 때에는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론적 지도자로 지목받았으며, 결국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다.

5. 대아시아주의 - 오카와 슈메이와의 교류

기시의 대학시절 기타 못지않게 그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이다. 기시의 오카와에 대한 관심은 대아시아주의에 있는데, 일본을 맹주로 아시아 여러 민족 연대의 사상이다. 오카와의 대아시아주의의 출발은 영국 지배하의 인도의 참상을 목격하고 1916년 11월 발표한 「인도에서의 국민적 운동의 현상과 그 유래」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오카와는 영국의 심한 박해로 인도가 어떻게 황폐화되었는가, 인도가 어떻게 영국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왔는가,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발흥’이 얼마나 ‘인도의 독립’을 지원했는가를 논증하였다. 여기에서 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한 친밀함이 아시아에 대한 팽창으로 바뀌어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전조가 관통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 만철의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에게 인정받아 오카와는 1917년 만철에 입사하였다. 다음 해인 1918년 오카와는 유존사를 결성하였고, 만철 동아경제조사국의 편집과장으로 승진하였다. 기시가 오카와를 빈번하게 만난 시점이 바로 그 시기였다.

기시의 생각과 관료생활의 전환점을 연 만주행의 기반은 다름 아닌 오카

와의 사고방식에 있었다. 기시는 1936년 10월 상공성에서 만주국으로 가게 된 사상적 기반은 오카와의 대아시아주의라고 솔직히 인정하였다.

기시 사상의 이론적인 기초는 기타 잇키의 국가주의, 국가개조론과 대외 팽창론을 일체화시킨 국가사회주의이다. 동시에 오카와의 대아시아주의는 국가사회주의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시가 기타 잇키의 대외팽창론의 대상을 아시아로 한정한 것은 오카와의 대아시아주의 때문이고,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의식을 사상적으로 정당화시킨 것은 오카와를 거쳤기 때문이다.

기타 잇키는 초기 사회주의자와 교류하였고, 그의 혁명론은 사회주의의 느낌을 가진다. 오카와 슈메이 역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시절 기타와 오카와의 영향을 받은 기시의 국가사회주의 혹은 국가통제론 속에는 조금이지만 사회주의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기시는 상공성과 만주국의 혁신관료로서 계획적·통제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였고, 전후 정계복귀 이후에는 사회주의자라도 연대하여 신당을 만들 것을 구상하였으며, 총리 재임 중에는 사회당의 정책을 베껴서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기시 사상의 사회주의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6. 보수적 국수주의와의 결별

기시가 우에스키류의 국가주의와 거리를 두게 된 계기는 모리토[森戸]사건이다. 1920년 1월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 연구회지인 『경제학연구(經濟學研究)』 창간호에 조교수 모리토 다쓰오[森戸辰男]가 러시아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자 크로포트킨(P. A. Kropotkin)의 사상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에스

키를 중심으로 하는 흥국동지회에서 위험한 사상을 선전한다고 규탄하였고, 학부 교수회에서는 모리토를 휴직 처분하였다.

기시는 모리토에 대한 흥국동지회의 반대운동에 불만을 품고 우에스키에게 막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그는 묵인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것을 계기로 기시는 흥국동지회와 결별하고, 사상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다.

기시는 모리토의 사상을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흥국동지회와 우에스키 같은 단선적이고 극단적인 국가주의와는 구별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측면이 있다. 기시는 천황제 국체의 유지는 필요하지만 사유재산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기시는 사유재산제와 국체를 분리하여 생각하였다.

우에스키와 같은 관념화된 국가주의는 천황 지배를 축으로 하는 일본의 역사·문화라는 추상적인 개념 조작을 통한 국체 관념의 양성으로 국민의식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천황제로의 절대적인 회귀에 대하여 기시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철저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국가상을 그려려고 했다.

V. 국가주의자 관료 기시 노부스케

1. 혁신관료 기시 산업합리화 운동의 기수

1919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기시는 1920년 7월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농상무성에 취직하였다. 정치적 야심이 있는 기시가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내무성과 대장성 관료가 되지 않고 농상무성으로 간 것은 비록 2류

관청이지만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정치의 실체가 경제에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기시의 관료 생활은 2개의 시기로 대별된다. 첫째 시기는 농상무성, 상공성에 근무하던 때로 1920~1936년의 16년간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36년 만주국 실업부에 착임해서 1939년 상공차관 취임으로 귀국할 때까지로 그의 만주국 시대이다. 이 두 시기에 공통으로 보이는 기시의 행동은 일본의 정치·경제에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시의 농상무성 시절부터 만주국을 떠나는 19년간, 일관해서 일본의 국권확대와 군국주의 체제강화에 힘을 기울였고, 동시에 그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1925년 농상무성이 농림성과 상공성으로 분리되었는데, 기시는 상공성에 배속되었다. 1926년 기시는 구미를 방문하고 특히 독일의 산업합리화 운동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이후 막대한 배상금의 지불문제와 심각한 불황, 그리고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도의 기술과 경영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경제를 재건시키고 있었다. ‘국가통제화’를 통한 산업합리화 운동을 펼친 것이다. 기시는 독일의 산업합리화 운동에서 강한 자극을 받고 일본이 가야 할 모델로 생각했다.

전 세계적인 공황의 여파로 일본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하마구치[浜口] 내각(1929. 7~1931. 4)에서 상공성은 독일식의 산업합리화 운동을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가격인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기업합동, 카르텔 형성으로 무질서한 경제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통제경제의 추진이었다. 추진은 상공차관 요시노 신지(吉野信治)가 중심 인물이고 상공성 내의 실제적인 책임자가 기시였다.

1920~1930년대에 경제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군국주의가 대두하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 출발한 정당정치와 정당내각이 퇴조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강력한 국가체제를 주장하는 기시의 국가통제론의 입장을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 산업합리화 운동은 하마구치 내각에서 경제회복의 마지막 카드로 각광받게 되었다. 일본은 1917년 금수출을 금지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불황과 1923년 관동대지진, 1927년 금융공황으로 금본위제로 복귀를 할 수 없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마구치 내각에서 금해금으로 금본위제의 복귀를 시도하였다. 이것의 준비를 위해 긴축재정과 산업합리화 운동을 실시하였다. 산업합리화 운동은 목적과는 관계없이 국가기구 자체의 모습도 변경시키기에 이르렀다. 산업합리화 운동의 사상은 사기업보다는 국민경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먼저 국가체제의 강화를 필요로 하였다. 다음으로 강화된 국가체제는 생산기술, 판매기술, 경영관리 등 기업의 질서를 정리하고 통제하는 작업을 하였다. 정당정치의 쇠퇴와 자유주의 경제의 혼란에 직면한 일본은 국권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강력한 산업합리화 운동을 추진할 토양을 제공하게 되었다.

산업합리화 운동은 국제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다. 러시아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소련은 1928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상공관료와 군부, 일부 정당인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기시는 5개년계획이 자유경제와는 달리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면서 국가통제론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산업합리화 운동이 소련의 제1차 5개년계획에 자극받은 것은 명확하다.

산업합리화 운동의 추진 주체는 상공성 내의 임시산업합리국이었다. 상공차관 요시노는 합리국의 발족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시에게 두 차례에 걸

친 독일 시찰을 명령했다. 독일 시찰 후 기시는 보고서에서 명확한 자유주의 경제 배제와 그를 위한 강력한 국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독일 시찰의 결과에 대하여 군부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국가통제의 정당성을 설명한 기시의 보고서는 국가주의적인 색채가 짙었고, 당시 군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부와 기시의 관계가 여기에서 시작된다. 또한 기시가 혁신관료(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 패전까지 군부가 추진하는 대외 침략, 국내체제의 파시즘화에 호응하여 총동원업무를 담당했던 관료를 가리킨다. 주로 대장성, 농림성, 상공성, 체신성 등 경제관계 관료가 중심이다. 1935년 내각조사국이 설치되면서 혁신관료는 횡적인 결합을 가지게 되고, 이후 기획청, 기획원을 거점으로 국가총동원법안, 전력 국가관리안, 물자동원계획, 생산력확충계획 등의 정책을 계획하게 된다)로서 주목받는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기시는 중소산업에서 섬유산업, 그리고 자동차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통제 정책의 지침을 만들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의 제정과 실시의 과정을 통해 혁신관료로서의 확실한 지위를 쌓아가게 된다.

2. 만주국 시대의 기시 - 관료에서 정치가로

만주국은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2년 3월 건국한 일본의 괴뢰정권이다. 만주국을 사실상 지배했던 관동군은 인재를 일본 중앙부처에서 충원했다. 상공성에서는 기시의 부하였던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가 왔고 기시도 40세 되던 1936년 가을에 실업부 차장으로 부임하였다. 기시는 중국인 부장 아래에서 만주국 산업행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수완을 발휘하였다.

3년간의 만주국 근무는 기시를 관료에서 정치가로 변모시켰다. 기시는 만주에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일본 군수산업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관동군의

계획(만주산업개발 5개년계획)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부를 비롯해 각 성청, 재계, 우익 등 각 분야와 절충 조정을 담당했다. 당시 관동군 참모장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와 교제하여 이후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시기에 '기시 인맥'이라고 불릴 정도의 각계 사람들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였다. 만주국 경영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기시는 관료의 신분을 초월하여 닛산 콘체른의 만주 진출 등에 정치력을 발휘했다. 기시의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의 인맥과 자금력은 이러한 가운데 배양되었다.

3. 패전과 현실주의자 기시

1939년 도쿄로 돌아온 기시는 상공성 차관이 된다. 1년 전 국가총동원법이 통과되어 국민경제와 생활은 전면적인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기시는 혁신관료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태평양전쟁 직전인 1941년 10월 발족한 도조 내각에서 상공대신으로 취임하여, 각료의 한 사람으로 개전(開戰)의 칙에 부서(副署)하였다. 전쟁 중 실시된 1942년 익찬선거에 입후보하여 상공대신의 자리를 유지한 채 중의원에 당선되었다. 1943년 상공성이 군수성으로 통합되어 모든 국력은 전쟁 수행을 위한 체제로 만들어졌다. 기시는 군수대신 도조 총리 밑에서 군수차관이 되었다. 1944년 6월 사이판 전황이 급박한 가운데 기시는 사이판을 최후의 일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계속하려는 도조와 대립하여 내각에서 물러난다. 기시는 일본의 패전을 간파하여 본토결전을 주장하는 도조와 대립하는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기시는 패전 후 1945년 9월 A급 전범으로 체포되었다. 기시는 미일개전에 대하여 문관으로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을 말하였다. 또한 전쟁의 종결을 두고 도조와 대립한 것이 기시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1948년 12월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Ⅵ. 새로운 기시를 바라는 일본의 우익

기시는 국가주의자이면서 현실주의자였다. 그의 국가주의는 국민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메이지유신 이래의 일본 정치지도자의 의식을 계승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적인 국가통제를 수용하여 국가 중심의 강력한 체제 구축을 주장하였고, 이것을 1930년대의 일본과 만주에서 실천하였다. 또한 천황에 대해서는 천황국체와 천황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천황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절대적인 존재로 파악하지 않는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가 기시는 1945년 이후의 신생 일본에 대하여 패전 이전의 국가주의적인 전통을 계승한 일본을 꿈꾸었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그 후계자인 오늘날 일본의 우익 정치가들은 기시의 사상과 과제를 계승하여 여전히 실천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시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준섭(1997), 『岸信介の思想と行動』, 廣島大學 박사학위논문.
- 김준섭(2002), 「기시 노부스케: 전후 일본의 우익 정치인의 原型」, 『일본연구논총』 15.
- 岡崎哲二(2007), 「經濟史から見た岸信介」, 『現代思想』 35-1.
- 額綱厚(2007), 「岸信介を蘇生させる時代精神の危うさ」, 『現代思想』 35-1.
- 渡邊治(2007), 「戦後保守政治の中の安倍政權 - ‘軍事大國’ 派の系譜」, 『現代思想』 35-1.
- 道場親信(2007), 「革新國民運動と知識人 - ‘革新ナショナリズム’ についてのノート」, 『現代思想』 35-1.
- 毛利嘉孝(2007), 「60年安保をめぐるメディアの政治學 - 岸信介と暴力と新聞ジャーナリズム」, 『現代思想』 35-1.
- 小林英夫・成田龍一(2007), 「インタビュー 岸信介とは誰か」, 『現代思想』 35-1.
- 新倉貴仁(2007), 「美しい國 ネーションとステートの亡靈的な關係」, 『現代思想』 35-1.
- 岸信介(1981), 『岸信介の回想』, 文藝春秋.
- 岸信介(1983), 『我が青春: 生い立ちの記, 思い出の記』, 廣濟堂出版.
- 岸信介(1983), 『岸信介回顧録: 保守合同と 安保改定』, 廣濟堂出版.
- 雨宮昭一(2007), 「岸信介と日本の福祉制」, 『現代思想』 35-1.
- 原彬久(1995), 『岸信介: 權勢の政治家』, 岩波書店.
- 原彬久 編(2003), 『岸信介證言錄』, 毎日新聞社.
- 長原豊(2007), 「‘連續’ と ‘斷絶’ の對合(キアズム) - 帝國の經濟官僚 岸信介」, 『現代思想』 35-1.
- 中村隆英・宮崎正康 共編(2003), 『岸信介政權と高度成長』, 東洋經濟新報社.
- 戸川猪佐武(1982), 『岸信介と保守暗闘』, 講談社.
- 萱野稔人(2007), 「冷戦中と冷戦後の間」, 『現代思想』 35-1.



제3부

우익과 보수정치의 상호작용

일본 우익과 천황제 (박진우)

야스쿠니신사 · 개헌 · 납치문제 (하종문)

역사기억을 둘러싼 교과서 전쟁 (허동현)



일본 우익과 천황제

박진우_ 숙명여자대학교

I. 일본 우익의 공통기반으로서의 준왕주의

일본 우익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보수적 우파의 총칭을 말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우익’ 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민족파’, ‘애국자’, ‘국사(國士)’ 등으로 자칭하는 자들도 있으며 주로 민족주의, 배외주의, 국가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단체로는 1997년 우익을 포함한 보수주의자 단체의 최대 조직으로서 결성된 ‘일본회의’가 있으며, 이 밖에도 ‘전일본애국자단체회의[全愛會議]’, ‘전일본애국자단체연합·시국대책협의회[時對協]’, ‘청년사상연구회[靑思會]’ 등이 있다.

오늘날 일본 우익의 구체적인 활동은 일본국헌법의 폐지와 대일본제국 헌법 체제의 부활, 북방영토의 탈환, 반공주의와 일교조(日教組) 반대, 반노동조합, 남녀공동참획 사회비판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제반 문제를 비롯하여, 친미와 반미에 관한 논의, 북한의 납치문제 등의 외교문제, 그리고 대동아전쟁 긍정과 도쿄재판 부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지지, 학교에서의 국기제양·국가제창의 의무화와 같이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배외주의

를 강조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 관여하고 있다. 물론 모든 우익단체가 이러한 문제에 통일된 사상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단체나 개인에 따라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당면 목표와 활동 형태는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들이 거의 유일하게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며, 천황이나 황실에 대한 비판에는 극도로 민감하여 때로는 협박과 테러까지도 불사한다. 또한 매년 정월 황거에서의 신년참하는 우익들에게 중요한 연례행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다이쇼 시대에 경시청이 우익운동을 “각 시대, 운동의 태도, 입장 등의 차이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일본의 국체와 고래의 민풍도덕을 만방무비의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지키고 선양하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사상과 운동”이라고 정의한 것은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익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본의 우익이 공통적으로 천황에 대한 충성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천황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입장이 전전부터 획일적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전의 절대주의 천황제는 전후에 상징천황제로 바뀌었으며,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하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신성한 권위를 독점하고 있던 천황은 전후의 일본국헌법에 따라서 ‘일본과 일본 국민의 상징’으로 규정되면서 그 정치적인 권한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후의 우익이 변함없이 천황 숭배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실이 전전의 절대주의적인 천황제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후에 ‘상징’으로 변모한 천황제에 대한 납득과 지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획일적인 공통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이 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의 우익이 천황제와 관련하여 어떤 주장과 운동, 또는 행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러한 운동과 행동을 규

정하는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시대별로 개관하면서 그 특징을 검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전전의 우익과 천황제의 관계를 사상사적으로 개관하고, 둘째로 패전 직후 우익의 해체와 부활의 과정 속에서 우익들에게 천황제가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가를 살핀다. 셋째로 1970년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자결을 계기로 새롭게 등장하는 신우익의 천황관은 그 이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살피고, 네 번째로 헤이세이 천황 즉위 후, 즉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황위가 교체된 이후 우경화의 흐름 속에서 우익과 천황제의 관계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200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여성 천황’ 문제에 대한 우익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의 우익과 천황제의 관계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II. 전전의 우익과 천황제

일본 우익의 사상적인 기원을 추적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화에서 구하거나, 또는 일본의 무사도에서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우익운동 자체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본다면 일본의 경우 그것은 히라다국학[平田國學]과 후기미토학[後期水戸學]의 영향을 받은 막부 말기의 존왕양이운동에서 구할 수 있다. 물론 히라다국학과 후기미토학은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위기의식을 중요한 계기로 하여 배외주의적인 배타성과 천황의 신권적인 절대성을 강조한 점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막부 말기의 존왕양이운동은 문자 그대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이래의 신성을 계승하는 천황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신국’ 일본을 서양 오랑캐의 침략에서 막아야 한다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존왕양이운동은 단순히 ‘존왕’과 ‘양이’라는 관념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테러와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수반하고 있었다. 예컨대 서구의 개국 요구에 굴복한 막부 고관과 서구와의 무역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매점상인, 그리고 ‘신국’ 일본을 더럽히는 존재로 간주되는 서양인 등에 대한 테러는 막부 말기 존왕양이운동의 주된 실천행동이었다.

이와 같이 존왕양이운동에서 나타나는 존왕주의와 배외주의, 그리고 테러와 협박은 오늘날까지도 우익운동의 중요한 실천강령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① 천황제를 일본의 고유한 전통으로 보는 절대적인 신념, ②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타국보다 우월한 국가라는 신념에 의거한 대외적인 배타성과 민족적 우월감, ③ 그리고 자신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테러와 위협을 불사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는 점의 세 가지는 막부 말기의 존왕양이운동부터 이어져 오는 우익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막부 말기에 존왕양이운동을 주도했던 정치세력은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면서 양이를 포기하고 서구와의 개국화친을 표방했다. 이후 존왕양이운동의 사상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흐름은 1873년의 ‘정한론 정변’과 1874년의 ‘민선의원설립건백’을 계기로 사족반란파와 자유민권운동파로 나누어져 반정부운동을 전개했다. 사족반란파는 1877년의 서남전쟁을 마지막으로 괴멸되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자유민권운동으로 흡수되어 반정부운동의 전통을 이어갔다. 흔히 자유민권운동을 일본 민주주의 운동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황실의 안태와 국권의 확립을 결부시켜 강조하면서 대외팽창적인 내셔널리즘을 주장하는 우

익운동의 중요한 조류를 형성했다. 메이지 우익의 원조로 일컫는 현양사(玄洋社)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우익의 거두로 알려진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하코다 로쿠스케(箱田六輔), 히라오카 고타로(平岡浩太郎) 등은 1876년 신평련(神風連) 사건, 하기(萩)의 난 등의 사족반란에 맞추어 후쿠오카에서 사족봉기를 획책한 혐의로 투옥된 경력이 있다. 도야마 등은 출옥 후 1877년 향빈숙(向濱塾)이라는 사설학원을 설립하고, 자유민권파의 집회에도 출석하였으며, 이후 향빈숙을 향양사(向洋社)로 바꾸고 국회개설청원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향양사는 1881년 현양사로 개칭되었으며, 이것이 후일 일본 우익의 중요한 계통을 이루는 흑룡회(黑龍會), 낭인회(浪人會), 대일본생산당(大日本生産黨), 대동숙(大東塾) 등과 같은 우익단체의 모태가 되었다. 당시 현양사가 “국체를 선명(宣明)하고 민권의 신장을 꾀하여 국운의 발전을 기하고 이로써 국위를 해외에 발양한다”는 것을 사시(社是)로 하고, 사헌칙(社憲則)의 제1조에서 “황실을 경애하여 받들 것”을, 그리고 제2조에서 “국가를 애중(愛重)할 것”을 명시한 것은 실로 국권주의적인 천황제 내셔널리즘을 표방한 것이었다. 현양사, 흑룡회 등이 주도한 아시아주의, 또는 대아시아주의도 그 실태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아시아 연대사상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여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우위 속에서 서구열강에 대치하자는 것이며, 그러한 신념의 배경에는 ‘신국’ 일본에 대한 애착과 서구에 대한 배외주의, 그리고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있었다.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의 일본 승리의 무대 뒤에는 아시아 주의라는 미명 아래 일본의 국권확립을 위해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정국 속에서 암약한 그들의 역할이 있었다.

메이지 시대에는 아직도 우익이라는 이름이 정치적·사회적인 위협으로 폭넓게 인식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이쇼 시대에 들어와 공

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의 갖가지 서구사상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임협계(任俠系) 우익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들은 국체호지를 기본 이념으로 적화방지와 정치혁신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재벌, 정계, 군부 등의 배후 지원을 받으면서 파업, 쟁의 등의 노동운동과 부락해방운동, 사회주의자 등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일삼았다.

다이쇼 시대의 우익이 내적인 사상성이 희박한 채로 임협계의 활동을 주로 일삼았다면, 쇼와 시대 전반기의 우익은 국가사회주의를 주류로 하는 국가혁신운동을 목표로 테러와 쿠데타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했다. 후일 이들의 혁신적인 사상운동은 ‘쇼와유신운동’으로 불리면서 ‘전통우익’으로 평가되어 왔다. ‘쇼와유신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1930년대의 정치부패와 국민경제의 궁핍화를 배경으로 천황제와 대치하는 반체제파의 공산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를 적시하며 서구의 군축요구에 따르는 정부의 연약외교에 반발하고, 재벌과 관료의 부패를 제거하여 천황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데 있었다. 1936년 “천황 친정(親政)을 왜곡하는 군측(君側)의 간신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펼친 2·26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쿠데타를 결의한 청년장교들은 “천황에게 혁명을 요구하는 역전된 구조의 유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쇼와 천황은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반란군’으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천황의 ‘배신’으로 ‘쇼와유신운동’은 좌절되었다.

이후 일본은 군부의 주도로 천황기관설 배척과 국체명징운동을 전개하여 천황 중심의 황국사관과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귀의를 강조하고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신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광신적인 국수주의로 질주했으며, 대부분의 우익도 이러한 기본 이념에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쟁협력에 가담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익운동으로서의 ‘쇼

와유신운동'은 좌절했지만, 그것이 곧 우익운동 그 자체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우익이 전쟁협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전후 우익과 천황제

1. 전후 우익의 해체와 부활(패전~안보투쟁)

일본의 패전은 열렬하게 천황주의와 국체수호를 부르짖던 우익들에게 더 이상 없는 충격이었다. 일본의 패전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던 강경파 군인과 우익은 천황의 '옥음방송'을 날조된 것이라고 선동하였으며, 일부 청년장교와 우익들은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러나 결사항전을 부르짖는 우익들에게 천황의 '옥음방송'은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었지만, 그 이상의 소란이나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천황의 '옥음방송'은 우익의 불만을 제어할 정도의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익들에게 천황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반발할 수 있는 '반역'의 논리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익은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신봉하던 것이 가치 전환을 했음에도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이며 '반역'으로 돌아서지 않고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정당화의 논리를 제시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패전 이후 천황의 성스러운 판단이 민족의 위기를 구하고 더 이상의 참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른바 '성단' 신화의 논리는 우익이 천황의 '배신'을 수용하는 절호의 구실이 되었다. 그리고 '성단' 신화는 이윽고 비단 우익뿐만

이 아니라 대다수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천황의 판단이나 결정을 수용하고 스스로 납득하는 우익의 자세는 천황의 ‘인간선언’에 대한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어왔던 ‘현인신(現人神)’으로서의 신격을 천황이 스스로 부정했는데도 우익의 천황에 대한 충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인간선언’ 이후 ‘인간’으로 내려온 천황의 지방 순행을 국민과 고난을 함께하는 인자한 군주의 모습으로 열렬하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만큼 그들의 사상적 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전에는 ‘귀축미영(鬼畜米英)’을 외치면서 최전선에서 반미주의를 주창하던 우익이 패전 후에는 솔선해서 적극적인 친미주의로 변모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점령군은 초기 정책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침을 세우고 전범체포와 도쿄재판, 국가신도의 해체, 재벌해체 등과 함께 우익지도자들을 전범으로 지명하고 체포하거나 공직에서 추방했다. 일찍이 1946년 1월 4일의 「정당 기타 단체 폐지에 관한 각서」에서는 우익의 주요 27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이어서 2월 22일의 「정당, 협회 기타 단체의 결사금지에 관한 칙령」에서는 무려 210개의 우익단체에 대한 해산을 지정했다(패전 당시 우익단체는 350개).

그러나 패전 후 우익의 쇠퇴는 단순히 점령하의 탄압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론적·조직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더구나 그들의 정치적·재정적 옹호자였던 군벌의 와해, 그 자금원이던 재벌의 해체, 그리고 인적 기반이던 농촌의 농지개혁에 따른 민주화 등의 제 요인이 우익 운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패전 후 400개 이상의 정체불명의 우익단체가 새롭게 결성되었으며, 전전의 간판을 바꾸고 재출발한 단체, 그리고 임협계 우익단체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패전 직후 가장 빨리 체계적인 정치활동과 사상운동을 전개한 우익단체는 1945년 9월 ‘존황의숙’이라는 간판을 내세운 단체였다. ‘존황의숙’은 이듬해 1월 ‘일본의숙(日本義塾)’으로 개칭했으며 3월에는 별도로 ‘일본혁명기쿠하타동지회’를 설립해서 운동의 확산을 꾀했다. ‘기쿠하타’란 천황가의 문양인 국화의 깃발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그들의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강령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이 “천황제 절대호지와 청년에 의한 민주정치의 확립”이며 두 번째가 “공산당의 타도, 국민입헌정부의 수립”이었다. 여기서 특히 천황제 수호와 반공주의는 전전의 우익운동과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단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반미반공’이 ‘친미반공’으로 바뀌었다는 점일 것이다.

1948년을 경계로 냉전체제의 심화에 따라 군국주의의 잔재를 일소한다는 방침 아래 우익단체를 해체하고 우익의 중심 인물을 공직에서 추방했던 미점령군이 역코스 정책을 펼치면서 우익에게도 해빙기가 찾아왔으며 1951년에는 공직 추방이 해제되면서 우익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미일안보체제하에서 우익은 오로지 자본주의의 적인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전후체제 옹호운동으로 일관했다. 이노 겐지(猪野健治)가 “전전 우익의 ‘반공주의’는 국체의 존엄과 황실 중심의 사상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것이었지 결코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반공’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전후 우익의 기본적인 노선은 존왕을 위한 반공에서 존왕을 전제로 한 친미반공으로 전환되었다.

2. 미시마 유키오의 자결과 신우익의 등장(1970~1980년대)

1970년 자위대 본부에서 할복 자결한 미시마 유키오를 일본 우익의 주류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보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의 죽음 이후의 우익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시마의 천황관을 살피는 것은 그의 영향을 받은 ‘신우익’의 천황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미시마 유키오의 천황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문화방위론』이라는 작품이다. 여기서 미시마는 ‘문화 개념으로서의 천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천황은 종교적이며 신성한, 다시 말하자면 비인격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비인격적인 천황을 희구한 까닭에 만년에는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와의 대답에서 “천황이라는 것을 ‘현상긍정의 상징’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싫다”고 발언하여 천황을 ‘현상부정의 상징’, ‘혁명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미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전후의 상징천황제를 ‘주간지 천황제’라고 비난하고 ‘국민과 친숙한 천황제’의 이미지 창출에 노력한 고이즈미 신조(小泉信三)를 ‘대역적’으로 매도한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자결하기 전의 마지막 연설에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의 중심’이요 ‘제사국가의 장’으로서의 천황을 절대시한 것도 이러한 ‘문화 개념으로서의 천황’이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의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시마는 또한 개인적인 인격으로서의 천황에 대해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결 직전 후루바야시 다카시(古林尚)와의 대답에서 그는 “나는 오히려 쇼와 천황 개인에 대해서 일종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신이었던 2·26사건의 반란 장교를 처벌하

게 한 점과 패전 후 ‘인간선언’을 함으로써 ‘신으로서의 천황을 위해 죽은’ 특공대원들을 배신한 점을 들고 있다. 그가 2·26사건의 3부작 『영령의 목소리[英靈の聲]』에서 “왜 천황[すめろぎ]은 인간이 되었는가!”하고 저주한 것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으리라. 이러한 인식도 결국 천황은 종교적이며 신성한 존재여야 한다는 그의 천황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마는 쇼와 천황에 대해서 ‘반감’은 가졌지만 ‘반역’은 하지 않았다. 일본의 신좌익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던 1969년 5월 미시마가 도쿄대학 전공투(全共闘)와의 토론집회에서 “너희들이 단 한마디라도 ‘천황폐하 만세’를 외쳐준다면 나는 기꺼이 너희들과 손을 잡겠지만, 전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서로 ‘죽인다’고 말할 뿐이다”라고 하여 좌익 학생들을 도발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그만큼 미시마에게 천황은 여전히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미시마가 반드시 우익과 궤를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자결 후 우익은 미시마를 하나의 모범으로 숭경하게 되었다.

미시마 사건을 계기로 전후의 기성 우익이 ‘반공’을 주요한 테마로 내걸고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무비판적이었던 점과 ‘체제변혁’이나 ‘민족’의 시점이 희박했던 점을 자기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우익세력이 신우익이다. 우익의 거물로 1993년 아사히신문사에서 자결한 노무라 슈스케[野村秋介]가 “우익은 전위이며 사회의 촉각이다. 안보를 인정하는 데서는 체제타도의 운동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듯이 1970년대 이후의 신우익은 사상적으로는 전후 일본이 기본적으로 수용한 알타협정과 포츠담선언을 의미하는 이른바 ‘YP체제’ 타파를 주장한 점에 기성 우익과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그들은 전후 세계는 알타협정으로 미소 2대국에게 독점적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으로 일본 약체화 정책의 영향을 받아 국내

는 반국가, 반민족, 반천황제의 주의주장이 만연하고 있는 병적인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우익은 ‘YP체제’를 긍정하는 기성 우익을 부정하고 있지만, 천황제 옹호, 닛코소[旧教組] 타도, 핵확산방지조약 반대, 헌법개정, 북방영토 탈환, 반좌익 등을 주장하는 점에서는 기성 우익과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성 우익과의 연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우익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막연해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애매하다. 또한 현실적인 국제정치의 역학을 무시한 반미라는 한계가 있으며, 기성 우익의 사상적 한계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신우익에 가담한 젊은층에 대한 『아사히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천황제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朝日新聞』, 1986. 10. 22). 그들이 공통적으로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각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성 우익과 다를 바가 없으며, 천황을 일본 민족과 문화의 아이덴티티로 인식하는 점에서는 미시마의 영향이 엿보인다. 예를 들면 통일 의용군 의장 기무라 산고[木村三浩]는 미시마 사건을 계기로 우익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천황 폐하는 일본 그 자체”라고 하면서 “민족, 국가, 천황이라는 생명 존중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고 한다. 또한 잇스이카이[一水會]의 회원 하리타니 다이ске[針谷大輔]는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등에 업고 계시는 분이 폐하이다. 폐하의 존재는 정신적인 것이며, 결코 정치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마쓰바라 하루미[松原晴美]는 “천황은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존재이며 일본인의 생각을 한데 묶는 데 불가결한 존재”라고 답한다. 다만 이러한 그들의 인식에 기성 우익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천황제에 대한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천황제를 논의하는 언론의 자유는 소중하다. 천황제를

비판하는 언론을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천황제를 자유롭게 논의함으로써 오히려 천황제가 보이게 된다”, “황거를 향해서 죄경례를 하지 않는 자를 비국민이라고 비난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 천황제에 대한 비판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던 기성 우익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우익 민족파에게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는 천황 부정론자를 죽이러 가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듯이, 신우익이 등장했다고 해서 천황제 비판에 대한 우익의 폭력적인 테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전에는 천황이나 천황제에 대한 비판은 불경죄와 치안유지법에 따라 극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탄압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는데도 천황이나 천황제에 대한 비판이나 불경스러운 언행은 종종 우익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1956년 12월 나카노 마사오[中野雅夫]의 소설 『삼인의 방화자[三人の放火者]』가 황후에 대한 ‘불경’을 묘사했다고 해서 저자가 우익의 습격을 받고 1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1957년에는 영화 「고독한 사람」과 「메이지 천황과 러일전쟁」이 천황에 대한 불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우익들의 항의가 있었다. 전후 우익의 폭력적인 테러로 천황제 비판이 위축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60년 월간지 『중앙공론』에 연재된 소설 「풍류몽담(風流夢譚)」 사건이다. 우익은 이 소설에서 민중이 황거를 습격하여 황태자비가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하는 내용을 문제삼아 격렬하게 항의했으며, 이윽고 이듬해 이 책을 연재한 중앙공론사의 사장 집을 습격하여 살상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언론과 출판업계의 황실이나 천황제에 대한 자율규제가 더욱 심각해졌지만, 그런데도 천황제 비판에 대한 우익의 폭력적인 테러행위와 협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IV. 아키히토 천황과 1990년대 이후의 우익

1989년 1월 9일, 아키히토 천황이 즉위식[朝見の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본국헌법을 지키고 이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며 국운을 한층 증진시키고 세계평화·인류의 복지증진을 절실히 희망하여 마지않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우익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전후 일본국헌법이 미국의 강요로 제정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줄곧 헌법개정을 주장해 오던 우익들에게 천황의 ‘헌법준수발언’은 그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천황의 발언에 대해서 ‘명예의 역적’을 자칭하면서 “순역불이(順逆不二), 충·불충 일체의 각오”로 폐헌운동을 추진한다는 우익 간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우익은 패전시에 천황의 ‘옥음방송’과 ‘인간선언’을 저항 없이 수용했듯이 나름대로 납득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수용을 정당화했다. 예를 들면 나카무라 다케히코[中村武彦]는 “폐하의 말씀에 고민할 것은 없다. 폐하의 입장에서 그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고 하여 우익의 중진답게 우익의 동요를 달래는 발언을 했으며, 신사본청에서는 “천황 발언은 호헌론이 아니다(『神社新報』, 1989. 1. 23)”고 하여 우익의 반발을 조기에 진정시키려 했다. 이러한 가운데 천황의 발언을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지지한 우익이론가 하세가와 미치코[長谷川三千子]의 주장은 가장 전형적인 납득의 논리라 하겠다. 그녀는 “부전(不戰)이야말로 일본의 전통적인 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부전의 이념을 조문화한 것이 헌법 제9조이며, 그 어떤 나라의 헌법에도 없는 부전조항을 감히 국시로 삼으려 한 점에 서구열강에 대한 무언의 노여움과 강렬한 자기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따라서 “신천황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알리고 싶었던 것”이며, “천황의

발언에는 이와 같이 일본의 전통적인 정신을 계승한 평화주의 헌법을 유지하고자 하는 진의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고유한 전통적 정신이며 그 부전의 이념을 헌법에 조문화한 것이 헌법 9조라는 말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일본국헌법의 제정과정을 전혀 무시한 황당무계한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천황의 언행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 이를 나름대로 납득하고 수용하기 위해 제시하는 우익들의 상투적인 정당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 천황 즉위 후 우익들의 딜레마는 이러한 천황의 ‘헌법준수 발언’에 그치지 않고 아키히토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가지는 문제점이었다. 일본 민족의 중심이요 일본 내셔널리즘에서 구심적인 역할을 기능해 오던 쇼와 천황과 같은 카리스마를 아키히토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는 황태자 시절부터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이러한 아키히토의 카리스마 부재는 우익들의 심리적인 불안의 한 요인이 되었다. 청년사상연구회 의장 다카하시 마사요시[高橋正義]가 “우리는 국가, 민족, 황실의 안태를 바라면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어서기 위해 지금은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다. …… 일본이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나설 차례가 반드시 온다”고 발언한 것은 부득이하게 현상을 수용하면서 나름대로의 각오를 다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무라 슈스케가 1993년 10월 20일 아사히신문사 본사 중역실에서 “천황폐하여 영원하라[天皇彌榮, すめらみこと いやさか]”고 세 번 외친 후 권총 자살한 배경에는 냉전종결 후 반공의 간판을 상실한 상태에서 개인숭배의 대상이었던 쇼와 천황이 죽고 아키히토 이후 풍화되어가는 천황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익은 천황제라는 일본의 ‘국체’ 그 자체를 절대시하

고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결여한 신 천황의 개성에 의지하지 않고 천황제라는 시스템의 전통 속에서 국민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모색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익들이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만세일계의 황통을 계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의례인 대상제(大嘗祭)였다. 대상제는 천황이 즉위식을 올린 이듬해 11월 23일(현재 일본의 근로감사의 날)에 황조신의 신령을 계승받는 황실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의례로 알려져 있다. 우익들이 황위 계승과정에서 특히 이 대상제에 주목한 것은 아키히토의 카리스마 부재로 인한 국민통합력 약화를 천황제의 전통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키히토 즉위 직후 대일본주광회(大日本朱光會) 회장은 “일본의 훌륭한 전통의 중심에 황실이 있다. 대상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으며, 민족혁신회 사무국장 이누쓰카 히로히데[大塚博英]는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치세가 바뀌는 것은 일본인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일본이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한 국체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민족적 통일성, 문화적 동일성,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하고 추인하는 커다란 갈림길이다”라고 하여 천황제는 전통적인 일본 민족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면 운동으로서 대상제는 …… 일본이 일본이기 위한 커다란 의식이며 황위계승에 따라 국민 측에서 일본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상제가 전통의식 그대로, 무사히 예스럽게 치리지도록 그 방파제가 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아키히토 즉위 직후 우익들이 새삼스럽게 국체, 민족, 전통적인 요소 등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아키히토 즉위 후 천황제의 풍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아사히신문』이 1990년에 특집으로 기획한 ‘헤이세이 우익 좌담회’에서 전애회의(全愛會議) 이사장 기시모토 리키오[岸本力男]는 “일본은 전후 4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점령하에 있다. 국체의 내용이 빠져

버렸다. 이대로 가면 민족의식도 애국심도 국가의식도 모두 사라져버린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도덕국가의 완성이다. 전통적 정신을 되찾는 것을 운동의 초점에 두어야 한다. 결국 국체라는 말의 알맹이는 천손이 강림할 때 내려진 3대 신칙이며, 우익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전국유지연합회 부의장 나카무라 다케히코[中村武彦]가 “종전 후 천황폐하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하가 점령을 승복한 이상 우리도 저항을 주저했다. …… 점령하에서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차 안보에서 좌익에 대항하기 위해 임협단체의 힘을 빌렸다. …… 쇼와유신은 실현하지 못했다. 헤이세이에 들어와 이를 반성하고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전략, 정책, 조직을 일변하여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일본의 우익, 민족파는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대상제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일본인의 자각이라는 것이 발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 것은 천황 개인의 개성을 초월하여 만세일계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정신을 강조하면서 대상제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물론 우익이 이와 같이 천황제의 전통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천황제의 평화뿐만 아니라, 쇼와의 종언과 함께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정치의 지각변동,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베 대지진과 옴진리교 사건과 같은 안전신화의 붕괴, 가정파괴와 학교교육의 위기와 같은 사회적인 불안심리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단주의적인 조치를 통한 강력한 리더십과 내셔널리즘의 강화를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이에 대체하는 역할을 천황제의 전통적인 요소에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천황제의 전통적인 요소에 기대하는 우익의 발상은 1997년 5월 3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하여 일본 최대의 우파 보수계 국민운동의 시민단체로 출범한 ‘일본회의’의 주의주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회의’는 9블록으로 나누어진 전국 47개 도부현(都道府縣)의 거의 모든 지역에 지부와 유사조직을 가지고 정치인, 종교인, 문화인, 관료출신, 민족과 활동가 등 각 방면의 다채로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애국주의, 반공주의, 친미보수주의의 입장에서 국익과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거하여 헌법개정문제, 교육기본법 개정과 도덕교육 등의 교육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추진 활동, 그리고 황실전법 개정, 외국인참정권, 부부별성, 인권옹호법안에 등에 반대하는 주장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의 설립취의서를 보면 “전국의 유지와 함께 운동을 전개한 원호법제화 실현을 비롯하여, 재위 60년과 즉위식 등 황실경모의 봉축운동, 역사교과서 편집사업과 전물자추도사업, 쇼와사(昭和史) 검증사업, 그리고 전통에 의거한 국가이념을 구상한 신헌법제정의 제창 등 모두가 전후 일본의 재건을 기원해 온 우리 국민운동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황실을 구심점으로 하여 전통 회귀적인 운동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근대 일본의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기본인식에 의거해 자신들이 지향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목표를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는 국가의 품격을 내일의 일본에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황실을 경애하는 국민의 마음은 천고만년의 예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황실과 국민의 굳건한 인연은 수많은 역사의 시련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일본 문화를 낳아 왔습니다. …… 125대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는 연면한 황실의 존재는 세계에 그 예를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우리 일본은 황실을 중심으로 민족의 일체감을 품고 국가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황실을 중심으로 같은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역사인식이야말로 ‘같은 일본인’이라는 동포감을 키우고 사회의 안정을 이끌며, 나아가 국가의 힘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화가 진전되고 사회가 크게 변동하더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자랑스러운 고고한 전통을 가지는 국가의 품격을 내일의 일본에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만세일계’의 역사를 가지는 황실의 전통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극찬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황실의 경사를 봉축하는 국민운동과 건국기념일 등 축제일의 전통행사 개최, 천황의 사적과 국기·국가의 의의에 관한 영상사업, 대동아전쟁의 진실과 전몰자 현창 등의 출판·보급과 같은 갖가지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V. ‘여성 천황’에 대한 우익의 입장과 그 의미

1990년대 이후 우익들 사이에 노골적으로 황실을 비판하는 자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천황제와 우익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주목되는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다. 그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보수계 잡지의 증가와 함께 언론우익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 우익들은 출판미디어를 통해서 아키히토 즉위 후의 카리스마 결여와 황태자비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에 개입했으며, 이러한 우파계 미디어의 황실 공격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황태자의 ‘황태

자비 인격부정' 발언 이후 현저해졌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미 천황제는 일본 내셔널리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천황제 없는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조차 통용되고 있다. 우익 논객으로 알려진 후쿠다 가즈야(福田和也)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천황폐하’라 하지 않고 ‘천황’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자유주의 사관’을 제기하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주도한 후지오카 노부가츠(藤岡信勝)도 태평양전쟁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애국심과 국가를 지킬 의무, 그리고 도덕적 재건과 가족질서의 강화를 주장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천황제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의 우익들 사이에 종래와 같은 맹목적인 천황 숭배나 무조건적인 폭력용인의 전통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동향이 천황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비판, 폐지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후지오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천황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지만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기본적으로 공동체, 가족질서, 충군애국을 강조하고, 천황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을 보면 역사논쟁에서의 수비범위를 고려한 전략적 위장이라는 측면이 강하며, 앞서 살펴본 대상제를 중시하는 우익들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실에 대한 우파 미디어의 공격은 대부분의 경우 황태자와 황태자비의 일종의 전통 파괴적인 언행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또한 1990년대 이래 아키히토의 카리스마 부재에 대체해서 천황제의 전통적인 요소에 기대를 하는 동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후쿠다 가즈야가 “영원한 일본의 그 풍토와 기풍이 우리와 일체가 되고, 용기를 고무시켜 주는 것이다. …… 쇼와 천황이 계실 동안은 아직도

일본은 국가로서의 ‘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천황은 교토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문화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키히토 천황의 카리스마 부재에 대한 초조감을 표현하면서 문화적 전통에 의거한 천황제의 국민통합 기능에 기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이후 천황제가 표면적으로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필요성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천황제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후 일본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면 할수록 천황제의 전통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국민통합을 강화하려는 경향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0년 모리 총리의 “일본은 신의 나라”라는 이른바 ‘신국발언’도 여론의 비난의 화살을 맞고 불발에 그쳤지만, 천황제의 전통적인 요소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강화하려 한 미봉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익들의 황실관에 위기가 도래했다. 그것은 1990년대부터 논란이 되어오던 여성 천황 용인과 ‘황실전범’ 개정을 둘러싼 문제가 2001년 황태자비의 공주 출산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성 천황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헌법 14조의 법 아래 평등이라는 규정에 부합한다거나, 남녀평등의 사회적 보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황통의 단절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역사상 여성 천황(女帝)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논의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2005년에는 이미 여성 천황의 용인이 ‘자연스런 흐름’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월에는 황실전범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유식자회의가 발족했다. 유식자회의는 같은 해 11월에 여성·‘여계’ 천황을 용인하는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했으며 2006년 1월 고이즈미 총리는 통상국회에서 황실전범 개정

법안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리의 발표 직후인 2월 7일 기코비[紀子妃]의 세 번째 회임이 발표되면서 황실전범 개정안의 국회제출이 보류되고 여성 천황에 관한 논의도 열기가 식어갔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기코비가 왕자를 출산하면서 여성 천황의 용인을 끈질기게 반대하던 우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파들이 여성 천황의 용인을 반대하는 논리는 무엇일까.

2001년 여성 천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남성주의 원칙은 국가 고유의 전통이라는 점, 여성 천황을 용인하면 계열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져 황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 배우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왔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을 역임한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는 특히 여성 천황뿐만 아니라 ‘여제’ 천황(여성 황족이 성인이 되어 외부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천황이 되는 것을 말함)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1대 진무천황 이래 천황은 일관해서 남계 혈통으로 계승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여제’가 존재했지만 ‘여제’가 즉위한 후에 낳은 아이가 황위를 계승한 사례는 없으며 천황의 근친에 남자가 태어나지 않을 경우 방계의 남계 혈통에서 황위계승자를 얻었다. 따라서 ‘여제’는 황족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가 ‘여제’ 천황을 반대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천황은 조상신에 대한 제사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여제’는 황조 황종(皇祖皇宗)의 자손이 아니므로 역대 천황에 대한 갖가지 궁중제사의 주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국헌법 2조에 황위는 ‘세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4조와 24조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남계 계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 천황과 ‘여제’ 천황

을 용인해야 한다는 유식자회의의 판단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천황이 단순히 헌법에서 말하는 ‘상징’ 이라면 그러한 판단이 성립할 수 있지만, 천황은 조상신에 대한 제사장이며, 백성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행위를 주재하는 존재이므로 ‘여계’ 천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헌법에서의 정교분리원칙을 무시하고 천황을 초법적인 권위로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황이 제사왕이자 신권적인 존재로 군림하면서 파국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국가 신도의 차질을 전혀 무시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 천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기코비의 왕자 출산으로 황통존속의 위기가 해소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패전 직후 황적에서 이탈한 11궁가의 복귀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하라 야스오[大原康男]는 유식자회의의 보고서의 백지철회를 주장하면서 황실전범을 개정하지 않고 황적취득과 신궁가 창설을 특례로 임시입법을 만들어 구 궁가의 자손 가운데 연령, 경력 등에서 적절한 자를 선정해서 황적을 부여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모치 아키라[百地章]도 2000년 역사의 전통을 가지는 황실을 60년의 현행 헌법 틀에서 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유식자회의의 보고서를 비판하고 남계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 궁가의 남계 남자에게 황족의 신분을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 천황을 반대하고 남계 계승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천황제의 본질을 초헌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헌법에서의 ‘상징’ 규정 이상으로 ‘만세일계’의 혈통을 중시하는 황국사관적인 발상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 ‘만세일계’의 정통성이 상실되면 천황제 그 자체도 존속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그들에게 여성 천황은 내셔널리즘적인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남성 우월적인 인식이 배경에 있을 것이다.

한편 아키히토 이후 일본의 평화주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천황상·황실상이 정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익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천황제가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1989년 나가사키 시의회에서 쇼와 천황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나가사키 시장은 그 이듬해 우익청년의 총탄에 부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헤이세이 시대에 들어와서도 천황제를 둘러싼 우익들의 테러와 협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예술의 자유와 감상의 자유를 침해한 1990년의 도야마현립도서관 전시회사건, 같은 해 대상제의 즉위 의례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 기독교계 대학 학장 집에 대한 총격사건, 1993년 황실에 대한 불경 보도에 대한 항의로 문예춘추사 사장 집에 대한 총격사건, 2000년 6월 황태자비에 대한 경어·경칭 미사용을 이유로 일본청년사가 『소문의 진상(噂の真相)』 편집부 직원을 폭행한 사건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2006년 11월 잡지 『주간금요일』이 주최하는 집회에서 황실을 비판한 연극이 공연된 후 우익의 항의로 주최 측이 사과한 사건 등 천황제 비판에 대한 우익의 폭력적인 행동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궁내청의 엄밀한 보도규제도 황실과 국민 사이에 거리를 두고 황실을 신비의 베일 속에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궁내청은 1990년 신문에 게재된 아키시노미야(秋篠宮) 부처(夫妻)의 사진에 관해서 게재중지를 요구했으며, 2005년에는 노리노미야(紀宮) 공주의 결혼식 보도에서 경비상의 이유로 상공 취재의 자속을 요청했다. 궁내청은 때로는 우익들과 공조해서 항의나 이의를 제기한다. 1960년의 풍류몽담사건에서도 그러

했듯이, 2007년 2월에는 강담사가 호주 작가 벤 힐즈의 *Princess Masako Prison of Chrysanthemum Throne*의 일본어판을 출판할 예정으로 있다가 궁내청의 압력과 우익의 항의를 우려해서 출판중지를 결정했다(이후 출판되었음). 궁내청의 입장에서는 황실의 품위를 유지하고 천황과 황족을 지키기 위해서 보도규제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황실 터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황족에 관한 보도는 100점 만점의 찬미방송 이외에는 만들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 그 실상인 것이다.

다만 대다수 일본 국민이 우익의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후 자신들의 천황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황의 권위강화를 피하면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또한 황실과 국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천황제 그 자체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거나, 또는 천황제에 대한 망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우익이 천황제의 전통을 강조하고 여기서 국민통합력에 기대를 거는 것도 현재로서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 천황, 여계 천황을 반대하는 우익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또다시 납득과 수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찾아낼 것이다. 패전 후 지금까지 우익은 천황제의 수차례에 걸친 탈바꿈에 대해서 결코 ‘반역’으로 돌아서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납득의 논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천황제를 지지해 왔다. 전전에 ‘쇼와유신’을 내세우고 2·26 사건을 일으킨 청년장교에 대한 천황의 냉담한 반응, 패전시 천황의 ‘성단’과 패전 후의 ‘인간선언’, 그리고 아키히토 천황의 ‘헌법준수 발언’은 모두 우익이 원하고 기대하는 천황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지만 우익은 이를 모두 수용하고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해 왔다. 그리고 21세기의 지금, 일

본의 황실은 '만세일계'를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서 '여성 천황'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수용하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우익은 이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반대해 왔다. 간신히 2006년 9월 왕자의 탄생으로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여전히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 대다수 일본 국민의 지지 속에서 '여성 천황'과 '여계 천황'의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우익은 어떻게 대응할 것일까. 지금까지의 우익의 천황제와 황실의 변모에 대한 대응의 논리로 볼 때, 그들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이를 수용할 때 그들은 그 대체논리의 근거를 지금 이상으로 더욱더 천황제의 전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발견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전통이 재창출되고 우익이 이를 수용해 갈 때, 역사의 진실과 교훈은 모두가 일본의 고유하고 순수한 전통의 이름 아래 파묻혀버릴 것이다.

● 참고문헌

-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 편, 김석근 옮김(2001), 『철저비판 일본 우익의 역사관과 이데올로기』, 바다출판사.
- 김양희 외(2007), 『일본 우익사상의 기저연구』, 보고서.
- 김호섭 외(2000), 『일본우익연구』, 중심.
- 박진우(2001. 4), 「현대일본사회와 상징천황제」, 『일본역사연구』 제13집.
- 이계황 외(2003),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어령 외(2001), 『신의 나라는 가라』, 한길사.
- 加藤典洋(1997), 『敗戦後論』, 講談社.
- 高橋紘(2003), 『平成の天皇と皇室』, 文藝春秋.
- 高橋紘・所功(1998), 『皇位繼承』, 文藝春秋.
- 別冊 島編集部 編(1989), 『平成元年の右翼』, J-CC出版.
- 寶島30編集部 編(1993), 『皇室の危機論争』, 寶島社.
- 福田和也(1999), 『日本の決断』, 角川春樹事務所.
- 社會問題研究所 編(1970), 『右翼事典』, 葉社.
-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編(2001),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 猪野健治(2005), 『日本の右翼』, ちくま文庫.
- 猪野健治 編(2006), 『右翼・行動の論理』, ちくま文庫.
- 中奥宏(1994), 『皇室報道と「敬語」』, 三一書店.
- 池田諭(1970), 『日本の右翼』, 大和書房.
- 坂本多加雄(1995), 『象徴天皇制度と日本の來歴』, 都市出版.
- 皇室擔當記者OB 編(2002), 『皇室報道の舞台裏』, 角川書店.
- 『週刊金曜日』・『産経新聞』・『讀賣新聞』・『朝日新聞』, 1996~2006.



야스쿠니 신사 · 개헌 · 납치문제

하중문_한신대학교

I.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쇼와 천황의 ‘옥음방송’으로 15년 동안의 긴 전쟁은 막을 내렸다. 식민지 혹은 점령지의 민중은 물론이고 보통의 일본인에게도 전쟁의 종결은 새로운 희망을 의미했다. 하지만 일본의 우익에게는 ‘신주(神州) 불멸’의 신화가 붕괴되고 자신들의 존재기반이 무너지는 치욕의 시작이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군 총사령부)의 추방지령에 따라 223개 단체가 해체되고 지도자는 추방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성립과 발효는 점령통치의 종식과 일본의 독립을 낳았고, 이는 우익의 활동 재개로 이어졌다. 1955년 사회당의 재통합에 위기를 느낀 자유당과 민주당은 합당을 결의했다. 소위 ‘55년 체제’의 시작이다. 거대 보수 여당 자민당은 일미안보체제를 근간으로 ‘현행 헌법의 자주적 개정’과 ‘국력과 국정에 상응한 자위 군비’의 정비를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우익의 부활은 바로 이런 자민당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리면서 전개되었다.

이하에서는 전후 일본을 규율해온 자민당과 우익의 연계를 야스쿠니신사, 개헌, 그리고 납치 등의 세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군국 일본의 상징으로서 야스쿠니신사는 전전의 영광을 되찾아야 했고, 자위대의 족쇄로 작용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은 패전으로 손상된 자긍심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납치문제의 쟁점화와 해결은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도약대로 자리매김되었다. 최근의 정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1세기 일본의 침로 또한 위 세 가지 쟁점의 향배와 불가분의 관련을 지닌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II. 야스쿠니신사

야스쿠니신사의 정의를 내리면 “근대 이후 일본이 관련된 국내외의 사변·전쟁에서 숨진 천황 측과 일본정부 측의 전몰자(군인과 군속, 일부 민간인)를 ‘현창(顯彰) 승경(崇敬)하기 위해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이다. 현재는 단일의 종교법인으로 신사본청¹⁾에 가맹되어 있지 않으며, 황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1869년 메이지유신의 와중에 죽은 천황 쪽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도쿄 초혼사(招魂社)로 창건되었다가, 1879년 야스쿠니신사로 이름이 바뀌었

-
- 1) 이세(伊勢)신궁을 정점으로 일본 전국의 8만여 신사를 총괄하는 일본 최대의 종교법인으로 1946년 설립되었으며, 소위 ‘종교우익’의 본산이다. 1969년 산하에 설립된 ‘신도정치연맹’은 정치적 압력과 자민당의 외곽 지원을 담당해 왔으며, 그 대응 창구로서 자민당은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간담회’를 조직했다.

다. 야스쿠니신사는 신사 행정을 총괄하던 내무성이 아니라 육군성과 해군성이 공동으로 관리했으며, 대일본제국의 발자취와 더불어 국가 신도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패전은 야스쿠니신사의 운명도 바꿔 놓았다. GHQ는 ‘국가 신도의 해체’와 더불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원칙으로 내걸었고, 이에 따라 야스쿠니신사는 1946년 9월 일개 종교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재출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강화조약의 체결과 일본의 독립은 야스쿠니신사로 하여금 종교 시설의 틀을 깨고 전전의 위상을 복원하는 기운을 자극했다. 이에 관해서는 야스쿠니신사의 국영화와 수상의 공식 참배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1. 야스쿠니신사의 국영화 운동

1952년 8월 1일 야스쿠니신사는 종교법인으로 설립이 공고되어 그동안 국유지였던 경내 일대의 토지를 양도받았다. 야스쿠니 전후사의 시작이었다. 한편 비군사회와 민주화를 내걸며 추진되었던 점령정책의 후퇴, 즉 ‘역코스’와 연동하면서 진행되던 재군비화는 명령을 모시는 야스쿠니의 복귀를 필요로 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야스쿠니신사의 국영화 운동(이하 국영화)으로 나타났고, 그 주체는 ‘일본 유족회’²⁾였다.

일본 유족회는 그 모태를 1947년 11월 전몰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본유족후생연맹’에 두고 있다. 1952년 11월의 제4회 ‘전국 전몰자 유족 대회’에서는 야스쿠니신사에서 거행되는 위령행사 비용을 국가가 부

2) 일본 유족회도 산하에 ‘일본유족정치연맹’이라는 정치단체를 거느리고 국회의원의 입후보와 추천, 그리고 자민당 후보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담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듬해인 1953년 3월 규약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항구 평화를 확립하여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공헌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본 유족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야스쿠니신사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1956년 일본 유족회는 ‘국가 호지(護持)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1962년 4월에는 야스쿠니신사는 국가가 호지하고 각지의 호국신사는 지자체에서 호지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전전의 야스쿠니신사(중앙)-호국신사(지방) 체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야스쿠니신사의 국가 호지에 관한 요강’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야스쿠니신사는 순국 영령을 야스쿠니의 신으로 모시고 그 유덕을 기리며 위령하는 곳으로 정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63년 말부터 일본 유족회를 중심으로 야스쿠니신사의 국가 호지, 즉 국영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개시되었다. 다음 해 4월 말까지 집계된 서명자 수는 668만여 명이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집권 자민당은 1964년 2월 자민당 유가족 의원 총회에서 야스쿠니신사의 국가 호지를 결의했다. 때맞춰 야스쿠니신사 측에서는 총리와 중·참의원 의장에게 국가 호지를 실현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청원했다.

국영화를 향한 정치작업으로 야스쿠니신사의 위상 강화가 연출되었다. 매년 8월 15일 히비야(日比谷) 공회당에서 열리던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1964년에는 야스쿠니신사 경내로 변경된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제20조와의 충돌을 염려하여 신전 앞에 장막을 쳐 비종교적인 의식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지만, 이듬해부터는 중지되었다.

1967년 1월의 중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자민당은 선거공약 중 하나로 ‘야스쿠니신사의 국가 호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선언

했다. 소위 ‘표발’인 일본 유족회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다.

그해 6월 자민당의 유가족 의원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야스쿠니신사 법안을 발표하여 국영화의 수순을 밟고자 했다. 하지만 법안에서는 헌법 20조와 충돌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도적인 색채를 배제하고자 한 탓에 일본 유족회와 신사본청의 반발을 사고 말았다. 결국 법안의 국회 제출은 미루어졌다.

1969년 1월 이세(伊勢)신궁을 참배한 사토 에이사쿠(佐藤英作) 총리는 “야스쿠니 법안을 중요 법안의 하나로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야스쿠니신사의 국영화는 재차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6월 자민당은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 국영화 법안을 제출했다. 제1조에서 “야스쿠니신사는 전몰자와 순국자들의 영령에 대한 국민의 존숭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그 유덕을 생각하고 영령을 위로하며, 영령들의 업적을 기리는 의식, 행사 등을 실시하여 영령들의 위업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에 비해 제2조에서는 “야스쿠니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야스쿠니신사 창건의 유래를 감안하여 그 명칭을 답습한 것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종교단체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헌법 제20조와의 충돌을 회피하고자 했다.

법안의 제출을 계기로 야스쿠니에 관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이 분출했다.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의 정당은 물론이고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를 망라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일었다. 하지만 정작 찬성 쪽의 분위기도 그리 활기를 띠지 못했다. 거두절미하자면 일본 유족회나 신사본청 쪽에서는 야스쿠니의 종교성을 부인하는 제2조가 여전히 불만스러웠기 때문이다. 결과도 마찬가지였으니, 8월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폐안이 되고 말았다.

이듬해인 1970년 4월 야스쿠니 국영화 법안이 재차 국회에 제출되었다. 5월에 들어와 법안의 성립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야스쿠니신사 경내에서 열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역시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폐안되었다.

1971년 1월 세 번째로 야스쿠니 법안이 제출되었다. 5월에 들어와 중의원의 내각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의 제안 이유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회기 만료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1972년 1월 자민당 유가족 의원 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야스쿠니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결의를 했고, 이는 5월의 정기국회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973년 4월에 자민당은 다섯 번째로 야스쿠니 법안의 통과에 매달렸다. 7월에 들어와 중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장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고, 9월 회기 종료가 다가오자 다음 국회에서의 계속 심의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7월부터 일본 일본 유족회와 전우회 등이 자민당 본부에서 법안 성립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던 것이 효과를 발휘한 듯 보였다.

해가 바뀌어 1974년 4월 자민당은 중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야스쿠니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고, 5월 중의원 본회의도 자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참의원에서는 회기 만료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다섯 번째의 시도도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상의 과정에서 신사본청과 더불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생장의 집 [生長の家]’이라는 종교우익이다. 1930년에 창설된 신종교로, 전전부터 천황 숭배의 관념이 강했으며, 전후에도 신사본청과 자민당 우파 정치가의 연계하에 야스쿠니신사의 국가 호지와 원호법(元號法)의 제정³⁾을 비롯해서 각

3) 1979년 쇼와를 원호로 하며 하나의 원호만을 사용한다는 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

종 국가주의적 정치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다. “자민당 우파가 전술상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우익이 외치는” 시스템, 즉 ‘아래로부터의 의사(擬似) 대중운동’을 담당했던 것이다(堀幸雄, 1983 : 224). 최근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이면에서 활발히 활동을 전개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전범의 합사에 관한 경과이다. 점령이 끝나자 전몰자 유족에 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의 시행은 강화조약 발효 이틀 뒤인 1952년 4월 30일이었고, 다음 해 8월에는 은급법이 개정되어 군인은급이 부활되었다. 동시에 전범으로 사형 혹은 옥사한 자를 공무사(公務死)로 인정하고 수형자 본인에 대한 부조와 은급을 부활시켰다.

바로 그 연장선에서 전범의 야스쿠니 합사가 실행되었다. 왜냐하면 합사 결정의 기준 중 가장 유력한 것이 상기 두 법의 원부(原簿)였기 때문이다. 1968년부터 시작된 전범의 합사는 1978년까지 계속되었고, 총 1000명 이상에 달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A급 전범은 후생성의 합사 예정자 명부에는 들어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을 고려하여 신사 측은 때를 보고 있었다. 1978년 신임 궁사(宮司, 주지) 마쓰다이라 나가요시[松平永芳]⁴⁾는 일본이 악의 근원이라는 ‘도

다. 1946년 원호법 제정이 GHQ의 반대로 좌절된 후 우익들에게 원호법은 오랜 염원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운동이 일기 시작하여 1975년 쇼와 천황 재위 50주년을 계기로 차기 천황의 등장을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사본청과 생장의 집 같은 종교우익은 전전에 연원을 두는 ‘기성 우익’을 능가하는 활력을 과시했다.

4) 마쓰다이라라는 화족 집안 출신으로 1978~1992년까지 제6대 주지를 역임했는데, 황국사관의 제창자인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를 평생의 스승으로 받들었다고 한다.

교재판사관'의 배척을 부르짖으며 10월의 합사제에 맞춰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이하 A급 전범 14명의 합사를 은밀히 결행했다.

2.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야스쿠니 법안의 폐기가 결정되고 난 다음인 1974년 7월, 신사본청은 당시 자민당 총재였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에게 법안이 성립된 후 제사와 관련하여 야스쿠니신사의 신도적 전통이 파괴될 우려는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야스쿠니신사의 전몰자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보호를 내세우던 자민당의 행보와 사뭇 배치되는 내용이다. 바로 이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운동은 야스쿠니신사의 국영화가 아니라 전몰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확대, 구체적으로는 영령에 대한 공식 참배로 전환되었다. 총리와 각료들의 공식 참배로 운동의 주안점이 바뀐다면 야스쿠니신사와 신사본청의 종교적인 의구심도 해소된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이 내걸던 최대의 무기인 헌법 20조와의 충돌도 회피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움직임은 1975년 2월 망언 정치가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중의원 내각 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후지오는 야스쿠니 법안을 대신하여 가칭 '전몰자 참배에 관한 법안'을 자민당에 제안했다. 야스쿠니 국영화의 중간단계로서 천황과 국가 기관장, 외교 사절의 공식 참배를 실현시키자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후지오의 시안에는 일본 유족회도 찬성 의사를 표했으나, 사회당과 종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2006년 7월 20일, 마쓰다이라의 A급 전범 합사에 대해 쇼와 천황이 강한 불쾌감을 가졌다는 사실이 측근의 일기에서 밝혀졌다. 물론 이와 비슷한 언급은 다른 측근들의 일기에서도 발견된다.

자민당은 국회 제출을 단념했다. 이것을 계기로 야스쿠니 법안의 입법화, 즉 국영화 시도는 중단되었고, 이후의 활동은 전적으로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 실행으로 집중되었다.

여기서 전후 천황과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경과를 정리해 두자.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공무원은 전몰자 장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해 10월에는 전후 처음으로 예대제(例大祭)⁵⁾가 열렸고, 여기에는 쇼와 천황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참배했다. 이후 천황의 참배는 1975년까지 총 8회 거행되었고, 총리가 봄·가을의 예대제에 참배하는 일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와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을 제외하고 다나카 가쿠에이까지 이어졌다.

1975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는 전후 처음으로 8월 15일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동시에 참배의 성격을 놓고 소위 ‘사적이냐 공적이냐’의 논란이 불거졌다.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는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신사에는 ‘개인 자격’으로,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지⁶⁾에는 ‘총리 자격’으로 참배한 것이다. 내각법제국이 헌법 20조의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견해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고조되자, 정부의 통일 견해로서 공식 참배를 피하는 네 가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직함을 방명록에 기재하지 않으며,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공식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으며, 공물은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등이다.

한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야스쿠니신사는 1978년 도조 히데키를 비

5) 예대제는 각 신사에서 정해진 날에 거행되는 대제를 칭하며, 주요 신사에는 천황의 칙사가 봉물을 전하는데, 야스쿠니신사도 이에 해당한다. 야스쿠니의 경우는 춘계 예대제(4월 21~23일)와 추계 예대제(10월 17~20일)가 각각 열린다.

6) 1959년에 완성된 무명 전몰자 묘지로 야스쿠니신사 인근에 있는 무종교 시설이다.

못한 A급 전범 14명의 야스쿠니 합사를 결행하면서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합리화한다는 입장을 새삼 노골화했다. 이 A급 전범의 합사가 알려지면서 총리의 참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약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1985년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은 관방장관의 사적 자문기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한 간담회’의 결론을 근거로, 위헌이 의심된다는 종래의 정부 견해를 180도 전환하여 공식 참배를 합헌이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 15일 나카소네 총리는 각료를 대동하고 야스쿠니를 공식적으로 참배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강력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총리의 참배는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한일·중일을 위시한 대아시아 관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잃어버린 10년’과 정치상황의 유동화는 야스쿠니 참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를 뒤집고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는 1996년 7월 29일 자신의 생일에 관용차를 타고 ‘내각 총리대신 하시모토 류타로’라 기재하고 참배를 결행했다. 그러자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8월 15일의 참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오부치, 모리 두 총리도 참배하지 않았다.

하지만 ‘괴짜’로 불렸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임기 내내 관철했고, 그 과정에서 야스쿠니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외교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당연히 일본 국내 여론도 참배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도자가 전몰자를 추도하기 위해 언제 참배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기반하는 국내문제로서, 타국이 가타부타 참견할 일이 아니다(2002. 4. 22 사설)”라고 참배를 평가했다. 반면에 『마이니치[毎日]신문』은 “헌법의 정교 분리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군국주의와 결별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우리

의 맹세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2002. 4. 23 사설)”와 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고이즈미 총리의 재임 기간에는 2001년과 2005년의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영토문제 등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판이 격렬했다는 사실도 한몫을 했다.

이제 끝으로 ‘국립추도시설’과 A급 전범의 분사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자.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두 개의 사안은 야스쿠니 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2001년 관방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추도 평화기원을 위한 기념비 등 시설 방향을 생각하는 간담회’가 설치되어 이듬해 국립 무종교의 추도 평화기원의 건설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사한 장병과 공습으로 희생된 민간인, 그리고 외국인도 추도의 대상에 포함되는 무종교의 국립시설로서, 전몰자의 위령과 현창을 목적으로 한 야스쿠니신사와는 경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립추도시설은 우익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지금까지 좌초되고 있는 형국이다. 우익 지식인과 신사본청 등은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은 야스쿠니신사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압력에 굴복해 시설을 만드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배 반대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전쟁 책임과 추도 범위 등이 애매모호하다는 부정적인 느낌의 의견이 만만치 않다. 여론의 양분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이즈미 총리는 국립추도시설의 건립을 위한 그 어떤 전향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A급 전범의 분사도 야스쿠니 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자민당 정치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분사의 착안은 이미 나카소네 내각 때 검토된 바 있다. 1985년 8월 15일의 공식 참배로 안팎의 비난이 일자,

나카소네 총리는 가을 예대제에 참배하는 것을 보류하면서 A급 전범의 분사에 관해 야스쿠니신사와 교섭을 진행했다. 물론 야스쿠니 측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나카소네 총리는 주변국에 대한 배려를 구실로 참배를 중단했던 것이다. 최근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야스쿠니신사도 신사본청도 분사는 ‘신사 제사의 본의’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978년 도쿄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합사를 결행했던 야스쿠니 신사이기에 사실 분사는 역사관의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일 것이다.

참고로 국회에는 초당파 의원 모임으로 ‘같이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 의원 모임[みんなで靖國に参する國會議員の會]’이 야스쿠니 참배의 실현을 위해 일본 유족회나 신사본청과 연계되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 회장은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로 10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가입되어 있다.

Ⅲ. 개헌

일본국헌법 제96조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7년 4월과 5월, 개헌을 위해 필수적인 국민투표법은 자민당의 강행 돌파에 따라 잇달아 중의원·참의원 양원을 통과했고, 시행은 3년 뒤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1947년 제정 이래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일본국헌법은 바야흐로 개헌이나 호헌 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전후 일본에서 개헌과 호헌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핵심적인 쟁점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는 전쟁의 포기를 선언한 제9조의 평가를 놓고 극명하게

드러난다. 개헌에 관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일본국헌법은 패전 후 GHQ의 강압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강압(押し付け)헌법론’과 일본 국민이 스스로 제정하는 헌법이어야 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주헌법제정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제정의 과정에, 후자는 개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동안의 개헌과 관련한 정치권과 우익의 주요 동향을 1990년을 경계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개헌의 범위는 천황의 지위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나, 여기서는 제9조에 집중시켜 논할 것이다.

1. 1980년대까지의 정황

1953년 4월 총선거에서 당시 자유당의 하토야마 이치로 그룹은 헌법개정, 특히 제9조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의석수의 감소로 나타났고, 반대로 사회당은 의석수를 늘였다. 이 시점에서 보수파의 의석이 3분의 2를 넘는 상태였지만, 여당인 자유당의 요시다 시게루 그룹은 개헌을 거론하지 않았다.

1955년 2월의 총선거에서 하토야마 총리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이끌던 일본 민주당은 헌법개정을 공약했고, 사회당은 호헌으로 맞섰다. 민주당이 의석을 대폭 늘렸지만, 보수 전체의 의석수는 여전히 3분의 2를 밑돌았다.

같은 해 7월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파 의원들이 개헌을 목표로 ‘자주헌법기성의원동맹’을 결성했다. 8월에는 미·일 양국 외상 간의 회담에서 진행된 일미안전보장조약(1952년 체결)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가 개

헌 쪽으로 불뚝이 튀었다. 해외 파병과 원정능력을 지닌 재군비와 군사력 강화를 요청한 미국 쪽의 주장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일본이 해외 파병을 수락했다”는 얘기로 와전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보수 측에서는 대등한 일미관계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굳히게 되었다.

11월에는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합당하여 자민당이 탄생하는 ‘보수 합동’이 성사되었고, 초대 총재에는 총리였던 하토야마가 선출되었다. 자민당의 강령 제1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주헌법의 제정을 지향한다고 명기되었다. “1,600억 엔의 거금을 사용하는 경찰예비대는 대체 경찰입니까, 군대입니까? 그것은 군대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하토야마의 발언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1956년 하토야마 내각은 소선거구제의 도입으로 개헌에 필수적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의원은 수정 끝에 통과되었으나 참의원에서 폐안이 되고 말았다.

기시 내각 때인 1957년에는 하토야마의 제창으로 내각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2000년에 설치된 ‘헌법조사회’와는 달리 사회당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소속이 되지 못했고, 사회당에서 이탈한 민주사회당(민사당)도 참가하지 않았다. 1964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에게 다수설인 개헌론과 소수설인 개헌불필요론을 병기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이듬해 폐지). 이로써 헌법의 조문을 직접 개정한다는 ‘명문개헌론’은 기세가 꺾였고, 대신에 헌법의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헌론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자는 ‘해석개헌론’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최종보고서는 그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배경으로는 당시의 여론이 개헌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사회당·공산당을 위시한 호헌파의 반발이 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후 자민당이 3분의 2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도 개헌 열기를 식게 만들었다. 1969년 5월 ‘자주헌법제정회의’가 결성되어 기시 전 총리를 앞장세워 반격을 시도했지만, 정치의 장에서 개헌을 꺼내기가 꺼려지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개헌은 일종의 금기로 굳어져 갔다. 1980년대에 들어가자 자민당 내에서조차 강령에서 개헌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

그러면 과연 우익세력은 어떤 개헌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언급할 것은 1981년 10월에 설립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이다. 국민회의의 모태는 원호법의 실현을 위해 1978년 생장의 집과 신사본청을 주축으로 결성된 ‘원호 법제화 실현 국민회의’인데, 우익 저명 인사와 구 군인 관계자를 중심으로 재결집한 모임이다. 국민회의는 원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중운동 방식을 채택했다. 생장의 집, 신사본청, 승공연합 등의 실행 부대가 나서서 지방의회를 무대로 자위대 지위의 명확화 혹은 개헌을 결의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궐기대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사실 개헌이 국회 통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운동 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전략이다. 이후의 움직임도 바로 이런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

2. 1990년대 이후의 반전

한편 1980년대까지 자민당을 포함한 보수 정치의 제9조 인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수방위론’이다.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이므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1980년의 정부 답변에 따르면, 자위의 목적

을 넘는 해외파병, 유엔군 참가는 위헌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대국화는 전수방위론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치세력의 탄생을 부채질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1990년의 걸프전 발발이다.

총 130억 달러라는 거액을 지원한 일본이 쿠웨이트 정부의 감사 메시지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일약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제9조하에서 일국평화주의에 매몰된 이상한 나라라는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의 나라' 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92년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협력한다는 명분 아래 'PKO협력법'이 제출되어 이듬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PKO 활동을 필두로 자위대는 유엔의 깃발을 앞세우고 각지의 분쟁지역으로 파견되었고, 그런 자위대의 활동상은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즈음부터 제9조를 둘러싼 쟁점은 '자위' 혹은 '집단적 자위권'에서 '국제공헌'으로 바뀌게 된다. 1992년 요미우리신문사는 헌법문제조사회를 만들어 유엔의 평화활동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밑그림을 소개했다(1994년 11월, 최종적인 '요미우리 신문 헌법 개정 시안'을 1면에 게재). 1994년 경제동우회는 자위와 국제공헌을 정한 법률의 제정 혹은 제9조의 수정을 제안했다. 그런데도 개헌 논의는 자민당의 하야(1993)와 같은 정치권의 격동과 경제불황으로 그다지 확산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 쟁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개헌의 방향타를 좌우하는 일대 변화였다. 이미 1994년 북한 핵문제가 터졌으며, 1996년의 일미동맹 강화에 이은 '신가이드라인'의 제정이 그러하다. '아시아·태평양'의 주변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후방지원을 담당하도록 정해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이 제정(1999)됨으로써 일본의 국내법은 정비되었다. 1998년 8월 북한

이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는 사태는 일본이 당면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강조되었다[2001년 11월 ‘불심선(不審船)’ 침몰과 2006년 10월의 핵실험도 마찬가지]. 동시에 개헌을 상징하는 구호로 ‘집단적 자위권’이 재차 복권되기에 이르렀다.

9·11사태,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은 자위대의 금제를 푸는 도약대로 활용되었고,⁷⁾ 이는 제9조의 위상 격하와 개헌 논의의 본격화로 이어졌다. 2000년 1월 처음으로 중의원·참의원 양원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된 것은 개헌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실질적인 신호탄이었다. 그해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에서 납치문제가 사실로 드러나자(후술), 개헌파들은 일본인은 제9조를 내걸어도 타국이 이를 무시하면 일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며 개헌 무드를 증폭시켰다. 11월 중의원의 헌법조사회는 ‘중간보고’를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하듯 자민당은 모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신헌법기초위원회’를 설립했다. 2004년에는 자민당뿐 아니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인 민주당에도 헌법조사회가 결성되어, 개헌에 관한 논의가 주요한 정치의제로 자리매김되어 갔다.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논의의 핵심은 단연 ‘집단적 자위권’으로 수렴된다. 즉, 일본과 미국의 안보 협력관계,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일미동맹의 강화를 배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헌법상으로 용인하려는 개정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제9조는 대미 협조를 저해한다”는 아미티지 미 국무차관의 언명(2004. 7)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

7) 자위대의 대미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2001. 10)과 이라크 부흥의 지원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2003. 7)이 제정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전시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고이즈미 내각에서 2차에 걸쳐 총 10개의 법안이 성립·실시되었다.

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의 존재’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경제단체에서는 게이단렌(經団連)이 “집단적 자위권은 국익과 국제평화의 안정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공공연히 해외 파병을 부추겼다(2005. 1).

2005년 이후 논의는 다음과 같이 연표로 정리하였다.

2005년 4월 : 중·참 양원의 헌법조사회가 헌법개정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8월 : 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회가 신헌법 제1차안을 발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칭하는 등의 내용이 알려짐

9월 : 제44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3분의 2를 획득. 참의원은 3분의 2에 미달

11월 : 자민당의 당 창립 50주년에 맞춰 ‘신헌법초안’을 발표

2006년 9월 : 신임 아베 총리가 소신포명연설에서 하토야마 총리 이후 51년 만에 개헌을 언급

2007년 4월 :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이 중의원을 통과

5월 :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이 참의원을 통과

마지막으로 개헌과 관련한 우익단체의 동향으로 ‘일본회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97년 5월 30일 앞서 말한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⁸⁾이 통합하여 결성된 것이 일본회의이며, 일본 전국을 9개의 구역으로 나눠 47개 도도부현에 지부 혹은 유사조직을 두고 있다(브라질 일본회의도 조직).

8) 주로 신도와 불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신사본청과 그리스도의 막옥[キリストの幕屋]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막옥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기도 하고 새역모 지원자로 활동하기도 했던 종교우익 중 하나이다.

기관지로 『일본의 숨결(日本の息吹)』을 발행하며, 고교판 새 역사교과서인 『신편 일본사』를 펴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회의는 헌법개정, 교육기본법 개정, 야스쿠니 공식 참배의 정착, 부부별성 반대, 보다 좋은 교과서를 어린이에게, 일본회의 주장의 발신 등의 6대 강령을 주창하며 활동한다. 개헌을 포함하여 일본의 우경화를 상징하는 현안들을 ‘아래로부터’ 실현하기 위해 지식인, 정치가, 경제인, 관료출신, 종교인, 우익활동가를 망라하는 최대의 우익단체가 바로 일본회의인 것이다. “국민동원적인 거대조직을 지향(上杉聰)”하는 국민회의의 제3대 회장은 최고재판소 장관을 역임한 미요시 도오루(三好達)이다.

일본회의의 영향력은 다름 아닌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에 기반하고 있다. 간담회의 결성은 일본회의 결성일 하루 전인 1997년 5월 29일 이고, 현 회장은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⁹⁾이며, 248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최대 의원그룹이다(아베 총리는 현재 부간사장). 이 간담회를 등에 업고 일본회의는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1월에는 ‘일본회의 지방의원연맹’을 결성하여 “지역에서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를 추진하여 국가의 기본문제에 진력하며 헌법개정을 지향(홈페이지)”하는 활동을 간담회와 연대해서 추진한다고 한다. 중앙에서는 우익적인 저명인사들의 공세와 정치권을 동원하고 지역에서는 우익단체와 지자체 의원들이 가세함으로써 개헌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9) 히라누마는 일찍이 1970년대 후반부터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했다. 그의 양부는 전시기의 거물 우익 정치가로 총리를 역임했던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이다.

IV. 납치

1. 납치문제의 개요

1980년 1월 『산케이[産経]신문』은 1978년 여름에 발생한 남녀 세 쌍의 실종사건이 외국 정보기관의 납치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1985년 4월에는 일본인을 납치하여 그 이름으로 활동했던 북한의 공작원이 한국에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1988년 1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일으킨 김현희는 자신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여성 이은혜로부터 일본어와 일본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분은 1991년의 북일 교섭에서도 의제에 올랐으나, 북일 양국은 각각 과거청산과 납치 의혹을 최우선으로 다루자는 주장을 교환하는 선에서 그쳤다.

납치문제가 일본열도 전체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97년 2월부터였다. 1977년 1월에 행방불명된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가 북한에 납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3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의회[北朝鮮による拉致被害者家族連絡会](이하 가족회)’를 조직했고, 경시청은 납치 의혹이 있는 사례가 7건에 10명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측은 이 문제에 관한 조사를 북한 쪽에 요청했지만, 1998년 6월 일본인 행방불명자는 찾지 못했다는 회답이 돌아왔을 따름이다.

납치문제는 2002년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3월 11일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의심되던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恵子]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었다. 경시청의 조사를 받던 요도[よど]호 사건 멤버의 전 부인 야오 게이코[八尾恵子]가 “아리모토를 북한으로 납치한 것은 요도호 그룹이 계획 실행했고, 자신도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야오는 3월 12일의 공판에서도 아리모토

의 납치 목적은 납치한 다른 남성과 결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일본인 남성 2명의 납치에도 요도호 멤버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요도호 그룹 관계자들이 납치에 관련되었다는 증언은 이것이 최초였고, 아리모토 케이코의 북한 납치도 확인된 바 없었다. 경시청 공안부는 북한의 납치사건과 요도호 그룹의 관련을 중시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편 야오의 증언을 접한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문제를 제쳐두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납치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까지 매듭을 짓는다는 ‘출구’ 방식에서 정상화 교섭 재개의 전제로 삼는 ‘입구’ 방식으로 임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일본정부의 강경노선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었다. 3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적십자 대변인이 아리모토의 납치에 대해 “우리는 그녀를 유혹하거나 납치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정했다고 전하면서도 “행방불명자의 조사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함으로써 일본과의 교섭 재개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때까지 북한은 “일본이 말하는 행방불명자는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소재 조사를 중지했는데, 이 발언으로 북한이 방침을 바꿔 행방불명자 조사의 재개를 약속한 것이다. 4월 말에 열린 북일적십자회담에서도 납치문제에 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재차 확인되었다.

납치문제의 결정적 전환점은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하면서 만들어졌다. 김 위원장은 회담 석상에서 13명의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했다. ‘평양선언’에서는 납치와 공작선(불심선)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금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표현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10월

15일 13명 중 생존자 5명을 일본으로 보냈다.

납치 피해자 8명의 사망 소식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달구었다. 일본 정부도 생존자 5명은 원래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으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영주 귀국시키는 강정책으로 나왔다. 10월 2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양국 대표들은 아무런 진전 없이 격렬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일본정부는 납치 피해자 가족의 귀국 일정을 확약할 것과 사망한 피해자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요구했다.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는 2003년 8월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초의 ‘6자회담’에서도 이루어졌다. 회담은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북한은 일본에 “납치를 포함한 북일 간의 문제를 평양 선언에 기반하여 해결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과 납치문제를 결부시키려는 일본의 태도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 점에서 북일 간의 직접 교섭과 6자회담이라는 두 개의 틀을 놓고 납치문제를 다루려는 일본정부의 의도와는 기본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북한은 생존자 5명의 영주 귀국으로 말미암아 일본 외무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접촉을 회피했다. 그 대신 북일교섭 담당대사가 2003년 12월 20~21일 북경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早期に救出す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 이하 의원모임] 사무국장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생존자 5명이 북한에 건너와서 가족을 데리고 갈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족회는 이를 거절하고 “납치 문제는 정부의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언해 버렸다.

2004년 2월 9일 일본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환법’을 개정했다. 원래 경제제재는 유엔의 결의나 일본을

포함한 2국 간 협의를 통해 가능했지만, 이 개정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독으로 북한으로의 송금과 무역거래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되는 액수는 연간 40억 엔에 이르며, 북한의 대일 무역은 대외 무역 전체의 약 2%를 차지한다.

외환법 제정 이틀 뒤인 2월 11일부터 3일 동안 평양에서 1년 4개월 만에 열린 북일 교섭에서도 납치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납치피해자 가족의 무조건 귀국을 촉구한 일본을 향해, 북한은 5명의 피해자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약속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또 북한은 사망한 8명의 진상규명 요구도 해결되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열린 제2차 6자회담에서도 납치문제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 여야 당을 막론하고 대북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접촉이 경색되자 재차 비공식 루트가 가동되었다. 4월 1~2일 이틀에 걸쳐 자민당의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일행은 대련에서 북한의 담당관과 비밀 접촉을 가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이원외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는 다시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행방불명자의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약속과 더불어 생존자 5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7월에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던 월북 미군 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족과 재회한 뒤 일본으로 귀국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대북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해 특정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법률을 6월에 제정했다(2006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하여 발동).

이후 8월(11~12일 제1회)과 9월(25~26일, 제2회), 11월(9~14일) 세 차례나 열린 실무자 협의를 통해 새로 제출된 조사보고서와 요코타 메구미 유골의 진위 여부

를 놓고 북일은 충돌을 거듭했다. 특히 유골 감정에 관해서는 일본 측이 가짜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학술지 『네이처』가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06년 2월 4일부터 닷새 동안 북경에서 열린 회담은 물론이고, 2007년 3월 7~8일 6자회담의 합의로 성사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워킹그룹’의 장에서도 양쪽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었다.

한편 2004년 이후 미국의 ‘북한 인권법’ 성립을 비롯하여 유엔에서의 ‘북한 비난 결의안’ 가결(2005. 11) 등과 같이 납치문제는 국제적인 쟁점으로 비화되어 갔다. 그중에서 특기할 것은 일본과 한국의 관련단체들이 연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6년에 들어와 DNA 감정을 통해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이 한국인 납북자 김영남으로 밝혀지면서 가족회와 한국의 납북자 단체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6년 9월 납치문제로 인기를 높여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총리로 취임했다. 2002년 귀국자 5명의 일본 잔류 강행은 아베의 의견이 관철된 것이라는 것이 중평이었기 때문이다. 총리가 되자마자 아베는 납치문제 담당 각료로서 관방장관을 그리고 납치를 전담하는 총리 보좌관을 새로 임명했고,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자신이 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납치문제에 관한 기본방침은 어디까지나 핵과 납치의 동시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납치문제가 불거지고 더디지만 ‘해결’로 나아가고 있는 데도 핵문제로 비롯된 긴장의 고조는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즉 핵과 납치의 포괄적 해결이고, 납치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국교정상화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발상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납치문제는 일본의 보수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좋은 소재

인 셈이며, 경시청에서도 납치 의혹에 관한 수사의 진전을 때때로 공표하며 납치문제의 지속적인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¹⁰⁾ 일본의 거의 모든 우익단체들은 ‘북한 두들기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납치문제로 들끓는 일본 국민의 여론은 적절하게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자극하고 뒷받침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다.

2. 납치문제 관련 단체의 동향

기존의 우익단체를 제외하고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성되어 활동하는 단체는 현재 십수 개에 이른다. 주요한 것만 예시하면, 피해자 단체로는 앞서 언급한 가족회가 있고, 관련 민간단체로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国協議会, 이하 구출모임)’와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이하 조사회)’가 있으며, 여·야당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이 있다. 그 외에 소규모로 개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여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1)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구출모임은 가족회가 결성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전국의 조직을 망라하는 형태로 출범하여 1998년 4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2006년 9월 현재 38개 도부현과 1개의 시에 39개의 조직이 있으며, 산하의 청년조직까지 합치면 전체 40개 조직의 연합체인 셈이다.

핵심 회원은 보수 성향의 한반도 관련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

10)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는 17명이며, 관련 단체에서는 7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다.

장이다. 현재 회장은 사토 가쓰미[佐藤勝巳, 현대코리아연구소장], 상임부회장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현대코리아연구소 주임연구원 역임], 부회장은 후지노 요시아키[藤野義昭]와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등이다.

회장인 사토는 과거 일본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우익으로 전향한 인물이다. 오랫동안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활동에 관여했으나, 자신이 관여한 재일코리안의 ‘복숭’이 실은 ‘지옥’으로 보냈다는 걸 알고 전향을 결심했다고 한다. 1964년부터 일본조선연구소(현재의 현대코리아연구소)¹¹⁾에 관여하여 이듬해부터 1984년까지 사무국장, 이후 소장이 되었으며, 구출모임의 발족 때부터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상임부회장인 니시오카 쓰토무는 현재 도쿄기독교대학 기독교학과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기독교 교파 중 성결교회 계열의 기독교협단(基督聖協團) 소속으로, 납치문제는 물론이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에 대해서도 우익적인 성향을 드러낸 인물이다. 부회장 시마다 요이치는 국제정치 전공자로 북한에 관한 저서를 다수 펴낸 후쿠이[福井] 현립대학 교수이며, 후지노 요시아키는 변호사로서 2004년 12월 부회장에 선임되었으며 ‘북한의 의한 납치 인권문제에 맞서는 법률가 모임[北朝鮮による拉致 人權問題にとりくむ法律家の會, 2003년 3월 설립]’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사토 회장은 사상과 입장에 상관없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 활동가 중에는 우익이나 폭력단, 신흥종교 관계자가 참가하는 사례가 있어 소동을 일으킨 바 있다. 가

11) 현대코리아연구소는 1961년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웃나라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일 한국·조선인 문제 등 각 방면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홈페이지)”고 밝히고 있으며, 이사장인 다마키 모토이[玉城素]도 일본공산당에서 전향한 경험을 가졌다.

령 스미요시카이[住吉會]계 우익단체 ‘일본청년사’의 한 간부[水野孝吉]는 ‘니가타[新潟] 구출모임’의 간부이기도 했고, 이로 말미암아 니가타 구출모임이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또 2002년 10월~2003년 11월에 북한 관련시설 등에 테러를 했던 ‘건국의용군’의 회원도 ‘구마모토[熊本] 구출모임’의 이사였다. 또 구출모임 본부는 2006년 9월 폭력단원을 운동에 참가시켰다는 이유로 ‘구출모임 이바라키[茨城]’의 대표간사를 징계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던 우익의 가세 정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2)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조사회는 2003년 1월 구출모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북한의 납치 가능성을 조사하는 단체로 설립되었다. 분리 이유로서는 ‘특정 실종자’에 관한 조사활동을 우선시하여 정치운동적인 색채를 약화시키며, 실종자가 북한의 납치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진 뒤 초래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대표는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이다. 아라키는 한반도 전문가로서 현재 다쿠쇼쿠[拓殖]대학 해외사정연구소 교수로 있으며, 민사당(1960~1994)에 참여한 뒤 현대코리아연구소 연구부장을 거쳐 다쿠쇼쿠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2000년~2003년 1월까지 구출모임의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납치문제와 민주당 내의 민사당 계파인 민사협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라키가 대표인 ‘전략정보연구소 주식회사’(2004년 4월 설립한 조사회의 싱크탱크)에는 민사당 관계자가 주력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그는 김완섭의 저서 『친일파를 위한 변명』의 역자 중 한 사람이다. 참고로 반공을 기치로 내걸었던 민사당은 1988년 1월 김현희의 증언을 근거로 처음으로 국회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했다.

3)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의원모임은 전신인 ‘북한납치의혹구원 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이 해산된 뒤, 이시바 시게루[石橋茂]를 회장으로 2002년 4월에 발족했다. 전신인 의원연맹은 1997년 2월 가족회와 마찬가지로 요코타 메구미에 관한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결성되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의원이 ‘북일우호 의원연맹’에도 중복 가입했을 정도로 정치적 쟁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의원모임의 개편은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정부와 여론이 강경기조로 선화하는 분기점이나 다름없다. 설립 취의서의 말미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단호히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의연한 자세로 북한을 대하고 가능한 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2004년 12월 의원모임은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는 판정이 나자 “경제제재 이외에 납치 해결의 길은 없다”는 결의문을 내고 고이즈미 총리의 제재 단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으로의 송금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

또 의원모임의 활동과 연계하는 형태로 지자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모임이 속속 결성되었다. 가령 군마(群馬)현의 경우 2004년 6월 자민당 현 의원 43명을 중심으로 ‘북한납치문제해결촉진 의원연맹’이 설립되어 군마현의 구출모임과 연계하여 활동을 개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지역에서 북한 경제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 혹은 요망서를 자민당과 내각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를 보다 조직화하기 위해 2006년 4월에는 ‘납치문제 지방의회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고, 22개의 도부현에 지역의원모임이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

2007년 3월 23일 가족회 결성 10주년을 맞이하여 구출모임과 의원모임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 구출모임과 의원모임은 양식 있는 국민과 제 외국의 친구들과 더불어 모든 피해자를 구출할 때까지 가족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맹세한다”로 끝맺고 있다. 피해자로서 가족회를 앞세우고 민간단체인 구출모임과 정치가 조직인 의원모임이 여론과 정치권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국면이다. 발족 당시 40여 명의 의원에서 급속히 늘어나 2004년 초에는 188명에 달했으며, 현 회장은 전술한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히라누마 다케오이며 아베 전 총리도 그 회원이다.

● 참고문헌

- 堀幸雄(1983), 『戦後の右翼勢力』, 勁草書房.
渡部治(1989), 『日本國憲法改正史』, 日本評論社.
木下半治(1977), 『日本右翼の研究』, 現代評論社.
朴一(2005), 『朝鮮半島を見る眼』, 藤原書店.
上杉聰(2003), 「日本における『宗教右翼』の台頭と『つくる會』, 『日本會議』, 『戦争責任』 39호, 3월.
小川原正道(2006), 「靖國神社問題の過去と現在」, 寺崎修 編著, 『シリーズ 日本
政治 第2巻 近代日本の政治』, 法律文化社.
赤澤史朗(2005), 『靖國神社』, 岩波書店.
田中均・田原總一郎(2005), 『國家と外交』, 講談社.
田中伸尚(2003), 『靖國の戦後史』, 岩波新書.
佐佐木毅他 編(2005), 『戦後史大事典』, 三省堂.
村上重良(1986), 『靖國神社－岩波ブックレット』, 岩波書店.
『昭和史全記録』(1989), 毎日新聞社.
『最新右翼辭典』(2006), 柏書房.

〈관련단체 홈페이지〉

-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國協議會] : www.sukuukai.jp
생장의 집 : www.sni.or.jp
신도정치연맹 : www.sinseiren.org
신사본청 : www.jinjahoncho.or.jp
야스쿠니신사 : www.yasukuni.or.jp
일본 유족회 : www.nippon-izokukai.jp/index2.html
일본회의 : www.nipponkaigi.org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 www.chosa-kai.jp
현대코리아연구소 : www.modern-korea.net

〈납치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

경찰청 관련자료 : www.npa.go.jp/keibi/gaiji1/index.html

수상관저 관련자료 : www.kantei.go.jp/jp/singi/rati/index.html

외무성 관련자료 : www.mofa.go.jp/mofaj/area/n_korea/abd/rachi.html





역사기억을 둘러싼 교과서 전쟁

허동현_경희대학교

I. 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은 계속되는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은 과거사 청산 문제에서 너무도 대조적이다. 침략의 역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참회하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1955년 평화헌법 개정을 당헌으로 내건 자민당이 집권한 후 우익진영의 교과서 공격의 포화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으며, 냉전 붕괴 이후 침략의 과거사를 영광의 역사로 미화하려는 우익과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 움직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우익은 ‘국민주의’의 입장에서 일본 정통 역사학계의 실증적·성찰적 역사연구를 ‘동경재판사관의 마인드 컨트롤’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며 이로부터 해방될 것을 주장하는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일본 근대사 인식을 내세우며 학계의 전통적·정통적 역사해석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하였다.

1993년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가 결성되고 1995년에는 ‘자유주의사

관 연구회'가 등장하였으며, 1997년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로 약칭)'이 결성되었다. '새역모'가 만든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나 검정을 통과한데서 알 수 있듯이, 역사수정주의의 도전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일례로 2005년 1월 새역모의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회장은 “중군위안부, 강제연행, 남경대학살 등 학문적으로 근거 없는 ‘날조’된 사실들이 역사교과서나 공민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오키나와 집단자결 사건에 대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삭제 지시도 2005년 5월 일본군이 주민을 강제로 자결하도록 강요한 집단자결 사건의 실체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사관 연구회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이들 역사수정주의자와 일본정부가 추동(推動)하는 교과서 공격의 초점은 ‘아시아·태평양기(1931~1945)’에 범한 남경대학살·중군위안부·강제연행·집단자결 강요 등과 같은 전쟁범죄와 침략행위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특히 2006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올랐던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재임 중 ‘전후체제로부터 탈피’를 내세우며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했고, ‘새역모’에 가까운 역사관을 견지해 도쿄전범재판을 비판함으로써 우파세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2007년 9월

아베 정권이 물러나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이 들어섰지만, 2006년 12월 15일 이미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의 걸림돌이던 교육기본법과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0년 국민투표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의 우경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역사교과서 등 이데올로기 기구를 통한 국가권력의 역사기억에 대한 신화화와 독점화 기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군국주의 교육을 이끈 천황의 ‘교육칙어’를 대체해 전후 일본 교육에서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며 진리와 평화를 희구하는 인간의 육성”을 기본정신으로 국가주의 교육의 대두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애국심 함양’이란 미명하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개인보다는 공익을 중시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기본법의 개정에 이어 교육 현장과 교사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으며, 2007년 교과서 검정에서 문부과학성이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의 집단자결을 강제한 사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국가권력이 교과서 검정제도를 통해 ‘자율규제’나 ‘자발적 수정’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의 역사기억을 왜곡하고 통제하려는 경향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여기에 더해 교과서에 침략의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는 데 안전판 역할을 해온 1982년에 만들어진 ‘근린제국조항’의 철폐를 ‘새역모’와 ‘교과서개선연락협의회’가 집요하게 요구하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도대체 일본에서는 왜 독일과 달리 역사 왜곡세력의 움직임이 그 관성(momentum)을 잃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냉전 붕괴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동이나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식의 확산 등 1990년대 이래의 우경화 추세에서 찾는 것은 현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보는 격이다. 그 주된 이유는 독일에서 전범세력은 아직도 추적·처벌되고 있지만, 전후 일본에서는 세계를 향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자행한 전범세력이 청산되지 않고 지배세력으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전전(戰前)의 제국 일본에 대한 기억은 자랑스러운 ‘영광’의 역사이지 반성해야 할 역사가 아닌 것이다. 냉전 붕괴 이후 ‘새역모’에 의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일과성(一過性)의 사

건이 아니다. 이는 1955년 평화헌법의 개헌을 당헌으로 내건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침략의 과거사 기술에 불만을 품은 우익진영의 기획에 따라 꾸준히 추동되는 계기적(繼起的) 사건으로 자국사를 신성화함으로써 타국사에 대한 일반적·보편적 시각을 왜곡해 온 메이지 이래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의 전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아울러 왜곡사태의 이면에는 냉전의 해체와 같은 전후 세계질서의 변동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같은 외생적 요소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Ⅱ.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의 전통

메이지유신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전통적으로 교과서를 신성시·절대시하고 그 진리성과 표준성을 믿는 전통이 강했다. 역사교과서도 국가권력의 공교육을 통한 국민 동원과 교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민족 중심주의와 집단주의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특히 문부성은 천황·민족·국가를 하나로 묶은 ‘일본’이란 가치를 절대화하고 이를 손상시키려는 모든 움직임을 억누르는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도 검정제도를 통해 침략의 과거사를 감추는 역사관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에는 여전히 역사교육을 국민교화의 수단으로 보는 전통이 살아 숨쉰다. 후소야 역사교과서도 메이지 이래의 천황 중심 사관과 1930년대 황국사관 같은 초국가적 전체주의를 강제한 패전 이전의 역사교육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패전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은 국가주의 경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맹목적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1872년 프랑스 교육제도에 미국의 교육사상을 가미해 만든

근대적 ‘학제’는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교과서의 자유 발행과 채택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0년 초 입헌정체 수립과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격화되자 일본정부는 1880~1883년간에 운동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92종의 교과서의 사용을 막음으로써 국가 통제하에 교과서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과서 검정제도(1886)와 ‘교육칙어(敎育勅語)’(1890)를 통해 교과서를 통한 국민의 사상통제가 본격화되었다. 교육칙어는 ‘대일본제국헌법(1889)’에 규정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천황대권(天皇大權)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천황에 충성을 강요하는 ‘국민도덕의 최고 경전’으로 추앙됨으로써 국수주의를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였다.

초등 역사교과서는 1903년 국정이 된 이래 패전까지 총 6종의 교과서가 발행되었는데, 그 개정·편찬의 역사는 군국주의 침략사와 맞물려 전개되어 나갔다. 1900년대의 『소학일본역사(小學日本歷史)』는 러일전쟁 개전을 앞두고 국민통합의 선창에, 1910년대의 『심상소학일본역사(尋常小學日本歷史)』는 러일전쟁의 승리와 한국병합의 예찬에, 1920년대의 『심상소학국사』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역행하는 국가주의적 교육정책의 강화에, 1930년대의 『심상소학국사』와 『소학국사심상과용(小學國史尋常科用)』은 각각 만주 침략 이후 황국사관에 따른 ‘국체명징(國體明徵)’의 강조와 중일전쟁에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집단 최면에, 그리고 패전 직전의 『초등과국사(初等科國史)』는 전시 비상체제하에서 학생들에게 광신적 황국사관을 불어넣기에 초점이 두어졌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역사교육은 황국사관에 입각한 초국가주의를 전파하는 나팔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이나 한반도 흥기론 등과 같은 왜곡된 한국사상(韓國史象)을 일본 국민의 의식과 기억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다.

Ⅲ.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세계질서의 변동에 따른 내전과 국제전의 이중주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재벌의 해체와 육·해군성 폐지(1945)를 단행하고, 천황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을 제정(1946)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를 해체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전쟁에 책임이 있는 천황을 포함한 전범세력을 철저히 숙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전의 지배세력이 다시 집권할 여지를 남겼다. 군국주의 청산은 미흡했지만 역사교육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31일에 발표한 ‘수신(修身), 일본 역사와 지리 정지에 관한 건’에 따라 군국주의와 초국가주의에 함몰되어 있던 역사교육이 중단되고 인간의 존엄, 기회의 균등 및 정치·경제·사회 제 방면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초등『국가의 흐름(くにのあゆみ)』, 중등『일본의 역사(日本の歴史)』, 그리고 사범학교용『일본역사』를 발간했다. 이 점은 다음 인용문에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패하였습니다. 국민은 오랜 전쟁에 커다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군부가 국민들을 억압하여 무리한 전쟁을 한 것이 이 같은 불행을 야기한 것입니다. 맥아더 원수의 지휘 아래 연합군은 즉시 일본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점령은 일본의 질서를 세우고 군부를 타도하여 군국주의 사상을 완전히 없애서 국민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민주주의를 통하여 일본을 재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을 비롯해 각종 제도의 개혁과 또 오랫동안 일본을 지배해 온 재벌을 해체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도모하였고, 또 신앙의 자유를 주고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이 연합군 사령부의 점령목적에 부응하여 평화로운 일본을 회복하는 데 힘을 북돋우어 줍시다.

『국가의 흐름』은 1947년 검정제가 채택되면서 사라졌지만, 1948년 ‘교과용 도서위원회’의 발족 이후 1955년까지 일본교직원조합이 지지하는 연구자와 지식인들이 잇달아 민주적인 교과서를 출간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역사교과서들이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의 이시아마 히사오[石山久男] 사무국장에 따르면 패전 직후 일본 교과서에는 비록 그 내용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일본군이 난징[南京]에서 자행했던 잔학행위에 대한 기술 등이 있었다. 당시의 한 『고교 일본사』는 “난징 폭행사건을 비롯한 당시 일본 군대의 약탈, 폭행은 세계적인 악명을 남겼다”고 기록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전 황국사관이 붙여넣은 역사의 기억에 속박되어 있었다. 1950년대에도 “3종의 신기(神器)는 무엇무엇이다”라고 칠판에 쓰면서 신대(神代)의 일을 설명하는 사회과 수업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신규 세대 간에 역사상(歷史像)의 간격이 존재했다고 한다.

새로운 교육을 통해 이러한 간격을 극복할 새로운 시민계층이 성장하기 전 중국이 공산화되고 6·25전쟁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1955년 평화헌법 개정을 당헌으로 내건 자민당이 집권한 후 힘을 얻은 우익진영의 교과서 공격의 포화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civil war)’이 시작되었다. 자민당은 미국의 묵인 아래 자위대라는 미명하에 재무장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가르치는 역사교육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전범세력과 그 뿌리를 같이하는 전후의 집권세력은 마치 형상기억합금처럼 미군정이 구부리기 전 일본의 원형, 즉 전전의 군국주의 체제로 돌아가려는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이다.

보수정당인 자민당이 집권하자 재군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우익진영은 교과서의 ‘침략’ 기술을 문제삼는 ‘1차 교과서 공격’에

착수했다. 당시 문부성은 일본교직원조합, 진보적 연구자와 지식인을 공격하고 모든 역사교과서를 불합격 처리하면서 ‘교과서 조사관 제도’를 만들어 검정을 강화함으로써 이후 교과서에서 일본의 가해 사실 등에 대한 기술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한 반격의 포화는 2001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도쿄교육대 교수가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한 문부성 검정이 부당하다며 검정 불합격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두 차례의 소송을 1965년과 1967년 제기하였으며, 이 ‘이에나가 소송’을 계기로 성장하기 시작한 일본의 시민사회가 역사의 기억을 왜곡하려는 왜곡세력들에 대한 저항에 나섰다. 이때 교사와 학부모 · 시민 · 연구자 · 문화인 · 출판노조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역사왜곡 시정 등을 위한 반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가 ‘검정 불합격 처분 취소’라는 승소 판결⁽¹⁹⁷⁰⁾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권 자민당 등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며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모색하는 우익세력에 대한 이에나가라는 한 지식인의 용기 있는 저항은 성장하는 시민세력의 힘을 결집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나가 소송과 1972년 중 · 일 국교 회복의 결과 난징학살사건 등 일본의 가해사실을 부각시킨 기술이 중 · 고교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자 이에 위기를 느낀 왜곡세력들은 재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우익의 ‘2차 교과서 공격’은 이에 동조한 문부성이 ‘침략’을 ‘진출’로 고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982년의 교과서 파동이라는 외교문제로 비화하였다. 이에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은 한국과 중국 등 침략의 기억을 공유한 이웃나라들과의 국제전으로 비화하였으며, 이 전쟁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한 일본정부가 ‘근린제국 조항’이라는 정치 · 외교적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일단 ‘종식’되었

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기억을 왜곡하려는 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965~1997년까지 32년간 3차에 걸친 교과서 소송의 역사적 의의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일본에서 하부의 힘을 통해 전전(戰前)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데 있다. 근대 이후 일본은 천황제 국가로 상징되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군국주의 세력을 내부의 동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채택하고 군부와 재벌을 해체해 군국주의의 독아(毒牙)를 뽑은 것은 미군정이란 외세의 힘이었다. 그러나 이어나가의 교과서 소송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우경화에 맞선 역사적 사건으로 냉전 붕괴 이후 더욱 심해지는 일본의 과거회귀 세력에 맞서 하부에서 제기한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시민사회를 이루려는 역사 발전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전전에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와 군국주의에 동원되어 무모한 침략전쟁에 희생되었던 일본의 시민사회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공존의 희망을 품게 해준 데 있다. 일본과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로서 공통의 역사기억을 갖고 있다. 이어나가의 교과서 소송은 이러한 일본과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군국주의 시절 일본에 대해 품고 있는 공통의 역사기억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아시아지역 공동체로 가는 강물에 놓기 시작한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이라고 볼 수 있다.

1982년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내전과 국제전이 병행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들어 정치권에서 견제세력이 사라지자 왜곡세력들의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1993)’와 ‘자유주의사관 연구회(1995)’ 발족을 계

기로 국내외에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전쟁을 도발하였다. 1997년 우익진영은 ‘종군위안부’ 기술 삭제에 구실로 세워진 ‘새역모’가 만든 후소샤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3차 교과서 공격’을 펼쳤다. 2005년 두 번째로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교과서는 ‘4차 교과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1982년과 1986년의 역사교과서 왜곡 기도가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좌절되고 2001년 후소샤 교과서가 일본 시민단체의 저지운동의 결과 극히 저조한 채택률을 보였으며, 2005년에도 한·일 두 나라 시민사회의 연대와 한·중 두 나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항의가 지속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내전을 넘어선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역사기억을 둘러싼 전쟁은 2007년 4월 미국 의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9월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 철회를 요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나선 오키나와 주민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일본의 역사왜곡을 둘러싸고 국제전과 내전의 포연이 가득한 이유는 침략의 과거사를 영광의 역사로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결과할 미래상에 대해 일본과 세계의 시민사회가 품는 우려 때문이다.

IV. 과거사 분식의 주역 우익

패전 이전 일본의 군국주의가 여성용 속옷 브래지어라면, 일본의 우익은 그 속에 든 찌그러뜨려도 원형으로 돌아가는 형상기억합금이며, 천황은 호크라고 할 수 있다. 침략의 과거사를 성찰하지 않고 영광의 기억으로 분식하려는 일본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경화 현상을 설명할 때 종종 드는 비유

이다.

군국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군사력을 통한 대외적 발전을 중시하여,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생활에서 최상위에 두고 정치·문화·교육 등 모든 생활 영역을 이에 전면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사상과 행동양식”이다. 1889년에 만든 ‘대일본제국헌법’ 제1조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이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이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이를 지킬 국민 저항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이미 군국주의는 싹트고 있었다.

대만침략(1874), 윤요호사건(1875), 청일전쟁(1894), 의화단 봉기 진압(1900), 러일전쟁(1904), 제1차 세계대전시 대독 선전포고(1914), 러시아혁명에 간섭한 시베리아 침략(1918),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소련과 충돌한 모몬한 사건(1939), 그리고 태평양전쟁(1941) 등 한 세기 전 이웃나라를 상대로 계속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일본 이외에는 없다. 그 죄값으로 맞은 원자폭탄 두 발에 군국주의 일본은 미국에 무릎을 꿇었다. 침략전쟁의 두 주역 군부와 재벌이 해체되고(1945), 천황은 살아 있는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앉았으며,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이 만들어졌다(1946).

전후 미국은 일본인들의 가슴을 옥죄고 있던 브래지어, 즉 군국주의의 제 장치를 해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선물을 일본 시민에게 주었다가 포장도 뜯기 전에 다시 뺏아갔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그때 이미 거꾸로 돌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를 해체하면서, 전쟁에 책임이 있는 천황을 포함한 전범세력을 철저히 숙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전의 지배세력이 다시 집권할 여지를 남겼다. 미국의 애초 일본 점령정책은 군정을 통한 직접 지배였지만, 진주 직후 천황을 포함한 일본의 기존 통치기구를 통한 간접지배로 정책을 바꾸었다. 점령 초기 미국은 천황

을 축으로 삼아 일본을 보수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로 유지해 나가기를 원했지만, 일본 국민들이 이러한 지배질서 온존정책에 저항할 경우 “일본 국민 자신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정세의 변화, 1947년 중국 국민당이 공산주의자에게 그 기반을 잠식당하면서 소위 ‘역코스(reverse course)’로 알려진 점령정책의 전환이 있었을 뿐이다.

1948년 재벌기업의 자회사 폐지계획이 축소되었으며, 극동군사재판은 침략전쟁의 주역 대다수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1949년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쫓겨가고 1950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자, 전범자는 죄값도 치르지 않고 정계에 복귀하였다. 이들은 1951년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미국의 전략체제 속에 일본을 종속시키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는 대가로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립을 얻어내었다. 반공의 이름으로 전범세력과 타협한 미국은 군국주의라는 때묻은 브래지어를 다시 일본 시민들에게 채웠다.

천황이라는 호크와 침략전쟁의 주역인 형상기억합금은 그대로 남았다. 1954년 미일 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방위청이 세워지고 자위대라는 미명하에 다시 군대가 들어섰으며, 이듬해에는 평화헌법 개정을 당헌으로 내건 자민당이 집권하였다. 전후 집권세력의 뿌리는 군국주의 전범세력으로 우익이다. 이들 우익은 형상기억합금마냥 미군정에서 구부리기 이전 군국주의 시절로 되돌아가려 했으며, 1991년 냉전의 해체는 그 복원력에 탄력을 더해 주었다.

침략의 과거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 전범세력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쟁도 벌일 수 있는 ‘보통국가’ 만들기, 일장기 달기와 기미가요(일본 국가) 부르기의 의무화나 ‘애국심’ 교육 강화를 통한 전체주의 되살

리기,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작금의 북한 선제 공격론은 모두 일본 우익이 벌이는 원형 찾기 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처럼 지배 엘리트가 철저한 역사적 성찰을 하기는커녕 원폭을 핑계로 마치 전쟁의 피해국인양 침략의 역사에 분철을 하는 일본의 역사 시계는 아직도 뒤로만 가려 한다.

V.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1. 균형감각이 결여된 자민족 우월주의

2001년에 이어 2005년에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여전히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일그러지고 비틀린 서술이 넘친다. 첫째, 이 책은 유사 이래 일본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책갈피 이곳저곳에서 일본의 독자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한국의 종속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치졸함이 묻어난다. 예컨대 한국은 고대에 임나일본부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직접 지배를 받거나, 역대왕조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복속국이었지만, 일본은 중국의 천자와 어깨를 겨루는 천황이 다스리는 독립국이었으니 일본이 한 수 위라는 식이다. 이 점은 아래 인용문에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열도의 사람들은 원래 귀중한 철 자원을 구하여 반도 남부와 깊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마토 조정은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출병하였다. 이때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加羅]라는 곳에 거점을 두었다고 생각된다. 야마토 조정의 군세는 백제를 도와 고구려와 격렬하게 싸웠다. 고구려 광개토왕(好太王) 비문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고구

러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했지만, 백제와 임나를 거점으로 한 야마토 조정의 군세의 저항에 부딪혀, 반도 남부의 정복은 이루지 못하였다. …… 신라는 야마토 조정의 거점이 두어진 임나도 위협하게 되었다. 562년 드디어 임나는 신라에게 멸망되고, 야마토 조정은 조선반도에 있던 발판을 잃었다. ……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수나라의 출현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에게 큰 위협이었다. 조선반도의 백제, 고구려, 신라는 수나라에 조공하였다. 일본도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까, 태도를 강요받게 되었다. …… 쇼토쿠 태자는 수나라와 대등한 외교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국내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 수나라의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는 “일출처(日出處)의 천자가 일몰처(日沒處)의 천자에게 서(書)를 보낸다. 무예(無枕)하신가?”라고 쓰여 있었다. 태자는 편지의 글귀에서 대등한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수나라에게 결코 복속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에 대한 서술과 달리 서양 특히 미국과 영국에 대해 강한 국력과 앞선 문화를 가진 따라 배워야 할 문명국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데에서 서양에 대한 열등의식도 배어 나온다. 이 책은 일관되게 “일본과 서양은 있다”와 “한국과 동양은 없다”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역사서술을 함으로써 한국이 독자 문화 생산능력과 자치능력이 결여된 이질적이며 마땅히 멸시해야 할 존재라는 부정적 관념을 갖게 한다. 이 점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난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청조)은 구미열강의 무력에 의한 협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중국의 복속국이었던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아편 전쟁에 충격을 받은 것은 중국보다 오히려 일본이었다. 중국에는 과거부터 자국의 문명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사상이 있었고, 이탈리아 등은 세계 끝의 야만민족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서양문명에서 배울 자제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 청조는 차츰 열강에 침식되었고, 영토 보전도 위태롭게 되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에도시대를 통

해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무사의 책임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열강의 군사적 협위에 민감히 반응했다. 특히 사쓰마와 조슈 2개의 유력한 번이 막부 말에 구미제국(諸國)과 전쟁을 한 결과, 구미와 일본의 힘 차이를 통절하게 인식했고, 서양문명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 메이지유신으로 신분제도는 폐지되었고, 사민평등의 사회가 실현되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공적으로 인정되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무사의 특권은 사라졌고, 무사신분도 소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의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철저한 것이었다. 메이지유신은 유럽의 혁명, 특히 프랑스혁명에서 시민이 폭력으로 귀족의 권력을 타도한 혁명과는 다르다. 에도시대를 통해 무사는 존경받고, 조닝(町人)이 무사를 쓰러뜨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무사신분을 폐지한 것은 바로 무사신분의 사람들이 구성한 메이지 신정부였다. 이것에 대해 어떤 프랑스인 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일본의 특권계급이었던 무사는 다른 계급에게 쓰러진 적이 없었다. 외국의 압력 앞에서 스스로 혁명을 추진하였고, 그 때문에 스스로 소멸되는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혁명이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을 쓰러뜨린다고 하는 보통의 미의 혁명은 아니었다. 무사들의 바람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힘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모리스 팡케, 『자사(自死)의 일본사』에서 일부 요약). 메이지유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한 무사들의 자기희생에 따른 실현이었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혁명이었다.

나아가 이 책은 “유럽인도 몽골인을 두려워하였다. …… 2회 모두 원군은 후에 ‘가미카제(신평)’라 불리는 폭풍우에 시달리며 패퇴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독립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유럽을 떨게 한 몽골조차도 일본을 점령하지 못했으며, “근대국가로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색인종의 나라 일본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 대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이겼다”면서 유색인종 국가로는 유일무이하게 백인종 국가인 러시아와 겨뤘던 열강의 대열에 들어간 강대국이니 자긍심을 가지라고 속삭인다. 또 일본

은 현존 목조건축으로 가장 오래된 호류지[法隆寺], 가장 큰 목조건축과 부처인 도다이지[東大寺]의 다이부쓰덴[大佛殿]과 다이부쓰[大佛], 인구 100만 명의 18세기 초 세계 최대의 도시 에도[東京], 그리고 고히도 모방한 ‘우키요에[浮世繪]’라는 화풍을 뿜낼 수 있지만, 한국은 중국의 앞선 문물을 일본에 전해 주는 다리 역할만 했지 이렇다 할 문화가 없다는 서술을 산견할 수 있다.

결으로 이 책은 일본 인근의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더불어 살 대상이 아니라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거나 존중할 만한 것이 없는 열등한 존재로 묘사한다. 서양을 제외하고 더불어 살기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대목은 메이지 초 일본에 왔다 조난당한 터키 군함의 생존자를 구조한 일과 1985년 이란·이라크 전쟁 때 터키가 테헤란 공항에 비행기를 보내 일본인의 귀환을 도운 일을 대응시켜 ‘은혜 갚기’라는 표현으로 소개한 것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1985년(쇼와 60) 3월,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있던 때의 이야기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48시간의 유예 후에 이란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무차별로 공격하라는 지령을 냈다. 즉시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국민을 돕기 위해 구원 비행기를 보냈지만, 일본정부의 대응은 늦어, 일본기업에서 일하는 일본인과 그 가족이 이란에 남게 되고 말았다. 그들은 이란의 테헤란 공항에서 귀국의 수단도 없이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다. 타임 리밋의 1시간 15분 전, 2대의 비행기가 공항에 내려섰다. 터키에서 일본인 구출을 위해 보낸 구원 비행기였다. 터키 비행기는 일본인 215명을 태우고 나리타[成田] 공항으로 향하였다. 왜 터키는 일본인을 구해 주었는가? 전 주일(駐日) 터키 대사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들은 일본인이 에루토루루호의 조난 사고 때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 이야기는 실려 있고, 터키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란에 빠진 일본인을 돕는 것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앗, 터키 항공기다! 일본의 여러분! 우리들

이 당신들을 일본까지 모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을 자랑하고 그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독자와 종속, 우월과 열등, 문명과 야만, 진보와 정체, 우군과 적군이라는 균형감각이 결여된 도식적 이항대립의 수사법을 남용하고 있다.

2. 침략의 과거사 부정과 전체주의 찬양

첫째, 이 책은 전쟁을 모든 문제 해결의 수단이자, 국력 향상의 지름길로 예찬한다. 왜냐하면 군대 보유와 전쟁을 합법화해 주는 개헌을 꿈꾸며, 일본 시민들이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전쟁을 혐오하지 않도록 침략의 과거사를 자랑스러운 영광의 역사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 제국의 복원을 위해 목숨을 바칠 군인으로 일본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교과서에 거짓을 적는 것이다. 예컨대 왜구가 일본인과 조선인의 연합세력인 것처럼 서술하여 일본사의 영광에 배치되는 해적행위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한반도가 적대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자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한반도 흥기론’을 되풀이하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같은 명백한 침략전쟁을 방어전쟁으로 호도한다. 이 점은 아래에 여실히 나타난다.

14세기 후반에 중국에서는 한민족의 반란으로 원이 북방으로 쫓겨가고, 명이 건국되었다. 명은 일본 왜구의 단속을 요구하였다. 왜구란 이즈음 조선반도와 중국 연안에 출몰하던 해적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 동아시아 지도를 보자. 일본은 유라시아대륙으로는 작고, 바다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 이 일본을 향해

대륙에서 하나의 팔처럼 조선반도가 돌출해 있다. 양국의 이러한 지리적 관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 과거, 조선반도는 중국의 문명을 일본에 전해 주는 도로였다. 그러나 조선반도 전체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면, 일본의 독립은 위협해진다. 일본은 중국과 조선반도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일본이 고대 율령 국가를 형성한 것도 동아시아 가운데 자립할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가마쿠라 시대에, 원구의 거점이 된 것도 조선반도였다. 이때 공포의 기억은 일본인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

둘째, 일본은 한국 근대화의 옹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침략자였다. 그러나 정한론과 운요호사건의 침략성과 식민지 지배의 약탈성을 은폐하고 한국의 근대화를 도운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한다. 또한 군대 위안부의 존재를 기술하지 않거나 징병·징용의 강제성과 관동대 지진 때의 학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범죄에 눈감는 것도 여전하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침략자 노릇을 한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이 책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 책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쟁을 한 적은 있어도 침략전쟁은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심지어 러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은 러시아나 미국 같은 백인종 제국주의에 맞서 황인종의 공동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쟁이자,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는 복음이었다는 식이다. 이 점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난다.

러일전쟁 후,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대국이 되었다. 필리핀을 영유한 미국의 극동정책의 경쟁상대는 일본이 되었다. 한편 일미 간에는 일러전쟁 직후부터 인종차별 문제가 일어났다. 미국의 서부 제주(諸州),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면으로 우수한 일본인 이민이 백인 노동

자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일본인을 배척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 1941년 12월 8일, 일본 해군은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기지를 공습하여 미국 태평양함대에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주었다. 이는 태평양 제해권을 획득하여 장래,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으로 석유 등의 물자를 수송하는 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같은 날 일본 육군은 말레이시아 반도에 상륙하여 영국군을 격파하면서 싱가포르를 목표로 진격했다. 일본은 미영에 선전 포고하였고, 이 전쟁은 ‘자존자위(自存自衛)’를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 일본의 모든 전투의 승리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사람들에게 독립의 꿈과 용기를 심어 주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군의 파죽지세는 현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일본군의 포로가 된 영국군 인도인 병사 가운데 인도 국민군이 결성되고, 일본군과 협력하여 인도로 진격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도 일본군의 지도로 군대가 만들어졌다. …… 일본군의 병사 중에는 현지에 남아 독립전쟁에 참가한 사람도 있었다. 일본의 남방 진출은 원래 일본의 ‘자존자위’를 위해서였지만, 아시아제국이 독립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독일·이탈리아·소련의 파시즘을 전체주의라고 비판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성찰은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는다. 나치와 스탈린의 학살은 지적하지만, 일본이 저지른 남경학살이나 군대 위안부와 같은 만행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쿄재판에서 전범자로 처벌된 이들과 전쟁에 책임이 있는 쇼와 천황을 국민과 함께한 애국자로 미화하거나, 미국의 원폭 투하와 소련의 난민 박해를 과장함으로써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한다.

도쿄재판(국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전범으로서 재판에 회부된 전쟁 중 지도자들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수상 이하 7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재판에서 피고는 ‘평화에 대한 죄’를 언도받았다. 이

는 자위전쟁이 아닌 전쟁을 개시한 것을 죄로 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죄로 국가의 지도자를 벌한 것은 그때까지의 국제법 역사에는 없었다. 도쿄 재판에서 단 1명의 국제법 전문가였던 인도의 팔 판사는 이 재판을 국제법상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 피고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 종전 직후, 천황과 처음으로 회견한 맥아더는 천황이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천황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국민이 전쟁수행에서 행한 모든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당신이 대표하는 제국의 결정에 맡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였다. 맥아더는 “나는 커다란 감동에 흔들렸다. 죽음까지 동반하는 정도의 책임, 명백하게 천황에게 돌아가지 않을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 이 용기에 찬 태도는 나의 골수까지 움직였다.”(『맥아더 회상기』에서 발췌) 패전 후 천황은 일본 각지를 순행하고 부흥에 힘쓰는 사람들과 친하게 이야기하며 격려했다. 격동하는 쇼와라는 시대를 일관하여 국민과 함께 걸어온 생애였다. ……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미국이 도쿄 대공습을 비롯해 다수의 도시에 무차별폭격을 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다. 또 소련은 일소중립조약을 파기하고 만주에 침입하였고, 일본 민간인에 대한 약탈, 폭행, 살해를 거듭하였다. 그래서 일본병 포로를 포함한 약 60만의 일본인을 시베리아로 연행해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시키고 약 10%를 죽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자궁과잉과 성찰결여로 요약된다. 진정한 자궁은 과오에 대한 성찰이 동반할 때 가능한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자화자찬은 이웃의 존중과 인정을 얻어낼 수 없는 법이다. 성찰이 결여된 과거사 학습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미래를 잘못된 길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그 악영향이 인접국과 세계에도 미친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국민국가의 국민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매체로서 그 수록 내용 여하에 따라 국민 의식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강조하고 타자·타민족과 더불어 살기

를 전파하는 교과서와, 국가와 민족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고 침략의 과거사를 영광의 민족사로 미화하는 교과서가 결과할 미래상은 판연히 다를 것이다.

성찰이 결여된 과거사 학습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미래를 잘못된 길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그 악영향이 인접국과 세계에도 미치기 때문에 역사왜곡 문제는 그 나라의 지성이나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과 연대를 꾀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숙제이다. 이제 역사교과서 등 이데올로기 기구를 통한 우익과 국가권력의 역사기억에 대한 신화화와 독점화 기도를 막는 것은 일본 내 왜곡세력과 시민단체 사이의 싸움인 ‘내전’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국제전’이라는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대 이후 일본은 천황제 국가로 상징되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군국주의 세력을 내부의 동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채택하고 군부와 재벌을 해체해 군국주의의 이빨과 발톱을 뽑은 것은 미군정이란 외세의 힘이였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수정되면서 전전의 지배세력의 후예 자민당이 집권하고 자위대도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침략의 과거사를 분식하려는 왜곡세력의 교과서 공격도 시작되었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미국이라는 바깥의 힘이 사라지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도 벌일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길을 가려는 일본의

주류집단은 전쟁을 혐오하는 일본 시민의 역사기억을 조작해 전쟁에 대한 혐오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교과서의 침략의 과거사 기술 내용을 왜곡하려 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통 역사학계의 침략전쟁에 대한 성찰적 연구를 ‘국민주의’의 입장에서 공격하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으며, 교과서에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한 침략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 준거가 된 ‘근린제국조항’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공세를 막는 관건이다. 특히 2006년 12월 국가주의 교육의 대두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고, 침략의 역사를 성찰적으로 기술하는 데 준거가 된 ‘근린제국조항’에 대한 우익의 철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국가권력이 교과서 검정제도를 통해 ‘지울규제’나 ‘자발적 수정’이라는 미명하에 역사기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일본 교과서에 침략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 내용은 점점 더 이를 은폐하는 쪽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왜 우익과 일본의 국가권력은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자학’이라고 매도하면서 역사의 기억에 분침을 하려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한 세력의 적자(嫡子)로서 제국 일본의 옛 판도와 영화를 되찾고 싶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60년 전 제국 일본의 꿈을 무산시킨 미국은 이제 그들의 재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늘 일본 사회의 역코스는 그 관성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만든 후소사관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해 일부 학교에서 채택되었으며, 다른 검정 교과서에서 침략행위에 대한 기술의 수위도 후퇴하였다. 또한 최근 각급 학교에서 일장기(日の丸) 제양과 기미가요(君が代) 제창의 강제, 평화헌법 개헌 기도, 그리고 총리의 야스쿠니신

사 참배 등 전전(戰前)으로 돌아가려는 극우세력에 맞서 타자·타민족과 더불어 살기를 꿈꾸는 시민사회 사이에 내전이 한창이다. 이러한 과거 회귀에 제동을 거는 힘은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공통의 역사기억을 갖는 일본 시민사회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에서 나온다.

지금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을 계승한 다카시마[高嶋] 교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교과서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거나, 평화학습을 위한 전쟁 유적 보존에 노력하는 전쟁유적보존전국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처럼 각성된 개별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연대만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국의 지배를 깰 유일한 희망이자 무기이다. 이미 한·일 두 나라 시민사회는 2001년과 2005년 역사기억을 둘러싸고 국제전과 내전이 벌어졌을 때 역사왜곡 세력에 맞서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경험이 있다. 두 차례에 걸쳐 후소야 교과서 채택을 저지한 일본 풀뿌리 시민사회의 저력을 보며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에 희망을 품는다.

끝으로 남의 잘못을 나무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결함을 살펴야 하는 법이다. 반면교사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싸우는 일본 시민사회 내부 양심세력들의 고투를 보면서 우리도 국사교과서를 반성적·비판적 입장에서 성찰해야만 함을 절감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타자와의 공존을 지향한다면, 지난 고난의 역사에서 배태된 저항민족주의에서 기인하는 배타성과 우월의식 같은 우리 안의 특수를 어떻게 남의 눈을 감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 엮음, 김석근 옮김(2001), 『철저비판 일본 우익의 역사관과 이데올로기』, 바다출판사.
- 김성보(2002), 「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비교」,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 편,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 김유경(2002),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의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비평』 59.
- 박길순(2001), 「일본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사 관련 내용의 사학사적 검토—국정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사연구』 16.
- 박수철(2006), 「일본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논리와 천황관」, 『역사학연구』 26.
- 박찬승(2005),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1910년 이후) 서술과 역사관 분석: 후소사판 교과서의 ‘전쟁’·‘식민지’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9.
- 신주백(2004),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역사인식—아시아·태평양 전쟁관, 인간관, 미래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7.
- 유영렬(2002), 「일본 우익교과서의 한국사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 유용태(2006), 「일본 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인식: 탈아관념의 지속과 변화」, 『역사교육』 98.
- 윤건차(1990), 정도영 역, 『현대일본의 역사인식』, 한길사.
- 윤세철(1983), 「일본의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역사교육』 34.
- 이성시(2002), 「한·일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을 둘러싸고—『새역사교과서』와 국정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억과 역사의 투쟁(당대비평 특별호)』, 삼인.
- 이신철(2007), 「일본의 우경화 노선 강화와 한·일 역사논쟁: 아베정권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40.
- 이원순·정재정 편(2002), 『일본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비판과 제언』, 동방미디어.
- 이찬희(2001), 「일본사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歷史教育論集—毅岩宋春永

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26.

이충호(2004),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체제의 변화—자유발행제에서 검인정제도가 지(明治初~現在)」, 『역사교육논집』 32.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편(2002),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역사비평사.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편(2003), 『글로벌화와 인권·교과서』, 역사비평사.

정재정(200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韓國史觀의 특징—扶桑社 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사연구』 16.

정재정(2002),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그 전망」, 『한국사연구』 116.

정재정(2003),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한국사관련 서술의 변화—동경서적 간행 신규 교과서의 대비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69.

조명철(2000), 「일본의 황국사관」, 『한국사시민강좌』 27.

지수걸(2002), 「'민족'과 '근대'의 이중주—'역사 교과서' 비판: 내셔널 히스토리의 해체를 향하여」,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하중문(200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와 그 의도—후소샤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1.

하중문(2001),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바로 보기」, 『한국근현대사연구』 18.

하중문(2005), 「일본의 우경화 정세와 우익 교과서 문제」, 고구려연구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제3차 국내학술회의, 『동아시아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한철호(2004),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근대 관련 내용 분석—『새역사교과서』(扶桑社)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40.

한철호(2005),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근대사 서술과 역사인식」, 『한국사연구』 129.

함동주(2003),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내셔널리즘과 타자 인식」, 『일본역사연구』 17.

허동현(2001),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一 管見—'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경기사학』 5.

허동현(2005),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후소샤 版) 문제의 배경과 특징: 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 『한국사연구』 129.

허동현(2006),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와 교과서 재판의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 家永三郎(1963), 「戰後の歴史教育」, 『(岩波講座)日本歴史』22, 岩波書店.
- 君島和彦(2005),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최근 일본의 정황」, 『역사교육』93.
- 浪本勝年(2001), 「日本 現行 教科書制度의 諸問題－검정과 채택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독립운동사연구』16.
- 松島榮一(1963), 「歴史教育の歴史」, 『(岩波講座)日本歴史』22, 岩波書店.
- 岩崎稔(2005), 「歴史修正主義：1990年代以後の位相」, 倉澤愛子 等編, 『なぜ, いま アジア・太平洋戦争か：(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1, 岩波書店.
- 歴史學研究會 編(2004), 『歴史教科書をめぐる日韓對話：日韓合同歴史研究シンポジウム』, 大月書店.
- 中村政則(2001), 「日本 歴史教科書(扶桑社 刊)에 보이는 歴史敍述과 歴史觀」, 『독립운동사연구』16.

● 찾아보기

〈ㄱ〉

강호구락부(江湖俱樂部) 196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 233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磨) 176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80, 86
고다마 요시오(兒玉譽士夫) 78, 80
교과서 검정제도 319
교과서개선연락협의회 317
교육기본법 316
교육칙어 317
구루시마 쓰네키(來島恒喜) 135
국가론과 순정사회주의 212
국가사회주의 242
국가주의 12, 252
국권론 44
국민동맹회(國民同盟會) 176, 190
국수주의 47
국체명징운동 63
군국주의 325
궁정사건 73
극동군사재판 326
근린제국조항 317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227

기타 잇키(北一輝) 57, 204, 242

김옥균 140

〈ㄴ〉

납치 290, 300, 304

내셔널리즘 11

노장회(老將會) 55

니시다 미쓰기 209

〈ㄷ〉

다치바나 고사부로(橋孝三郎) 223

다카시마(高嶋) 교과서 재판 337

대동숙(大東塾) 74, 94

대리 강경론(對露強硬論) 198

대로동지회(對露同志會) 179

대상제(大嘗祭) 23, 272

대외론 16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120, 261

도쿄재판 79, 82

동광회 조선총지부 159

동광회(同光會) 154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 176, 183, 184

〈ㄹ〉

라스비하리 보스 148

런던해군군축조약 57

〈口〉

만세일계 279

만주 개방책 193

메이지유신 32

명랑회(明朗會) 74

모리타 마사가쓰(森田必勝) 77

무위 20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77, 259, 266

미일안전보장조약 235

미치가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 55

민권론 44

민족과 102

〈ㄴ〉

반공우익 101

배영운동 67

보통국가 326

본류우익(本流右翼) 99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
의회(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
るための全國協議會) 308

불평등조약 개정 46

〈ㄷ〉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 80

4차 교과서 공격 324

3차 교과서 공격 324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

教科書を作る會) 109, 276, 316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2, 79, 82, 92

쇼와유신운동 262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 131

신도 기헤이타(進藤喜平太) 121

신론 12

신우익 102, 266

쑨원(孫文) 119

〈ㅇ〉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259

아타고야마(愛宕山) 74

애향숙(愛郷塾) 223

야스쿠니신사 284, 291

언론통개 29

역사검토위원회 315

역사수정주의 315

영일동맹(英日同盟) 198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55, 204, 245

옥음방송 263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愼吉) 242

우치다 료헤이(内田良) 152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 87

유존사(猶存社) 55, 207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78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322

2차 교과서 공격 322

인간선언 81, 85

인재등용론 28

일본 유족회 286, 291

일본개조법안대강(日本改造法案大綱) 216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國民會議)

106

일본을 지키는 회(日本を守る會) 105

일본회의 274, 301

일진회(一進會) 156

1차 교과서 공격 321

임협우익 99

〈ㅈ〉

자민당 284

자유민권운동 43

자유주의사관연구회 107, 315

조선내정독립기성회 169

조선내정독립운동 154

조선내정독립청원서 161

조선협회 199

존양동지회(尊攘同志會) 73

존왕양이운동 259

존왕양이파 42

종교우익 102

종군위안부 324

중국 보전론 181

지나 보전(支那 保全), 조선 부액(朝鮮 扶腋)

178

지나 보전론 186

지나혁명외사(支那革命外史) 215

집단적 자위권 299

〈ㅊ〉

친왕 63

친미박애근로당(親米博愛勤勞黨) 89

〈ㅋ〉

탈아론 49

〈ㅠ〉

8·15사건 73

평양선언 304

평화헌법 285

포즈담선언 73

풍류몽담(風流夢譚) 사건 269

〈ㅎ〉

하코다 로쿠스케(箱田六輔) 121

한반도 흥기론 331

해방론(海防論) 12

행동우익(行動右翼) 99

헌법개정 232

혁명평론사(革命評論社) 206

혁신관료 250

현양사(玄洋社) 47, 119, 261

황국사관 318

황국의용군(皇國義勇軍) 76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 327

휘트니(Courtney Whitney) 88

홍아론(동양맹주론) 48

히라오카 고타로(平岡浩太郎) 128

〈기타〉

A급 전범 290, 291, 293

YP 체제 267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09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초판 1쇄 인쇄 2008년 3월 14일

초판 1쇄 발행 2008년 3월 24일

지은이 박 훈 · 남상호 · 최영호 · 김태기 · 방광석 · 김동명
정애영 · 함동주 · 김종식 · 박진우 · 하종문 · 허동현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8

ISBN 978-89-6187-042-9-9390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